

“활력 넘치는 희망찬 대구경북 창조”

뉴 디자인 대구경북

New Design
D a e g u
G y e o n g b u k

2010. 11

「총괄보고서」

대구경북연구원

목 차

Executive Summary 3

파워포인트 요약 21

제1장 『뉴 디자인 대구경북』은?

① 세상이 변하고 있다 63

② 광역경제권 시대의 도래 63

③ 지방의 위기, 대구경북의 위기 66

④ 『뉴 디자인 대구경북』 수립, 이렇게 67

제2장 대구경북의 현실과 미래

I. 대구경북의 과거와 현재 73

① 과거의 추세와 현재의 위상 73

② 총체적 문제점 진단 및 장래에 대한 우려 79

II. 패러다임 변화와 메가트렌드 81

① 세계 및 국내 여건변화와 시사점 81

② 도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85

③ 지역주의 이념과 내생적 발전전략 89

III. 비전과 전략 95

① 비전과 목표 95

② 주요 거시지표 전망 99

제3장 고소득 일자리 창출 : 산업

I. 주력산업의 첨단화	105
① 산업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05
② 주력산업 현황 및 문제점	112
③ 비전과 전략	118
④ 주요 전략사업	120
⑤ 사업 추진계획	128
II.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133
① 신기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33
② 현황 및 문제점	140
③ 비전과 전략	146
④ 주요 전략사업	148
⑤ 사업 추진계획	154
III.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157
① 메가트렌드와 농수산업 현황	157
② 농수산업의 문제점 진단	164
③ 비전과 전략	170
④ 주요 전략사업	175
IV. 기업중심의 R&D 체계 구축	193
① 메가트렌드와 R&D 현황	193
② 대구경북 R&D의 문제점 진단	197
③ 비전과 전략	205
④ 주요 전략사업	206
⑤ 사업 추진계획	216

V.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221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221
② 서비스산업별 현황과 문제점	230
③ 비전과 전략	240
④ 주요 전략사업	242
⑤ 사업 추진계획	246
VI. 문화·관광산업의 글로벌화	247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247
② 현황과 문제점	249
③ 비전과 전략	253
④ 주요 전략사업	255

제4장 격조 높은 대구 경북인 : 사람

I.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	267
① 현황과 정책동향	267
② 문제점 진단	270
③ 비전과 전략	273
④ 주요 전략사업	275
II.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283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283
② 현황과 문제점	285
③ 비전과 전략	294
④ 주요 전략사업	297
III. 수준 높은 문화기반 조성	309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309

② 현황과 문제점	313
③ 비전과 전략	316
④ 주요 전략사업	318
IV. 건강한 시민을 위한 헬스케어	323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323
② 현황과 문제점	327
③ 비전과 전략	333
④ 주요 전략사업	334
⑤ 사업 추진계획	336
V. 문화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339
① 문화공동체란?	339
② 현황 분석	340
③ 문제점 및 과제	342
④ 정책화 방안 및 전략사업	344
VI.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의식 개혁	347
① 시민의식 개혁의 목적과 의의	347
② 대구경북 주민의식 : 현황과 문제	347
③ 비전과 전략	349
④ 주요 전략사업	350

제5장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 도시

I. 뉴 디자인, 공간전략 구상	355
① 공간전략 기조 및 과제	355
② 기존 공간계획 검토	362
③ 뉴 디자인 공간구상	364

④ 대구대도시권 발전방향	367
⑤ 동해안권 발전방향	379
⑥ 도청신도시권 발전방향	389
⑦ 첨단산업도시권 발전방향	404
⑧ 관문도시(상주·문경 등) 발전방향	411
II. 도심 재창조와 활력 창출	421
① 도심 재창조 추진 배경	421
② 대구경북의 도심 현황	424
③ 도심 재창조 기본방향	426
④ 주요 전략사업	428
III. 안전한 도시 만들기	435
① 재해 발생과 정책동향	435
② 문제점 및 과제	438
③ 비전과 전략	441
④ 주요 전략사업	443
⑤ 사업 추진계획	446
IV. 자원순환형 도시 구현	449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449
② 현황과 문제점	454
③ 비전과 전략	458
④ 주요 전략사업	458
V. 세계로 열린 SOC 확충	465
① 세계를 향한 길, 현황과 문제점	465
② 비전과 전략	470
③ 주요 전략사업	471

VI. 편리한 광역·도시교통 477

-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477
- ② 현황과 문제점 479
- ③ 비전과 전략 484
- ④ 주요 전략사업 486

제6장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I.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499

- ① 지방재정 개황 및 전망 499
- ② 대구시 재정 현황과 전망 500
- ③ 경상북도 재정 현황과 전망 503
- ④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정책동향 505

II. 재정 및 투자계획 507

- ① 세입·세출의 문제점과 과제 507
- ② 비전과 전략 509
- ③ 재원조달 방안 512
- ④ 핵심전략사업 사업비 추정 514

Executive Summary



활력 넘치는 희망찬 대구경북 창조



Executive Summary

활력 넘치는 희망찬 대구경북 창조

① 우리도 멋지게 살아보자

■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오늘날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적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지구촌의 변화는 ‘세계화’와 ‘지식화’라는 2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화에서 적자생존의 법칙인 ‘경쟁’의 코드를 읽고, 지식화에서 공존상생의 원리인 ‘협력’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지식화의 흐름은 ‘융합’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시대를 구현하고 있다. 산업, 문화 등 사회 전 분야가 융복합되는 컨버전스 현상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의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가 대도시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국가 성장엔진으로 11개의 Mega Region을 국가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도시권국가(Metro N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런던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8개의 지방도시권을 육성하는 도시권(City-Reg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3개의 대도시권(슈토권, 킨키권, 추부권)을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열도 전체를 1개의 초광역경제권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베이징, 상하이, 홍콩을 중심으로 한 3대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확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경제권이 태동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적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Soft & Green 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정책의 역점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속교통 및 통신망 구축을 통해 전국을 KTX 90분 시대로 시공간을 압축시켜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수도권의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로 성장·발전하는 충청·강원 등 일부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의 상당 부분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좁은 우리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MB정부는 대도시권 경쟁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행정’ 단위보다 ‘광역권’ 단위의 발전전략으로,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네트워크 도시권으로 형성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연결될 때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개 도(강원도, 제주도)로 나누어 권역별로 2개씩의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전국적으로 30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50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역경제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 내에서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이 작동하여, 대도시와 인근도시 간 상생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정도가 이러한 시장기능이 작용하는 경제단위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충청권과 강원도가 점차 수도권 속으로 흡수 통합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중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경제권들은 사실상 행정단위의 단순 결합에 불과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자생력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5+2광역경제권’은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포함한 중부경제권과 호남권·대경권·동남권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등 2대 경제권과 제주도를 특별경제권으로 설정하는 ‘2+1 광역경제권’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구경북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의 일류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청권과 수도권 주민들의 위락·휴식 공간화 된 강원도는 이미 광역수도권을 형성하여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중부경제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서울이 메가시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인천은 관문도시, 경기도는 지식기반제조업, 그리고 충청도가 기초연구 및 첨단제조업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게 된다면 향후 5년 내 중부경제권 형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부경제권은 대한민국의 대표 광역경제권으로서 도쿄권, 상하이권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계 속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부경제권을 제외한 남쪽 영호남지역 대부분의 도시들도 경제활동에 있어서 서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남부권 도시별 자생력과 도시 간 상호 연계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수도권의 스�필오버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영호남지역 도시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경제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같은 현상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부권 도시들의 쇠퇴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중부경제권에 대응하여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남부경제권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지역은 과거 1970~198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의 거점기능이 약화되고, 중소도시들은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이 취약하며, 농어촌도시들은 성장을 위한 혁신과 발전 잠재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그 결과,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충청권으로 떠나고 있다. 특히 대경권은 경제적 위상이 전국 5대 광역경제권 중 최하위 수준으로 시장(market)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 경제권 형성에 대한 가능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구경북, 내일을 향한 희망의 싹은 있다!

경부축이 국가발전의 중심이었던 시절, 대구경북은 그런대로 살만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지역은 어두운 침체의 터널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다. 대구의 중추기능은 약화되고, 포항과 구미 이외의 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경북 북부지역은 성장을 주도할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각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구경북의 미래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씨앗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구경북이 함께 손잡고 경제자유구역('08), 첨단의료복합단지('09) 등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였고, 국가산업단지('10)도 3곳이나 지정받았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11)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국제행사는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대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1세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민들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대구경북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희망의 싹을 바탕으로 21세기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 수도권과 부·울·경 경제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와해될 것인가?

②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세우자

■ 활력 넘치는 희망찬 대구경북 창조를 위한 3대 목표

『뉴 디자인 대구경북』의 기본목표는 대구경북이 그간의 침체와 절망에서 벗어나 ‘멋지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멋지게 산다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풍요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경북인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품격과 문화를 갖춘 격조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래의 비전을 ‘활력 넘치는 희망찬 대구경북 창조’로 설정했다. 그리고 3가지 기본목표(goal)로서 ‘격조 높은 대구경북인 : 사람’, ‘고소득 일자리 창출 : 부(富)’,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 도시’로 설정하였다. 기본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3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6개씩 총 18개의 세부적인 목표(objective)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은 크게 4가지 전략(Strategy)을 기본으로 한다.

■ 추진전략 1 : 내생적 전략과 외생적 전략의 병행 추진

지금까지 대구경북은 주로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대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한 외생적 발전전략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큰 실효를 거

두지 못했으며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더욱이 국내외 여건변화로 더 이상 외생적 발전 방식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 자산, 경험, 기술, 인적자원 등 지역의 **내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로서는 지역역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업을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병행하면서 **점차 내생적 발전**의 비중을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

■ 추진전략 2 : 상생(Win-Win)을 위한 협력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소모적인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2006년 이래의 **경제통합기조**를 더욱 발전시켜 협력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화에 따른 지나친 경쟁과 갈등도 마찬가지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차별화와 협력 사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계층 간의 **소통과 협력**도 중요하다. 상층부를 점하고 있는 소수의 ‘지방특별시민’과 지역주민 다수를 형성하는 ‘지방보통시민’, 복지의 주된 수혜 대상인 저소득층 간의 이해와 협력이 사회통합과 발전의 기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구경북을 넘어 같은 **영남권의 부산·울산·경남지역**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등 **호남지역**과의 **상생**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추진전략 3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세계화 시대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의 요체 중 하나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차별화된 요소와 콘텐츠**를 찾는 것이다. 우리 지역만이 가진 또는 우월한 가치를 재발견하거나 재창조하는 것이다.

■ 추진전략 4 :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협력의 원리가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전체 가용자원을 하나의 풀(pool)로 보고 필요시 협력 사업으

로 자원을 집중하는 등 효과적인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영남경제권 활성화 견인

현재 대구경북의 공간구조는 3개의 대경제권과 2개의 소경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3대 경제권은 대구대도시권, 도청신도시권, 동해안권이며, 2대 소경제권은 첨단산업도시권과 관문도시(상주문경권)이다.¹⁾ 이렇게 분산된 대구경북의 경제권역은 대도시권 경쟁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화학적 결합을 통한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구경북은 부·울·경 경제권과 함께 손잡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대경권의 중심인 대구와 부울경권의 중심인 부산이 상생 협력함으로써 트윈 시티(Twin City) 기반 MCR(Mega City Region)을 형성하여 영남경제권의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 주력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방산업발전청 설립

대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지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주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첨단화하는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계·자동차부품 및 섬유(대구, 경주, 경산, 영천), 전기·전자(대구, 구미), 철강과 1차금속(포항) 등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다.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에 접목시켜 강소형 첨단부품소재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신산업은 지역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므로 대상 업종을 1~2개로 국한하고 기반을 다지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비교우위가 높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은 의료산업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충북 오송과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산업의 특성

1) 대구대도시권은 대구광역시 및 주변 7개 시·군(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과 인근 경상남도의 3개 군(거창, 함천, 창녕)을 포함. 도청신도시권은 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 북동부 6개 시·군(안동, 영주, 의성, 영양, 예천, 봉화). 동해안권은 포항·경주와 동해안 4개 군(울진, 영덕, 청송, 울릉)을 포함. 첨단산업도시권은 구미와 김천, 관문도시는 상주·문경 등을 포함

상 단기적으로는 기존 잠재력에 기반을 둔 중·저 수준의 기술분야(low tech)부터 시작하여 메디바이오 등 첨단분야(high tech)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DGIST**를 메디바이오에 특화시키고, 포스텍과의 강력한 연대로 뇌연구원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오송과의 차별화**는 지역 대학병원과 IT기술의 활용이 관건이다. 신서 혁신도시를 의료산업 육성의 핵으로 삼으면서도 달성·경산·영천·구미 등 주변도시에 의료생산단지를 집적시켜 높은 지가에 따른 부담도 극복해야 한다.

정부의 **지방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부처별 분산지원 체제를 일원화하여 (가칭)'**지방산업발전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의 산업정책과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각종 **중앙지원기관을 통폐합**하여 광역권 산업발전청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각종 R&D, 인재육성, 마케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농수산업, 특성화와 6차 산업화로 새로운 희망을

쌀농사 중심, 생계형 농업에서 벗어나 유기농산물, 토종농산물, 전략상품 등 **특성화·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종래의 1차 산업 형태에서 식품가공(2차), 유통(3차)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의 융복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 정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농어민사관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을 활용하는 등 농어촌 인재육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신성장엔진 문화·관광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대구경북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의 보고(寶庫)이다. 이러한 자원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화하여 **머무르는 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 그 동안 대구경북은 광역적 접근성이 취약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2010년 **KTX 2단계 개통**은 지역의 관광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판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 올 전망이다.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주·동해안권은 화랑정신을 태권도와 접목시켜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하

고, 경주를 대한민국 태권도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경북 북부권은 유교문화 자원(韓), 백두대간의 청정자원(山), 풍류가 흐르는 낙동강(江)을 함께 패키지화 하여 상품화시킨다. 대구는 매력적인 도시문화 관광지대로 육성한다. 단기적으로는 대구국제뮤지컬·오페라축제 등을 기반으로 지방 최고의 공연문화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MICE, 스포츠, 공연, 패션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관광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자원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인사 등 주변지역 자원의 연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격조 높은 대구경북인

■ 교육경쟁력을 높여 지역발전을 선도

교육과 문화는 대구경북이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자 21세기 새로운 메가트렌드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이다. 교육과 문화의 수준은 주민의 행복, 지역과 국가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대구경북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전생애적 교육시스템(life-time learning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은 전인교육에, 중·고등학생은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의 조화에 역점을 둔다. 특히 중등교육은 우수고교 육성으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지방보통시민들에게도 희망이 생긴다. 도시지역에는 자율형 공·사립고의 육성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 우수인재의 유출을 억제하고, 농촌지역에는 기숙형 공립고를 육성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4년제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고, 전문대학은 고급 현장인력 양성에 역점을 둔다.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은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접근한다. 포스텍은 신소재, 경북대는 IT융복합, 영남대는 기계자동차 분야를 특성화시킨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경우는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교육, 취약계층 사회통합 지원 교육, 은퇴 및 노후설계준비 교육 등을 강화하여 지역민의 실제적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평생학습체제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각종 학교와 대학, 기업 등을 연결하는 산·학·관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축한다.

■ 수준 높은 문화·복지·의료 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수준 높은 대구경북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예술가, 문화산업 전문가 등 창작인력 양성과 관련 시스템 구축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시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 문화가 되도록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병행하도록 애써야 한다. 문화는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경북의 고유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현대화하여 문화산업으로 재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선진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복지의 확대와 강화는 필연적인 만큼 효율적·협력적·예방적 복지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투자적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구조 하에서 복지예산의 급증과 지나친 지방부담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높은 삶의 질은 건강한 시도민으로부터 시작된다. 헬스케어의 일차적 관건은 의료 접근성 개선에 있다. 지역의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북 오지의 의료접근성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119구급대·보건소·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기초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방문서비스와 원격의료를 통해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원하는 가깝고 편한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제공은 예방의료의 핵심이므로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 세계와 소통하는 대구경북인

건강한 신체는 건전한 정신으로 완성된다. 낡은 가치관과 폐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식구조로 거듭나는 것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하여 주민 개개인과 지역사회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각종 교육시스템을 통한 의식개선 학습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 가치관과 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민에 대한 외국어 및 외국문화 교육 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민의 전반적인 지적 수준을 높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초·중·고교와 대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함께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도시의 규모와 특성을 막론하고 모든 도시는 1차적으로 삶의 공간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해야 하며, **활력과 매력**을 갖추어야 한다.

■ 도심 활력 창출을 위해 도심재생사업 추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심을 살려야** 한다. 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살기 때문이다. 각종 신도시 개발과 시설 노후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심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심재생은 각 **도시의 위계 및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면서도 **장소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도심재생**은 ‘영남 도심재건 프로젝트’ 차원으로 사업의 위상을 높여 추진해야 대경권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등 **중소 거점도시**들의 도심재생사업 또한 해당 지역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쾌적, 안전,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도시의 잣대

안전 또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지표이다. 재난·재해 정책의 관건은 사전적 **예방 노력**과 **재난복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이다.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대구경북의 일차적 노력은 **분산된 안전관리 조직체계의 통합**에서 시작된다. 단기적으로 대구시 및 경북도 내부의 조직체계부터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구경북 안전관리 공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복구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 단계별 **정확**

한 정보가 지역 주민에게 빠르게 전달되어 피해를 줄이고, 재해·재난 발생 이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시민 연대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재난복구 체험교육의 전국적 메카로 활성화시킨다.

자원순환형 생태도시를 위한 첫걸음은 시·도민과 정책당국의 자원위기에 대한 인식수준의 제고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시의 자원소비에 대한 생태과피 정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생태발자국’은 지역민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이다. 자원위기예 대한 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광역협의체’를 구축하고 감량·재활용·에너지 자원화에 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또한 저조한 물 수요관리 실적의 제고를 위해 항목별 치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지역문화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도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인간의 삶은 지역성을 가진 공동체 간의 ‘소통’에서 시작한다. 개발연대를 거치며 여론형성과 시민교류의 핵심 매개체인 공동체적 지역사회가 해체되었다. 사라진 마을, 따뜻한 문화공동체의 재건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우선 과제이다.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 재건은 자발적인 주민 중심에서 비롯된다. 대구경북에는 다양한 지역문화 공동체의 싹이 트고 있다. 대구에만 해도 한들도서관, 감나무골 새터공동체, 문화나눔 옷골 등 20여개의 문화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활동 중에 있다. 지방정부는 공동체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공동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 세계로 열린 SOC와 편리한 광역·도시교통 체계

21세기 도시 경쟁력은 인근 도시 및 세계 도시들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달려 있다. 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생존문제를 넘어, 영남권 나아가 남부경제권 공동번영의 필수요소이자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전략이다. 대구경북은 신공항을 밀양에 반드시 유치하고 2020년 이전에 완공하여, 경제자유구역 등 국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포항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 배후산업단지외 항만배후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함으

로써 대구경북의 국제무역항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내륙교통망도 광역경제권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 동서 5축 간선도로와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으로 수도권~동해안 접근성 제고 및 동서해안의 연계를 높여야 한다. 포항~안동 국도 확장으로 도청신도시권과 동해안을 연계하고, 영천~안강 포항직결선 부설을 통해 동해안과 대구대도시권을 연결해야 한다. 김천~영주 경북선 복선전철화는 백두대간에 위치한 관문도시들을 연계시킬 것이다.

대구대도시권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김천~구미~대구~경산~영천~포항을 잇는 광역통근전철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대구 4차 순환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 또한 도시철도망 확장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범물동~대구스타디움~2호선~1호선(안심) 구간의 3호선 연장은 혁신도시와 침복단지의 도심 연결과 도시철도의 순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지하철 1호선으로부터 옥포~현풍~구지를 잇는 경전철 건설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를 도심과 연결한다. 동대구역과 EXCO를 도시철도로 연결하여 전시컨벤션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⑥ 도시권별 발전좌표 설정으로 특성화 유도하자

대도시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경제권 간 경제적 통합과 도시권역별 특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구대도시권은 대구가 중심이 되어 대경권 전체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고 글로벌 지식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구미와의 상생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동해안권은 과학기술과 에너지산업을 중점 육성하면서 역사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삼고, 도청신도시권은 경북의 행정·업무 등 고차서비스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핵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첨단산업도시권은 구미를 중심으로 IT융복합산업과 녹색산업기술을, 상주·문경 등 관문도시는 녹색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대구대도시권 : 지식경제중심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구시는 대구경북의 중심도시로서 정치행정, 금융, 고등교육, R&D 등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문화, 쇼핑, 관광, 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고차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주변 중소도시들과 더불어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기능분담을 통하여 지식경제 부문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핵심추진사업으로는 첫째, 권역 내 산업입지 재편, 광역통근전철망 등 통합 대도시권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주력산업의 지식산업화와 신성장지식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기업지원 R&D 강화에 힘쓰고 의료산업벨트 등 신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셋째, 부울경권·호남권 등 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남부경제권 형성을 견인해야 한다. 넷째, 포스텍·경북대·DGIST 등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지역대학 간 연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전문계고를 신성장산업 및 주력산업 관련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등 특성화 고교를 육성한다.

■ 동해안권 : 신해양시대 첨단산업 및 관광의 중심으로

동해안권은 R&D 기반 신산업 거점 육성, 지역자원 활용 연계 관광 활성화, 동해안 거점 육성 및 도시간 협력 강화 등 3대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핵심사업으로는 첫째, 방사광·양성자가속기의 산업적 활용을 높이고 지곡단지~포항테크노파크~소재산업 집적지를 잇는 첨단기술 R&D 벨트를 조성한다. 특히 포항 방사광가속기와 경주 양성자가속기를 잇는 가속기벨트를 구축하여 대구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수소연료전지 및 원자력 관련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셋째, 경주 문화유산 및 풍부한 산림·해양자원을 활용한 융복합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한다. 넷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항과 경주를 거점화 하고 포항과 영덕의 도시통합을 추진한다. 그리고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의 조기 조성으로 항만 물류기능을 활성화시킨다.

■ 도청신도시권 : “백두-낙동 그린파라다이스”로

도청신도시권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웰빙 추세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여 녹색산업과 녹색관광에 기반 한 고품격 정주도시 조성을 미래발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양생한방관광벨트 조성’ 등을 통한 그린-컬처노믹스에 집중

한다. 또한 산림과학벨트 구축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신도청도시·안동·영주 등 거점 도시별 특성에 맞는 신산업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소규모 마을 재편을 통한 정주기반 강화는 고령화 및 다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철도 및 간선도로망 등 광역인프라 구축은 도청신도시권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구미와 김천 : 세계를 향한 첨단산업도시로

첨단산업도시권은 IT융복합산업 및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구미와 김천은 각 도시의 장점을 바탕으로 단일도시형 소광역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대구대도시권과 협력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핵심사업으로는 첫째, IT기반 신산업밸리형 도시권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구미 1·2·3차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고도화시키고, 신규 산업단지는 2차전지·솔라모듈 등 업종을 다각화 시킨다. 김천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구미산단의 배후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이전공공기관 관련 녹색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낙동강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 낙동강변의 친수공간화와 감천과 직지사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가꾸는 등 낙동강을 시민의 품으로 끌어들이 필요 있다. 셋째,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미와 김천이 공동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대도시권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구권 광역통근전철망을 김천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 상주·문경(관문도시) : 녹색산업과 문화관광의 관문으로

중앙·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백두대간이 뚫리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들이 부상하고 있다. 영주, 문경, 상주, 김천은 백두대간을 따라 분포한 도시들로서 산업, 관광, 유통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이 기대된다. 영주·문경으로 관광객이 모여들고, 상주·김천에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이동, 정체성의 혼란, 토지이용상 난개발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이 지역 최대의 자산인 백두대간 전체를 국립공원화하여 국가 책임 하에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7 성공적 도약을 위하여!

■ 위기의 지방재정, 해결의 Key는 중앙정부에

대구경북의 지방재정은 지방세수의 감소, 지출의 급증, 재정자율권의 저하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가 재정분권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장 큰 복지예산의 지방분담금 확대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정부는 복지비 매칭 구조의 전면 개편을 포함하여 특단의 재정분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도 재정력 강화와 효율적 재원운영을 위하여 전시성 사업을 줄이고, 국책사업 유치에 신중을 기하며, 복지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정운용 전략을 새로이 해야만 한다.

■ 영남권 신공항,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Key !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 유치는 세계로 향하는 대구경북의 관문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세계화 시대 대구경북, 크게는 영남권 전체의 미래를 여는 핵심 키(Key)가 될 것이다. 밀양 신공항은 부산, 대구, 울산, 창원, 포항, 구미 등 영남권 주요 도시로부터 1시간 이내의 중심에 위치하며,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 영남권 MCR (Mega-City Region) 구축에 최상의 입지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88고속도로와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를 통하여 호남권으로부터의 접근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과 남부경제권(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으로 양분되고, 통일 후 북부경제권을 추가하여 3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하면서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러한 큰 스케일의 공간적 발전 흐름을 전망하면서 광역적(대구경북권), 초광역적(동남권, 호남권) 연계·협력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 대구경북 결속력 강화 절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검토!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은 선택사항이 아닌 지역의 사활이 걸린 필수적 과제이다. 강력한 상호 연대만이 밀양 신공항을 매개로 영남경제권, 나아가 남부경제권 형성을 앞당길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금년 KTX 2차 개통으로 김천·구미가 수도권과 직접 교류하고, 부·울·경 경제권의 태동으로 동해안 남부지역이 울산·부산에 흡수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4년 경북 도청이전이 이루어지면, 대구경북의 결속력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2006년 이래의 협력기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효과적 대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파워포인트 요약



뉴 디자인 대구경북



New Design

Daegu

Gyeongbuk





●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 **세계화와 지식화 : 경쟁과 협력 공존**
- **지식기반시대 : 융합, 공감**
-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혁명**
- **중국이 Superpower로 등장 : G2**



대한민국은 지금

● 저출산 · 고령화의 심화

● 수도권 확산 & 부 · 울 · 경 경제권 태동

● 신성장동력 창출에 정책 집중 : Soft & Green

● 문화 중심의 사회 지향

● 고속교통/통신망 구축 : 전국 KTX 90분 시대

※ G20 정상회의 개최 : 대한민국이 의장국

5

세계는 대도시권 경쟁 중!

● 미국 : 대도시권국가(Metro Nation) 정책

- 국가 성장엔진으로 11개 Mega Region 중점 육성

● 영국 : 도시권(City-Regions)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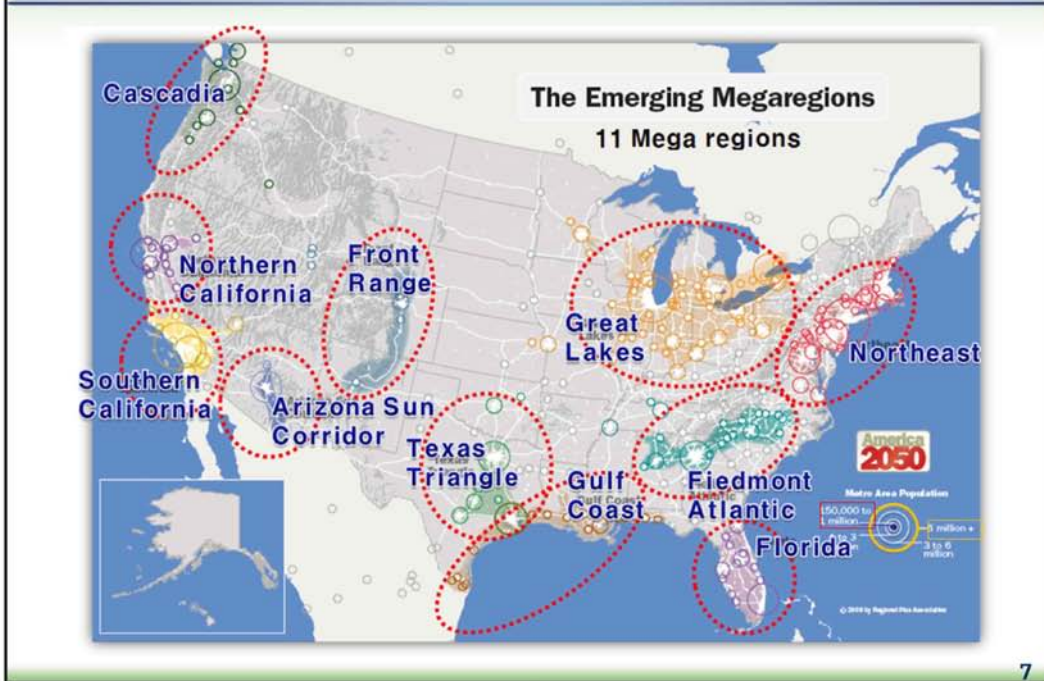
- 런던권 집중 대응 → 8개 지방도시권 육성

● 일본 : 열도 전체를 1개 초광역 경제권화

- 장기적으로 3개 대도시권(슈토크, 킨키, 추부)을 통합

6

「America 2050」 : 11개 Mega Region 중점육성



동북아의 광역경제권



● MB정부, 5+2 광역경제권 추진!

5+2 광역경제권 : 세계적 추세에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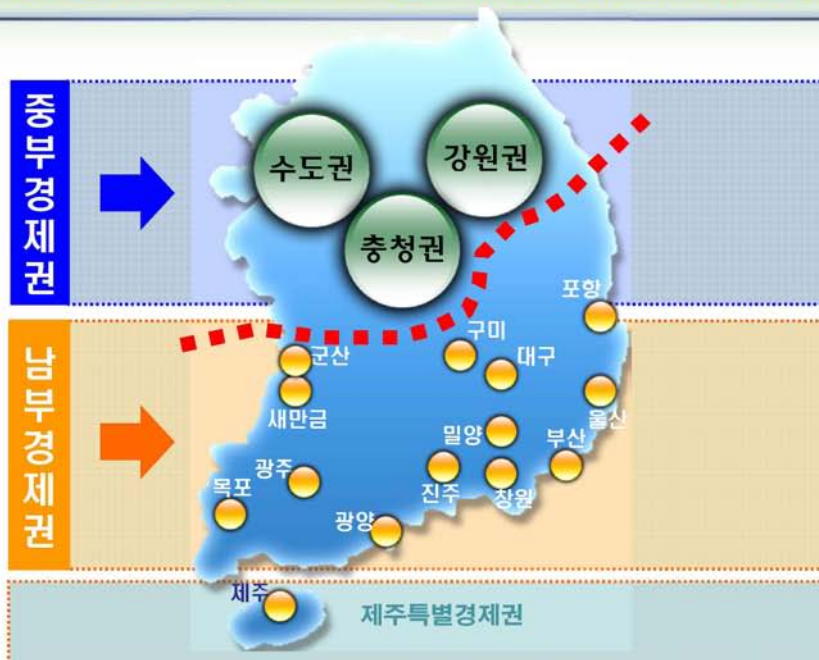
● **선도산업 : 권역별 2개**

● **선도 프로젝트 : 전국 30개**

→ 5년간 50조 투자

9

● 대한민국, 2+1 광역경제권 체제로!



10

● 현재, 중부경제권 구축 중

● 수도권 + 충청권 + 강원권

- 수도권이 넘쳐서 충청·강원도로 확산



11

● 중부경제권, 세계 속의 광역경제권으로

- 서울 : Megacity
- 인천 : 관문도시
- 경기도 : 지식기반 제조업
- 충청도 : 기초연구 + 첨단제조업
- 강원도 : 여가·휴식공간

도쿄권·상하이권 등과 대등한 경쟁할 수 있도록!

12

● 문제는 남부경제권, 특히 대경권이 취약!

- 70~80년대 : 우리나라 산업화 중심 역할
 - ❖ 울산, 창원, 포항, 구미, 광양 : 아직 건재

↓

- 대도시 : 부산, 대구, 광주 → 거점 기능 약화
- 중소도시 → 정주여건 취약 (*교육, 의료, 문화)
- 농어촌도시 → 경제력 상실

일 자리를 찾아, 수도권·충청권으로 떠나고 있다!

13

● 대경권, 경제적 위상 최저 수준

- 5대 광역경제권에서의 순위

면	적	2위
인	구	3위
재	정 자 립 도	4위
경	제 활동 인구 비율	4위
GRDP		5위

14

● 대구경북, 오늘의 현실은 어렵다!

과거 그런대로 잘 나갔다
● 경북축이 국가발전의 중심

현재 어렵다 "인구감소, 특히 청년층 인구유출 심각!"
● 대구의 중추기능 약화
● 포항과 구미 이외 지역은 산업기반 취약
● 경북 북부지역은 성장주도산업 부재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15

● 하지만, 우리도 "희망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

-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06)
- 경제자유구역('08), 첨단의료복합단지('09) 유치
- 대구, 포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지정('10)
- 세계육상선수권대회('11), 세계에너지총회('13) 등 개최
- MB정부 출범 이후 국비지원 증가(2010년 10조원)

대구경북, 자신감 회복중!

16



● 대구경북, 왜 어려운가?

● **남탓** : 지난 20년간 권력의 핏박

● **내탓** : 잘 나갔던 지난 30년(1960~1980년대)
→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다!

● **한 뿌리인 대구경북이 나뉘어져**
→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고 있다!
→ 도청 이전 이후(2014), 결속력 더욱 떨어질 전망

➔ **특별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9

●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자!

비전

Energetic & Great Daegu-Gyeongbuk
활력 넘치는 희망찬 대구경북 창조

목표

고소득
일자리 창출

부(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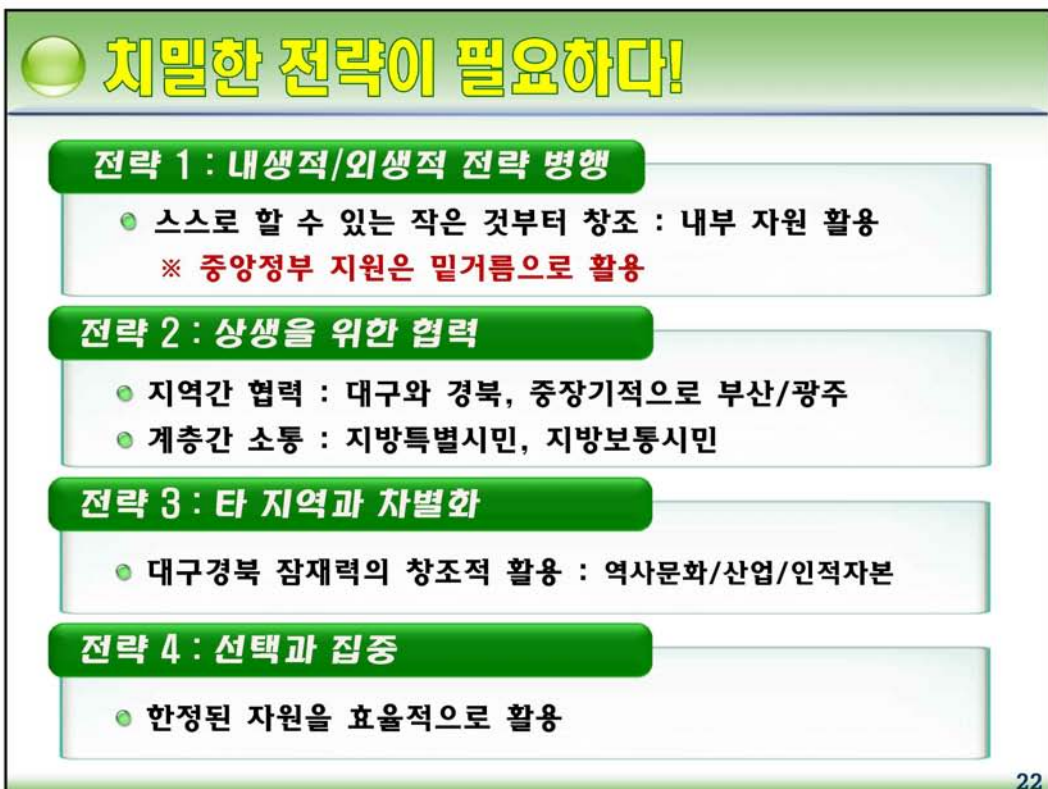
격조 높은
대구경북인

사람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도시

20



● 현재 대구경북, 3+2 도시경제권으로 구분

3대 경제권

- 대구대도시권
- 도청신도시권
- 동해안권

2대 소경제권

- 첨단산업도시권
- 관문도시(상주, 문경 등)

※ 화학적 결합, 하나의 경제권으로!

23

● 영남권, 함께 손잡고 미래를 준비하자!

대경권 중심 : 대구

↓

부울경권 중심 : 부산

↓

Twin City MCR 구축

↓

**대도시권 경쟁시대
영남경제권 형성!**

24



● 보통사람을 위한 일자리부터!

- **오늘을 사는 보통시민의 일자리가 급선무**
 -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
- **먼저, 지역 주력산업에서부터 시작!**
 - 제조업은 보통시민들의 안정된 일자리

기존 주력산업을 첨단화 시켜야!

26

● 뿌리산업을 육성하자!

● 뿌리산업은 기초공정 산업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 과거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대명사

●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절반이상, 뿌리산업!

- 지역 주력산업 밑거름 & 신산업 육성 기반
- 新3D산업으로 전환 : Digital, Dynamic, Decent

27

● 산업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자!

뿌리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전통 주력산업에 접목시켜

강소형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거점화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

28

● 오늘의 일자리, 주력산업 첨단화로 시작!

● 대구 : 기계·자동차부품산업 → 부품소재산업

- 메카트로닉스 발전 → 로봇산업 기반 구축

● 구미·성서 : 전기전자 → 모바일융합, 2차전지

● 포항 : 철강 → 금속소재산업

- 비철금속소재산업, 연료전지, 메디바이오 등으로 발전

● 섬유산업 : 산업/스포츠용 기능성 섬유 개발

-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역점

29

● 후손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자!

신산업 성공의 조건

기초연구 R&D, 대기업 헤드쿼터, 강력한 정부 지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MB정부 17개 신성장동력산업 : 수도권에 50~70% 집중

우리는 1~2개 산업이라도 제대로 키우자!

30

●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에 올인하자!

의료산업 육성 : Two-Way 방식으로 접근

- 오랜 시간 소요 : DGIST 메디바이오 특화
→ 뇌연구원 유치 (*포스텍과 협력)
- 단기적 : 기존 잠재력 활용 → Low Tech
- 중장기적 : Medi-Bio 등 → High Tech



오송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

- 대학병원과 IT기술 활용이 관건
- 생산공장은 땅값이 중요
→ 생산단지는 달성, 경산, 영천, 구미 등에 집적

31

● 의료산업, 『Hub & Spoke』 전략 추진!



32

● 로봇산업은 기반을 다지자!

로봇산업

MT산업이 궤도에 올라야 성공 가능



- 포항지능로봇연구소(PIRO)
-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 입지)
- 로봇 관련 지역대학 연구
→ 로봇 관련 기초연구 담당

성급한 기대는 금물, 기초를 다져 나가야!

33

●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생산기지 역할 담당!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대구경북, 의욕적 사업 추진중



- 태양광 & 연료전지
→ 선도산업으로 추진 중
- 구미지역에 공장 설립
- 대구·포항에도 몇 기업 입지
→ 현장인력 제공 등 국한
(※ 연구개발 등은 수도권 집중)

고급 R&D가 있어야 → 지역은 아직 신산업 역량 부족!

34

정부의 지방산업정책 → 대구경북 효과는?

- **신산업 육성 : 참여정부 10개, MB정부 17개**
→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 초래
 - **지방의 신산업 육성에도 의욕적**
 - 참여정부 : 시도별 전략산업 4개 → 2조6천억
 - MB정부 : 광역권별 선도산업 2개 → 5천억원(향후 3년 1조5천억)
- ※ 지역특화 R&D센터 전국 82개소 설립 (→대구경북 18개소,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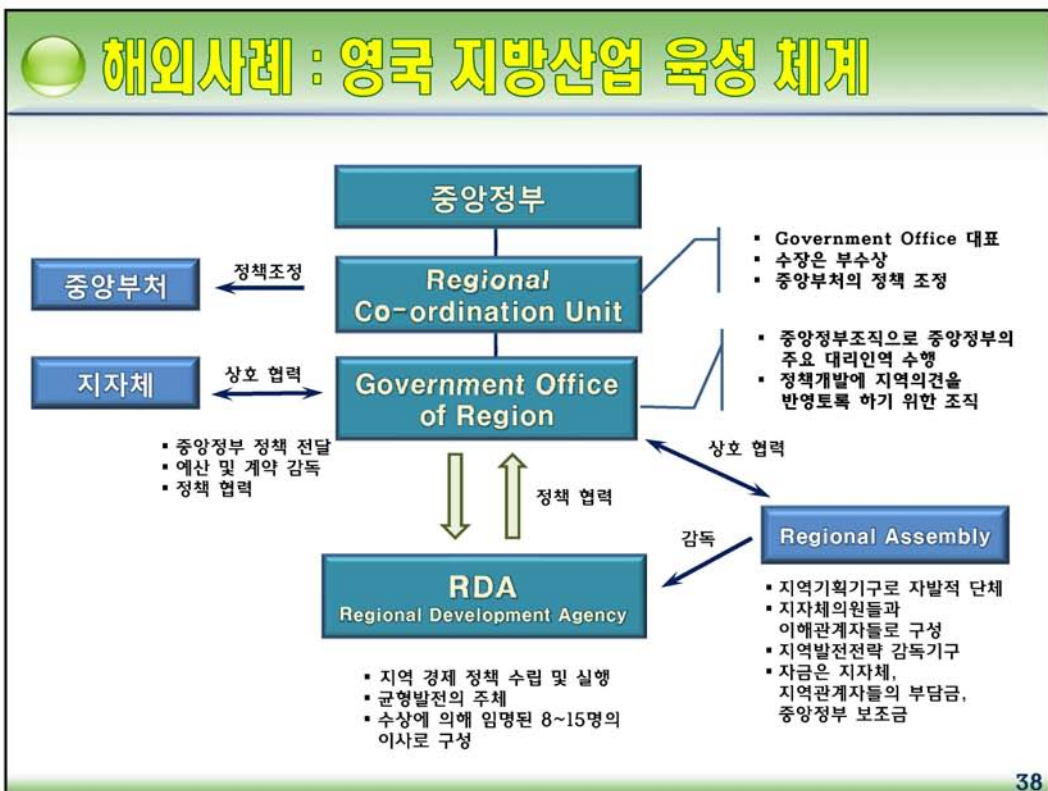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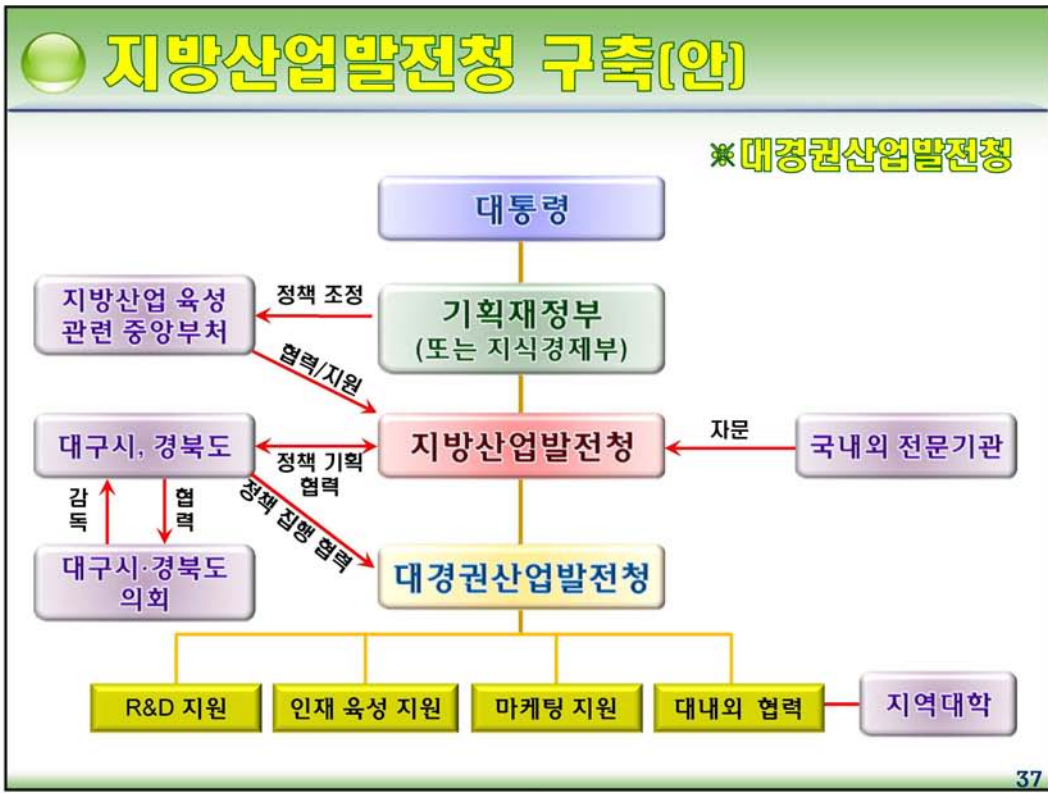
기업과 연계되지 못해 → 지방산업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35

지방산업 육성, 특단의 조치가 필요!

- **기획재정부(또는 지경부) '지방산업발전청' 설립**
 - 1960~1970년대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듯이
 - 중앙정부가 10년 정도 진두지휘!
- 『**대경권산업발전청**』(가칭)을 설립하자!
 - 기업지원 중앙지원기관 통폐합 추진
→ 중기청, 중진공, TP, 전략/선도산업 관련기관 등

36



● 지역R&D와 대학 → 지역기업 지원 강화!

● 지역 R&D → 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역점!

● 지역 대학의 R&D 기능 → 2원화 시키자!

- 신산업 연구 : 중앙정부와 직접 연계
- 중소기업 지원 연구 : 지역기업에 기술 제공을 의무화

● 지방대학 인력양성 사업

- 지역기업 인력 충원과 반드시 연동시켜야!



39

● 서비스산업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비즈니스서비스 → 중소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부터!

- 중소기업 : 기초적 컨설팅, 디자인, 시험·인증 등
- ※ 대기업 & 중견기업 → 서울 BS업체 활용

● 지역금융 → 지역 중소기업부터 키우자!

- 서민 생활안정은 → 제2금융권이 담당
- 금융을 위한 금융산업 → 아직 어렵다!

● 소비형서비스 → 보통시민 생활의 받침판으로!

- 상인 자구노력 → 조직화 및 특성화 지원




40

● 농수산업, 이제는 생명산업이다

● 지금과 같은 농수산업으로는 어렵다

- 노인들의 일터 : 쌀농사 등 중심
- 생계형 농업 & 정부의존형 산업



● 생명산업으로 변화에 적극 대처하자!

- 6차(1*2*3)산업화, 융·복합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 웰빙·로하스 → 친환경 유기농식품 수요 증가


경북을 대한민국 최고의 특화농업지역으로!

41

● 농수산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원으로!

● 창의성, 특성화로 최고의 경쟁력 달성

- 1인 창조 농기업 및 명품브랜드 육성
- 지역별 토종농산물 → 전략식품산업으로 집중 육성
- 도시농업 프로젝트 : 도시 먹거리 농장 등
-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GMSP) 활성화



● 인재가 농수산업의 미래를 바꾼다

- 성공신화를 통해, 젊은이를 농촌으로 부르자!
→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어민사관학교 기능 대폭 강화

42

● 문화 · 관광산업은 신성장엔진, 세계적 수준으로

●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혜 생태자원을 활용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화 : 머무르는 관광지로

- 신라 · 가야 · 유교 3대 문화 본향, 국내 최다 세계유산(역사) 백두대간(산), 낙동강(강), 동해(바다), 도시문화(도시관광) 등 관광의 완결이 가능

※ 그 동안 광역적 접근성 취약으로 관광객 유치 부진

● KTX 2단계 개통, 관광시장 지각변동 예상!

-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해야 성공 가능

43

● 경주&동해안, 경북북부의 문화관광 전략

● 경주&동해안 : 『화랑=태권도』 글로벌 브랜드화

- 태권도! → 10년 후 한국관광의 리얼 아이콘
- 태권도 공연관광 → 재미와 감동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동해안 → 몸과 마음의 치유 공간화

“경주, 대한민국 태권도 원류도시로 육성해야!”

● 경북북부 : 韓·江·山을 함께 팔자!

- 국제 유교문화 허브화 → 풍류(멋과 흥), 한스타일
- 백두대간 청정자원 비즈니스화 → 로컬푸드, 웰빙온천, 슬로시티
- 풍류가 흐르는 낙동강 → 낙동가람 실크로드

44

● 대구는 매력적인 도시문화관광지대로!

● 우선, 지방 최고 『공연문화도시』로 육성하자!

- 시작이 좋다! → 대구국제뮤지컬/오페라축제 등
- 공연으로 넘쳐나는 축제도시로!
→ KTX 타고 우수한 프린지 공연을 보러 대구에 오도록 특성화

● 대구권 주변도시와 연계, 새로운 관광거점화

- 비즈니스관광 → 의료, MICE, 스포츠, 공연, 패션 등
- 자원경쟁력 부족 → 합천 해인사 등 주변자원 연계로 극복
※ 먹거리, 살거리, 야간 즐길거리 준비 → 동성로와 연계

45



● 격조 높은 대구경북인을 위한 과제

-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 건강한 시민을 위한 헬스케어
- 세계와 소통하는 대구경북인



47

● 제일 먼저,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 "교육도시"로 명성이 높았던 대구경북
 - 초중등 교육, 좋은 대학 및 취업을 위해 지역 인재 → 대구경북을 빠져나가
- 수능 등 학력지표는 갈수록 하락
 - 과거 높은 위상 경북대 → 보통 지방대로 위상 저하
 - 대학생 취업을 전국 최저 → 지역기업 만성적 인력난!

일자리도, 인재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 주소!

48

● 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 **취학전 아동** → **보육 강화** (*일하는 엄마 후원)
- **초등학생** → **전인교육/수준 높은 방과후프로그램**
- **중고등학생** →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강화**
- **대학 2원화** : **연구중심 vs. 교육중심**
- **평생교육시스템** → **직무제교육, 노후설계교육 등**

49

● 초·중고 : 내실 있는 공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및 특성화**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강화** : 학교별 맞춤형 전문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 초등저학년은 돌봄 기능 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으로 전인적 능력 함양
- **우수고교 육성을 통한 공교육 강화**
 - (도시) 자율형 공·사립고 : 지역 내 우수학생 선발 및 질 높은 공교육 제공(* 지역 전체의 공교육 수준을 선도적으로 제고)
 - (농촌) 기숙형 공립고 :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50

● 대학은 "연구 및 교육중심"으로 특성화

● 연구중심대학 육성

- POSTECH : 신소재
- 경북대 : IT융복합 / 영남대 : 기계자동차
- DGIST : 메디바이오 (* 첨복단지 의료산업 견인)
→ 뇌연구원 유치, 5개 대학 종합병원과 연계



● 교육중심대학 → 대학 특성별 지역인재 양성

- 고급기술인력, 특화부문인력, 현장중심인력 등
※ 전문대는 지역 현장인력 양성에 역점

51

● 지역민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평생교육

●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교육

- 산학관(전문대 중심) 연계체제를 통한 평생학습-계속 근로

● 취약계층 사회통합 지원 교육

- 저소득층 · 장애인 · 다문화 : 비문해자 한글교실, 다문화 가정(한글 · 요리 · 자녀교육),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등

● 은퇴 및 노후설계준비 교육

- 길어진 노년, 준비해야 행복한 노후 : 재무, 건강, 여가, 가족관계, 사회참여 등을 교육 및 설계 지원

52

● 둘째, 문화는 시민생활 속에 뿌리 내려야

● 각종 문화시설 특화 → 『문화센터』로 육성!

- 대구도심을 "문화창조기지"로 (*KT&G → 문화창조발전소 등)
- 동성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 거리문화 활성화

● 창작인력 양성 → 예술가, 문화산업 전문가

- 공연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등

● 공연창작파크 조성 → 문화공간

- 공연창작~장치제작~용품보관까지 원스톱 지원

● 문화콘텐츠 팩토리 구축 → 문화산업 상품화

53

● 셋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 대구경북 복지에산 2조원, 연평균 20% 증가

- 2010년 복지에산 비중 : 대구 19.4%, 경북 24.4%
- 일반예산 증가율의 **1.5배** 수준

● 서비스 전달 관리소홀 → 예산누수 심각

- 중복수혜/부정수급 근절, 복지수급자 수혜기간 일몰제 도입 등

● 2018년 지역 복지에산, 30%에 이를 전망

- 먼저, 예방적 정책 강화로 복지의존성 완화가 시급

지자체 재정위기 초래 → 중앙정부 직접시행 요망!

54

● **빛때, 건강한 시도민이 대구경북의 미래입니다**

● **좋은 의료서비스 기반 → 시·도민 체감도는 낮아**

- 환자들 수도권 쏠림, 경북 주민은 병원 가기 불편
- 응급진료체계 → 곳곳이 의료사각지대
- 많은 체육시설 → 손쉽게, 편하게, 즐겁게 운동하기 곤란

● **우선, 메디시티 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

- 선진화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관광도 함께
- 안심할 수 있는 요양 환경 마련
-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도 관심 → 지역 건강지도

55

● **의료접근성 개선이 일차적 관건**

● **원격의료시스템, 경북 오지 의료접근성 개선**

-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 영양 & 대구)
경북의 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

● **기초보건의료서비스의 정책적 노력 중요**

- 119구급대,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 방문서비스와 원격의료 → 촘촘한 건강 감시 체계

● **생활체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 예방의료 핵심**

- 시민이 원하는, 가깝고 편한 생활체육시설 제공

56

다섯째, 세계와 소통하는 대구경북인이 되어야

● 대구경북인의 장점 → 『독심』과 『도전정신』

❖ 중앙정부 등 외부 의존 탈피 → 우리의 것, 우리의 힘으로 미래 개척

● 어린이, 청소년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중요

❖ 자랑스런 지역역사, 큰 인물, 교훈적 사건 등 교육 강화

● 어른들이 공부해야 → 지역사회 바꾸는 인적 원동력

❖ 외국어, 외국문화 학습으로 글로벌 마인드

시·도지사 혁신적 리더십 → 공직사회 혁신!

57

대구경북, 안전하고 아름다운

V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 도심에 활력이 넘치고, 안전해야
- 21C 자원위기, 자원순환형 도시 구현
-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되살려야
- 사람과 물류 흐름이 원활한 도시

59

● 우선, 도심의 활력과 매력을 살려야!

● 대구도심 → "영남 도심재건" 프로젝트

- 문화재생프로젝트 : 오페라하우스~시민회관~중앙로~봉산문화거리
- 도심맥 프로젝트 : 대중교통전용지구~국채보상로(연결가로 활성화)

● 거점 중소도시, 지역 중심기능 강화

- 포항 : 동빈내항 복원, 복합문화예술타운 조성
- 구미 : 구미역 주변 그린타운 정비, 제1국가산단 이미지 개선
- 안동 : 구시가지 도시디자인 시범지구, 문화유산 재생사업

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60

둘째,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3원화된 안전관리 조직체계 통합

- 1차적으로 대구시&경북도 내부 조직체계 일원화
- 2차적으로 대구경북 안전관리 협력 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복구 시스템 구축

- 지역 주민의 자율적 행동(피난 등) 요구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
- 재해 대응단계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시민안전테마파크 : 재난복구 체험교육 메카로

- 재난 사전 예방교육과 시도민 홍보 강화

61

셋째, 자원순환 모범도시를 만들시다

자원순환형 사회, 당면한 현실 문제

- ❖ 오폐수 해양투기 금지(런던협약, '13), 정부 자원수요관리 강력 추진

자원위기 →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 ❖ 대구경북 「생태발자국사업단」 구축
→ 생태파괴지수 조사 : 경기도 사례 벤치마킹



물 수요 관리 정책 강화 → 항목별로 꼼꼼히 챙겨야

폐기물 관리 → 광역적 대응이 핵심

- ❖ 폐기물 관리 「광역협의체」 구축 : 감량/재활용/RDF 공동 활용

62

● 넷째, 따뜻한 문화공동체를 되살리자!

● 지역문화공동체, 싹이 트고 있다!

- 대구지역 20여개 문화공동체 자발적 활동 중
 - 한들도서관, 감나무골 새터공동체, 문화나눔 옷골 등
- 지역문화공동체는 여론 형성과 주민 교류의 핵심 매개체

● 지역문화공동체 재건을 위한 과제

- 공동체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구축
- 지역단위 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학교와 작은 도서관 설치
- 공동체 공간과 활동 성과물에 대한 홍보와 관심 제고

문화공동체 재건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63

● 다섯째, 세계로 열린 SOC를 구축해야

● 신공항 밀양 유치, 대구경북 명운을 걸자!

- 밀양은 영남권 신국제공항 최적지!
- 김해공항 확장은 실효성 없는 대안!
- 태평양 바다 위 부산 가덕도는 영남권 후보지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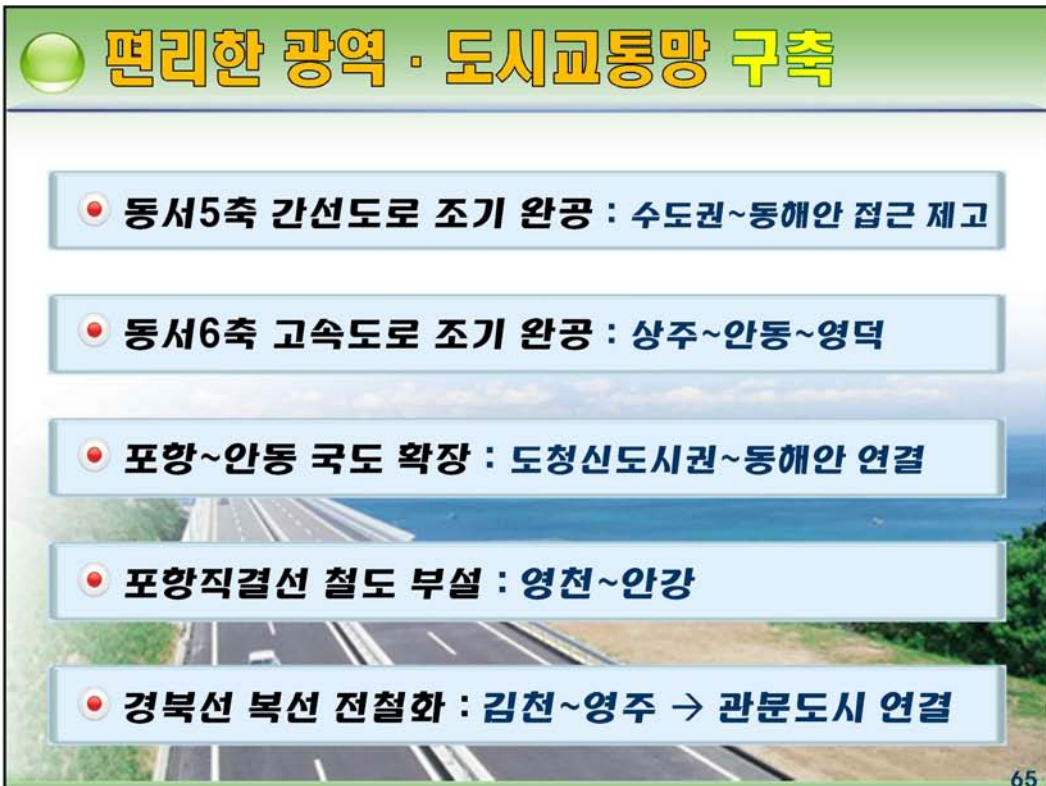
● 21세기는 공항시대 : 밀양 신국제공항이 필수

● 영남권, 대구&부산 Twin-City MCR 구축!

64


● 편리한 광역 · 도시교통망 구축

- 동서5축 간선도로 조기 완공 : 수도권~동해안 접근 제고
-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상주~안동~영덕
- 포항~안동 국도 확장 : 도청신도시권~동해안 연결
- 포항직결선 철도 부설 : 영천~안강
- 경북선 복선 전철화 : 김천~영주 → 관문도시 연결



65

● 대구대도시권 교통망 구축

- 대구대도시권 광역전철 구축 : 구미~대구~포항
- 대구 4차 순환선 조기 완공 
- 도시철도 1, 2, 3 호선 연결 : 범물~스타디움~안심
 - 혁신도시, 침복단지 도심 연결
- 도시철도 건설 : 동대구역~EXCO
- 대구~달성 경전철 건설
 - 대구국가산단, 대구테크노폴리스 → 도심 연결

66



도시권별 특성화를 유도하자!

대구대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지식경제중심지
도청신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고차서비스 기능
동해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에너지산업 중심
첨단산업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복합산업 거점
관문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산업, 문화관광 관문

68

● 대구대도시권은 글로벌 지식경제중심으로

● 도시별 기능 및 역할

- 중추도시 : 대구
- 산업거점 : 구미
- 신산업화 도시
- 경산, 영천, 칠곡, 달성
- 특성화 도시
- 군위, 성주, 청도, 고령

통합 대도시권 모델 구축 → 대구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

69

● 통합 대도시권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 실행력 한계

- 최상위 법정 광역계획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 대도시권 형성을 뒷받침 할 강력한 실행력 부족
→ 직접적 개발행위 및 토지이용행위 구속력은 제한적

● "지방대도시권 구축에 관한 특별법(가칭)" 추진

- 지방대도시권 형성을 이끌 실행력을 갖춘 특별법 추진 필요
※ 예 : 수도권정비계획법

70

● 첨단산업도시권(구미/김천)은 세계로 열린 첨단산업 중심지

● 구미 기존 산업 고도화 및 신규 산업 업종 다각화

- 기존 노후 산업 : 성공적 리모델링 추진
- 신규 산업 : 그린융합, 2차전지 등

● 단일 소경제권 구축

- KTX역 & 혁신도시 기반
- 혁신도시 & 구미 연계 강화

● 대구권과 연계 상생발전

- 대구권 광역통근전철망 구축 : 김천~구미~대구~경산~포항



71

● 셋째, 동해안권은 신해양시대 발전거점으로

● 첨단기술 R&D벨트 구축

- 포스텍~포항TP~소재산업 집적지
- 가속기클러스터 → 침복단지 연계

● 철강 단일 산업체계 탈피

- 비철금속 소재산업 육성
- 수소연료전지, 원자력에너지
- 대구, 울산 등 산업의 광역 연계



72

셋째, 동해안권은 신해양시대 발전거점으로

- **역사문화, 해양·산림 복합관광**
 - 천년고도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 해양레포츠 기반의 해양관광 육성
 - 동해안과 낙동정맥 연계 및 국제관광휴양섬화
- **영일만항 활성화**
 - 배후산단 및 배후단지 우선 조성
 - 항만 및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73

넷째, 도청신도시권은 백두-낙동 그린 파라다이스로!

- **신도청 중심 광역도시계획 수립**
- **도시별 전략산업 연계**
 - 안동 : 문화산업
 - 영주 : 건강산업
 - 산림과학벨트 구축
- 예천~영주~봉화~영양
- **정주기반 강화**
 - 소규모 마을 재편
→ 공공서비스 효율적 공급

74

● 마지막으로, 관문도시는 수도권/충청권 관문!

한반도의 등뼈인 백두대간을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

수도권

- 오창과학산업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충청권

- 세종시
- 대전

도시별 특성화

- 상주 : 낙동강변 친환경 녹색도시
- 문경 : 스포츠 & 녹색관광
- 영주 : 전통문화 & 생태관광
- 김천 : 혁신도시 연계 녹색산업기술

국립공원 지정 지역: 문경, 상주, 영주, 김천, 대구, 마산, 부산·김해

75

VII 대구경북, 성공적 도약을 향하여!

● 튼튼한 지방재정, 효과적 사업추진의 관건!

대구경북은 심각한 재정문제 직면

- 지방세수 감소, 재정지출 급증, 지방재정 자율권 저하
※ 부동산경기 의존 재원구조 → 개발연대에 끝났다!

먼저, 중앙정부는 특단의 재정분권을 추진

-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장 큰 복지비 매칭부터 없애야

대구경북, 지자체의 세수기반 강화

- 기업 유치로 세원 증대, 탈루세원 축소, 징수율 제고

77

● 성공적 도약을 위한 우리의 3대 선택!

I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 Twin-City 기반 영남권 MCR 구축

II 대구경북 결속력, 더욱 강화!

→ 실질적 협력 증진이 필요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검토!

III 의식개혁 : 개방성, 진취성, 창조성

→ 소통과 화합, 공동체적 시민정신과 글로벌 마인드 확립

78



제 1 장



뉴 디자인 대구경북은?



프롤로그

『뉴 디자인 대구경북』은?

① 세상이 변하고 있다

■ 세계는 지금

- 세계화와 지역화 : 경쟁과 협력이 공존
- 지식기반시대 : 융합, 공감
-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혁명
- 중국이 슈퍼파워(Superpower)로 등장 : 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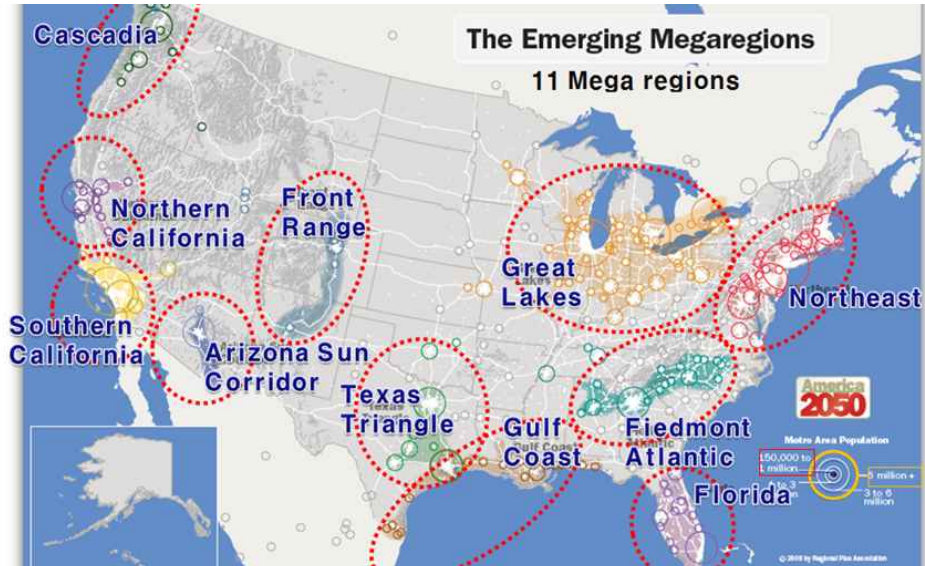
■ 대한민국은 지금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 수도권 확산 & 부·울·경 경제권 태동
- 신성장동력 창출에 총력 : Soft & Green 산업
- 문화 중심의 사회 지향
- 고속교통·통신망 구축 : 전국 KTX 90분 시대
- ※ G20 정상회의 개최 : 대한민국이 의장국

② 광역경제권 시대의 도래

■ 선진국의 도시권 정책과 동북아 광역경제권

- 미국 : 대도시권 국가(Metro Nation) 정책
 - 국가 성장엔진으로 11개 Mega Region 중점 육성
 - ⇒ 초고속철도(High Speed Rail, HSR)로 신속한 연결



▲ 'America 2050' 11개 Mega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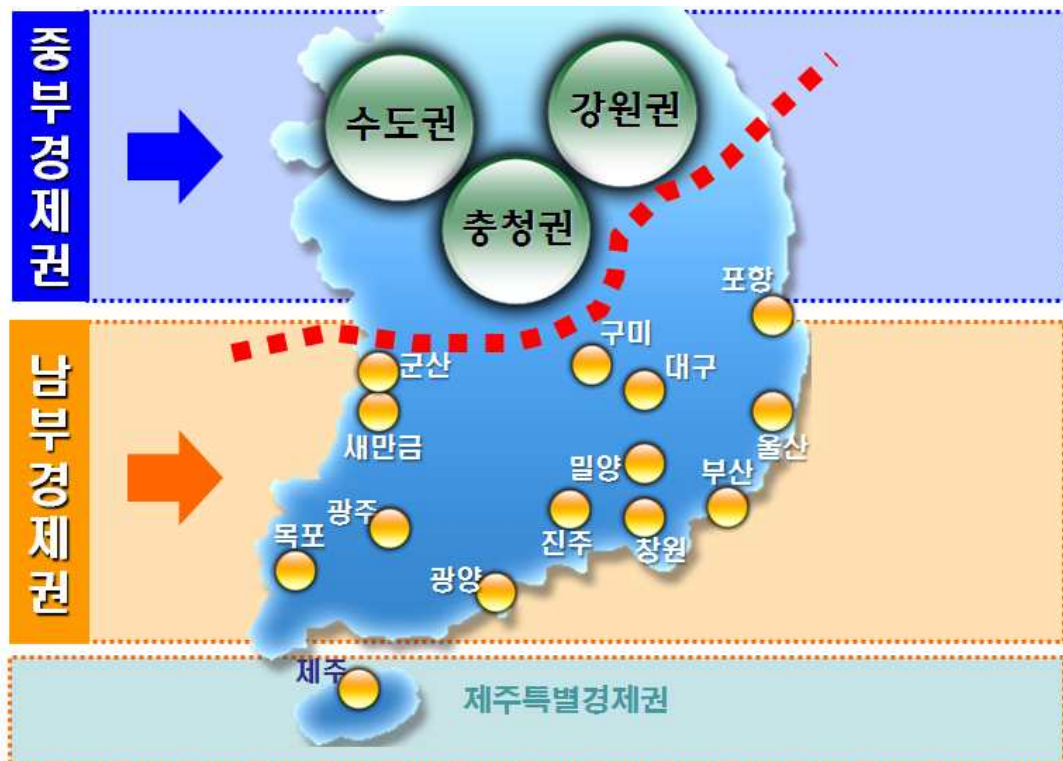
- 영국 : 도시권(City-Regions) 정책
 - 런던권 집중에 대응, 8개 지방도시권 육성
 - ⇒ 개발계획 공동 수립, 도시권 협약 체결, 전략분야 공동 추진
- 일본 : 열도 전체를 1개 초광역경제권화
 - 장기적으로 슈토권, 킨키권, 추부권 등 3개 대도시권을 통합 (리니아 신칸센 580km/h)



▲ 동북아의 광역경제권

■ 대한민국, 2+1 광역경제권 체제로!

- 현재 중부경제권 구축 중 : 수도권 + 충청권 + 강원권
 - 서울 : Megacity, 인천 : 관문도시, 경기도 : 지식기반 제조업
 - 충청도 : 기초연구 + 첨단제조업, 강원도 : 여가·휴식공간
- ⇒ 도쿄권, 상하이권 등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세계 속의 광역경제권으로



- 남부경제권은 광역경제권 형성 여건 미성숙, 특히 대경권이 취약
 - 1970~198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심 : 현재 쇠퇴 일로
 - ※ 울산, 창원, 포항, 구미, 광양 등의 산업도시는 아직 건재
 - 대도시인 부산, 대구, 광주의 거점 기능 약화
 - 중소도시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취약
 - 농어촌도시는 자생적 경제력 상실
- ⇒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충청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③ 지방의 위기, 대구경북의 위기

■ 지방의 위기

- 장기간의 중앙정부 주도적 정치·행정체제, 수도권 중심 발전 구조로 지방의 지속적 쇠퇴와 위기 상황 직면
 -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 체제
 - 지방분권화의 지지부진
 - 지방재정의 약화
 - 수도권 중심의 사회경제 구조로 불균형 심화

■ 대구경북의 위기

- 전반적 지방 위기 구조로 인구 감소, 도시 발전 위축
- 1981년 시·도 행정체제 분리로 불필요한 경쟁 및 갈등 구조 형성
-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 낙후, 신성장동력 부재로 지역경제 쇠퇴
- 국가성장축의 서해안 이동, 국민·참여정부의 정치적 홀대로 쇠퇴 가속화
- 대구시는 경제 침체와 활력 상실로 중추관리 기능, 성장주도 기능 약화
- 지방정부의 비현실적 발전전략과 비효율적 사업 추진으로 성과 부진
- 중부경제권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흡인력과 압박
 - ⇒ 대구경북 경제 종속, 정체성 상실, 지역성 와해 위기, 장래 전망 불안

■ 새로운 돌파구 마련, 활력과 희망 창조 필요

-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 필요
-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내부의 역량과 자원, 경험과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필요
- 주요 목표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신성장동력 창출, 대구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와 중추기능 회복, 경북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강화와 농어촌 활성화로 집약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위협 받는 대구경북

4 『뉴 디자인 대구경북』 수립, 이렇게

1. 연구의 목적

■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 주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고부가가치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 발굴로 미래에 대한 희망 확보
- 전통산업과 농업의 획기적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대구경북인의 자긍심 회복과 미래의 행복한 삶 보장

- 대구경북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
-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품격있는 삶 도모
-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회투자형 복지체계 형성

■ 도시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상생방안 모색

- 중심도시 대구의 중추기능 및 성장주도 기능 회복,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주요 권역별 거점도시의 특화와 성장역량 강화로 주변지역 발전 견인
- 농어촌 소도시의 정주여건 조성, 농어촌 활성화 기반 마련

■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및 사업 도출

- 주변 상황, 지역의 역량·자원·경험·문화·환경 등을 고려한 현실적 전략 수립
- 실천 가능하고 실효성이 큰 전략사업의 도출
- 권역별·시군별 차별화(uniqueness), 특성화(specialization)로 상생 도모

2. 연구 범위와 프로세스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2020년, 3단계로 구분 수행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23개 시·군 + 주변 지역



■ 「뉴 디자인 대구경북」의 성격과 역할



■ 연구 단계별 프로세스



3. 접근방법

■ 치열한 자기반성과 국내외 환경변화 검토

- '80년대 이후 대구경북의 정책, 시장대응, 전략, 사업 등에 대한 재평가와 반성
- 21세기 메가트렌드와 패러다임 변화, 국내외 상황, 정부 정책동향 등과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
- 대구경북의 현재 상황, 위상,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식 추구

- 기존의 성장지향적·외생적·하향적 지역발전 이념과 전략에 대한 의문과 재고
 - 출산을 저하, 지역인구의 유출 여건에서 도시의 대규모 양적 성장 기대 곤란
 - 국가예산 지원 감소, 공공투자의 한계, 대규모 민자 유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와 외부자본에 의존하는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주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생적·상향적 지역발전 전략의 적극적 검토
 -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우선적 관심
 - 지역 내부의 기존 산업·기술·문화를 토대로 지역경제구조 재구축 지향

■ 대구경북 통합적 접근

- 대구경북을 하나의 계획 대상지역으로 보고 수립
- 하나의 계획 공간, 공동 발전목표, 자원의 공동이용 원칙 적용

■ 전략적 접근

- 한정된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 효과와 효율 도모
-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 및 전략사업 모색
-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외생적 전략을 당분간 유지하되, 지역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내생적 발전 전략을 확대·강화

제 2 장



대구경북의 현실과 미래



New Design

Daegu

Gyeongb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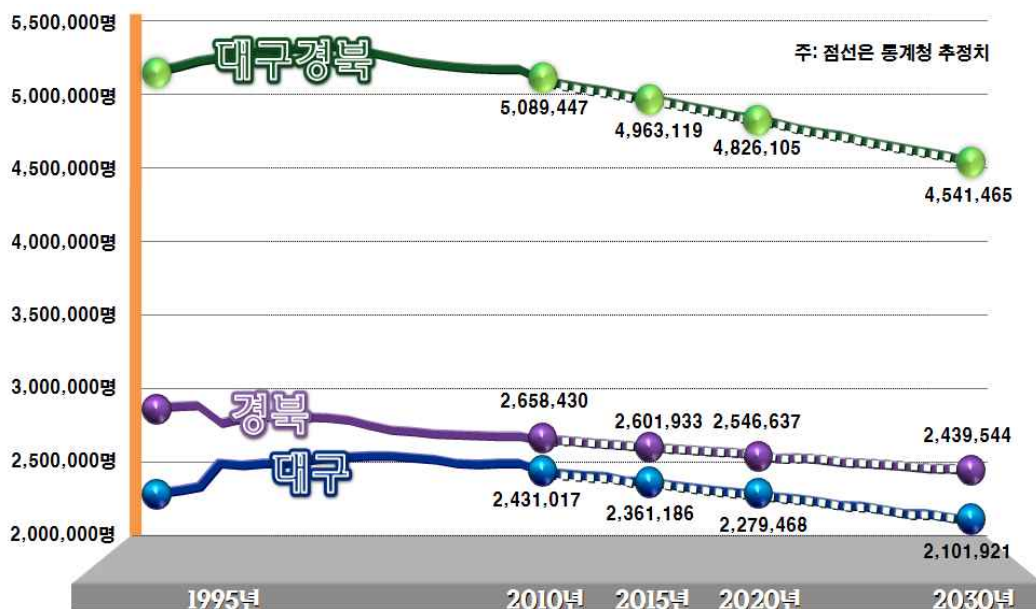
대구경북의 현실과 미래

I. 대구경북의 과거와 현재

① 과거의 추세와 현재의 위상

■ 전반적 인구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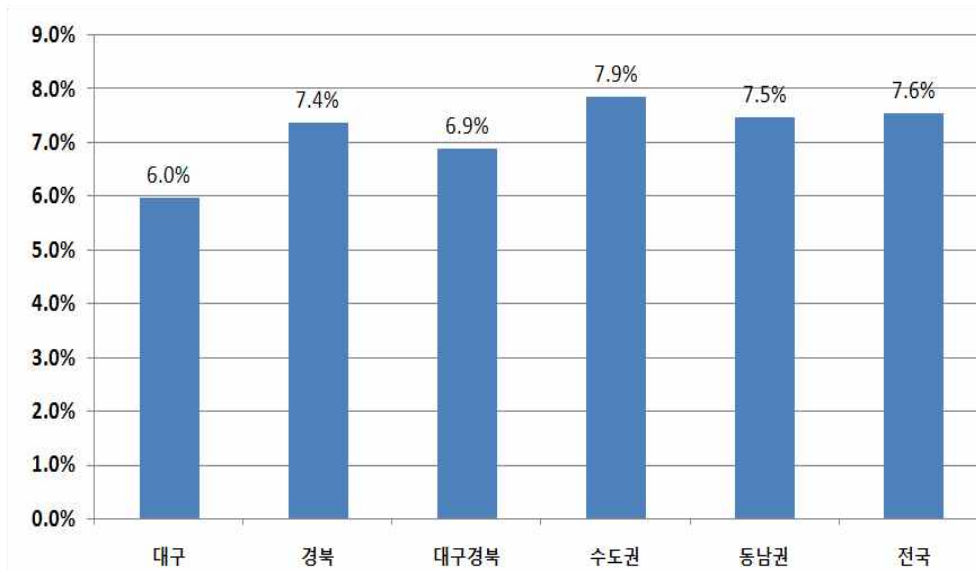
- 대구경북 인구는 1980년 495만명이었으며, 2000년 532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2009년 말 기준 516만명(대구 249만명, 경북 267만명)
- 최근 30년간 전국 대비 인구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
 - 1980년 13.2% → 2009년 10.4% → 2020년 ?
- 통계청 추정에 의하면, 2020년 483만명(대구 228만명, 경북 255만명), 2030년 454만명(대구 210만명, 경북 244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



▲ 대구경북 인구 변화 추이

■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유출 등 경제적 침체 지속

- 1998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9%로 전국 평균 7.6%에 미달
- 지역총생산(GRDP) 규모, 비중, 상대적 순위 전국 하위수준으로 저하
-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하청구조의 생산 공장
 -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지속적으로 유출(외부 이전)
 - 대기업의 이전으로 관련 중소기업(협력업체) 이전 유발
 - 관련 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산업의 쇠퇴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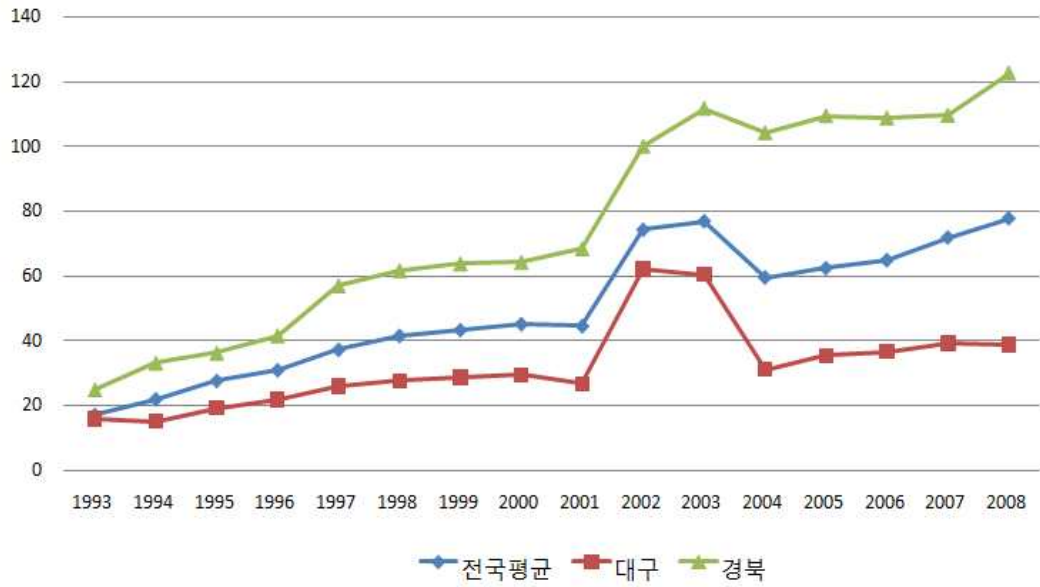


▲ 1998~2008년 10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시장가격 기준)

■ 산업구조의 낙후와 정주기능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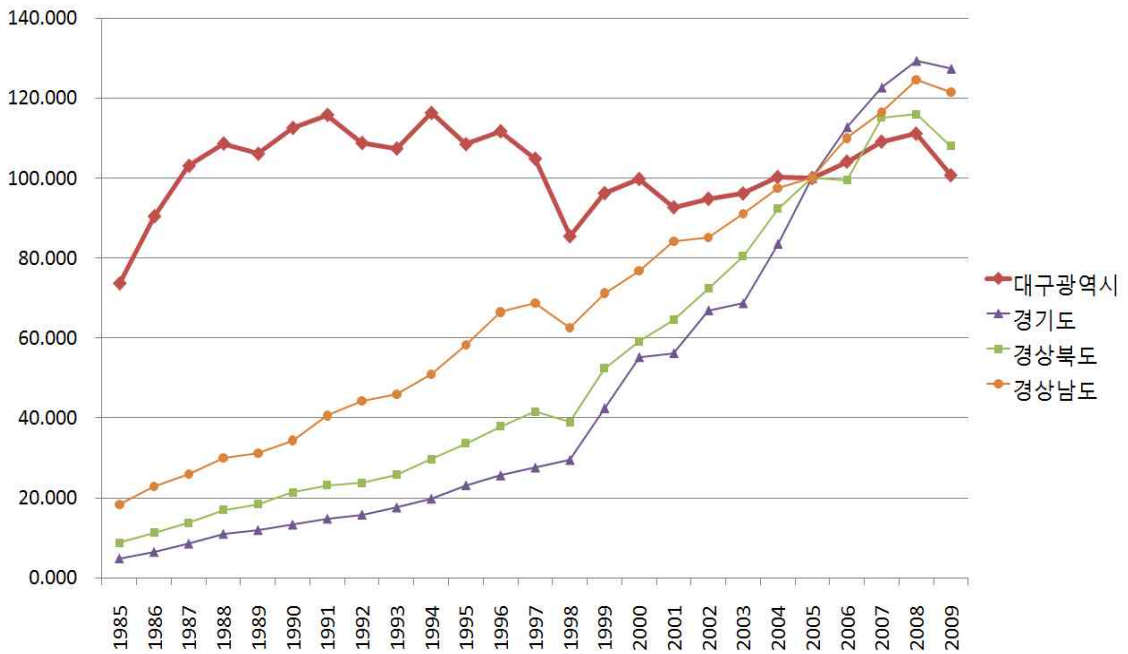
- 사업체 수, 산업별 종사자 수(대구경북 합계)가 1980년대에는 2차>3차>1차 순, 현재는 3차>2차>1차 순
-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가 수도권·경남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격차 확대
-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경북은 지속적 상승, 대구는 90년대 수준의 답보 상태

단위:백만원



▲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비교

주: 2002년, 2003년 통계자료는 회사법인만 조사한 결과(비법인 소형 제조업체 제외)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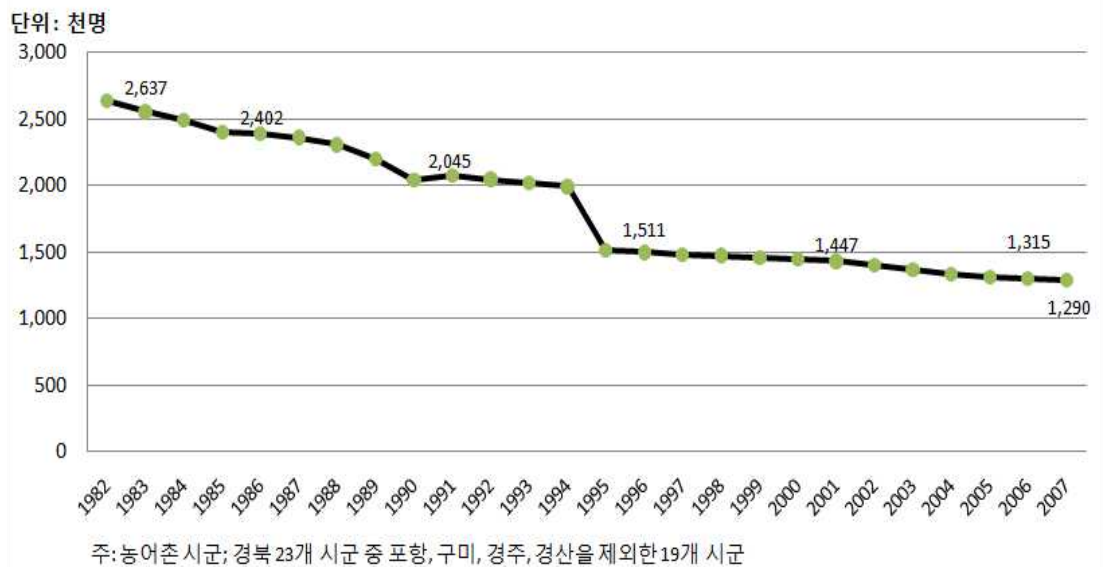


▲ 대구경북 및 주요 도시 산업생산지수

▼ 대구시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1994~2008)

(단위 : 개, %)

구 분	전체 사업체수	종업원 규모별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중	300인 이상 (대기업)	비 중
1994년	151,222	151,086	99.91	136	0.09
1995년	166,296	166,166	99.92	130	0.08
1996년	168,639	168,516	99.93	123	0.07
1997년	171,002	170,886	99.93	116	0.07
1998년	164,025	163,933	99.94	92	0.06
1999년	171,187	171,100	99.95	87	0.05
2000년	174,478	174,406	99.96	72	0.04
2001년	178,294	178,225	99.96	69	0.04
2002년	182,277	182,198	99.96	79	0.04
2003년	182,766	182,693	99.96	73	0.04
2004년	182,005	181,929	99.96	76	0.04
2005년	171,664	171,589	99.96	75	0.04
2006년	174,820	174,742	99.96	78	0.04
2007년	175,597	175,513	99.95	84	0.05
2008년	174,315	174,215	99.94	100	0.06



▲ 경북 19개 농어촌 시·군 인구 감소 추이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어업 비중 감소로 농어촌 정주 기능 약화
 -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 지속

- 농어업의 경쟁력 약화, GDP 비중 감소, 농어가 소득 상대적 낮은 수준
- 주거·SOC·교육·의료·문화 등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구 유출 촉진

■ 중심도시 대구의 쇠퇴와 위상 저하

- 1981년 경북과의 행정적 분리로 경쟁 및 갈등 구조 형성
- 90년대 이후 대구의 지역경제 침체로 중심도시 기능 및 위상 약화
- 1인당 GRDP 및 성장률이 광역시 중 최하위
- 주력산업의 쇠퇴, 대기업의 이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부재
- 대학의 위상 약화, 인적자원 유출로 전통적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약화
- 전반적 도시 이미지도 추락

▼ 시·도별 1인당 GR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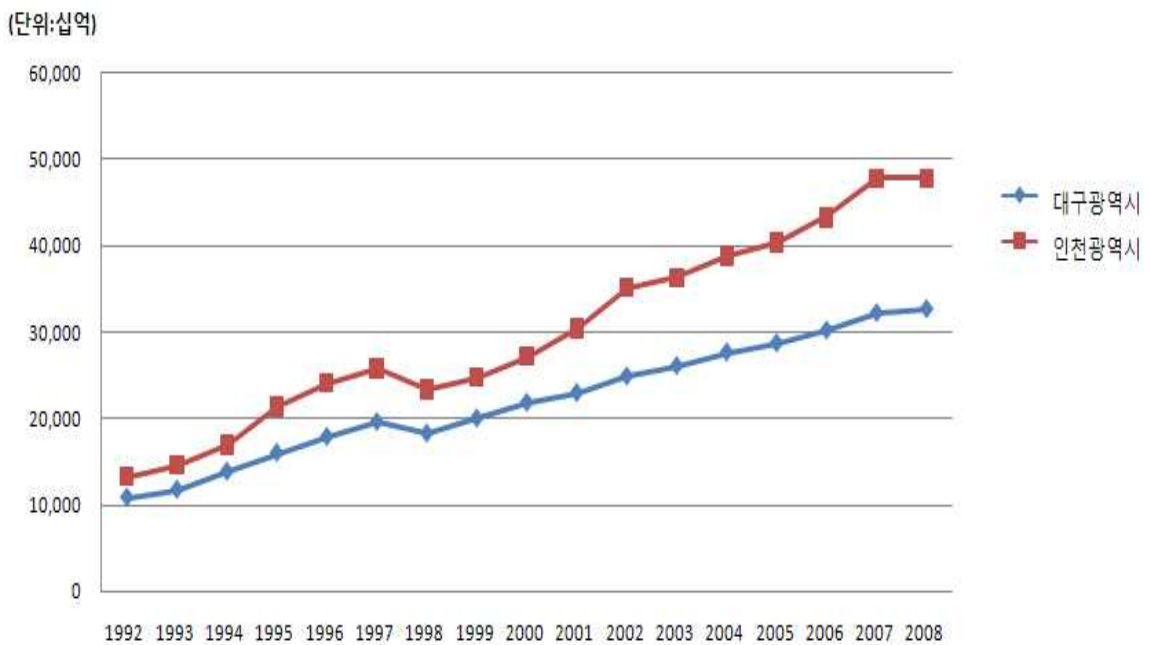
(단위: 천만 원)

행정구역 (시·군·구)별	1995		2000		2005		2008	
	1인당 GRDP	순위	1인당 GRDP	순위	1인당 GRDP	순위	1인당 GRDP	순위
전국	9,174		12,648		17,820		20,761	
서울특별시	10,284	2	14,679	3	20,546	5	24,349	5
부산광역시	6,715	14	8,989	15	13,212	15	15,761	12
대구광역시	6,469	15	8,660	16	11,451	16	13,124	16
인천광역시	9,047	8	10,654	10	15,535	9	17,762	8
광주광역시	7,482	12	9,574	14	13,480	13	15,285	15
대전광역시	7,624	11	10,110	11	13,770	12	15,678	14
울산광역시	0	16	27,839	1	38,337	1	47,112	1
경기도	9,371	6	12,433	8	15,828	8	17,618	9
강원도	8,014	10	10,912	9	15,210	10	17,441	10
충청북도	9,862	3	13,250	5	17,948	7	19,811	7
충청남도	9,302	7	15,236	2	24,201	2	28,721	2
전라북도	7,088	13	9,653	13	13,378	14	15,881	11
전라남도	9,728	4	13,062	6	21,765	4	27,299	3
경상북도	9,599	5	14,435	4	22,971	3	25,323	4
경상남도	11,795	1	12,797	7	18,431	6	23,031	6
제주도	8,048	9	9,865	12	14,287	11	15,756	13

▼ 경북대 대학평가 종합부문 순위의 연도별 변화 및 비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북대	11	16	16	17	16	18
부산대	16	12	13	13	15	20
아주대	15	14	16	15	18	13
중앙대	12	12	13	14	13	12

자료 : 중앙일보교육개발연구소(<http://www.jedi.re.kr/>), 대학평가 연도별 종합순위리포트



▲ 대구와 인천의 지역총생산규모 변화 추이 비교

■ 경북 중소도시의 지속적 쇠퇴, 인구 감소와 정주여건 악화

- 포항, 구미 외에는 산업도시 부재, 수도권 집중 추세와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포항·구미의 전망도 불투명
 - 농어촌 소도시 : 인구 감소, 정주기반 악화, 인구유출 가속화 악순환
 - 지역 인적자원과 혁신역량, 가동 자원(자본, 기술 등)의 부재로 새로운 발전 동력 약화
- 수도권 집중, 충청권의 급격한 성장,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상대적 성장 우세 등으로 대구경북의 상대적 위축 추세 지속 우려

② 총체적 문제점 진단 및 장래에 대한 우려

■ 대구경북의 현실 진단 및 문제점 요약

- 전반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기반 약화
- 산업구조의 낙후와 생산력 약화로 인한 고용(일자리), 소득, 기술개발, 서비스 부문 등 경제 및 산업연관구조의 허약
- 중심도시 대구의 활력 및 위상 저하로 광역도시권의 중추도시 기능 약화
- 인적자원, 자본, 기술, 문화, 재정력 등 지역 자원과 역량의 결핍 또는 약화로 내적 혁신 창출의 한계 노출
- 실용도 높은 근거리 국제공항 부재 및 국제항만의 미비, 보수적 의식구조 등 세계화(Globalization) 기반 미흡
- 경북 북부지역의 상대적 저발전(Underdevelopment)으로 위화감과 갈등 확대
- 수도권 집중 추세, 충청권의 급격한 성장, 동남권(부울경)의 상대적 성장 우위로 인한 위협, 대구경북의 분화와 정체성 약화 가능성
- 국가주도 외생적 지역발전 정책 : 중앙정부 의존 마인드, 내생적 자원과 역량 축적 미흡, 지역자본 형성 및 금융시스템의 미흡,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 대구경북의 장래에 대한 우려(현 상황 지속 시의 부정적 전망)

-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지역의 전국적 비중과 위상 하락 우려
 - 2030년 인구는 대구 210만명, 경북 244만명으로 감소(통계청 전망)
-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인구 유출 가속화 등 악순환 지속 우려
- 산업구조 개편 및 고도화의 실패로 시장 창출 실패, 생산력 약화 및 부가가치 저하, 기업 유출 및 축소 우려
- 대구의 인구 감소와 중추기능 약화로 영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하락 우려
 - 대구의 위상이 떨어질 경우 경북 북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는 부산·울산권으로 종속되어 대구경북권이 사실상 와해 우려

대구경북의 현실과 미래

II. 패러다임 변화와 메가트렌드

① 세계 및 국내 여건변화와 시사점

1.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와 메가트렌드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 세계인구, 현 69억명에서 2040년까지 약 88억명으로 증가 예상
- 평균 출산율은 낮아지고 수명은 길어져 인구구조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010년 7.6%에서 2040년 14.2%로 증가)

■ 기후변화와 녹색혁명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효과로 지구대기 평균기온 상승, 심각한 각종 재앙 우려
-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본격화
- 교토의정서(1997) 이후 EU의 ‘기후변화종합법’(2009), 영국의 ‘기후변화법’(2008) 등 관련 규제 확대
- 각국이 녹색혁명 기반 정책 수립 추진 중 : 미국의 ‘Green New Deal’, 일본의 ‘저탄소사회 비전’,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등
- 탄소배출권 시장, 대체에너지 개발 등이 산업의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

■ 에너지 문제의 본격화

- 현 추세 시 세계에너지 수요 2030년까지 현재의 1.4배로 증가
- 화석에너지의 고갈이 예상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과제 대두

■ 세계 식량부족 문제

-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 감소, 사막화·도시화에 따른 농경지의 감소 등으로 세계적 식량위기 가능성 가시화
-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Agflation] 가능성,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 문제 등 대두

■ 세계화와 더불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 중

- 90년대 이후 세계화와 함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득세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1997), 글로벌 금융위기(2008)의 발생으로 찬반 논란 비등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양극체제(Bi-polar System)에서 90년대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중심의 일극체제(Unipolar System) 형성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 EU의 통합경제체제화, 다수의 신흥개도국 등장, 다국적 기업·미디어·NGO의 영향, G20 체제의 형성 등으로 무극체제(Non-polar System)로 진전되는 추세

■ 디지털혁명(Digital Revolution)의 가속화

- 가상공간(VR)과 아바타(Avatar)로 촉발된 멀티페르소나(Multi-persona) 현상이 미래사회에서는 일반화 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Ubiquitous Culture, Cyber Community 형성, UCC의 확대 등으로 새로운 사회문화 패턴 형성 전망

■ 세방화(Glocalization)와 대도시권 경쟁체제(Megacity Competition) 본격화

-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응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역화(Localization) 현상이 함께 시현
-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과 성장이 일어나면서 국가 간 경쟁체제보다 도시 간, 특히 세계적 대도시권(MCR, Megacity Region) 간 경쟁이 중요하게 대두

2. 동북아시아의 정치 · 경제적 변화와 영향

■ 중국의 부상, 양날의 칼

-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을 능가하는 Superpower로 부상
-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정치적 · 외교적 · 군사적 영향력 증대 예상
-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성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내포

■ 한반도 긴장 지속과 함께 국제적 역학관계도 당분간 현 상태 유지

- 김씨 일가의 세습체제 당분간 유지
- 경제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으로 체제 유지 전망
- MB정부는 비교적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3. 국내 여건 및 정책 변화

■ 국가적 경제성장과 국내 지역간 · 계층간 격차

- 국가적으로는 경제규모 증대 및 세계경제 선두권 진입
 - 경제규모 세계 15위(2009), 2010년 G20 의장국으로 녹색성장 주도
- 국내적으로는 지역간 · 계층간 격차 및 갈등 구조 상존
 - 수도권과 그 외의 지방간 격차, 사회계층간 소득 · 교육 · 문화 등 격차 심화

■ 국가주도 정치 행정 체제와 지방자치 정착의 한계

- 정책결정권의 중앙 집중 지속, 지방분권화 지지부진, 지방재정의 취약
- 혁신도시 등 강제적 자원배분에 의한 지역발전 논리 견지, 실효성은 의문

■ MB정부 지역발전정책, ‘지역 자율’과 ‘지역 책임’ 강조2)

- 지역정책에서 ‘균형’보다는 ‘경쟁력’을 강조

2) 한경원, “신지역발전정책과 지역개발 : MB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한국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

- 향후 지역정책에서 수도권에 대비되는 특별한 혜택이나 인센티브 기대 불가능
 - 지난 정부처럼 수도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방에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MB정부의 기본 방침
- 각 지역은 과거와 같이 국가가 특정 지역을 입지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공공투자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과 조건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

4. 대구경북에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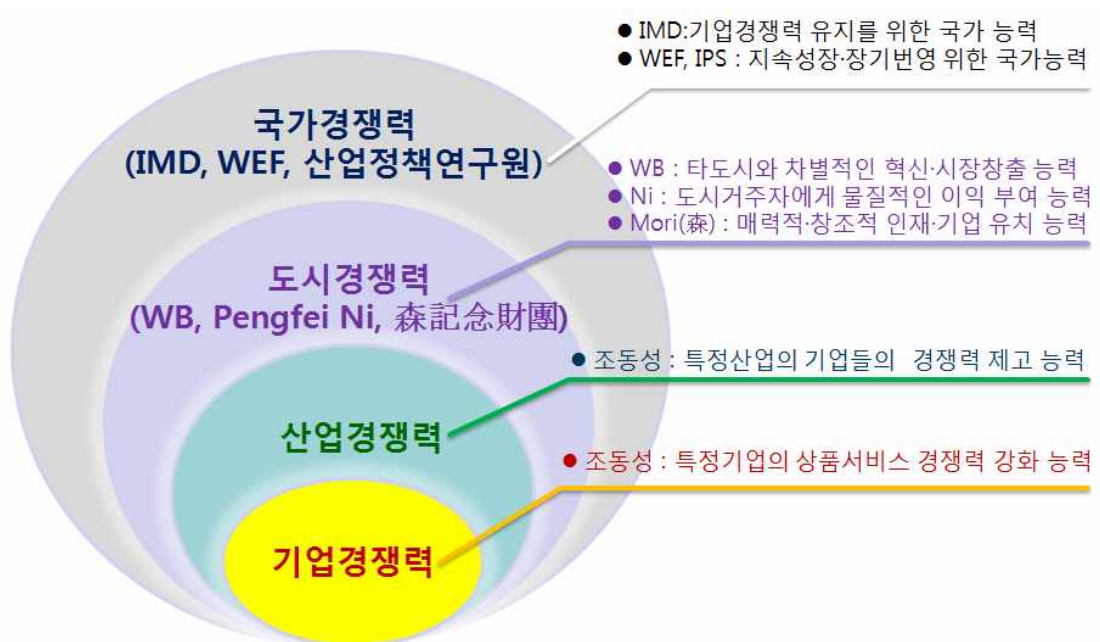
- 대구경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 변화와 트렌드가 직·간접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가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모든 계획의 수립에 이를 고려
 - 이들 요인들은 위협적일 수도 있지만 또한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은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서해안 지역은 유리하고 대구경북은 불리하다는 것은 단견으로 봐야 할 것임
-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거와 같은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과 도시 차원에서 접근 필요
 - 국가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과 도시의 상호이익을 원칙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
-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원칙(기본방향)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
 - 예컨대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지방분권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전되지 않는 것이 현실
- 따라서 과거처럼 중앙정부의 지역사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특성과 강점에 입각,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전환
 - 즉 중앙정부 추진사업의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기보다 독자적 사업의 수립·추진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사업은 가능성과 실효성이 높은 사업만을 선택하여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

② 도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1. 도시경쟁력 이론

■ 도시경쟁력의 개념

- ‘타 도시와 차별화 되는 혁신·시장 창출 능력’(World Bank), ‘도시 거주자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능력’(중국사회과학원),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인재·기업을 유치하는 능력’(일본 森기념재단)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음



▲ 도시경쟁력의 개념

■ 도시경쟁력 왜 강화해야 하는가

- 도시는 정주기반이자 생산기반, 대학, R&D, 행정기관 등 주요 시설의 집적지로 혁신과 창조의 창출 거점
- 현재 전 세계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하며 2050년까지 70%로 증가할 전망
- 특히, 대도시권(MCR)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서 대도시권 경쟁력이 주요 과제로 부상

■ 도시경쟁력의 요소 및 평가

-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와 영향 요인은 다양하며 연구자에 따라 상이
- 중국사회과학원 : 세계 50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7개 부문의 104개 해석지표로 구분하여 평가³⁾
- A.T. Keaney - Foreign Policy(FP) : 5개 부문, 15개 항목에 대하여 세계 60개 도시 평가⁴⁾
- Master Card사 : 글로벌 상업중심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7개 분야로 구분하고 72개 세부지표로 나누어 세계 상업중심도시 75개 평가⁵⁾
- 삼성경제연구소 : 1997년 3개 부문, 64개 지표를 설정하여 세계 30개 도시의 경쟁력 수준 평가⁶⁾
- 인천발전연구원 : 도시위상, 국제화, 성장여건으로 나누어 14개 지표 구성, 우리나라 7개 대도시를 포함한 한국과 중국의 19개 도시 경쟁력 평가(2009년)

▼ 중국 사회과학원 글로벌 도시경쟁력 분석 지표

대분류 (세부지표 개수)	중지표 항목(40개)	대분류 (세부지표 개수)	중지표 항목(40개)
기업구조 (14)	기업문화	소프트웨어 환경 (17개)	시장제도
	기업제도		시장관리
	기업관리		사회관리
	기업운영		공공서비스
	상표		전략방향
산업구조 (12개)	기업성과	생활환경 (16개)	세금부담
	제조업		자연환경
	서비스업		환경수준
	금융업		구매환경
인력자원 (12개)	하이테크기술분야	세계와의 연계 (15개)	요식업
	건강수준		거주
	문화수준		문화여가
	노동력		사회치안
기반여건 (18개)	인재		지리적 여건
	교육수준		육로
	인력비용		해운
	기초요소		항공
	금융시장		정보관련
	창조 환경		주민관련
	시장규모		기업관련

자료: 강승호,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9

3) 중국사회과학원,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Project*, 2006년, 2008년
 4) A.T. Keaney, "The 2008 Global Cities Index", *Foreign Policy(FP)*
 5) Master Card, *World Wide Centers of Commerce Index 2008*, 2009
 6) 김현주 외, 「세계도시경쟁력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1997

2. 대구시 도시경쟁력 현실

■ 중국사회과학원 분석 결과(2008년 기준)

- 세계 500대 도시 중 287위로 평가(서울 12위, 울산 162위, 부산 242위)
- 투입 부문 : 종합 247위, 기업의 질 384위, 글로벌 연계 324위로 특히 열악
- 산출 부문 : 종합 283위, 경제성장률 361위, 다국적기업 492위로 특히 열악
- 산업 : 종합 356위, 금융산업 361위, 미디어산업 455위로 특히 열악

▼ 중국사회과학원 평가 500대 도시 중 한국도시 경쟁력 순위

세계		한국		일본		중국	
순위	도시	순위	도시	순위	도시	순위	도시
1	뉴욕	12	서울	3	도쿄	26	홍콩
2	런던	162	울산	56	나고야	41	상하이
3	도쿄	203	대전	57	요코하마	64	선전
4	파리	221	인천	67	오사카	66	베이징
5	워싱턴	242	부산	90	카와사키	78	마카오
6	LA	287	대구	101	교토	112	타이페이
7	스톡홀름	295	광주	118	후쿠오카	130	광저우
8	싱가포르	-	-	125	사카이시	216	중산
9	샌프란시스코	-	-	128	치바	218	쑤저우
10	시카고	-	-	137	고베	222	항저우

주 : 일본의 경우 이외에도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500위권 내에 히로시마, 삿포로 등 12개 도시가 추가적으로 포함되며, 중국은 .톈진, 다롄, 우시 등 50개 도시가 추가 포함

■ 강승호(2008)⁷⁾ 동북아 주요 도시 경쟁력 분석

- 종합 순위 19개 도시 중 17위로 낮은 수준
- 일반도시 현황 순위 14위, 성장여건 순위 13위
- 국제화 여건 순위 19위로 최하위 수준

7) 강승호, “동북아 주요도시의 경쟁력에 관한 비교”, 「동북아경제연구」 Vol. 20, No. 1, 2008

▼ 동북아 19개 도시 경쟁력 순위(국제화 관련 부문)

도시명	공항 여객수	공항화물 처리량	운항 횟수	공항	순위	컨테이너 물동량	선석수	항만	순위	국제연계 기반	순위
가중치	0.037	0.037	0.025	0.0991		0.029	0.033	0.062		0.161	
베이징	2.12	1.80	1.53	5.4509	6	1.13	1.07	2.20	15	7.65	8
톈진	1.58	1.61	1.02	4.2175	14	1.30	1.45	2.75	9	6.97	12
파렌	1.63	1.62	1.06	4.3044	13	1.22	1.41	2.63	11	6.93	13
상하이	2.14	2.21	1.57	5.9196	3	1.75	2.17	3.92	3	9.84	3
칭다오	1.63	1.61	1.08	4.3228	12	1.35	1.45	2.80	8	7.12	11
광저우	1.88	1.75	1.30	4.9409	7	1.29	1.36	2.65	10	7.59	9
선전	1.79	1.73	1.23	4.7385	8	1.68	1.79	3.47	5	8.21	6
서울	1.77	1.68	1.15	4.5943	10	1.13	1.07	2.20	15	6.80	14
부산	1.67	1.64	1.07	4.3717	11	1.56	2.08	3.64	4	8.01	7
대구	1.57	1.60	1.00	4.1643	16	1.13	1.07	2.20	15	6.37	18
인천	1.98	2.41	1.26	5.6506	4	1.17	1.45	2.62	12	8.27	5
광주	1.58	1.60	1.00	4.1757	15	1.13	1.07	2.20	15	6.38	17
대전	1.57	1.59	0.99	4.1473	18	1.13	1.07	2.20	15	6.35	19
울산	1.57	1.59	0.99	4.1573	17	1.14	1.21	2.36	14	6.51	16
도쿄	3.08	2.60	1.86	7.5364	1	1.27	1.74	3.01	6	10.54	1
요코하마	1.55	1.59	0.97	4.1161	19	1.21	1.21	2.43	13	6.54	15
나고야	1.75	1.67	1.17	4.5947	9	1.21	1.65	2.86	7	7.45	10
싱가폴	2.05	2.18	1.34	5.5755	5	1.93	2.03	3.96	2	9.53	4
홍콩	2.20	2.68	1.44	6.3274	2	1.95	2.03	3.98	1	10.31	2
한국수도권	2.20	2.50	1.44	6.1287	3	1.69	1.45	3.15	6	9.28	5

자료 : 강승호, 동북아 주요도시의 경쟁력에 관한 비교, 「동북아경제연구」 Vol. 20, No. 1, 2008.

■ 대구시 경쟁력 :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중국사회과학원 분석 결과, 대구의 경쟁력은 세계 500대 도시 중 287위이며, 국내 7개 대도시 중 6위로 최하위권
- 부문별로는 글로벌 연계(324위), 다국적 기업(492위) 등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동북아 주요 19개 도시 경쟁력 분석에 의하면 대구시는 13~14위 정도의 하위 수준이며, 특히 국제화 여건은 최하위로 평가
- 향후 대구시에서는 특히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부문과 국제화 부문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

③ 지역주의 이념과 내생적 발전전략

1. 지역주의 이념의 대두

■ 지역발전 이념과 정책적 기반

- 지역계획의 기본목적 : 지역의 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것
-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의 의미 : 특정의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 조성과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김용웅, 2009)
-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 법·제도상으로 균형발전을 지역발전의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음
 -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균형발전의 의미
 -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고병호, 2010)

■ 지역발전 이론과 정책의 변화

- 지역발전 이론은 크게 성장모형, 재배분모형, 유연체제모형, 환경모형으로 발전·전개(김용웅, 2009)
- 성장모형 : 1980년대까지 개발연대의 지역발전 모형
 - 지역발전은 산업화와 총량적 경제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
 - 효율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국가주도적 하향적 접근방식(외생적 발전전략)
 - 전반적 저개발상태(Underdevelopment)에서 국가적 총량성장을 주목표로 하는 단계에서 채택되는 모형

- 재배분모형 :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인구, 산업, 시설 등)의 지방분산(재배분)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
 - 지역 SOC 개선, 고용촉진, 소득향상 등 가시적 지역격차와 불균형 개선이 목표
 -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효율성 위주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삶의 질 개선도 중시한다는 점에서 성장모형으로부터 진일보
 -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지역 자체역량 강화보다는 여전히 국가주도적 규제에 의한 재배분 방식을 취함으로써 부분적 효과 밖에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나(혁신도시, 세종시 등),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유연체제 모형 : 지역혁신과 지역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지역발전 모형
 - 지역의 내부적 재구조화를 통한 역량강화와 내생적 개발이 주된 전략
 -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가 지역혁신시스템(RIS)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였으나 제도의 정착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로 끝난 것으로 평가되며, 차선책으로 재배분모형으로 회귀
- 환경모형 : 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지역발전 모형
 - 전 세계적으로 이념적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도적·정책적으로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 내생적 발전 기반 없이 외생적 발전 전략만으로는 지속적·장기적 지역발전 불가능
 -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 흐름과 지역발전 성과, 시대적 추세 등으로 볼 때, 인적자원의 개발, 지역자본의 형성, 기술개발기반 구축 등 지역역량이라는 내생적 발전 기반 없이 외부에 의존하는 발전전략만으로는 일시적 성과는 있으나 효율이 낮고 더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 절대적인 저발전 상태나 지역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는 외생적 전략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에도 지역역량 강화라는 내생적 발전기반 확보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발전 이론의 비교

구 분	성장모형	재배분모형	유연체제모형	환경모형
지도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 경제적 합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 • 필요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 • 유연성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 • 환경보전의 원칙
패러다임의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지향적 • 경제적 합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지향적 • 사회학적 패러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지향적 • 지역주의 패러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 생태학적 패러다임
경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제
주요 개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경제발전 • 입지적 능률 • 성장거점과 대도시 지향적 발전 • 대규모 사업방식과 자본기술집약 • 중앙중심의 하향식 발전전략과 적극적 정부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의 재구조화 • 고용 촉진과 최소한의 소득 보장 • 내향적, 내부 수요 충족 • 소규모 비공식 부문 사업 • 도농통합적 영역 • 노동집약적 중간 기술의 활용 •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재구조화 • 내향적 투자 • 정보형 개발 • 신산업지구의 조성 • 유연생산체계에 조응하는 지역 공간 • 지방경영의 도입과 탈규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 지속개발 (ESSD) • 인간활동의 환경적 비용 고려 • 자원절약적 청정 기술 사용 • 경제와 환경의 동시 고려 • 에너지효율적 발전 방식의 모색 • 환경 보전 시범 도시의 육성
관련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전경제이론과 균형성장이론 • 진화주의이론 • 경제발전·국가발전 단계설 • 산업화이론과 근대화이론 • 경제기반이론과 투자확대이론 • 누적성장이론 • 성장극이론과 성장거점이론 • 불균형적 극화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향적 접근방법 • 최소소득 접근방법 • 기초수요 접근방법 • 상향식 발전이론 • 분배를 통한 성장론 • 종속이론 • 소규모발전론과 중간기술 • 정주권 구상과 도농통합발전론 • 주민중심전략 • 중간적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포드주의 • 지역주의 • 유연생산체제이론 • 혁신지향적 발전모형 • 신기술경제 패러다임 • 상황적응적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윤리론 •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 UN인간환경회의 • 생태발전론 • 나이로비선언 • 도쿄선언 • 리우선언과 지속가능한 발전

자료 : 고병호,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6권, 제2호, 1994.

2. 신지역주의와 내생적 발전전략

■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이념의 대두

- 경제 위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재정 악화, 국가 주도 지역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
- 지역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외부의존적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와 비효율성 인식
- 세계화로 인한 지역 간·도시 간 경쟁체제 형성, 일부 도시나 지역의 경우 국가보다도 앞서 나가려는 경향의 지역 우선주의 출현
- 기업적 지방정부 체제,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 지역 간 경쟁의 심화 등에 따라 지역의 내부역량 강화 필요성 인식

■ 신지역주의의 특성과 지향 방향

- 경제성장의 공간적 측면, 즉 지역화(regionalization) 강조 :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활, 지방분권 등
-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발전 병행을 도모하며, 공간의 질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중요 목표로 설정
- 물리적 격차 해소와 균형, 고용·소득 차원의 성장을 넘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고병호, 2010)
- 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 지역별 독창성, 즉 역사와 문화적 개성, 환경성을 강조하고 상향적 거버넌스 추구(이재하, 2003; 김태일, 2009)

■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의 필요성

- 기본개념 : 지역발전의 자원이나 원동력을 지역내부에서 동원하는 개발 방식(김용웅 외, 2009)
-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외부 대기업 유치에 의존하기보다 지역내부의 기술·산업·문화를 토대로 지역산업연관이 존재하는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학습하고, 계획하고, 경영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꾀하는 전략(고병호, 2010)

■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특징

- 지역 내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지역발전 추진
- 주민의 소득, 고용, 교육, 보건 등에 우선순위 부여
- 지역 내부 사회 및 생산체계의 구조적 개선 도모에 역점
-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은 내부수요와 역량 증진에 따라 점진적·지속적 추진

■ 평가와 한계점

-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내부수요와 자원에만 의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저발전 지역에서는 내부적 역량과 자원이 부족하여 수요 유발과 혁신의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삶의 질 개선에 지나치게 자원이 투입될 경우 경제적 재생산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음
- 내부수요에 치중할 경우 외부를 향한 수출산업이 약해지고 화폐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음

■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에 기반을 둔 주요 지역정책 과제⁸⁾

- 지역정체성의 확립, 권역 간·도시 간 결속력의 향상과 잠재 에너지 결집
- 살기 좋은 도시(livable city)와 환경의 조성
- 삶의 질과 품위 향상
- 지역중심구조의 인프라 구축
- 지방금융체제 구축과 지역자본 형성
- 교육 수준, 지식 수준의 향상과 지식자산의 축적
-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유지
- 지역기업 간 네트워크와 산업연관구조의 형성

8) 한국도시행정학회, “동아시아 수도권의 지역경쟁력 강화방안”(2001, pp. 33-34)의 내용을 기초로 대구경북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구성

- 지역상품, 지역자산에 대한 수요창출 및 마케팅
- 문화발전을 통한 지역매력 및 브랜드 가치 창출
- 행·재정체제 개혁을 통한 지자체 재정력 및 행정서비스 향상

■ 대구경북의 선택 : 내생적 발전전략과 외생적 발전전략 병행

- 내생적 지역발전 이론은 이념적 우월성과 함께 시대정신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
-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부적 역량과 자원의 확보가 상당 수준 형성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
- 대구경북의 경우 현재의 내부적 역량과 자원 측면에서 내생적 전략만으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과 수준에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 여지
- 따라서 당분간 외부자본의 활용, 첨단기술의 도입, 국내외 분업네트워크 형성, 외부지향형 생산구조의 유지 등 외생적 발전전략을 유지하면서, 지역인적자원의 양성, 기술의 개발, 지역자본의 형성, 지역 매력도와 브랜드가치 향상 등 내생적 발전전략을 병행하고, 점진적으로 내생적 사업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전략이 유효
- 또한 도시경쟁력의 확보가 불가피한 과제라는 점에 입각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각 도시별 기본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에 따라, 클러스터모형(Cluster Theory), 지역혁신시스템(RIS) 등이 공간혁신모형, 네트워크도시모형, 창조도시이론, 사회적자본이론 등 다양한 신지역발전 이론의 지역적 적용 가능성 모색도 필요

대구경북의 현실과 미래

Ⅲ. 비전과 전략

① 비전과 목표

1. "활력 넘치는 희망찬 대구경북 창조"를 비전으로



■ 비전 수립의 기반

- 대구경북의 당면 과제인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여 미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도록 설정
- 세계와 국내의 다양한 여건변화와 시대흐름을 충분히 반영
-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에 1차적 관심을 두고 추진

■ 비전의 키워드와 의미

- 활력(Energy) : 지역경제 회복이 당면 과제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활력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사회적·문화적 활력도 지속적으로 함께 도모
- 희망(Hope for Great Daegu-Gyeongbuk) : 대구경북은 오랜 역사적 전통과 함께 한반도의 중심을 형성했던 지역이며, 근현대사에서도 수많은 인재의 배출, 학문의 진흥, 산업의 발전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주도했던 위대한 지역으로서의 자긍심 보유
- 그러나 최근 경제적 침체와 어두운 장래 전망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부분적으로 비관론마저 제기
 - 이러한 불안과 비관은 지역 정체성의 약화와 인구 유출, 지역이미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비전과 목표, 실현가능한 전략과 사업 등을 제시하여 지역에 희망을 주입
- 창조(Creativity) : 과거의 답습과 기존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최근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대두
 - 국가계획의 단순한 수용이나 타 지역의 사례를 모방하기보다 우리 지역의 고유 자원, 경험, 역량, 강점을 살려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모색

2. 기본목표와 세부목표

■ 고소득 일자리 창출 : 부(富)

- 주력산업의 첨단화
-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기업 중심 R&D 체계 구축
-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 문화·관광산업의 글로벌화

■ **격조 높은 대구경북인으로 거듭나기 : 사람**

-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
-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만들기
- 수준 높은 문화기반 조성
- 건강한 시민 되기
- 문화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 의식개혁

■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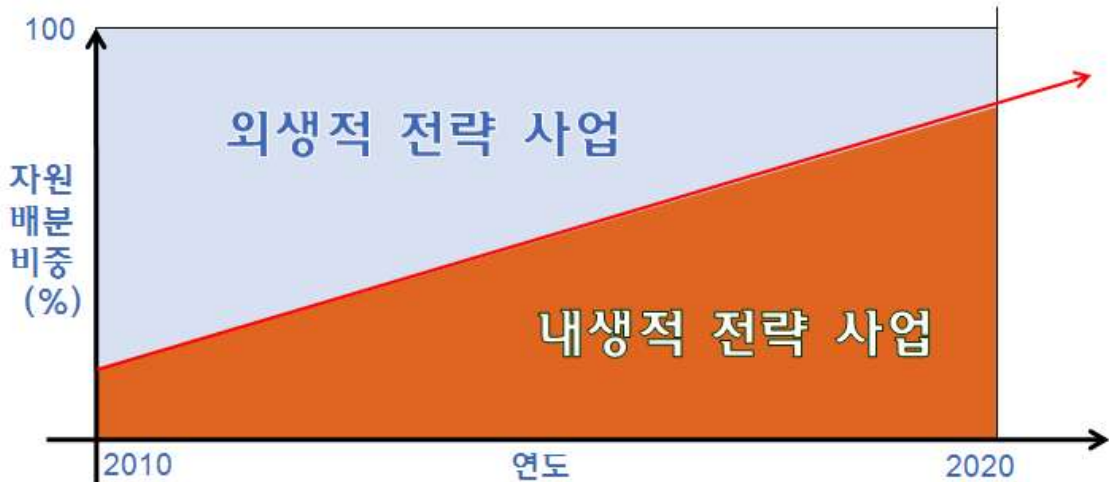
- 도시권별 특성화·차별화로 경쟁력 확보
- 도심 재창조와 활력 창출
-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자원순환형 도시 구현
- 세계로 열린 SOC 확충



3. 기본전략

■ 내생적 · 외생적 발전전략의 병행

- 인적자원 양성, 응용기술 위주 R&D, 지역자본 형성, 지역브랜드 개발 등 창조적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내생적 발전에 역점
- 기존의 시설, 자산, 경험, 기술, 인력 등 지역 내부자원의 적극적 활용
- 단, 당분간 외부자본의 유치, 첨단기술 도입 등 외생적 전략 병행



▲ 내생적 · 외생적 전략의 병행

■ 상생(Win-Win)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차별화

- 지역 내, 지역 간 Network 구축 : 행정적 · 기능적 협력기구 등
- 사회적 소통과 상생의 도모 : 계층 간 · 세대 간 소통시스템 등
- 커뮤니티차원의 복지체계 등 균형적 삶 도모

■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

- 지역의 강점과 비교우위 활용 극대화
- 지역의 자연적 특성, 역사적 · 문화적 자산 창조적으로 활용
- 지역 내 시 · 군별 차별화 전략 : 독창적 브랜드 효과, 갈등의 비용 최소화

2 주요 거시지표 전망

■ 뉴 디자인(New Design) 거시경제지표 : 대구

▼ New Design 계획 주요 거시지표 전망 : 대구

기본지표		2000년	2008년	2015년	2020년
인구 (천명)	통계청 추정	2,524	2,490	2,361	2,279
	시계열 추정	2,524	2,490	2,464	2,444
	New Design 전망	2,524	2,490	2,567	2,633
고용률 (%)		58.4	56.4	56.6	58.6
1인당 GRDP(천원)		8,660	13,140	18,140	22,750
1인당 소비지출(천원)		8,474	12,819	17,695	22,196
제조업 생산지수 (2005=100)		100.2	111.2	109.0	115.8

주 : GRDP 소비지출은 시장가격기준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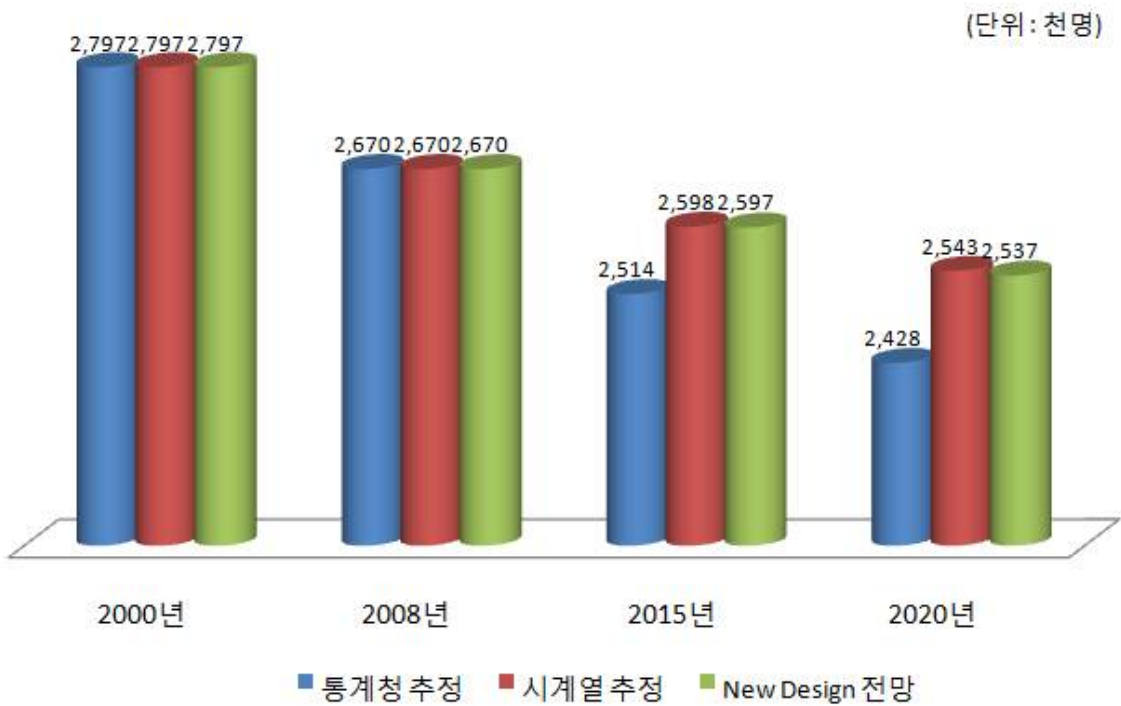


▲ New Design 대구 인구 전망치 비교

■ 뉴 디자인(New Design) 거시경제지표 : 경북

▼ New Design 계획 주요 거시지표 전망 : 경북

기본지표		2000년	2008년	2015년	2020년
인구 (천명)	통계청 추정	2,797	2,670	2,514	2,428
	시계열 추정	2,797	2,670	2,598	2,543
	New Design 전망	2,797	2,670	2,597	2,537
고용률(%)		62.9	62.7	61.5	61.0
1인당 GRDP(천원)		14,435	25,361	40,994	57,959
1인당 소비지출(천원)		8,213	12,459	20,138	28,472
제조업 생산지수 (2005=100)		59.1	116.1	150.7	1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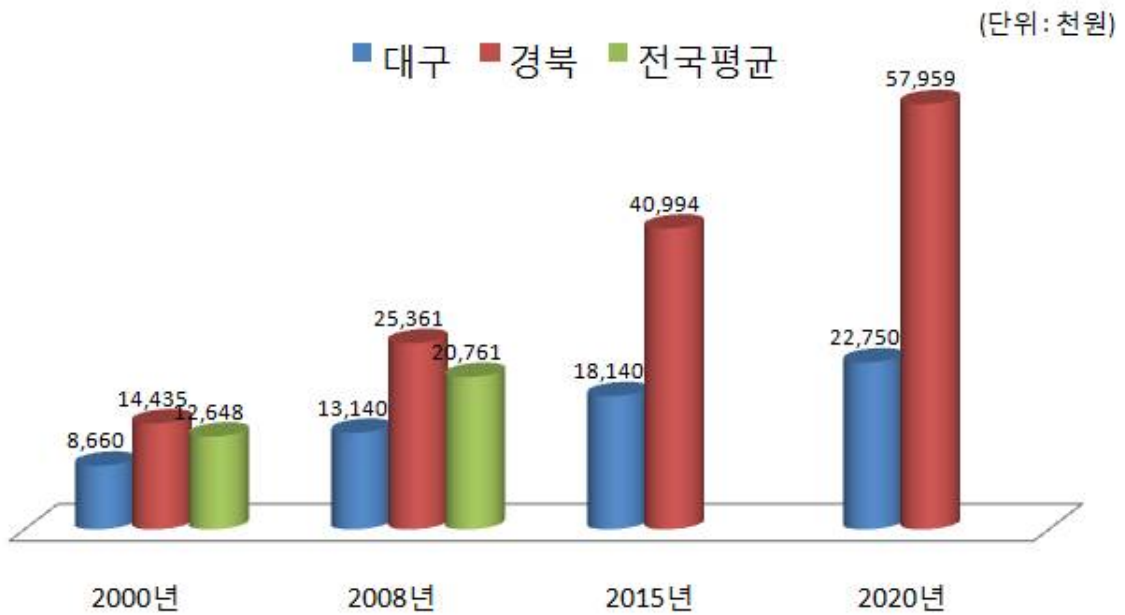
▲ New Design 계획 경북 인구 전망치 비교

※ 거시경제지표 :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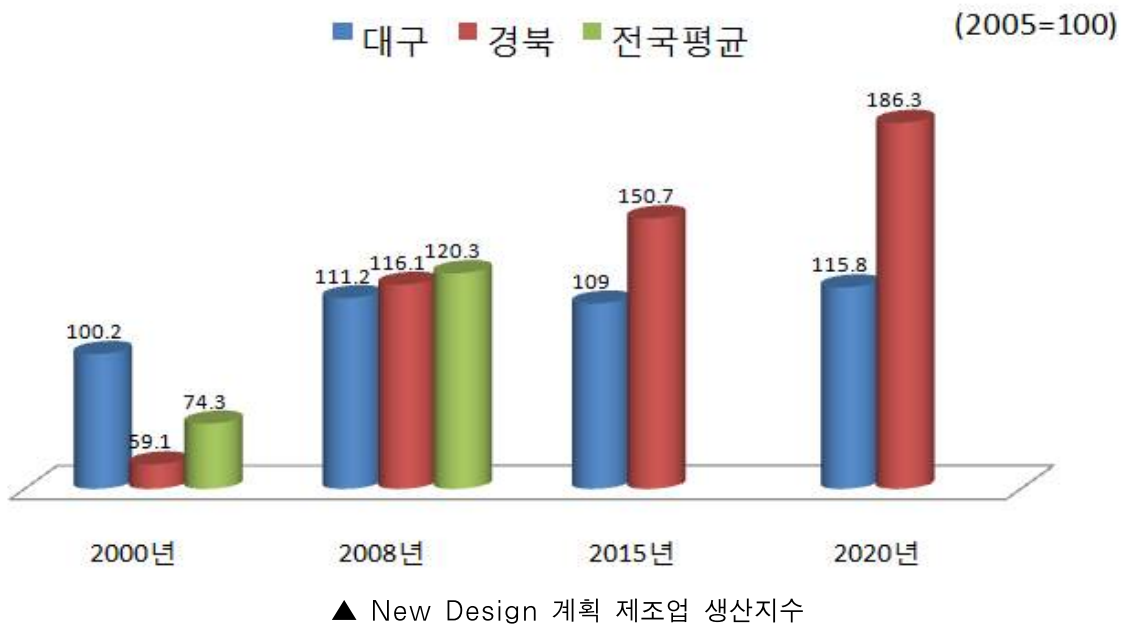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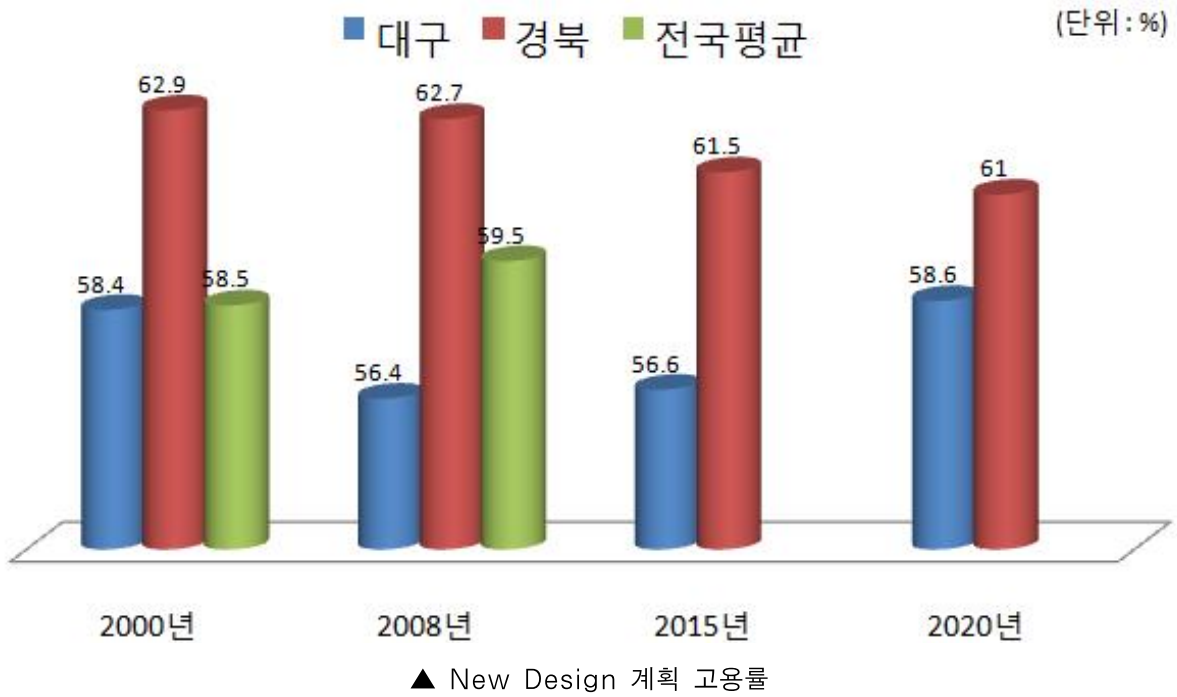
▼ New Design 계획 주요 거시지표 전망 : 전국

기본지표	2000년	2008년	2015년	2020년
인구(천명)	47,732,558	49,540,367	49,277,094	49,325,689
고용률(%)	58.5	59.5	N.A.	N.A.
1인당 GRDP(천원)	12,648	20,761		
1인당 소비지출(천원)	8,536	14,448		
제조업 생산지수 (2005=100)	74.3	120.3		

※ 전국 거시경제 지표 장기 전망치는 인구(통계청 추정)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 New Design 계획 1인당 GRDP



제 3 장



고소득 일자리 창출



New Design

Daegu

Gyeongbuk

고소득 일자리 창출

I. 주력산업의 첨단화

① 산업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 산업 메가트렌드

■ 글로벌화 및 광역화

- 세계 주요국 간 FTA 체결과 경제의 블럭화, 한·중·일 3국 FTA 추진
 - 세계 FTA 발효 건 수는 199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
- 세계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BICIs 국가뿐 아니라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개도국들도 급부상 중
- 글로벌화 및 광역화에 따라 광역경제권별 산업 육성 정책이 부각
 - 대도시권 광역경제권이 글로벌 경제시대 경쟁단위로 부상하면서 국가차원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 산업육성 전략 추진
 - 대경광역경제권은 그린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IT융복합(실용로봇,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선정
 - 광역권별 기존 주력산업 첨단화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생산기반(뿌리), 그린에너지, IT융복합 등이 미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부각

■ 저탄소화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고갈 심화로 환경문제가 핵심 아젠다(Agenda)로 등장
 - 세계 환경시장 규모 확대로 환경경영이 기업경영 핵심이슈로 부상
 - 교토의정서가 본격 시행되고 후속 협정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온실가

- 스 배출감축 의무화 조치가 발동될 전망
- 국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향후 녹색 일자리(Green Job)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전망

■ 지식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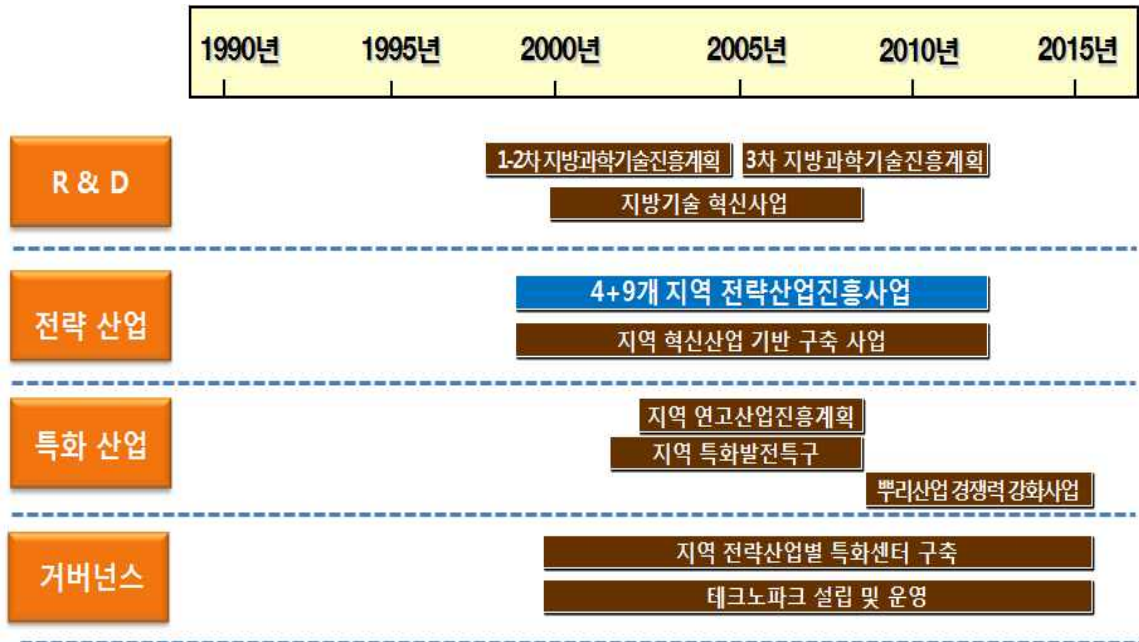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 기반산업⁹⁾ 부상
 - 부와 성장의 원천이 자본과 노동 등 물질적 자원에서 지식·정보·R&D 등 비물질적 자원으로 전환
 - 지식산업의 부상에 따라 산업 및 제품간 융합화가 급속하게 진전
 - 지식산업의 근간인 창조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분야 기술선점의 중요성 부각
- 지식정보화로 인해 지식, 정보, R&D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
 - 지식기반산업(제조업 +서비스업)이 고학력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

■ 저출산 및 고령화

-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 2019년 65세 이상 인구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농촌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농촌 지역의 노동인구 감소 및 정주 기반 약화를 초래
- 국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노동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
 - 노령인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력으로 부상
- 고령화 및 저출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바이오·의료, 고령친화, 여가 등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9) 지식기반산업이란 축적된 학문적 지식과 인간의 지적 능력을 노동이나 자본보다 중요한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지식기반산업은 크게 지식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

2. 정책동향



▲ 시기별 지역 주력산업 관련 정책 변화

■ 4+9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¹⁰⁾

- 대구는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생물산업, 경북은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
 - 대구지역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4년간 계획(2009~2012년)으로, 경북지역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5년간 계획(2008~2012년)으로 수립·추진
- 대구경북은 전자정보기기 및 생물 산업을 모두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있고, 광역적 관점에서 상호간 연계성이 높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 전자·정보기기의 경우 구미의 IT산업 집적지, 대기업 입지를 이용한 대구의 IT부품산업, IT산업과 융합 가능한 나노기술 등의 기반과 대구의 풍부한 연구개발 인력 및 구미의 완성품 위주 IT산업과의 연계 활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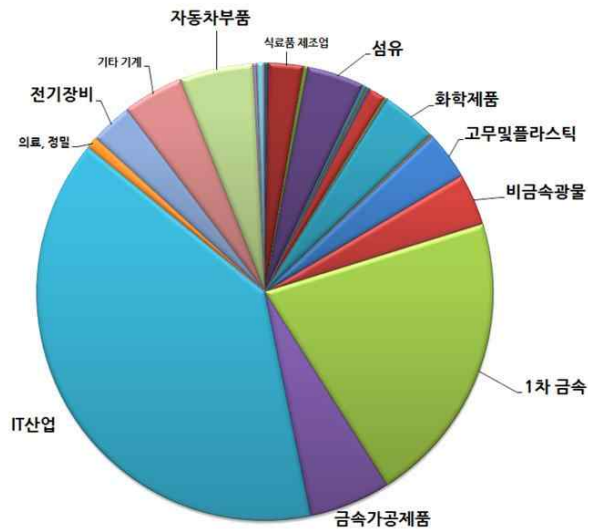
10)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경우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 신성장동력을 육성코자 한 사업

- 대구의 메카트로닉스와 경북지역의 부품소재는 전후방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구미의 IT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 생물산업은 경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생물자원 및 혁신지원기관과 대구 생물소재와 한방단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능력의 연계로 자원과 기술이 결합된 생물자원 산업화 촉진
- 대구경북은 지금까지 모바일, 임베디드 S/W와 섬유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경험이 축적되어 전략산업 간 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 대구**
 - ▶ 섬유
 - ▶ 메카트로닉스
 - ▶ 전자정보기기
 - ▶ 생물
- 경북**
 - ▶ 전자정보기기
 - ▶ 신소재부품
 - ▶ 생물한방
 - ▶ 문화관광
- 공통**
 - ▶ 전자정보기기
 - ▶ 생물

지역산업구조



▲ 대경권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구조

■ 지역특화센터 및 테크노파크

- 지역특화센터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역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의한 지역 전략산업 집적화 단지 및 혁신거점 조성으로 장비·시설 구축, 공동 활용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 지원
- 테크노파크 : 지역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기술혁신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연구인력, 시설, 장비, 정보 등을 집적시킴으로써 신기술 개발 및 벤처창업을 촉진

▼ 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정 현황

지역	지정시기	지원기간	예산지원(5년간)
충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97년 12월	'98~'03	각 250억 원
부산, 포항(민간)	'00년 12월	'03~'07	각 125억 원
충북, 전북, 전남, 강원	'03년 12월		
경남, 울산	'04년 12월	'04~'08	
서울(민간)	'05년 9월	-	723.7억 원(사업비)
대전(민간)	'08년 1월	-	438억 원(사업비)
제주(민간)	'10년 1월	-	152억 원(사업비)

■ 지역연고산업 진흥계획

- 지역특화산업은 시·군의 특성화된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한 산업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규모가 한 차원 낮은 산업
- 국가균형발전계획(2004)에서 시·도별로 10개씩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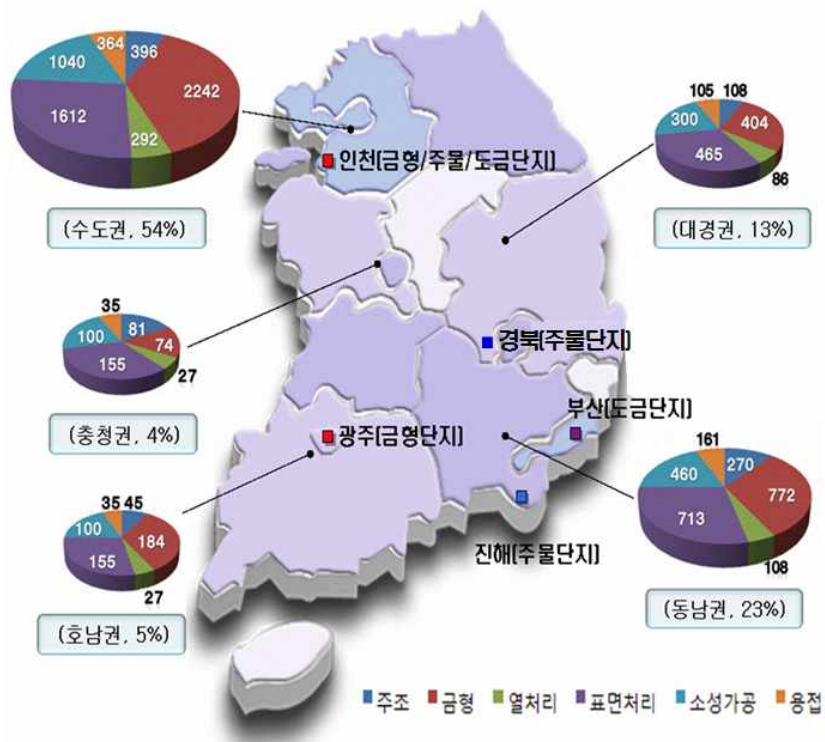
▼ 대경권의 지역특화산업

대 구 광 역 시	경 상 북 도
문화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시컨벤션, 인쇄·출판, 의료기기, 안경 귀금속, 물류·유통산업, 방재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이벤트산업, 농산물 가공 및 시설채소산업 수산물가공 및 해양 산업, 전통직물산업 포도가공산업, 마늘가공산업, 화훼산업

■ 뿌리산업 육성 계획

- 뿌리산업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서 6대 생산기반기술(주조, 금형, 소성,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과 연관
- 국내 뿌리산업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대명사로 인식

- 영세성 : 전체 기업의 95.8%가 중소기업
- 수도권 밀집형 : 전체 기업 중 54.1%가 수도권 집중
- 대기업 종속형 : 전체 기업의 90%가 수요 대기업의 2~4차 협력사
- 종사자 고령화 : 40대 이상 근로자 비중 '04년 45%에서 '08년 53%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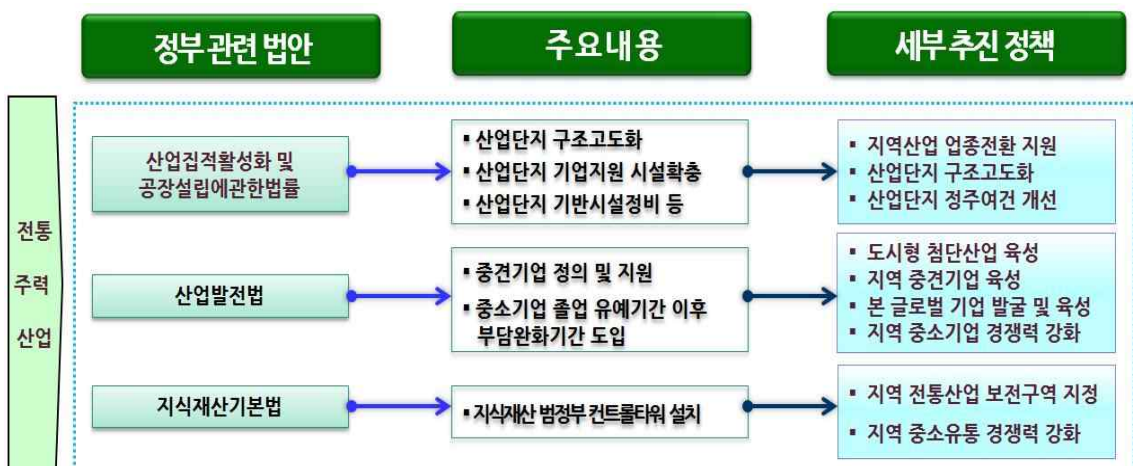
▲ 국내 뿌리산업 지역별 분포도

- 정부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 인력공급 시스템 확충, 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술 역량 강화 등 4개 전략과 11개 정책과제를 제시
 -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 :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 고도화, 신규 뿌리산업 단지 조성, IT 융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
 - 인력공급 시스템 확충 : 혁신인력 양성·공급 체계 강화, 종사자 자긍심 고취 및 후생복지 지원
 - 뿌리산업 기업 경영여건 개선 : 뿌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입지 관련 환경규제 개선, 지원 근거 마련 및 전문기업 육성

- 뿌리산업 기술역량 강화 : 생산기술연구원의 기능 강화, 맞춤형 R&D 지원,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지원

■ 주요 법률

-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력산업의 업종 전환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지원
 - 「산업발전법」 및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시형 첨단산업 및 지역 중견기업 육성을 지원 중
- 산업의 첨단화, 지식산업화 추세를 반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산업의 업종전환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 글로벌화, 광역화 등에 따른 지역 산업간 경쟁력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
 - 지역 중소기업을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
 - 도시형 강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도시형 산업 육성책 제시
- 「지식재산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지원
 - 전통 주력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전통산업 보전구역 지정
 - 지역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



▲ 최근 국가 주력산업 관련 주요 관련 법안 및 세부 추진정책

2 주력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주력산업 현황 분석

■ 대경권 주력산업 집적도, 성장성 분석

- 대경권 제조업별 클러스터 발전 가능성을 현재의 제조업 집적도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개의 산업군으로 분류
 - 제조업 집적도는 종사자수 기준 특화도(LQ)를 기준으로 하고, 제조업 성장성은 종사자수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기준으로 설정

▼ 대경권 주력산업 특화도 분석

구분		종사자수 기준 특화도	
		특화계수 1 이하(낮음)	특화계수 1 이상(높음)
종사자수 기준	전제조업 평균 이상 (높음)	- 식료품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전제조업 평균 이하 (낮음)	- 음료 제조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의외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 팔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주 : 1. 2008년 제조업의 산업 중분류별 현황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여 가공
 2.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3년간(2005년~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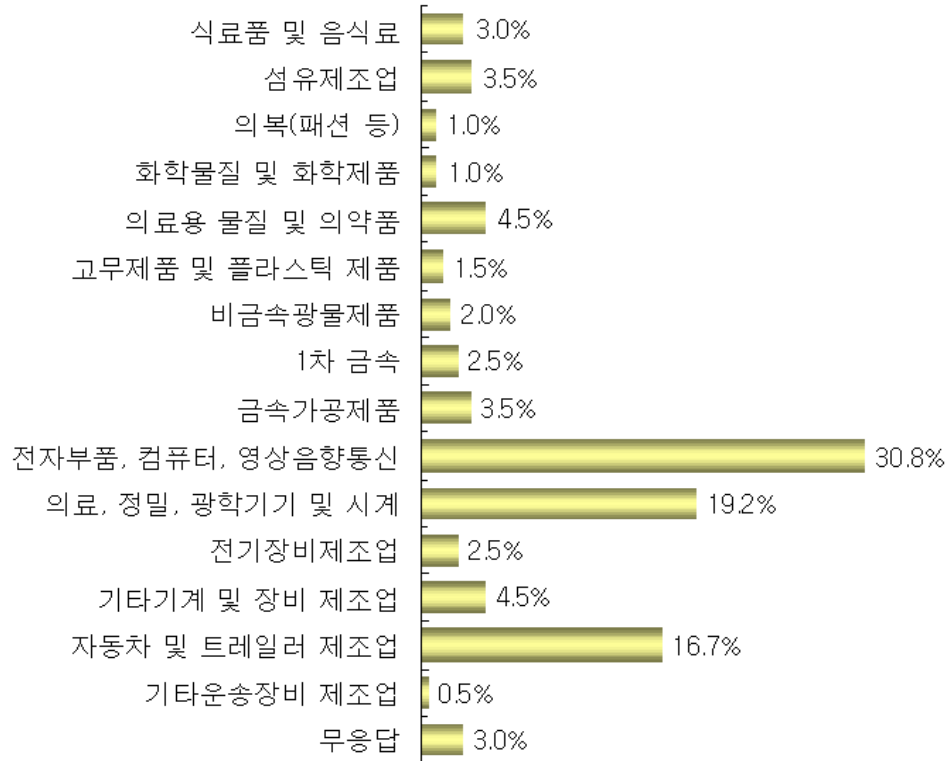
- 산업 평가를 토대로 4개 산업군으로 분류
 - Leading 산업군 :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지역 내 이미 상당한 산업발전 잠재력을 보유하여 당장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야 할 산업이며, 향후 중점 육성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
 - Restructuring 산업군 : 현재까지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주력산업이나 경제·산업여건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산업군

- Emerging 산업군 : 지역 집적도는 낮으나 산업의 성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서 아직 구체적 시장 형성 미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업군
- Selecting 산업군 : 산업 전체를 육성하기에는 전반적 산업기반이 약하지만, 산업내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지역 내 특화된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육성할 경우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군
- 대경권 기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4개 산업군 분류 결과
 - Leading 산업군 : 금속소재 및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토대로 지역의 IT 기술기반을 이용한 생산성 제고 및 IT융합산업 육성전략이 효과적
 - Restructuring 산업군 : 섬유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변동을 완화하고 성장유망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위한 애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조정과정(adjusting process)을 가속화시키는 정책 필요
 - Emerging 산업군 : 식료품, 기계·장비,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연구개발기반 확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등 집적지 조성 추진
 - Selecting 산업군 : 의류, 의약품, 신소재 등에 대한 부문특화 육성전략 추진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중점 육성 분야

- 지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력산업 내 중점 육성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조사기간 : 2010년 5월 3일 ~ 2010년 5월 13일
 - 조사대상 : 대구경북의 지역 산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66명을 대상¹¹⁾
- 2020년을 대비하여 대경권의 기존 주력산업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산업(30.8%)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
 - 다음으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1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6.7%) 등의 순

11) 소재 지역별 전문가는 대구 49명(74%), 경북 11명(17%), 수도권 6명(9%)으로 구성



▲ 대경권 주력산업 내 중점 육성 분야

▼ 제9차 KSIC 산업분류와 주요 국책 사업간 연관도

육성사업	산업분야	주요 KSIC분야(2digit)	4개 산업군 (육성전략)
전략산업	전자·정보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Leading
	섬유	섬유제품 제조업	Restructuring + Selecting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신소재·부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merging + Leading + Restructuring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물	식료품 제조업	Emerging + Selecting	
	음료 제조업		
기타 지역 특화산업 육성	안경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merging + Leading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출판·인쇄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Selecting
	귀금속산업	기타 제품 제조업	Selec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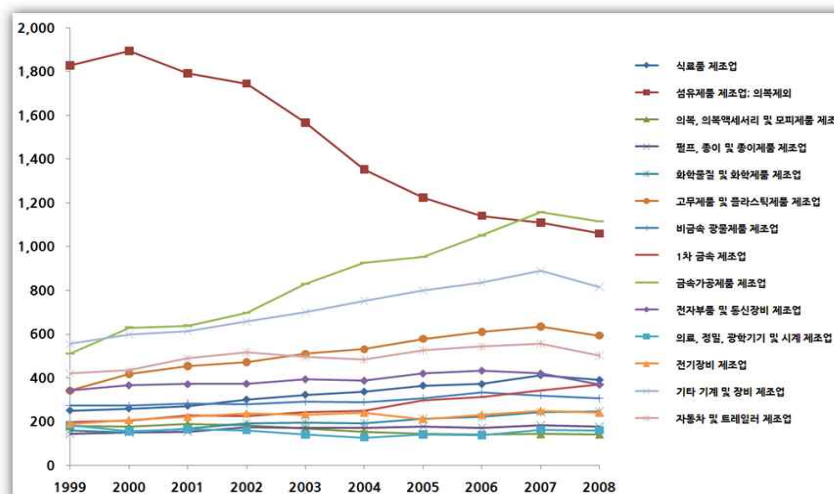
2. 문제점

■ 주력산업 사업체 수 및 일자리 감소

-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지역 주력산업 구조조정 지체 및 성장동력 약화로 제조업체 수 및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섬유산업의 일자리 및 사업체 수 감소가 가장 심각(일자리 연평균 9.8%, 사업체 수 5.9% 감소)
 - 전자 및 금속가공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경우 거의 답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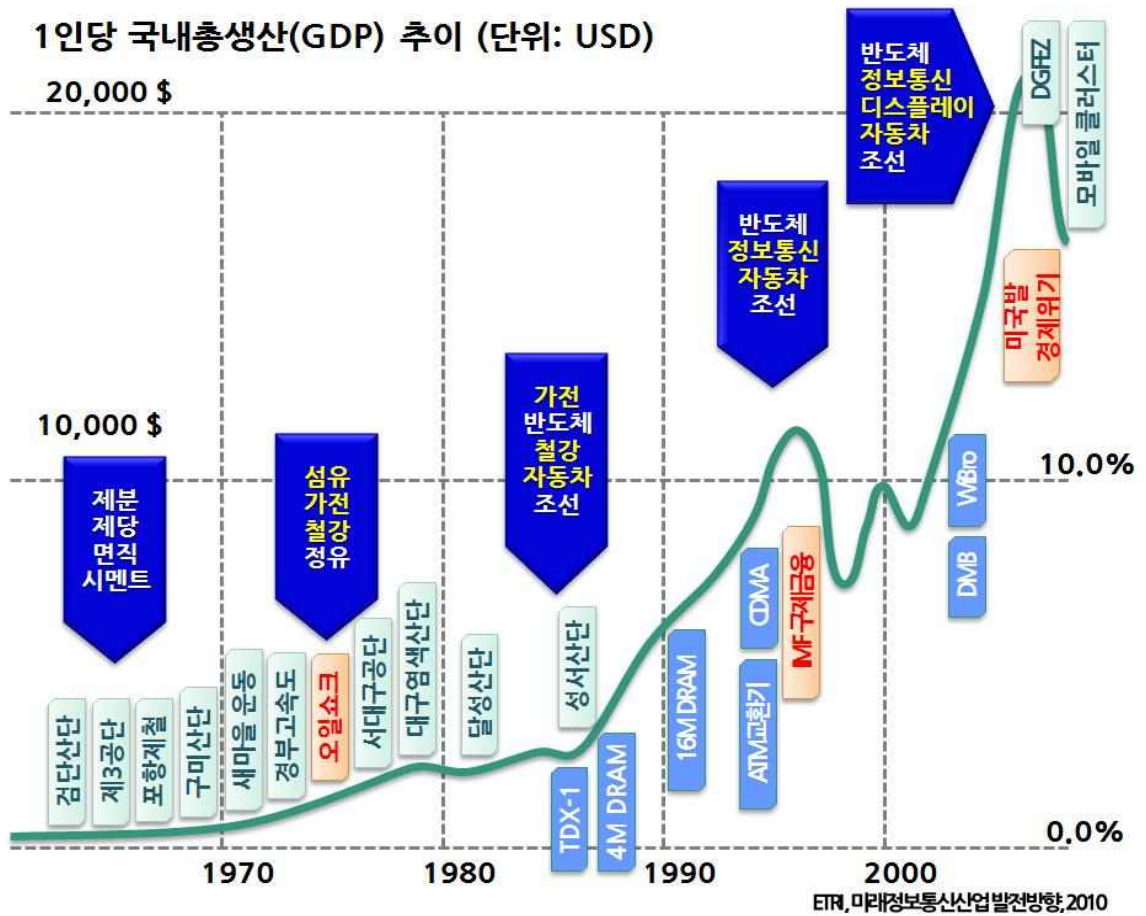
▲ 대경권 주력산업 사업체수 변화('99-'08)



▲ 대경권 주력산업 일자리 변화('99-'08)

■ 주력산업 R&D, 인력 등 혁신능력 약화

- 198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 섬유, 전기전자 등 대경권 주력산업이 국가 성장을 주도
- 2000년대 이후 과거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혁신능력(R&D, 인력, 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 R&D 기관은 전국 평균 상회(1.09)
 - 투자와 인력은 전국 평균 크게 하회(0.45, 0.68)
 - 특허출원도 전국 평균 하회(0.79)



▲ 국가 산업발전 과정 및 성장산업

■ 기업 시장창출 능력 미흡 : 경영 및 제품화 등

- 대경권 산업 내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마케팅 및 경영능력 부족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 대경권 산업 내 니치 마켓 및 기술 개발이 저조하고, 시장창출 능력이 미흡
- 전반적인 기존 기술개발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어, 산·학·연 혁신 결과 활용도 저조한 상황

■ 산업단지 간 연계 협력 부족

-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성서 3, 4차 단지 간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구미국가산업단지(전기전자), 포항국가산업단지(철강), 성서 1, 2차 단지(기계)의 경우 산업단지 간 연계협력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
- 미니클러스터 사업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산업단지 간 연계협력 효과는 미미한 현실

■ 효율적 산업지원 정책 미흡

- 대구경북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섬유, 전자,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의 쇠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 대구의 경우 섬유산업 쇠락, 포항의 경우 철강위주의 단일 산업구조, 구미의 경우 전자산업 단순 생산 집적지가 문제
- 전략산업 관련 R&D 기능 취약 및 보다 효율적 사업관리체계 미흡
 - 현장 중심의 전략산업 지원 및 관리 체계 미흡
 - 전략산업별 사업 추진 후, 효율적 사업관리시스템 미비로 실질적 지원 및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략산업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지자체 간 역할 정립 부족

3 비전과 전략

1. 비전

- 지방민들이 지방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워 서울로 이주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지방보통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이로 인해 지방민들에게 안정된 제조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적 주력산업을 첨단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 2020년 대경권 전통 주력산업 첨단화를 선도할 비전을 “주력산업 첨단화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설정

2. 목표

-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 주력산업 구조고도화, 주력산업 New Engine 창출, 주력산업 혁신역량 강화로 설정
 - 섬유, 자동차부품 등 기존 대경권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
 - 전통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원(New Engine) 창출
 -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 대경권 주력산업 첨단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추진전략

■ 주력산업 업종전환 지원 전략

- 주력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구미 및 성서 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역클러스터 구축
- 지역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디자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주력산업기반 독립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

- 주력산업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형 중견기업 육성 발굴, 자립형 Born-Global 기업 육성을 통해 주력산업기반 독립형 중소기업 육성

■ 현장중심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현장중심 우수 전문계고 육성, 지역대학기반 전문인력 양성, 주력산업 현장밀착형 인력양성, 산업별 기술별 전문아카데미 운영, 산업인재 재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현장 R&D 제품화 지원 전략

- 기업 미활용기술 제품화 지원, 중소벤처성장단계별 「기술·경영닥터」 운영, 퇴직 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해외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 지원, 이업종 간 공급·수요 기술 매칭 협업 사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R&D 제품화를 지원

■ 지식정보 연계 지원 전략

- 대구경북 지식정보 연계 지원을 위해 우선 대구경북 중장기 산업-일자리 로드맵 구축, 중소기업 지식 흡수능력 강화, 글로벌 지식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지역역량을 강화

4 주요 전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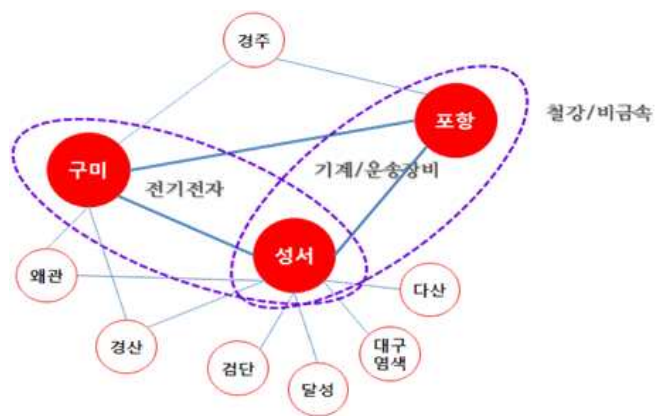
1. 주력산업 업종전환 지원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핵심사업

- 사업기간 : 2011 ~ 2015년
- 사업비 : 1,500억원(지방비 500, 민자 1000)
-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사업내용
 - 노후공장부지 재개발 및 재활용 : 특화단지 개발
 - 친환경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 도로, 주차공간, 완충녹지 및 근린공원 등
 - 산업단지별 맞춤형 기업지원기능 강화 : 공동물류센터, 창업 보육 및 중소벤처 지원, 비즈니스서비스지원, 주차 및 녹지 확충

■ 주력산업기반 광역 클러스터 구축

-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사업내용
 - 구미, 성서, 경산 거점단지 및 연계단지 기능 활성화 : 광역클러스터 구축 및 산학연관 협력체제 강화
 - 구미, 성서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하여 주변지역 산업단지 등과 산업적·기능적 연계를 통한 광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



■ 한계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

- 주관기관 :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센터 건립
 - 한계 중소기업 구조전환, 폐업 관련 일괄 컨설팅, 애로사항 멘토링 제도,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 R&D 연계,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제품화 지원

- 주관기관 :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 이전기술 지원 :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 지원
 - 중소기업 난제과제 해결 : 난제 과제 컨설팅, 최신 첨단기술 획득
 - 중소기업 R&D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대형과제 지원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 주관기관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대학 관련 연구소 등
- 사업내용
 - 중소기업 디자인 거점센터 운영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연계
 -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화 지원
 - 디자인기반 기술개발 지원

2. 주력산업 기반 독립형 중소기업 육성

■ 주력산업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 핵심사업

- 사업배경
 - 가치사슬(Value-chain) 내 경쟁력이 강한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
- 사업기간 : 2011 ~ 2015년
- 사업비 : 150억원(국비 105, 지방비 45)
- 주관기관 :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ETRI 대경권연구센터, 중소기업청 등
- 사업내용
 - 뿌리산업 : 소재(마그네슘, 알루미늄), 금속가공(금형, 열처리), 부품(샷시, 기업), 완제품(자동화기계) 등에 필요한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지원
 - 섬유산업 : 산업용·스포츠용 기능성 섬유, 디자인 분야 등 지원
 - IT 부품소재산업 : 스마트센스, 이차전지, 광학정밀부품 등
 - 그린융합 자동차부품산업 : 차체/샤시 경량화 소재개발 등 에너지 친화적 자동차부품 개발, 전장구동모듈, 모터분야 등 인간친화적 자동차부품 개발 지원
 - 건설기계 핵심부품산업 : 엔진·유합·모터·전자제어장치, 굴삭기용 메인펌프 및 메인컨트롤 밸브, 선회모터, 주행구동모터 등 핵심부품 개발 지원

■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 발굴

- 주관기관 :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DGIST, 포스텍 등
- 사업내용
 - 핵심 중견기업과 일반 부품 납품기업 간 협동화사업을 통한 기술혁신형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 정부의 10대 핵심소재(WPM) 사업과 연계 : 지경부 사업
 - 글로벌 기술 확보를 위한 시장선도형 원천기술 지원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기술개발 지원 : 중견기업 중심으로 개발기술을 중심으로 제품화를 위한 가치사슬(Value-chain) 연계 강화

■ 자립형 본 글로벌(Born-Global) 기업 육성

- 주관기관 : 대구/경북 TP, 중소기업청 등
- 사업내용
 - 지역 Born-Global 기업 발굴
 - 해외 기업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본 글로벌 기업 수출 산업화 지원
 - 병역특례요원 활용기반 강화

3. 현장 중심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주력산업 현장밀착형 인력양성 : 핵심사업

- 사업기간 : 2011 ~ 2020년
- 사업비 :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주관기관 :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지역 대학/연구소 등
- 사업내용
 - IT 인력양성 사업 : 금오공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과 연계, 모바일, 전자 부품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지원
 - IT 융합형 뿌리산업 인력양성 사업 : 정규 교과과정 + 전문대학 교육 + 수요기업 교육과 연계
 - 금형설계인력양성 사업 : 영진전문대학 초정밀금형 지역혁신센터와 연계, 설계 제작, 3차원 금형설계, 금형공작법 등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작업공정관리 인력양성 사업 : 현장의 작업공정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체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형 생산 스케줄러 양성
 - 기계장비 MRO 인력양성 사업 : 기계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유지·보수·관리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인력양성
 - 원자력 인력양성 사업 : 원자력 발전 및 비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 현장 중심 우수 전문계고 육성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경북 교육청 등
- 사업내용
 - 지역 전략산업 및 관련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 중심의 명문 전문계고 육성
 - 기업 연계 산학연 인턴십 제도 및 일터학습 강화,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 우수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등 직업교육 여건 강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교원 산업체 현장적응연수 의무화 등을 통한 교육기능 강화

■ 지역대학 기반 전문인력 양성 거점화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대학, 중소기업청 등
- 사업내용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
 - 지역 청년층 뉴 스타트 프로젝트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중소기업청 사업과 연계

■ 산업별 기술별 전문아카데미 운영

- 주관기관 : 지역 대학,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 사업내용
 - 산업별 전문 아카데미 운영 : 모바일융합 아카데미
 - 기술별 전문 아카데미 운영
 - 현장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 산업인재 재교육 시스템 구축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 기업체, 대학/연구소 등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직업교육혁신센터 건립

- 산업인력 전주기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
- 직업중심대학 컨소시엄 구축
- 직업 재교육시스템 구축 : 사이버대학 활용 등
- 산업체 전문연구요원제도 도입

4. 현장 R&D 제품화 지원

■ 퇴직 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 핵심사업

- 사업기간 : 2011~2020년
- 사업비 : 20억원(국비 14, 지방비 6)
 -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운영(연간 2억원)
- 주관기관 : 대구 및 경북 테크노파크, 지역 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 퇴직 과학기술자 연계 비즈니스 매칭(Business Matching) 사업
 - 대중소기업 퇴직 엔지니어링 R&BD Matching 옴부즈만 제도
 - 퇴직 기업 CEO 연계 기업 컨설팅 자문

■ 기업 미활용기술 제품화 지원 방안

- 주관기관 : DGIST, 대구/경북 TP, 지역특화센터 등
- 사업내용
 - 미활용기술 R&D 정보센터 구축 : 미활용 특허정보서비스 지원
 - 미활용 기술기반 시제품개발 및 제작 지원 : 지역특화센터 연계
 - 기업 미활용 특허 매칭 시장 구축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기술·경영닥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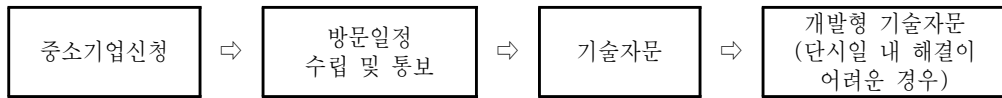
○ 주관기관 : DGIST,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기술 닥터」 운영
 - 창업 중소기업 시장진입기술 지원(기술 시장화, 상품화 지원)
 - 도약 중소기업 산업현장 요소애로기술 지원(제2의 도약 지원)
 - 전환기 중소기업 융합기술 지원(구조전환지원)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경영 닥터」 운영(신규사업)
 - 창업 및 구조조정 단계: 창업 및 구조조정 경영컨설팅 지원
 - 성장 단계 : R&D 및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경영 합리화 지원
 - 성숙 단계 :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역점

○ 추진절차

- 기술닥터



- 경영닥터



■ 해외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 지원

○ 주관기관 : DGIST, 포스텍, 대구/경북 TP, 기업체 등

○ 사업내용

- 해외 선진지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경쟁력 제고
- R&D 공동연구 협의체 구축, R&D 관련 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핵심/요소 기술 개발 사업 우선 지원

■ **이업종 간 공급·수요 기술 매칭 협업사업**

- 주관기관 : 기업체,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이업종간 기술 및 산업 컨소시엄 구성, 수요-공급 기술 매칭
 - 미니클러스터 간 협업사업 추진
 - 전기전자(구미) + 전자부품금형(구미) + 기계금속재료(대구)
 - 지능형자동차부품(성서) + IT 장비(구미) + IT 전기전자(성서)

5. 지식정보 연계 지원

■ **대구경북 중장기 산업-일자리 로드맵 구축 : 핵심사업**

- 사업기간 : 2011~2013년
- 사업비 : 10억원(국비 7, 지방비 3)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 및 경북 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대구경북 중장기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구축
 - 일자리 수요-공급 매칭(Matching) 사업 : 일자리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신 지식 정보 네트워크 강화, 인터넷 활용) 등

■ **중소기업 지식 흡수능력 강화**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그린화, 융합화가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수요 조사 → 기업 간 협력 가능한 분야 발굴, 정보 제공
 - 중소기업 가치사슬 알리미 : 가치사슬 기업별 정보 제공
 - 미니클러스터 기능 확대 및 다변화, 유기적 협력 활성화
 - 독립형 중소기업 연계,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

■ 글로벌 지식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 주관기관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글로벌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 지역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 컨설팅, 마케팅 등
 -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 해외 연구소, 대학 기술개발 동향 파악, DB 구축
 - 해외와 협력 가능한 현지기술/아이템 발굴, 사업화 지원 : 한중, 한일, 한러간 기술, 정보, 비즈니스 협력 강화
 - Asia Biz Forum 등 환황해 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 개발
 - 환동해 지역과의 수직/수평 생산/서비스시스템 구축 촉진
 - 해외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 사업 : 지경부 사업
 - 해외 선진지역과의 공동연구로 글로벌 R&D 경쟁력 제고
 - R&D 공동연구 협의체 구축, R&D 관련 포털 사이트 구축·운영

수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우선순위

■ 선정 기준

- 효율성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 대비 효과성으로 평가
- 시급성 : 사업 수요자가 사업 추진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따라 평가
- 지역적합성 : 지역 역량과 잠재력을 고려한 사업의 적합성 평가
- 정책부합성 : 현 전반적인 정책 트렌드 및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의 부합성 정도로 평가

■ 우선순위

○ 효율성, 시급성, 지역적합성, 정책부합성 등 4가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전략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대경권 산업분야 주요 사업별 우선순위

구분	전략사업	효율성	시급성	지역적합성	정책효과성	우선순위
주력산업 업종전환 지원	구미 및 성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	●	●	1순위
	주력산업기반 광역클러스터 구축	●	●	●	○	5순위
	한계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	●	●	●	●	2순위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	●	●	3순위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	●	●	○	4순위
주력산업기반 독립형 중소기업 육성	주력산업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	●	●	●	1순위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 발굴	●	●	○	○	3순위
	자립형 Born-Global 기업 육성	●	●	●	●	2순위
현장중심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현장 중심 우수 전문계고 육성	●	●	●	●	2순위
	지역대학기반 전문인력양성 거점화	●	○	●	○	5순위
	주력산업 현장밀착형 인력양성	●	●	●	●	1순위
	산업별 기술별 전문아카데미 운영	●	●	●	●	4순위
	산업인재 재교육 시스템 구축	●	●	●	●	3순위
현장 R&D 제품화 지원	기업 미활용기술 제품화 지원 방안	●	●	●	●	4순위
	중소벤처성장단계별 「기술·경영다터」 운영	●	●	●	●	2순위
	퇴직 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	●	●	●	1순위
	해외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	●	○	●	○	5순위
	이업종 간 공급·수요 기술 매칭 협업	●	●	●	●	3순위
지식정보 연계 지원	대구경북 중장기 산업-일자리 로드맵 구축	●	●	●	●	1순위
	중소기업 지식 흡수능력 강화	●	○	●	●	2순위
	글로벌 지식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	●	●	○	3순위

주 : ○ (부합하지 않음), ● (매우 부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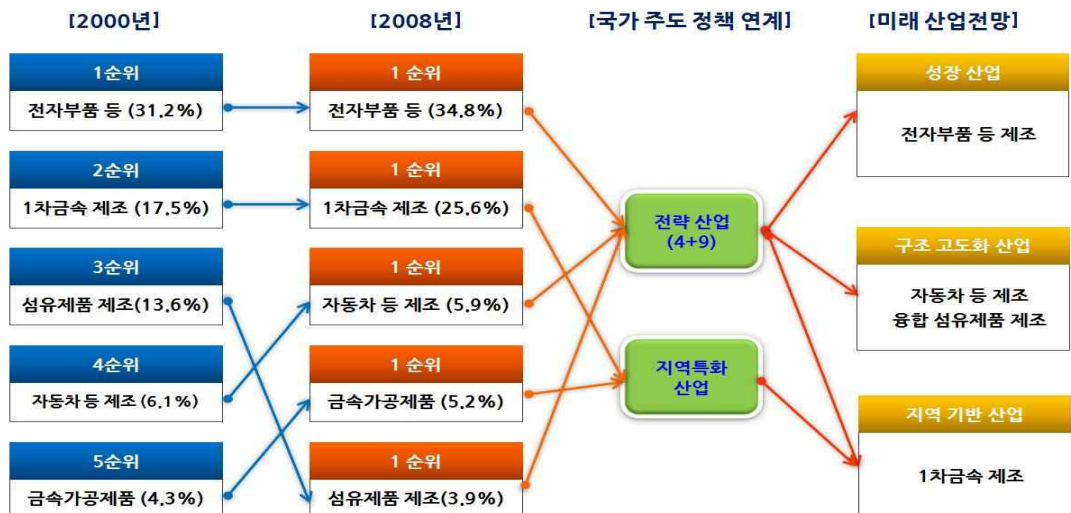
2. 추진 로드맵

추진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력산업 업종전환 지원	구미/성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주력산업기반 광역클러스터 구축		한계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한계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						
	주력산업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형 중견기업 육성 발굴						
	자립형 Born-Global 기업 육성								
	현장 중심 우수 전문계고 육성								
현장중심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기반 전문인력양성 거점화		주력산업 현장밀착형 인력양성						
	산업별 기술별 전문아카데미 운영		산업인재 재교육 시스템 구축						
	기업 미활용기술 제품화 지원 방안		중소벤처성장단계별 기술·경영닥터 운영						
	퇴직 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해외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 지원						
현장 R&D 제품화 지원	이업종간 공급-수요 기술 매칭 협업사업								
	중장기 산업-일자리 로드맵 구축		중소기업 지식 흡수능력 강화		글로벌 지식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지식정보 연계 지원									

▲ 대경권 주력산업 주요 사업 로드맵

3. 주력산업 공간구상

- 대경권 주력산업은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성장산업으로, 자동차 및 융합섬유제품 등 제조업을 구조고도화산업으로 1차 금속제조업을 지역기반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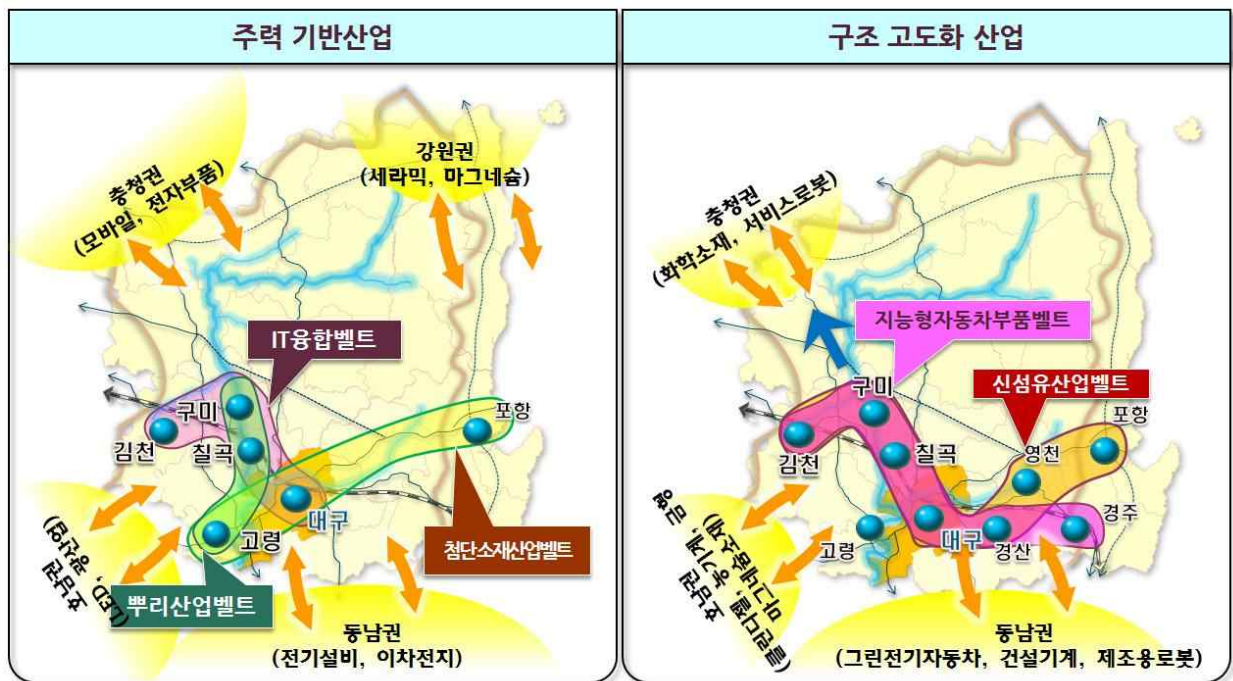


▲ 대경권 미래 핵심 주력산업 선정

○ 대경권 성장 및 기반산업, 구조고도화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류

▼ 대경권 전통 주력산업 첨단화 전략

구 분	산업 성격	기본전략	주요 특화분야(세부항목은 KSCI 분류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성장 및 기반 산업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기반산업	생산기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력산업의 IT융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 전자부품(기억장치등) - 전자부품(기억장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기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부품 - 기타내화요업 제품 - 열간 압연 및 압출 - 금속압형 제품 - 무기 및 총포탄 - 분말야금제품 - 분말야금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말야금제품 정보통신서비스 금융보험 컨설팅 산업디자인
구조 고도화 산업	대내외환경 변화로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요구되는 현재의 지역주력산업	섬유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섬유직물 직조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 특수사 및 특수직물 - 연사, 가공사, 호부처리 - 연사, 가공사, 호부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부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사, 가공사, 호부처리 - 자동차용 전기장치 - 자동차 차체용 부품 -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 자동차엔진용 부품 - 자동차엔진용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엔진용부품 방송통신업 금융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 2020년 대경권 전통 주력산업 공간구상

고소득 일자리 창출

Ⅱ .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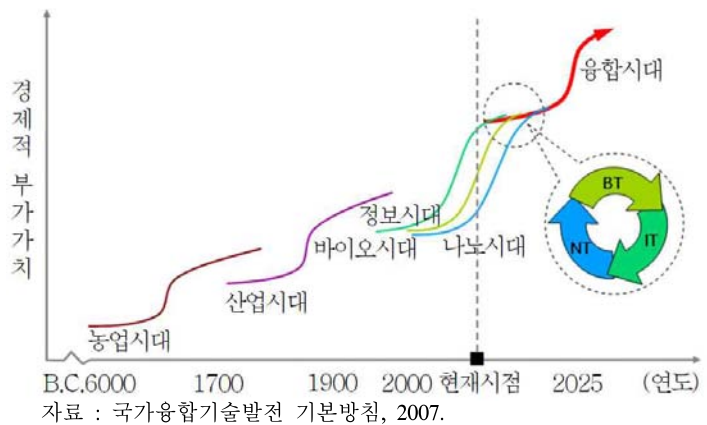
① 신기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 신기술 산업 트렌드 변화

■ 융합화

- IT, NT, BT, ET 등 첨단 신기술의 지속적 발달과 더불어, 신기술 간의 융합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부품소재, 환경/에너지 및 의료건강 분야 등에서 글로벌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

-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신기술 융합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에 전력을 기울임 (산업연구원, 2007)



▲ 정보화시대에서 융합시대로의 변화

- 산업 간 융합화 및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전문 인력양성 및 인력 재교육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 지역차원에서 신기술 중심 융합형 인재 및 일자리 창출이 중요

■ 지능화

-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이 중심에서 인간과 사물 간, 사물과 사물 간의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능화(intelligence)가 진전될 전망

- 로봇은 제조용 로봇을 제외한 전문서비스용 및 개인 서비스용 로봇산업 시장이 2009년 약 124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3,800억 달러까지 확대 전망
- 기존 노동집약적 조립산업 중심에서 로봇 및 자동화 기계에 의존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더욱 감소할 전망

■ 녹색화

- 지구 온난화와 화석에너지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 노력이 강화되고, 녹색 기술·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측
-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2005년 110억 달러에서 2010년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¹²⁾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해 첨단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일자리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

■ 개방화

-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IT 산업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개방화와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전
- 첨단 기술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향후 기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서비스화

- 경제의 서비스화뿐 아니라 산업에서도 기존 제조업의 수익 기반 및 이익 창출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제품의 서비스화가 가속될 전망
- 첨단화·자동화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되는 반면, 경제의 개방화·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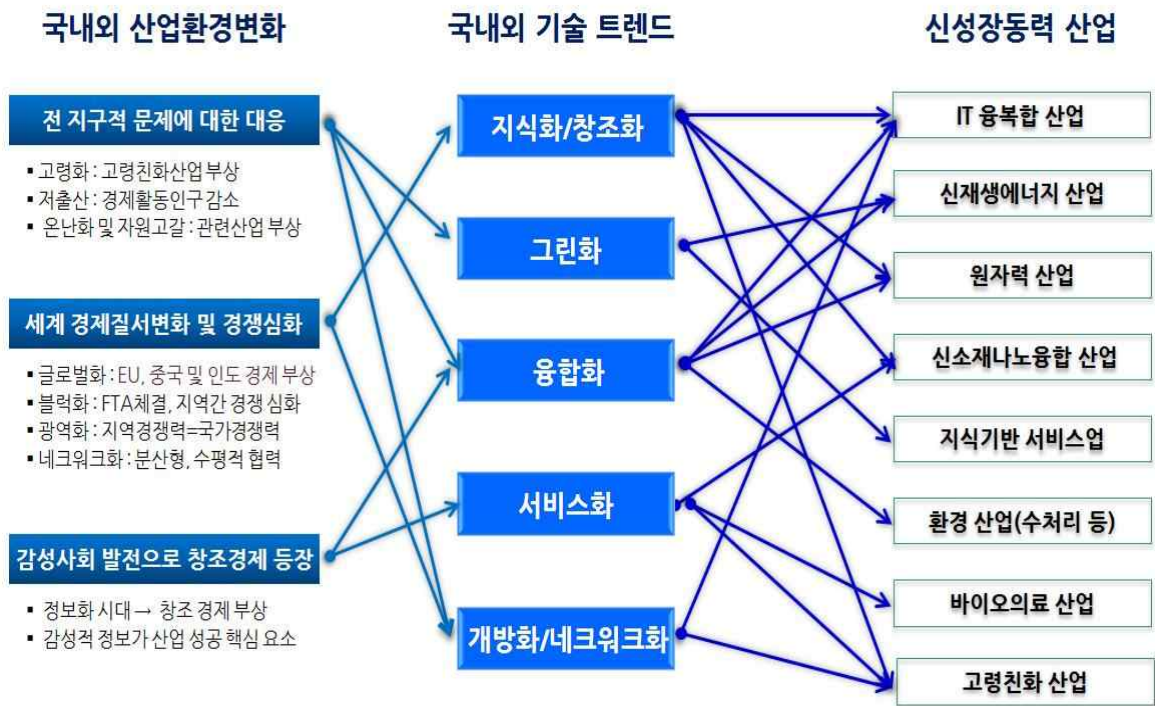
12) IETA &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6.

스화로 서비스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디지털 콘텐츠 S/W 분야, 디자인 분야, 기업 컨설팅, 기후변화 등 서비스업 관련 신규 일자리가 감소된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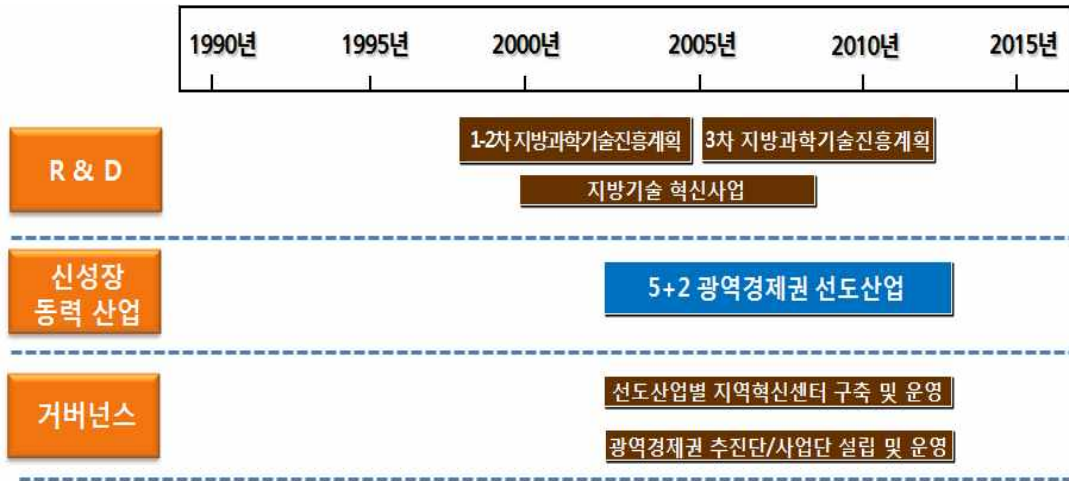
■ 지식화 · 창조화

- 정보화 시대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창조화 경제가 부상함과 동시에 그 핵심이 되는 창조산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산업 및 기술의 개방화, 네트워크화로 인해 네트워크 기반 1인 창조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전망



▲ 글로벌 산업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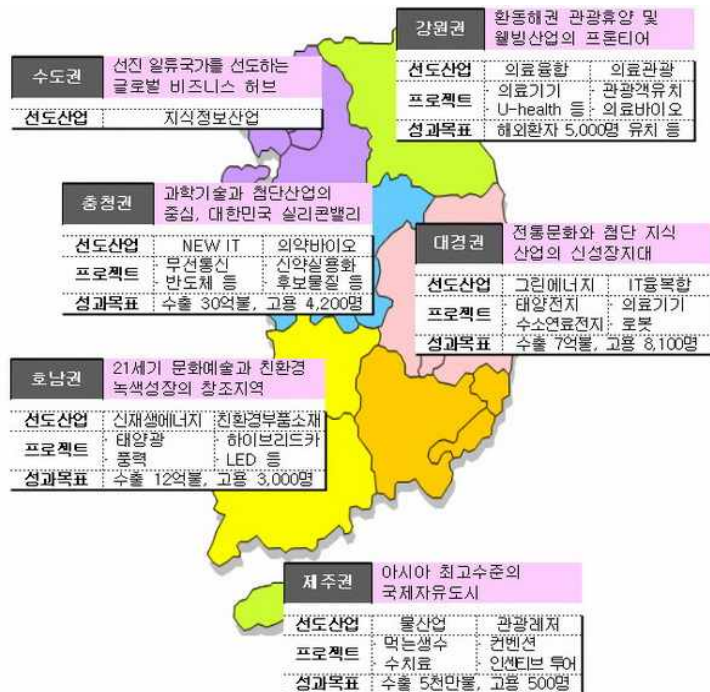
2. 정책동향



▲ 시기별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정책 변화

■ 5+2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 및 육성

-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달성을 위해 기존 시·도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중심으로 전환
- 광역경제권역별로 1~2개의 핵심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표준, 특허, 국제협력, 브랜드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

-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그린에너지 및 IT 융·복합산업 선정

-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력 고효율 IT 기술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집중 육성
-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부품소재, 에너지 및 건강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 사업을 추진 중



▲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

- 대구시는 지능형자동차부품 및 메카트로닉스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경북은 구미에서 포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조성 중
- 대구시는 솔라시티사업을 통해 태양광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나가고 있으며, 경북도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사업을 중심으로 그린에너지산업을 육성
-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특화단지(수성의료지구)의 조성, 지멘스 등 첨단의료기기 기업의 유치 등을 통해 건강의료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

■ 정부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및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및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에서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
- 녹색기술산업 분야에는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6개 기술을 선정
- 첨단융합산업 분야에는 세계시장규모와 IT 분야와 같이 우리나라 기술 역량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방송통신융합산업 등 6개 기술을 선정
- 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등 5개 분야를 선정



▲ 녹색기술산업 분야

▲ 첨단융합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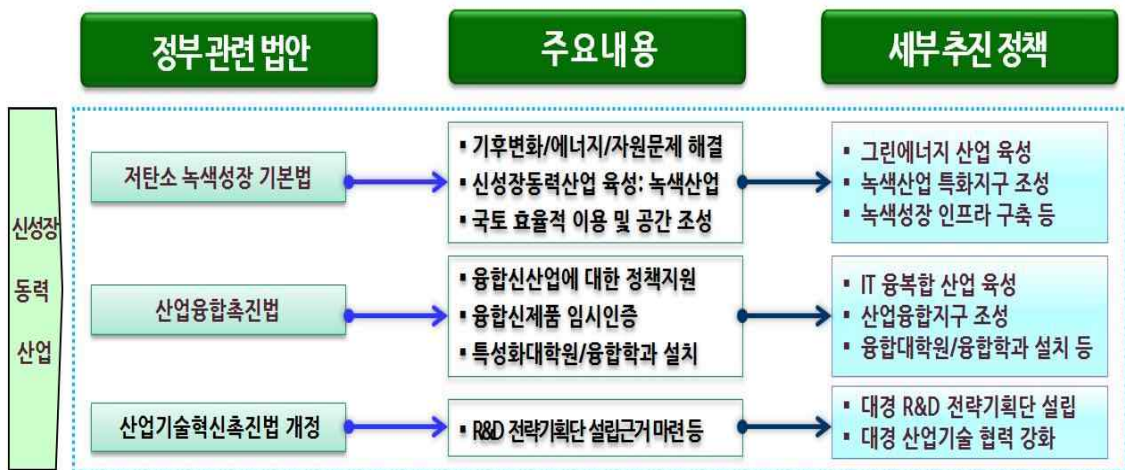
-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에 따라 대경권내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특히 구미시는 2004년부터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 왔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과학연구단지” 및 구미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사업을 추진 중
 - 대구, 구미, 포항 등 국가산업단지를 연구개발과 기술 집적이 중시되는 산업체제로 전환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R&D 기관 유치를 통해 동북아 중심의 IT산업 R&D 허브로 육성하는 실천적 전략 마련 필요
 - 전자부품·소재, IT 융합산업, 금형·MT산업, 섬유산업, 환경·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산업 중 대경권이 향후 중점 추진 분야 모색 필요

■ 주요 법률

-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2010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

법」 등을 추진 중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의지를 반영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향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그린에너지 및 기후변화관련 산업의 구체적 육성방안을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녹색경제산업 구현, 저탄소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제시
- 최근 산업, 기술, 제품 간 융합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
 - 정부 주도의 새로운 규제, 제도 신설 보다는 민간주도의 융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시책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 중
 - 이를 통해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융합지구, 융합대학원 및 융합학과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정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R&D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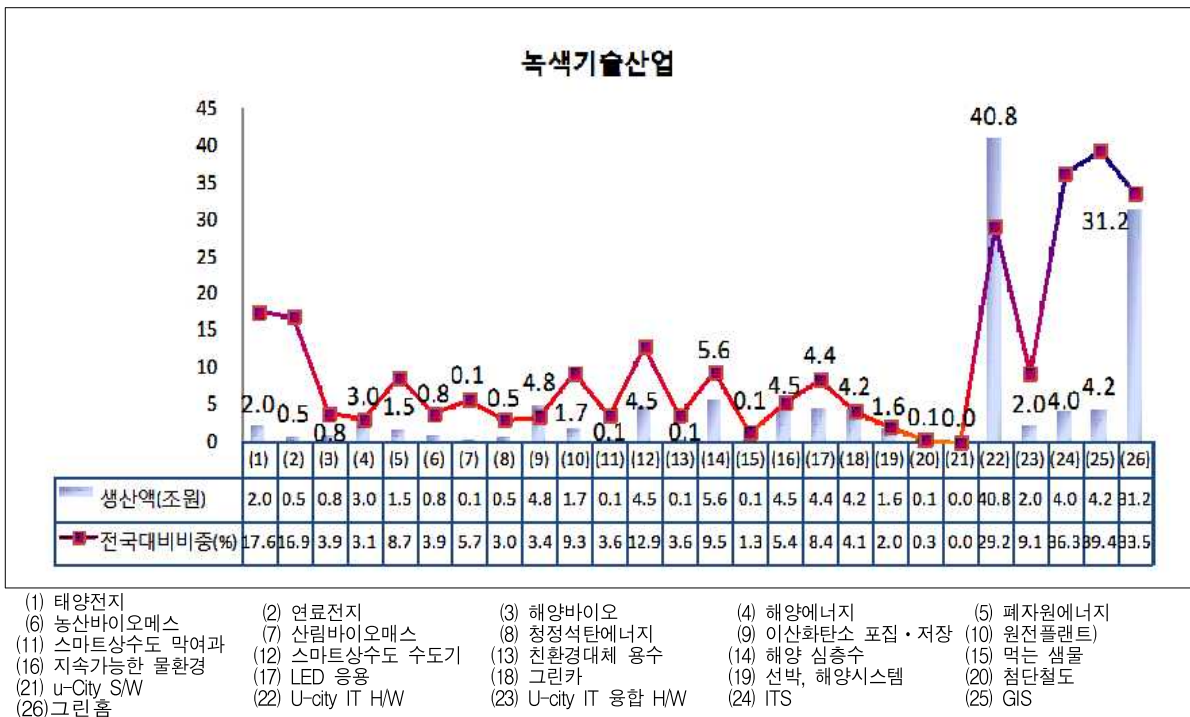
▲ 최근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주요 법안 및 세부 추진정책

2 현황 및 문제점

1. 신성장동력산업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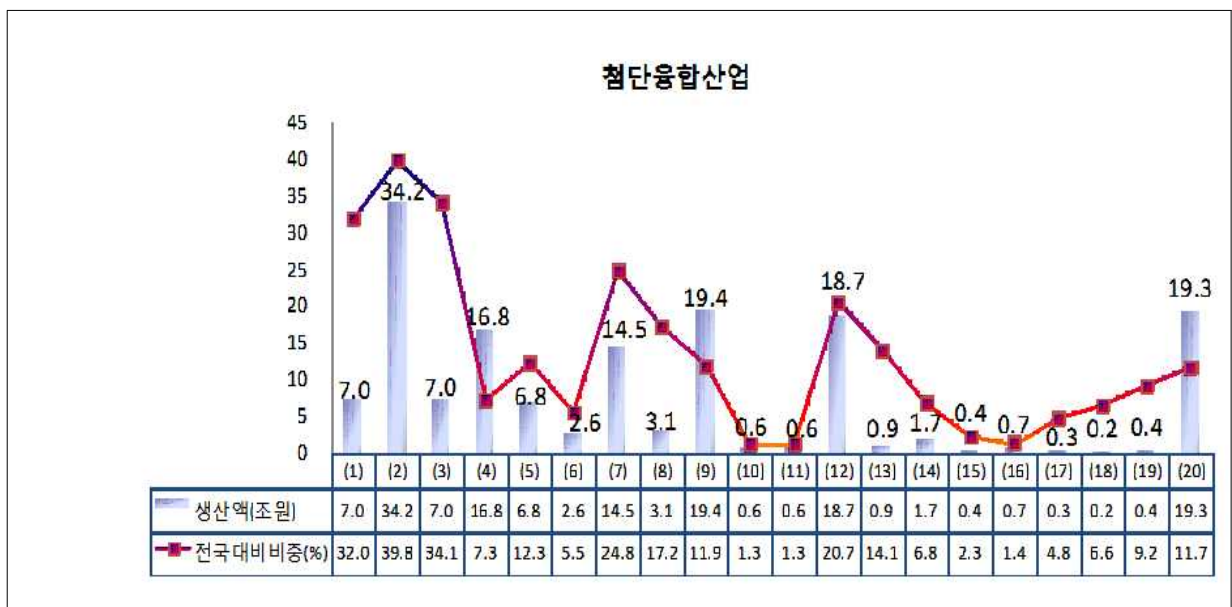
■ 통계조사를 통해 본 대경권 유망산업

- 정부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대구경북지역의 중점 유망산업 선정을 위하여 전문적, 주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적정성을 객관화, 계량화하여 상대적 우위성을 평가
- 산업연구원 분류기준에 따라 대경권 녹색기술산업 내 경쟁력 상위분야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태양광(전국 생산액 대비 비중 17.6%), 연료전지(16.9%) 분야가 전국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단그린도시 산업 중 GIS분야(전국대비 비중 39.4%) 및 ITS(3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녹색기술산업 내 대경권 경쟁력 상위 분야

-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업연구원 분류기준에 따라 정부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분석해 볼 때, 대경권 첨단융합산업 내 중점 육성분야는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융합산업내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 IT 융합시스템산업 내 Flexible 디스플레이 분야
 - 신소재 나노융합산업 내 기능성 나노필름,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분야
 -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내 고령친화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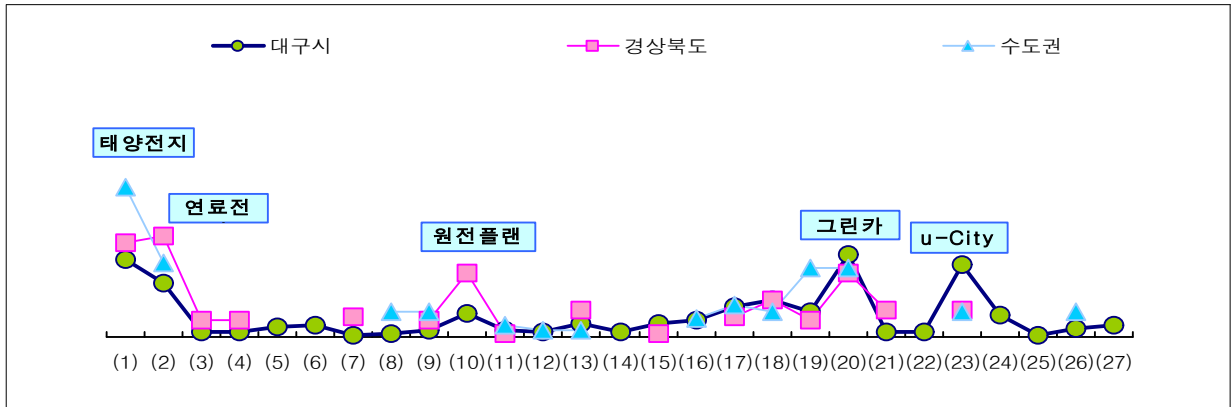


- (1) 융합 네트워크
- (2) 무선통신
- (3) 방송통신미디어
- (4) IT 융합
- (5) RFID/USN
- (6) 반도체
- (7) 디스플레이
- (8) 로봇응용
- (9)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 (10) IonicLiquid 소재
- (11) 나노탄소 융합소재
- (12) 기능성 나노필름
- (13) 나노융합 바이오퍼신
- (14) 바이오의약품
- (15) 자원/신소재/장기
- (16) 바이오매스유래
- (17) 메디/바이오진단
- (18) 첨단의료영상진단
- (19) 고령친화의료기기

▲ 첨단융합산업 내 대경권 주요 육성 분야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중점 육성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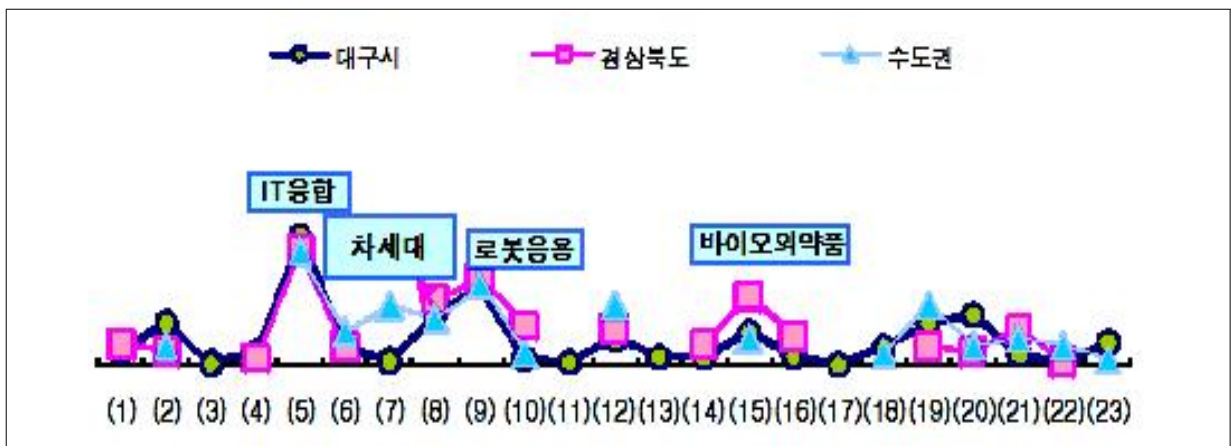
- 지역내외 전문가를 대상, 신성장동력산업내 중점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 조사기간 : 2010년 5월 3일 ~ 2010년 5월 13일
 - 조사대상 : 대구경북 산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66명을 대상
- 녹색기술산업에서는 태양전지(15.6%), 연료전지(11.4%), 그린카(13.9%), u-City(10.9%)를 중점 육성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



- | | | | | |
|----------------|--------------|-----------------|---------------|-------------|
| (1) 태양전지 | (2) 연료전지 | (3) 해양바이오 | (4) 해양에너지 | (5) 폐자원에너지 |
| (6) 농산바이오메스 | (7) 산림바이오메스 | (8) 청정석탄에너지 | (9) 이산화탄소포집저장 | (10) 원전플랜트 |
| (11) 중소형원자로 | (12) 스마트상수도 | (13) 친환경 대체 용수 | (14) 먹는 샘물 | (15) 해양 심수층 |
| (16) 지속가능한 물환경 | (17) Eco LED | (18) LED 스마트 모듈 | (19) LED 조명 | (20) 그린카 |
| (21) 선박, 해양시스템 | (22) 첨단철도 | (23) u-City | (24) ITS | (25) GIS |

▲ 녹색기술산업 내 대경권 주요 육성 분야

- 첨단융합산업 중점 육성분야로 IT 융합(20.9%)과 로봇응용(13.3%), 차세대 디스플레이(8.5%) 등을 선정
- 그 외 주요 육성분야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분야에서는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7.0%)을 비교적 높게 평가



- | | | | | |
|----------------------|---------------------|-------------------|-----------------|-------------------|
| (1) 차세대융합네트워크 | (2) 차세대무선통신 | (3) 실감DTV 방송 | (4) 차세대 IPTV | (5) IT 융합 |
| (6) RFID/USN | (7) 차세대반도체 | (8) 차세대디스플레이 | (9) 로봇응용 | (10) 초경량마그네슘소재 |
| (11) ionic liquid 소재 | (12) 나노탄소융합소재 | (13) 기능성 나노필름 | (14) 나노융합 바이오마신 | (15) 바이오의약품 |
| (16)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 (17)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품 | (18)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 (19)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 (20) 고령친화의료기 및 제품 |
| (21) 고부가식품제조업 | (22) 고부가식품서비스업 | | | |

▲ 첨단융합산업 내 대경권 주요 육성 분야

▼ 제9차 KSIC 산업분류와 주요 신성장동력 사업간 연관도

육성사업	산업분야	주요 KSIC분야(2digit)	4개 산업군 (육성전략)
선도산업	태양광	전기장비 제조업	Emerging + Leading + Selecting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수소연료전지	전기장비 제조업	Emerging + Selecting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기기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merging + Leading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로봇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merging + Leading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첨단의료 복합단지	의약품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Selecting
	의료기기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merging + Leading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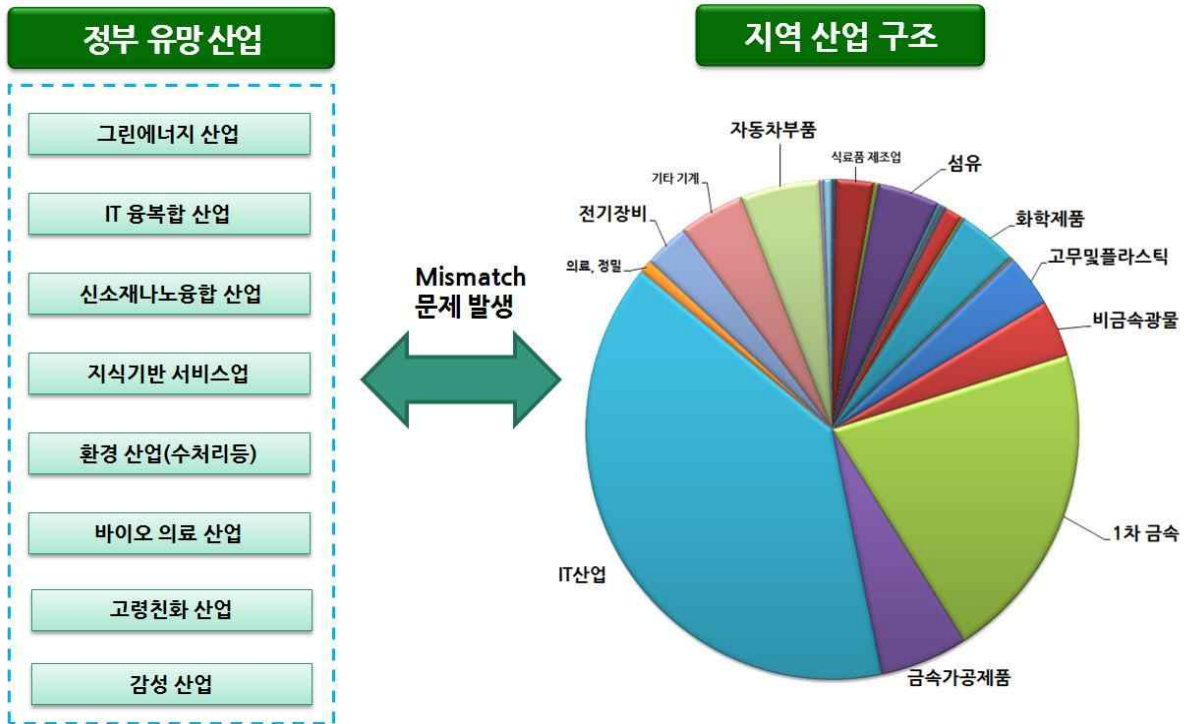
2. 문제점

■ 신성장산업 육성에 취약한 지역 산업구조

-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 및 제품개발에 있어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며, 시장 형성도 늦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 대구경북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신산업 육성 기반이 취약한 상황
 - 대기업의 경우에도 R&D 기능이 취약한 단순한 생산기지 성격을 띠고 있고, 지역 벤처기업기반도 상대적으로 취약
- 제조업의 경우, IT산업 기반은 우수하나 핵심 R&D 기능이 배제된 단순한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섬유, 자동차부품 등 기존 주력산업의 점진적 구조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중
 - 대경권 내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던 자동차부품 산업, IT산업(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과 섬유산업(화섬원사) 등 주력산업의 성장성이 지체 상태

■ 대경권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역량 미약

- 지역 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IT, MT, BT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혁신능력으로 질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 대기업 투자 감소 및 R&D 역량 약화 등에 따라 지역 내 신성장동력산업을 이끌어 갈 혁신역량이 더욱 감소되고 있는 상황
 - 산업연구원 전국 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 대경권 R&D기관 혁신역량은 1.0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투자와 인력 분야 혁신역량은 각 0.45, 0.68로 전국 평균에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대구경북 특허출원 혁신역량은 0.79로 전국 평균을 하회



▲ 대경권 산업구조와 신성장동력산업과의 불일치(Mismatch)

■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정책 효율성 저하

- 대경권내 신성장산업 육성 및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 기업과 연계 부진으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 대경권 선도산업 선정에 있어 신산업 중심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기반이 약한 분야가 선정되거나 지역 간 중복 선정이 두드러짐
 - 태양광 : 국내시장 미성숙, 해외 수출시장 지원 미비
 - 수소연료전지 : 산업기반 약화, 상용화 기술 부족 및 R&D에 대한 체계적 지원 미비
 - 의료기기 : 현재 관련기업의 미성숙
 - 실용로봇 : 로봇산업기반 부족
-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중복 및 비효율성 발생
 -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있어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역 간 중복 육성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심화
 - 대기업 신성장육성 분야 중복 육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우려

■ 주력산업, 구조전환을 통한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 노력 미흡

- 애플, 노키아, 3M 등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황 이후를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
 - 전통적인 기존 주력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 신성장 사업영역으로 사업 대전환
 - 지속적 R&D 투자로 차후 호황기의 큰 성장기반 마련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신사업의 확고한 역량 구축
-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등 지역 내 다수 산업들의 경우, 외환위기 등 외부적 불황기에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자체적 구조 전환 노력이 미흡

3 비전과 전략

1. 비전

- 지역을 둘러싼 환경변화, 지역여건, 산업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타 자치 단체와 차별화된 미래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비전 설정
- 2020년 대경권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새로운 비전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기반 일자리 확대” 로 설정

2. 목표

-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신성장산업 창업 및 성장기반 구축, 신성장산업 혁신역량 강화로 설정
 - IT, MT, BT 등 대경권 신성장산업 창업 및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
 - R&D, 인력, 정보 등 대경권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내생적 성장 기반 확보에 주력



▲ 대경권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및 전략

3. 추진전략

■ 신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

- 신기술 융합 선도기업 및 신지식 기반 1인 창조기업 육성, 신지식 기반 제2의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 신성장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전략

- 신성장산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신지식기반 융합형 인재양성, 신지식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 기반 신규 일자리를 창출

■ 신지식 창출 R&D 지원 강화 전략

- 대경 R&D 특구 신지식 거점화, 융합 신기술 제품화 지원, 이업종 간 신기술 교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대구경북 신지식기반 R&D 역량 강화

■ 신성장동력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략

- 신지식 산학융합지구, 선도산업 특화단지 및 도시형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구축
- 대구-구미-포항 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산업 융합클러스터 구축

■ 신지식정보 연계 지원 전략

- 지역 중소기업의 신지식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신지식 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신지식기반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신지식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4 주요 전략사업

1. 신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 신기술 융합 선도기업 육성 : 핵심사업

- 사업기간 : 2013~2017년
- 사업비 : 240억원(국비 120, 지방비 120)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등
- 사업내용
 - 산업 융합비즈니스파크 조성 : 산업융합화기술센터 등
 - 신기술 분야 융합 선도기업 발굴 및 유치
 - 첨단기술 융합형 미니클러스터 운영 : 구미, 성서, 경산 거점단지 중심의 첨단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

■ 신지식 기반 1인 창조기업 육성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대학/연구소, 대구/경북TP, 중소기업청 등
- 사업내용
 - S/W기반 1인 창조기업 육성 : 게임, 전자상거래, SW솔루션 등
 - 디자인관련 1인 창조기업 육성 :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 의료관련 1인 창조기업 육성 : 의료기기디자인, 의료서비스 등

■ 신지식 기반 제2의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 주관기관 :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대경권 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사업(지방예산 활용)

- 중소기업 기술연계 창업 활성화 : 기술 씨앗(Seeds) 활용 지원
- 신지식기반 연계 벤처기술기반 제품화 지원 :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개인/팀/사업부 등 창업자 사업화 컨설팅, 벤처창업(spin-off)
- 청년 창업동아리 기반 벤처기업화 지원

2. 신성장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신성장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 핵심사업

- 사업기간 : 2013~2017년
- 사업비 : 50억원(국비 35, 지방비 15)
- 주관기관 : 지역대학/연구소, 기업체, 지자체 등
- 사업내용
 - IT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 첨단의료기기관련 전문인력 양성
 - 신재생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 원자력부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 신지식기반 융합형 인재양성

- 주관기관 : 지역대학/연구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방노동청 등
- 사업내용
 - 산·학 융합캠퍼스 조성 : 산·학체 위탁교육 등을 통한 현장인력 양성
 -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활성화

■ 신지식 글로벌 인재 유치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 사업내용
 - 글로벌 전문인력지원센터 설립
 - 우수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치
 -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

3. 신지식 창출 R&D 지원 강화

■ 이업종 간 신기술 교류 활성화 지원 : 핵심사업

- 사업기간 : 2013~2017년
- 사업비 : 50억원(국비 35, 지방비 15)
 - 이업종·기술 교류 플라자 운영 : 20억원
 - 이업종·기술 교류 홍보 전시관 운영 : 20억원
 - 이업종 관련 사업 추진 : 10억원
- 주관기관 : 기업체,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이업종·신기술 교류 플라자 운영 : 미니클러스터 확대 운영 등
 - 이업종·신기술 교류 홍보 및 전시관 운영, 교류협력기금 조성
 - 민군 겸용 R&D 활성화 및 공동기술 산업화 : 지능형 부품소재 등

■ 대경 R&D 특구 신지식 거점화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경북 TP, DGIST 등
- 사업내용
 - 융합신기술 사업화 지원 : 로봇, 나노, 의료기기 등 신산업 육성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설립 : R&D와 산업 간 연계
 - 산업단지 간 연계 활성화 : 성서, 경산, 구미 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등 연계

■ 융합 신기술 제품화 지원

- 주관기관 :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DGIST 등
- 사업내용
 - 융합신기술 기반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지원
 - 신기술융합 테스트 베드(Test-bed) 구축 : 융합 신제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 테스트를 통한 제품의 경쟁력 지원
 - 융합 신기술사업화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창업·기술사업화 정보 교류 활성화
 - 융합 신기술 제품화를 위한 특허상용화 지원(개발시험 측정 및 기술지원)

4. 신성장동력산업 특화단지 조성

■ 신지식 산학융합지구 조성 : 핵심사업

- 사업기간 : 2012~2015년
- 사업비 : 100억원(전액 국비)
-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경북TP 등
- 사업내용
 -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과 연계 산·학 융합지구 조성
 - 대학과 기업이 R&D, 인력양성이 일체화된 프로젝트 발굴
 - 추진방안 : 신지식기반 융합형 인재양성 사업과 연계

■ 선도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

-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경북 도시개발공사 등
- 사업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허브 역량 강화 : 중개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역량 구축,

- 의료기기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 등
-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원자력부품 등 그린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 그린에너지 산업벨트,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등과 연계
- 추진방안 : 대경권 선도산업 육성계획, 정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

■ 도시형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 주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도시개발공사, 지자체 등
- 사업내용
 - 3공단 내 아파트형공장, 성서산업단지 내 비즈니스서비스센터, 동대구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하여 특화단지 조성

■ 신규 국가산업단지 연계 산업융합 클러스터 구축

-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 사업내용
 - 녹색융합선도 핵심 부품소재 관련 기업 유치
 - 신규 산업단지별 브랜드 홍보 지원 강화 : 대구 사이언스파크/구미 디지털밸리/포항 블루밸리
 - 신규 산업단지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신지식정보 연계 지원

■ 신지식기반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3~2020년
- 사업비 : 90억원(국비 72, 지방비 18)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경북 TP 등

○ 사업내용

- 신지식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 지식프라자센터 설립, 신지식 융합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 연계 강화, 신지식산업 지식서비스(바우처) 산업 지원 등
- 신성장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 대경디자인센터 등 연계
- 신성장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인력, 클리닉, 해외 전시회 등

■ 신지식 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가칭) 대구경북 산업발전협력위원회 구성 : 기존 위원회(기능)를 실질적 협력 단위로 재구성, 협력적 성과 도출
- 신지식기반 산업간 컨소시엄 사업 분야 다각화
- 관련 업체 간 종합정보망 구축, 창업 및 보육, 기술상용화 지원

■ 글로벌 신지식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 주관기관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대구/경북 TP, 지역혁신센터 등

○ 사업내용

- 글로벌 신지식 기업과 연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 해외 대학교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지식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5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우선순위

■ 전략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 효율성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 대비 효과성으로 평가
- 시급성 : 사업 수요자가 사업 추진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따라 평가
- 지역적합성 : 지역 역량과 잠재력을 고려한 사업의 적합성 평가
- 정책부합성 : 현 전반적인 정책 트렌드 및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의 부합성 정도로 평가

■ 전략사업 우선순위

- 효율성, 시급성, 지역적합성, 정책부합성 등 4가지 평가기준 고려

〈표 5-1〉 대경권 산업분야 주요 사업별 우선순위

구분	전략사업	효율성	시급성	지역 적합성	정책 효과성	우선순위
신지식 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신기술 융합 선도기업 육성	●	○	●	●	1순위
	신지식 기반 1인 창조기업 육성	○	○	●	●	2순위
	신지식 기반 제2의 벤처기업 활성화	○	●	●	○	3순위
신성장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	○	●	●	1순위
	신지식기반 융합형 인재양성	○	○	○	●	2순위
	신지식 글로벌 인재 유치	○	○	●	○	3순위
신지식창출 R&D 지원 강화	이업중간 신기술 교류 활성화 지원	○	●	○	●	1순위
	융합 신기술 제품화 지원	○	○	●	●	2순위
	대경 R&D 특구 신지식 거점화	○	○	○	●	3순위
신성장동력산업 특화단지 조성	신지식 산학융합지구 조성	●	○	●	●	1순위
	선도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	○	●	○	●	2순위
	도시형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	○	○	●	3순위
	신규 국가산업단지 연계 광역클러스터 구축	○	○	○	○	4순위
신지식정보 연계지원	신지식기반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	●	○	●	1순위
	신지식 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	○	○	●	2순위
	글로벌 신지식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	○	○	○	3순위

주 : ○ (부합하지 않음), ● (매우 부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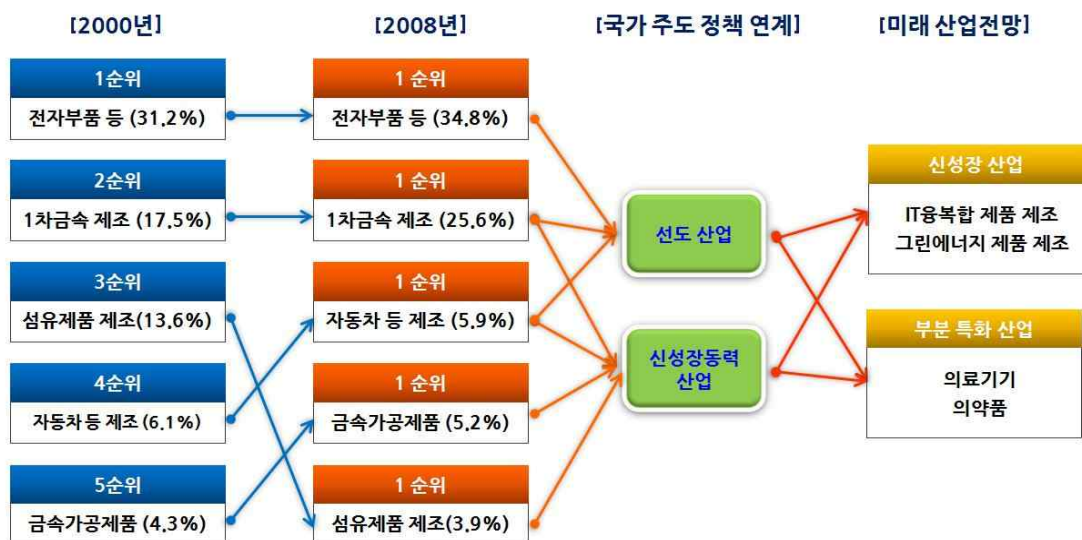
2. 추진 로드맵



▲ 대경권 신성장동력산업 주요 사업 로드맵

3.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구상

- 신성장산업인 IT 융복합제품, 그린에너지제품 제조업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부문특화산업을 대경권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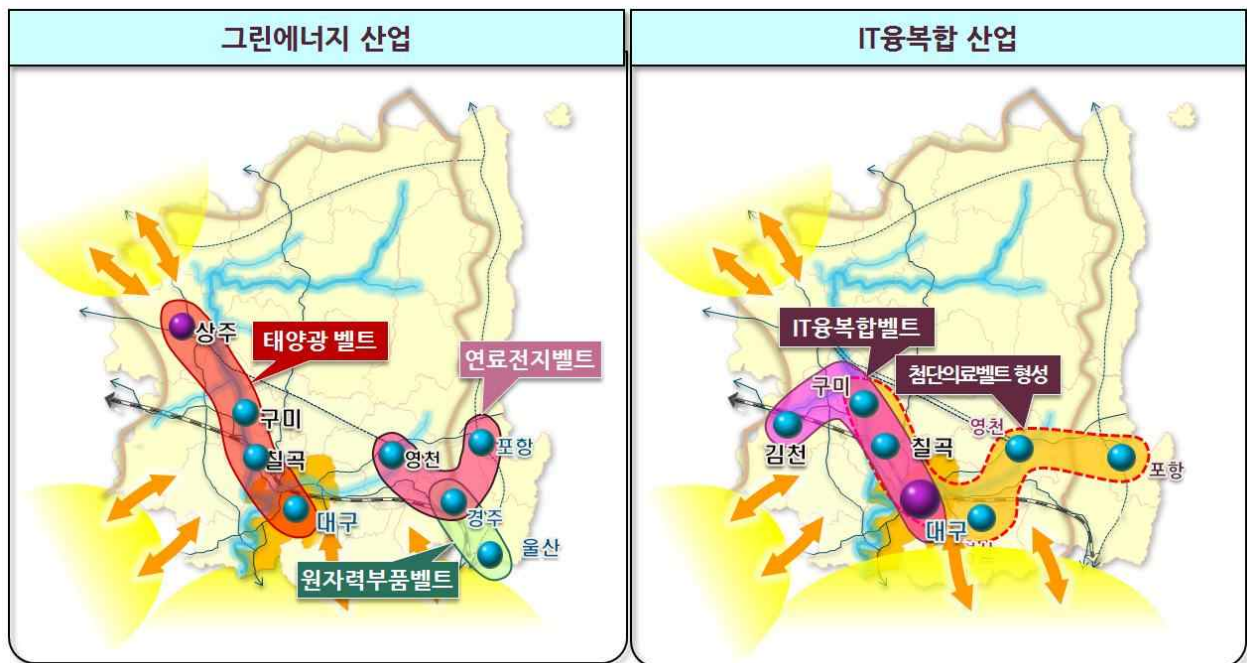


▲ 대경권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 대경권 신성장동력산업, 성장특화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류

▼ 대경권 전통 주력산업 첨단화 전략

구분	산업 성격	중점 지원분야	주요 특화분야(세부항목은 KSCI 분류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신성장 동력산업	현재 기업집적도는 낮으나 성장성이 높아 적극적 산업구조 발전정책이 필요한 지역 신규산업	식료품,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업지원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융복합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제품제조 - 산업용처리공정제어장비 - 주형 및 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에너지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장비 제조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 화합물질 및 화학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영상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성장특화 산업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유망섹터의 육성 필요성이 있는 지역 특화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부문특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기기 -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약품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20년 대경권 신성장동력산업 발전구상

고소득 일자리 창출

Ⅲ.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① 메가트렌드와 농수산업 현황

1. 주요 트렌드

■ 기후변화로 농어업 시스템의 변화 불가피

- 자연의존성 농어업 활동에서 인공적 통제를 통해 공장형으로 나아가는 환경제어형 농어업 형태 출현
- 식물공장, 빌딩농장 등 온도, 햇빛, 영양 등 자동조절장치를 통해 4계절 공장형 균질한 품질의 농수산물 생산 추구

■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수산업 발달

-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는 지속적인 산업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화석에너지 자원의 사용가능한 절대량의 고갈 의미
- 환경문제(environment problems)는 화석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생물종 멸종, 수질·토양·대기오염 등이 대표적인 사례
- 물질의 순환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수산업, 저투입농수산업, 토양온실가스 저감농수산업 등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로 농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산업·기술 간 융합(Convergence)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하면서 BT 중심의 융·복합화하는 농수산업 혁명을 촉발하여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

- 식의약 소재 개발, 식물생명공학을 이용한 재해저항성 증진, 기능성 작물의 산업화 소재 개발 등

■ 생명산업으로의 새로운 가치 전환이 필요한 농수산업

- 농수산물의 공공재 및 환경재적 가치에 대한 논의 활발히 전개
- 농어촌의 다문화 가족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 저출산을 해소하면서 사회문화적 차원의 또 하나의 세계화 현상
- 친환경농수산업, 로컬푸드운동, 농민장터, 생활협동조합, 지역사회지원농수산업(CSA) 등 대안적 먹을거리 운동 지속적으로 확산

■ 국가경쟁력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는 해양수산업

- 바다는 생명의 근원, 미래 자원의 보고로 지구 생물의 90%인 해양생물이 지구표면적의 71%인 해양에 서식
- 해양자원의 이용·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해양산업 발전 도모, 특히 해양생물 자원 확보 및 산업화를 위한 경쟁 치열
- 기르는 어업에서 IT, BT를 접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수산업의 개념 변화 및 각국 간 경쟁 가속화

2. 과거와 현재

■ 농수산업 생산 비중 하락, 농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 농어업 GDP 비중이 2000년 4.2%에서 2005년 2.9%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1.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농어업 취업자의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05년 7.5%로, 2020년에는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대구경북 지역 농가인구의 비중은 총 농가 수 대비 2009년 현재 15.3%이며, 지역의 농가 수는 20만여호로 총 농가 수의 16.7%

▼ 연도별 농어업 GDP 비중

(단위 :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20
농어업 GDP 비중	13.8	11.6	7.8	5.5	4.2	2.9	1.6
농어업 취업자 비중	32.4	23.7	17.1	11.2	10.2	7.6	-

■ 영농 규모화 정책으로 3ha 이상 농가의 증대

- 정부의 영농규모화 정책에 따라 증가되는 영농기계화로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3ha 이상 농가가 1998년 7,091호에서 10년 후인 2008년에는 10,822호로 52.6% 증가

■ 농어업소득은 높으나 농외소득은 낮은 이원적 구조

- 경북의 농어가소득은 2008년까지는 전국 평균 대비 91.4% 수준인 28백만 원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농수산업소득이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
- 농외소득은 전국 평균치를 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것이 지역의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 주요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전국 평균	경북	전국 평균	경북	전국 평균	경북	전국 평균	경북
1995	21,803	21,265	10,469	11,770	6,931	5,587	4,403	3,908
2000	23,072	22,818	10,897	11,485	7,432	6,376	4,743	4,957
2008	30,523	27,895	9,654	11,025	11,353	8,867	5,289	3,694
2009	30,814	31,296	9,698	12,498	12,128	10,203	5,481	5,289

자료: 통계청

■ 주요 농작물의 재배 감소와 중소 신작물, 가공식품 생산 증가

- 경북지역의 경우 농축산물 생산품목이 200여개로 작부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이로 인해 다품목 소량생산의 특징을 보임
- 대구는 전국 생산량 대비 점유율이 매우 높은 연근(44%), 체리(30%), 잎들

깨(15%)를 생산, 기타 특산물에는 오디 외 친환경농산물(195호 149ha), 전통 장류(12호 21톤)를 중심으로 생산

■ 대구경북 농수산업 특화품목

- 경북은 농축산물 생산품목이 200여개로 작부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다품목 소량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내외 경쟁력이 약하여 지역적 차별성을 가진 대표 품목 육성이 요구
- 특성화 품목은 총 40여개이고, 이 중 5개 이상 지역의 시·군에서 특성화 품목으로 재배되는 품목은 한우(9), 사과(8), 버섯(5) 등으로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안전·품질 중심의 소비자 선호 변화 →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는 평균 매년 약 79%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 재배 면적은 평균 매년 약 72% 증가

■ 산지-소비지 연계형 유통체계 구축 및 강화

- 산지에서 수집, 세척, 선별, 포장, 수송까지 일괄 공동작업을 실시, 소비지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에 직접 판매토록 하게 되면서 간이집하장 494개소 및 산지유통센터 83개소를 주산단지 중심으로 집중 배치

■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의 지역 식품산업

- 식품 매출액은 2조 1,411억 원으로 전국 대비 7.5% 점유, 건강기능식품은 1.4%, 식품첨가물 2.5%, 기구·용기·포장지는 2.7%로 다른 시·도에 비해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환경 및 경관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공간의 재구성

-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이 새로운 레저와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재발견(농림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4개소, 관광농원 45개소, 농어촌민박 996개소, 자연휴양림 17개소, 산림욕장 16개소, 생태숲 5개소 조성

■ 경북도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림면적

- 경북 임가 인구는 61,120명, 임가 수는 23,715호로 전국 대비 24.4%의 높은 비중 차지
- 임목축적량은 2008년 현재 총 138,127천m³으로서 전국 임목축적량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ha당 102천m³
-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산림자원 보유

■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산 어획량의 점진적인 증가세

- 수산물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국 수산물 생산량 대비 4~5%의 비중 차지
- 2008년의 총 어획량은 17만 7,586M/T, 생산금액은 377,427백만 원으로 해마다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늘어나는 경향

▼ 어종별 어획량

(단위 : M/T, 백만원)

구 분	합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패류 포함)	해조류	
2000	수량	143,466	52,620	14,663	72,510	1,711	1,962
	금액	290,585	96,823	66,916	115,246	9,932	1,668
2008	수량	177,541	59,436	18,414	95,009	3,491	1,191
	금액	377,427	142,248	64,093	157,502	12,227	1,357

자료 : 통계청 및 경상북도, 「통계연보」 및 「도정백서」, 각호.

■ 상대적으로 고가 어종이 많이 잡히는 동해 바다

- 어업생산 실태를 보면 물량기준으로는 전국 생산량의 5.5%, 금액기준으로는 8.1%를 차지 비교적 고가 어종의 비율이 높은 편
 - 지역의 고가어종은 일반 해면어업의 대계, 양식어업의 활어, 멍게 등이 포함

■ 주요 어획물 및 생산품의 단순성

- 연근해어업(일반해면어업)이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내수면 어업은 1~2%에 불과
- 오징어, 대게, 가자미류, 문어, 붉은 대게 등 일반 해면어업이 전체의 69%, 이 중 오징어가 생산량 기준 51%, 금액기준 32% 점유

■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수산 제조업

- 냉동·냉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는 거의 없고 단순히 보관 후 외부로 판매

3. 정책동향



가. 농업정책의 변천과정

■ 1980년대 : 개방농정의 시대

- 농촌공업화 도입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불안한 출발)
- 자작농체제에서 임대차제 도입으로 농지유동화(농정사의 큰 의의)
- 선의의 복합영농정책이 소값 파동으로 중단
- 상업적 농수산업의 본격화로 자가소비농수산업에서 판매농수산업 정착

■ 1990년대 : 구조조정의 시대

- UR 협상결과 본격적인 시장개방(쌀을 제외한 관세화 원칙 합의)
- 농수산업 구조조정으로 규모화, 경쟁력 제고 정책 더욱 가속화
- 농어촌발전대책으로 농정개혁 추진
- 친환경농수산업육성법 제정(1997), 농수산업농촌기본법 제정(1999)으로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증대와 공익적 기능 강화

■ 2000년대 : 소비자중심 농정의 시대

- FTA 체결 확대 : 칠레, 미국, 동남아, 홍콩, EU 등
- 농수산업·농촌종합대책 실시(2004~2013) : 소득정책, 지역정책 강조
-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정책대상(농수산업에서 농식품), 지원방식(농가유형별로 차별화), 투·융자방향(생산기반 SOC에서 소득, 복지, 지역개발), 소득안정수단(가격지지에서 소득보전), 정책(생산자에서 소비자), 농촌의 성격(생산공간에서 정주·휴양공간)
- 관련 법제정 : 도농교류촉진법(2007), 식생활교육지원법(2009)

나. 해양수산 정책의 변천과정

■ 1980년대 : 수산업 정책의 본격 추진

- 1987년에 수립된 해양개발기본법에 의거, 1996년부터 5년 단위의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 추진
- 생산·생명·생활의 바다 실현을 통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모색
-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 해양바이오산업 중점 육성

■ 1990년대 :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 정부중심의 수산업과 획일적인 자원관리 중심
- 국내외 환경변화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

■ 2000년대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융·복합화

- 식품, 서비스분야로 영역확대, 산업기술간 융·복합화 추진
 - 농수산업 + 식품산업 + 생명산업
- 생산자 중심(소득안정)에서 생산자 + 소비자(건강, 안전)+미래세대(환경보전)로 전환

② 농수산업의 문제점 진단

- 대구경북 지역농어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국농어업 일반의 문제, 지역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 지역정책 추진의 문제, 주민의식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고착화되어 나타남

▼ 대구경북 농수산업의 부문별 문제점

농업일반	지역고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양·질 저하, 농가소득 상대적 저위 ▪ 주곡(쌀) 소비 감소, 경지면적 축소 ▪ 낮은 공공투자 효율성, 포장디자인·브랜드 난립 ▪ 시장개방 확대(DDA/FTA), 기후변화로 농업지대 변화, 농촌주민의 구성변화(토착민 → 외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농작물의 재배면적 감소 ▪ 농외소득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음 ▪ 영농규모화 애로(영세한 작물 재배 위주) ▪ 호당 농업자본 규모 적고, 격차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중심의 정책사업 시행, ▪ 정책기획 및 거버넌스 부족 ▪ 지역농정의 창의성 및 트렌드의 수렴 노력 미흡 ▪ 지자체간 정책연계성 미흡 및 경쟁적 마찰 증대 ▪ 일부 인기품목 경쟁적 지원 ▪ 1회성 중장기계획 남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변 환경오염의 심각한 확산 ▪ 희망적 미래전망 부재, 마을 공동사업에 이기적 태도, 소비자의 이중적 태도, 소비자 선호변화에 대응 느림, 투기적 농지수요 ▪ 지역해양수산 이해 부족, GMSP 내실 부재, 해양 R&D 및 해양산업의 특성화 미흡
지역정책	주민의식·해양수산의 문제

1. 농어업 일반의 문제

■ 노동력의 양적·질적 하락 심각한 수준

- 생산의 주체인 농업노동력의 양적·질적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며, 고령자와 여성 중심의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산성이 낮은 상태로 주곡(쌀) 생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품목에 집중

- 앞으로 젊은 층 중심으로 과일, 채소, 축산 등 고소득, 환금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재배되면서 역대소득 농가의 전략적 육성 필요
- 외지인의 농촌정착 증가에 대비한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적합한 영농기술 보급 등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 구축 필요

■ 농가소득의 상대적 저위

- 농어촌 지역의 소득은 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수준이 낮으며, 지난 2008년도 기준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5.3%에 불과

■ 주곡(쌀) 소비의 지속적 감소

- 주곡인 쌀 소비의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
 - 지난 2008년도 1인당 쌀 소비량은 74kg 수준으로 이대로 두다가는 60kg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2008년 초반의 국제곡물위기 당시 이집트, 필리핀 등에서 쌀 배급제를 실시 하였던 긴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쌀 소비의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지역 농수산업에 대한 낮은 공공투자 효율성

- 보조사업 중심으로 농수산 부문에 대한 대형 공공투자가 실행되면서 투자사업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 중 과잉 투자사업은 개인 중심의 농수산업 기계화, 개인과 법인체 중심의 유통시설, 그리고 브랜드디자인 영역
-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것은 보조중심의 사업추진, 일부 인기 품목에 대한 경쟁적 과잉 지원 등이 더욱 심화시킨 측면도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업지대 변화, 환경오염 심각

-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지역, 수산 어류의 변화와 같은 품목의 변화 등장
-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온 꽃매미 피해 등과 같은 유입 병해충 발생으로 농수산업의 생산기반이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지역의 환경에도 큰 문제를 야기

2. 지역고유(특수성)의 문제

■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감소

-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사과, 배, 포도 등 과실류, 채소 등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
- 또한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특용작물(참깨, 땅콩)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인 감소세

▼ 경북지역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M/T)

구분	식량		과실		채소		특용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80	318,244	615,925	29,398	308,938	-	-	11,479	2,881
2000	168,144	725,343	56,443	761,876	56,890	1,502,202	11,565	9,614
2008	147,316	720,284	53,171	786,751	44,281	1,435,833	8,851	7,351

자료 : 통계청

■ 농외소득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편

- 농가소득 중 농수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매년 감소 추세이며,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저수준

3. 지역정책의 문제

■ H/W 중심의 정책사업 위주로 진행(S/W 간과, 소홀)

- H/W 위주의 시설투자사업의 경쟁적 추진으로 시설운영 및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S/W 계획에 대한 진지한 고민 부족

■ 지역농정의 창의성 및 거버넌스, 트렌드의 지역화 노력 부족

- 지역농정에서 정책적 차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수립 및 기획 능력이 미흡하고, 중앙에서 개발한 정책의 집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이해, 트렌드 변화에 적응한 창의적인 지역정책의 개발 노력 부족

■ 지자체 간 정책 연계성이 매우 미흡

- 광역도-광역시, 도-시·군, 시·군-시·도간의 유사·동일 사업의 중복시행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대안 필요

4. 주민의식의 문제

■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 및 비전 미흡

- 일부 부농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의 영세 농가들은 혁신 능력, 창의적 사고, 비즈니스 마인드 부족

■ 주민 공동사업(마을·권역사업)에 대한 이기주의적 입장

- 공동체 기반 규모화의 전제조건이나 사업의 목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계획, 나눠 먹기식 사업 추진, 무임승차 등 이기주의로 사업의 실효성 저하

■ 소비패턴,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과거의 애국적 소비주의에서 웰빙·고품질을 추구하는 소비추세로 바뀐 현실에 대한 인식 및 능동적 대응 필요

5. 해양·수산의 문제

■ 지역 해양수산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 부족

- 해양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는 낙후된 분야(수산), 접근하기 힘든 미래산업(해양)으로 인식

■ 지역 해양발전의 싱크탱크인 GMSP의 내실화 요망

-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Gyeongbuk Marine Science Park; GMSP)는 기 입지한 2개의 연구기관과 해양바이오산업단지, 환동해해양과학교육관 등으로 조성될 예정
- GMSP의 각 주체 간 역할 분담, 연계·협력, 발전방향 등 마스터플랜이 필요

■ 해양 R&D 및 해양산업의 특성화 부재

-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비교우위성을 가진 특화된 연구개발기술 및 산업 발굴 필요

■ 수산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 어선·어업 중심의 지역 수산업으로 단순가공 수준의 식품산업으로 수산업의 2차 가공 등 애그리비즈니스화로 고부가가치 실현 필요

6.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제

■ 농수산업을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 농수산업은 더 이상 1차 산업, 생산에만 안주하는 산업이 아닌, 6차 산업화(1차×2차×3차), 융복합화 산업이자 신성장동력산업
- 2020년대의 떠오르는 생명산업으로 부상할 잠재력 충분한 농수산업을 Rising Star로 육성

■ 인재를 키워 농수산업의 미래를 바꾸자

- 성공신화를 통해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불러 모으고, 신규 취농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
- 전문가, CEO 농어민 양성을 위해 농어민사관학교 기능 대폭 강화
- 경북을 대한민국 최고의 특화농업지역으로 변모시켜 억대소득 농어가 2만호 양성

■ **첨단과학기술의 적극 수용 : 농어업의 융복합화**

-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주도 농어업 육성
-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고생산·고효율형 농어업 추진

■ **투입 에너지 체계의 변화 선도 :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 석유정점(Peak Oil)의 시대 이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정점(Peak Food)으로의 이행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폐기물을 생산과정에 재활용하는 ‘생산 → 폐기물(폐자원) 재활용 → 재생산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로 이어지는 순환경제인 블루이코노미(자원순환경제) 실현이 필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 세계 최대의 환경기업 에코버(Ecover)의 설립자이자 저술가인 군터 파울리(Gunter Pauli)가 창안한 개념으로 “폐기물이나 배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자본에 기여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시스템”
-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동일 수준, 혹은 더 적은 이익을 위해 기업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지불을 요구하는 그린이코노미에 대비

■ **도시의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방지 : 농어촌의 대안 공간화**

- 도시지역의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해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간 소외 현상 : 적정한 소득과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수요 증대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증대, 체험활동, 귀농·귀촌 수요 증대에 대비하는 전략 필요

3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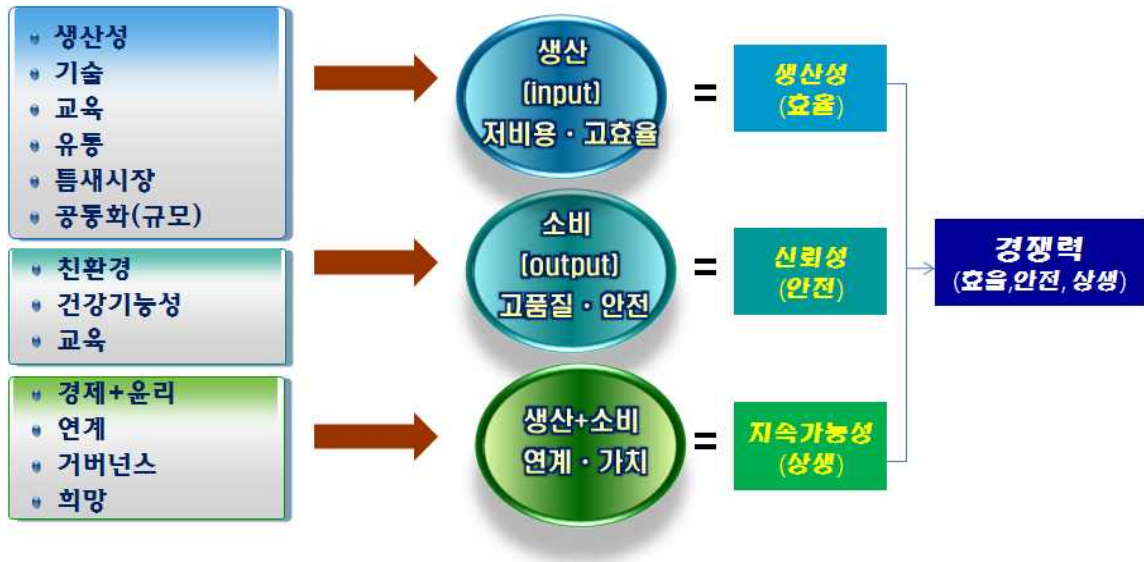
1. 지역 농수산업을 형성하는 주요 키워드

- 지역 농수산업은 내적인 과제는 물론 바깥에서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트렌드 변화 요소들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됨
 - 시장개방의 확대, 인구의 질적·양적 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석유중심 기술 체계의 변화 가능성,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는 기술 발전의 추이, 농수산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 지역 농수산업의 과거는 물론 현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 중앙과 지역정책 동향 등에서 제기되는 사항들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 가능
 - 생산성, 기술, 교육, 유통, 틈새시장, 공동화(규모화), 친환경, 건강·기능성, 경제윤리, 연계(network), 거버넌스, 희망
 - 12개의 키워드는 생산(생산성=효율), 소비(신뢰성=안전), 생산과 소비의 연계(지속가능성=상생)의 세 부문으로 구성
 - 생산, 소비, 양자의 연계로 함축되는 키워드는 최종적으로 효율, 안전, 상생의 틀을 토대로 '경쟁력 강화'라는 미래형 농수산업 구축을 위한 지향성 제시

▼ 지역 농수산업의 주요 키워드

키워드	세부내용
생산	생산성, 기술, 교육, 유통, 틈새시장, 공동화(신개념 규모) 저비용·고효율, 투입물(Input)
소비	친환경, 건강·기능성, 교육 고품질·안전, 산출물(Output), 신뢰성(안전)
생산 + 소비	경제+윤리, 연계(네트워크), 거버넌스, 희망 가치, 지속가능성(상생)

- 지역 농수산업이 나아갈 모습은 효율의 경쟁력, 안전의 경쟁력, 상생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희망의 농수산업을 개척해 나가야 함



▲ 지역 농수산업의 주요 키워드

2. 비전

- 비전은 대구경북 농수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힘, 능력, 방향, 가치를 담은 총체적 표현이자,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함축
- 비전은 생산성, 신뢰성, 지속가능성의 키워드와 이를 수렴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한 경쟁력, 활력 넘치는 녹색농어업”으로 설정
 - 효율, 안전, 상생의 키워드를 최종적으로 경쟁력으로 수렴하고, 경쟁력에 기반하여 활력 넘치는 녹색성장 시대의 지역 농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비전의 핵심
- 지역 농수산업의 2020 비전은 고소득, 친환경산업, 신성장동력원이 될 식품산업의 전략적 창출,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소망을 내포
 - 지역 농수산업이 당면한 과제인 대내·외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 농어업 실현이 목적



▲ 비전 체계도

3. 목표

- 대구경북 농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한 경쟁력과 활기 넘치는 지역농수산업 실현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농가 소득증대 실현’과 ‘지역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의 개량적 목표 설정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실현

- 지역 농수산업의 소득 목표는 궁극적으로 도시지역 근로자 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 도·농 간 균형소득(100%) 실현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농어가소득을 수취

▼ 전국 최고의 농어가소득 수취를 위한 목표치

(단위 : %, 천원)

구분	2007	2013	2018	2020
도농 간 소득격차율(%)	68.7	79.5	93.8	100.8
도농 간 균형소득 목표치	26,000	38,000	52,000	58,000

■ 지역 식품산업 육성

- 지역 식품산업의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약 4조778억 원 수준
- 지역 식품산업 성장지표 설정을 위해 음식료품 제조업 출하액(1998~2007) 추세치를 적용하되, 목표치는 지역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발전전망을 감안, 추세치에 2.5%를 합산한 연 평균 증가율(7.5%)을 설정
 - 지역 식품산업 규모 2007년 4조778억 원을 기준으로 추세치와 목표치 산출

▼ 지역 식품산업 목표치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13	2018	2020
추세연장치	4,077,845	5,488,130	7,029,415	7,760,989
목표치	4,077,845	6,313,565	9,088,202	10,513,790

4. 추진전략

- 전략은 지역 농수산업이 가진 차별성, 독창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농수산업과는 다른 비교우위를 갖는 방법이자 통로
- 대구경북 농수산업이 확보 가능한 비교우위의 통로, 차별성에 근거하여 크게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

■ 친환경농어업 역량 강화

-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은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동하느냐(do creative)에 의존
- 사람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과 함께 미래 농수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기술 농수산업 역량 제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농수산업 자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자본 능력 확충은 지역 농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선결과제

■ 블루오션 전략품목 육성

- 블루오션 품목이란 새로운 개념(make new conception)과 새로운 가치(make new value)를 제공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많은 부가소득을 제공하면서도 기존 시장, 기존의 생산물과 경쟁이 없는 신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품목을 의미

- 지역에는 200종이 넘는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 중으로 다품종소량생산의 전형을 보여주는 지역으로 다품목소량생산의 기반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춘 유연적 생산체계를 도입할 때 블루오션 품목의 개발이 가능
- 곤충산업, 토종농산물, 기능성 양잠, 각종 산채류, 중소 과일 및 과채류 등의 품목,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명품 농산물 등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블루오션 전략품목의 육성 가능

■ 신성장동력 확충

- 어제와 다른 생각, 생각의 속도가 남보다 빠를 때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신기술(innovation makes hi-tech) 보유 가능
-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진보로 IT, BT, NT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산업과 제품 출현
- 2010년 이후 농수산업 전개과정에서 첨단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하면, IT농수산업은 물론 바이오농수산업, 나노농수산업, 바이오·나노농수산업의 융·복합화 형태 등 새로운 농수산업 분야 개척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이 가능

■ 소비자 지향 농수산업 추진

- 도시와 농촌의 교류, 체험을 통한 공감은 상대를 이해하는 지름길이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단순한 상품의 생산과 공급관계가 아닌 신뢰(network makes truth)를 구축
- ‘친환경농업육성법’, ‘도농교류촉진법’, ‘식생활교육지원법’은 농수산업이 농어민 만을 위해 존재하는 산업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산업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에 의한 산업으로 규정
-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으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
- 웰빙과 로하스적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패스트푸드(Fast Food)가 아닌 슬로푸드(Slow Food)의 건강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세 가지 법령 체계는 소비자치향 농수산업 지향을 위한 제도화를 추구하는 핵심 법안

4 주요 전략사업

1. 전략사업의 개념

-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진 사업
- 전략사업은 투입요소의 성격, 내용에 따라 원료자원 우위형, 노동자원 우위형, 기술자원 우위형의 세 가지 전략사업으로 구분
 - 원료자원 우위형 : 지역농업이 이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 중 투입자원인 원료 자원에 기반을 둔 전략사업
 - 노동자원 우위형 : 3대 생산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수한 노동자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사업
 - 기술우위형 : 토지보다 기술에 의존한 집약적 생산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사업

2. 전략사업의 도출

- 대구경북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전략사업은 제시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전략사업 요인을 통해 도출

▼ 전략사업의 요인과 내용

키 워 드	세 부 내 용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제고 실현
현안문제 해결	지역 농수산업의 당면문제 해결
소비자 지향	소비자의 선호, 태도 변화의 적극적 수용
비교우위 실현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춘 비교우위 요소의 판단 및 활용
소득 증대·삶의 질	도농격차 해소 및 쾌적한 정주기반 구축
트렌드·정책 수렴	트렌드 변화와 정책동향의 탄력적 수용

■ 전략사업의 도출 과정

- 지역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제시된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고, 이들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4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하도록 하는 6가지 전략사업 요소를 설정
- 전략사업 요소들을 활용하여 지역 농수산업의 현안사항이 되는 제반 문제점 해소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전략사업으로 도출



▲ 전략사업의 도출 과정

3. 사업 우선순위

■ 핵심전략사업 및 기타 중장기사업

- 핵심전략사업 : 지역주민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현재의 기술수준 및 재정여건에 추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선정(12개)
- 기타 중장기사업 : 지역 농수산업이 가진 문제해결,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사업, 신성장동력원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활동이 필요한 사업(27개)

▼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핵심전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현재의 R&D, 재정여건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사업
기타 중장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기후변화, 개방 확대 등 트렌드를 수렴하는 사업 ▪ 신성장동력원으로 광범위한 정책수혜가 예상되는 사업

■ 핵심전략사업

- 1~2년 이내에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바로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나타나는 사업
- 현재의 기술 수준,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정책의 주도과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중장기사업

- 지역농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 등 지역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업
-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신성장동력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파급효과가 지역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

▼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사업

추진 전략	전략 사업	사업 추진	
		핵심전략	기타 증장기
친환경농어업 역량 강화	주산지별 명품브랜드 육성	●	
	키친 인큐베이터(Kitchen incubator) 육성		○
	쌀 소비촉진을 위한 자조금 조성 지원	●	
	Z-W농업단지 조성		○
	바이오가스(축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
	산림비즈니스특구 조성	●	
	바이오매스-단백질 프로젝트		○
	도축장(수산시장) 폐기물 자원화 사업		○
	온배수 활용 바다목장 조성		○
	친환경수산물 인증지원		○
블루오션 전략품목 육성	1인 창조 농기업 육성	●	
	1%플러스 농산물·식품 육성		○
	한지산업 육성		○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	
	과실류 변이지 신제품 육성지원		○
	블루오션 농식품 육성		○
	자생식물 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
	동해특산 대게명품화 사업	●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		○
신성장동력 확충	식물성 자연색소산업 육성		○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한식세계화 R&BD연구센터 설립		○
	국립불고기연구소 설립		○
	기능성 쌀 막걸리 연구센터 설립		○
	근층산업 소득화 사업	●	
	농가형 식물공장 조성		○
	식품개발연구원 분원 유치		○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건립	●	
	GMSP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		○
	해양수자원 활용센터 건립		○
한류성 어류 R&D 기반 구축		○	
소비자 지향 농어업 추진	녹색농업타운(에너지독립마을) 조성		○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	
	지역사회지원농장(CSA) 조성	●	
	지자체-기업 상생협력도시 조성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추진단 운영	●	
	대경광역권 학교급식 종합물류센터 조성		○
	해양관광자원 체험벨트 구축		○

4. 핵심전략사업 추진계획

가. 주산지별 명품브랜드 육성

■ 사업의 필요성

- 대구경북은 200종이 넘는 다양한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살아있는 전시관으로 사과, 포도, 참외 등 전국적 브랜드 품목의 명품화로 고소득 실현이 필요
- 또한 대외경쟁력 확보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해 품질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품목의 차별화, 특성화, 집중화하는 육성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2016(5년간)
- 사업량 : 경북도내 23개 시·군 및 대구시 일원 등 10개소
- 대상품목 : 쌀, 과실류, 축산물, 채소류 13개, 수산물 5개
 - 명품화 대상 품목은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생산비중 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도품목과 보완품목으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육성
-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요내용
 - 품목별 주산지별 명품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 품목별 주산지별 명품브랜드 기업 육성

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자조금 조성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2009년 쌀 재고량은 적정재고량을 초과하는 100만 톤으로 금년 수확 이후 재고량은 150만 톤으로 증가 예상

- 특히 적정재고물량(2개월분 72만 톤)을 초과하는 재고물량 보관비(2천억원) 발생의 문제도 초래
- 쌀 재고량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지역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어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쌀 소비량(1인당) : 131.5kg('81) → 119.6kg('90) → 106.5kg('95) → 93.6kg('00) → 80.7kg('05) → 74.0kg('09)
- 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서 쌀 가공산업 육성 등 다양한 쌀 소비 촉진대책과 쌀 생산조정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재고 감소 효과에 머무르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대책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도(1년간)
- 추진지역 : 쌀 생산 주요 광역 도(경북, 전남북, 충남)
 - 참여단체 : 쌀 관련 조직, 협회, 법인체, 기업체(한국쌀산업협회, 관련 기업체 등)
- 지원조직 : 쌀 자조금 조성 지원 T/F팀 구성
- 주요 활동 : 쌀 자조금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행정적 지원
- 사업내용
 - 자조금 조성규모 : 220~370억원
 - 운용기관 : 한국쌀산업협회(쌀 대표품목조직)
 - 조성방법 : 쌀전업농만 참여하는 임시자조금으로 출발, 법제화 이후 모든 쌀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제로 이행
 - ※ 임시자조금제항의 각출대상은 쌀 전업농(약 56천명, 호당 5.14ha), 쌀 유통 및 쌀 제품 생산기업도 포함
 - 자조금 이용 :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에 지속적 홍보, 마케팅 활동
 - 바른 식생활교육 및 쌀소비 촉진교육 대상 : 영양(조리)사·학생, 일반 시민(특히 주부), 기업체, 사회단체 등

다. 산림비즈니스 특구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큰 화두로 부각되면서 환경·생명·소재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증대
- 특히 산림자원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재생가능자 에너지원으로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산업 자원으로 녹색성장의 핵심분야
- 또한 소득증가와 함께 웰빙식품을 비롯한 친환경유기농식품과 산지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소비 급증

▼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임산물

구분	임 산 물
버섯류	표고버섯, 송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능이버섯, 싸리버섯, 꽃송이버섯 등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고비, 죽순 등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복분자, 산딸기 등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구절초, 감초 등
수엽류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음나무잎, 참주잎, 청미래덩굴잎 등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도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등
수목부산물류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등

- 대구경북의 경우 전국 대비(21%) 최고의 산림면적 보유(총 산림면적 1,346천ha)하고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임야율이 75.2%로 산림 및 임산자원 활용의 높은 잠재력 보유
-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임야율이 75.2%인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서 백두대간을 축으로하는 다양한 산림생태계와 태백산·소백산·가야산·주왕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산림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산림자원을 산림휴양·관광 등 타부문과의 연계가 가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2014년(4년간)
- 사 업 비 : 20,000백만원(1개소)

- 사업지역 : 산림자원 및 경관 수려지
- 사업내용
 - 산림비즈니스 특구 조성
 - 농산촌일자리 창출형 펄프-단백질 프로젝트
 - 복합경영단지 조성 및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설립
 -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목재 바이오매스타운 조성
 - 목재가공산업 육성 및 산림경영 기업 설립
 - 산림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라. 1인 창조 농기업 육성

■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가진 손재주, 기술, 인생의 경험, 노하우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사업 모델
-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손맛을 기초로 한 1인 창조기업이 개발할 아이템은 거주하는 주민의 수만큼이나 무궁무진
- 1인 창조 농기업은 지역(local), 저투입=친환경(low input), 저기술(low tech)의 3가지를 축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기업이자, 친환경기업이며, 누구든지 쉽게 활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1인 창조 농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2020년(10년간)
- 사업량 : 500개소(개소당 20백만원)
- 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1인 창조 농기업 육성계획 수립 : 사업 기본 개념, 지원기준, 지원내역, 지원기간 등
 - 주 지원 사항은 농가형 식품가공사업의 규모에 맞도록 식품업 허가대행, 경영교육 및 컨설팅, 제품의 홍보마케팅 지원
 - 1인 창조 농기업 발굴 워크숍 개최 : 기업육성을 위한 전문가 발굴(특별한 솜씨, 장인적 가질, 경력

마.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 사업의 필요성

- 최근 토종농산물에 대한 보존 육성의 중요성이 한층 주목받는 가운데 국가 연구기관에서도 새로운 관심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
-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대구경북은 토종농산물 생산에서도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생산
- 조, 수수, 기장, 보리, 감자, 고구마 등 춥고 배고플 때 먹었던 구황성 농작물 뿐 아니라, 약초류, 특용작물류 등이 지역 토종농산물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이를 문화·경관 등과 연계하면 지역특산화는 물론 농가소득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2015년(3년간)
- 사 업 비 : 25,000백만원(50개소, 개소당 5억원 지원)
- 사업내용
 - 마을단위 토종농산물 특산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화 추진
 - 토종농산물 지역 명품화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 지역적응성이 높은 토종농산물 선정, 우량품종 선발 및 종자지원
 - 우수 토종품종의 시험포 대량 증식을 통한 토종재배농가 보급
 - 토종종자 연구개발 및 홍보를 위한 토종전시채종포 운영

-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1농가 1토종종자 심기 사업 확대
- 생산된 토종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기존 브랜드 활용 가능), 공동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 추진 가능

바.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사업의 필요성

- FTA 등 농업외부 환경이 변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 농업생산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대안이 필요한 시점
- 경북지역은 전국의 19.1%에 달할 정도로 면적이 넓고(19,026km²), 평야지와 산간지, 해안지대 등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
- 지역주민의 20.6%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뚜렷한 4계절로 한우,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참외, 고추 등 세계적인 특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전형적인 농도(農道)로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식품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농어가 소득 증대 실현 가능
- 특히 대구경북은 다양한 농산물과 특화단지, 연구관련 인프라 및 제조·가공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편이며 향후 농·산·학·연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토대가 잘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비 : 50,000백만원(10개소, 개소당 5,000백만원)
- 비교우위 특산품을 융·복합화하는 고부가가치 2, 3차 식품산업 육성
- 생산자 참여형 식품기업 육성 : 생산자(원료납품), 식품기업(가공유통)
 - 생산유통 부문 :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에 대하여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공동생산·유통 이용시설을 지원
 - 가공식품 부문 : 식품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안전·위생(HACCP 등) 시설 개선 지원

- 추진 가능한 사례(지역 특산품, 향토식품 우선 추진)
 - 지역별로 특화된 2~3개의 핵심 아이টে을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টে을 중심으로 전략품목 육성
 - 김치, 전통주, 한식, 축산물·수산물 등 원재료로 이용한 전통·향토식품
 -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형, 퓨전형 식품개발, 관광산업화

사. 곤충산업 소득화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곤충산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 유리한 산업으로 곤충의 새로운 용도개발에 따라 무한한 시장창출이 가능한 21세기형 지식산업
 - 현재 1,000억원 규모로 2015년에는 3,000억원 시장 예상
- 웰빙 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농산물 수출장벽의 확대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화분매개곤충과 천적곤충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예천은 전국 최초로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여 화분매개곤충과 천적곤충사육 및 대량 생산기술 개발·보급 등 곤충생산기술이 높고 농업분야에 적극 활용

▼ 대구경북 곤충산업 관련 현황

구 분	내 용
사육농가	13농가(전국 220농가)
생태공원	3개소/영양, 예천, 울진군
체험학습장	11개소(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천, 문경, 영양, 칠곡, 예천, 울진)
곤충연구소	3개소/(문경 (주)나비스, 경산 그린아그로텍, 예천 곤충연구소)

- 상주의 잠사곤충사업장은 유용곤충종 유전자 보존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유용자원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양잠산물의 개발로 농가소득에 기여
- 곤충산업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예천산업곤충연구소, 문경 나비스(주) 생산기업을 연계한다면 타 지역보다 곤충산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2015년(3년간)
- 사업비 : 30,0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핵심기술역량 고도화 사업, 신기술·신사업 기반 조성사업
 - 화분매개곤충 연구 분야에 대한 인력확충,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및 상업화 추진
 - 유용곤충 사육농가 발굴 육성
 - 판매유통망 확보를 통한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 벤처기업 R&D사업 지원 및 시설확충
 - 벤처기업 전문 연구인력 확충, 수요기반 강화 및 홍보사업
 - 곤충생태원, 생태체험 경관조성, 지역별 전시관 등 곤충관광 자원화

아.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 사업의 필요성

-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순화, 대기순화, 토양보전, 경관보전, 문화, 정서향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여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는 농업
- 도시먹거리 농장(주말농장, 공동체 텃밭, 옥상농장, 학교텃밭 등), 도시농업교육센터, 농민장터, 도시농업육성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도시농업 활력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 이상과 같은 전통적 도시농업과 함께 최근에는 ‘신개념 도시농업’(Metropolitan Agriculture) 개념이 출현 급속도로 파급
 - 기존의 교외 농업에 추가하여 도시 내 생산 및 유통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과 도시지역의 연결을 도모

- 도시화로 인한 농산물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자, 유통업자, 이해관계자 등 사이의 혁신적이고 지능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농업생산물, 관련 에너지 및 폐기물의 흐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생산시스템
- 신개념 도시농업은 농촌전환센터(생산거점으로 농산물의 집하, 저장, 수송), 농산물생산·가공센터(Agropark; 2차 가공, 연구개발, 교역, 관광 등 농업생산분야를 통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도시통합소비센터(수요에 맞게 최종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제공하는 기능 수행)로 구성



▲ 신개념 도시농업의 개념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대구대도시 및 도시지역
- 사업기간 : 2011~2020년(10년간)
- 사업량 : 1,000개소(개소당 10백만원 정도)
- 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전통적 도시농업 프로젝트 : 식용정원(edible garden), 도시농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신개념 도시농업 프로젝트

자. 지역사회지원농장(CSA)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로컬푸드가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생산-소비 연계로 푸드마일 리지를 줄이는 공동체 농장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사회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은 “소비자가 사전

에 선금을 생산자에게 지불하면 생산자는 수확 이후 일정간격으로 선금에 상응하는 농산물을 소비자 가정에 공급하는 직거래 유형”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CSA 농업형태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
- 도농교류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욕구 충족, 식량자급률 향상이란 이상 실현을 위해 CSA 시스템의 시급한 도입 및 확대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2020년(10년간)
- 사업량 : 20개소(개소당 1억원)
-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대구경북형 브랜드인 CSA농장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과 신뢰가 전제된 가운데, 농산물 생산 이전에 계약을 통해 일정액을 소비자가 농가에 선불로 대금을 지불하면 농가는 이 돈으로 농사를 한 뒤 수확물을 일정주기(주 1회 정도)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직거래 유통방식
 - CSA농장은 개인농장 혹은 마을단위가 생산자측 파트너가 되고, 아파트부녀회나 시민단체의 회원, 기업체 직원 등이 소비자측 파트너가 되어 친환경적 생산방식에 의한 생산활동, 소비자는 생산 기간 중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업 체험도 할 수 있고, 수확 이후에는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사전에 지불한 금액만큼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농장
 - 소비자단체, 아파트부녀회 등과 계약 : 선금납부, 택배(회수), 품목
 - 공급자 준수사항: 생산방법(친환경농산물인증, 생산량(공급회수), 생산품목(최소 10개)
 - 소비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도농교류활동, 수확체험 등 농촌체험 활동, 상호간의 신뢰 구축)
 - CSA농장 조성비 지원(생산자), CSA홍보마케팅(소비자) 등

▼ CSA농장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생산자	농장 유형	농민주도형, 농민협동조합형
	농장 규모	최소 5ha
	생산 품목	최소 10개 품목(채소류를 기본으로 과실류, 곡물 등)
	총생산비	시산 및 공포(투명성 확보)
	참여 농가수	최소 규정은 없으나 품목다양성을 위해 가급적 참석 유도
	생산방법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기본으로 향후 친환경 계획도 포함
	CSA 판매물량	최소 20%는 CSA로 판매, 기타는 일반판매 가능
소비자	참여 소비자	최소 10가구
	선금 지불금	가구당 최소 50만원
	농산물공급주기	주 1회(회당 5만원), 연간 10회 기준
	농산물공급장소	가정택배, 소비자 집합장소 공급, 소비자 농장방문 수취
	농장 체험계획	주요 생산시기별로 체험계획 제시, 도농교류 차원에서 접근

차.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추진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과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
- 현재 2009년 대경권 급식대상 인원은(초·중·고생)은 약 75만명으로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의해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등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에 대한 인식은 아직 취약한 편
- 대구·경북의 광역급식행정을 총괄하는 별도조직의 설립, 운영 하여, 장기적으로는 대경권 광역물류기능을 갖춘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 등 다양한 식재료 소비처에 공급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갖춘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2013(2년간)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60% - 대구시, 경북도 50%씩)

■ 사업내용

- 대경권 학교급식추진단 구성
 - 시·도 행정, 교육청, 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 내외의 T/F팀 구성
 - 대경권 학교급식 정책의 총괄, 기획 및 사업 추진
- 대경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2011년)
 - 기존의 학교급식유통체계 활용(급식업체 ↔ 학교)
 - 시·군·구별 자치단체 지역거점에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자체 주도 시스템 관리 : 경북도(공급체계), 대구시(물류체계)
 - 학교급식정보화 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 생산·유통·소비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공급품목 제시, 학교별 필요 품목·량 발주)
- 대경권 학교급식정보화 시스템 구축
 - 지역농축산물의 공급가능 물량 검토 : 시기별, 지역별(제철농산물 및 농식품 가급적 확대 공급)
 - 가급적 기존의 유통시스템(농협, 유통법인체의 APC, 급식자재 납품업체)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SW를 통한 연결고리 역할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카. 동해특산 대게 명품화사업

■ 필요성 및 목적

- 불법 포획, 생산 감소, 단순 가공 등 지역특산자원인 대게는 최근 어려운 현실에 직면
- 대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
- 생산·유통·가공·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대게산업의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도모 필요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영덕군 일원
- 기 간 : 2011~2015년
- 사 업 비 : 498억원(국비 250, 지방비 248)
 - ※ 2010년 2억원 집행
- 주요내용
 - 종묘생산(심층수) 연구기반시설 구축 등 자원조성 및 관리 방안 모색
 - 식품산업, 소재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 유통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등 효율적인 유통방안 강구
 - 대계를 소재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타. 국립 해양과학교육관 건립

■ 필요성 및 목적

- 작은 대양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동해의 해양특성과 다양한 해양자원의 특성을 교육, 연구, 전시, 체험시설을 통해 알림으로써 동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
-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해양과학연구기관들과 연계·협력함으로써 교육관의 내 실을 도모하고 지역의 해양과학 및 해양산업의 역량 홍보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GMSP 내)
- 기 간 : 2011~2015년
- 사 업 비 : 2,000억원(국비)
- 주요내용
 - 교육 : 종합해양교육관, 첨단해양기술교육관, 독도교육관
 - 전시 및 연구관 : 해양자원전시관, 연안연구 전시관, 해양국토수호 전시관,

- 왕돌초 전시관, 수족관, 온배수 연구·전시관, 수중해산 전시관, 심층수 활용관, 심해생물관, 세계 해양 및 동서남해 연구·전시관 등
- 체험 : 해중터널, 미래해양기술체험관, 해양탐사 조망탑, 소형 해양체험
 - 교육 : 중합해양교육관, 첨단해양기술교육관, 독도교육관
 - 전시 및 연구관 : 해양자원전시관, 연안연구 전시관, 해양국토수호 전시관, 왕돌초 전시관, 수족관, 온배수 연구·전시관, 수중해산 전시관, 심층수 활용관, 심해생물관, 세계 해양 및 동서남해 연구·전시관 등
 - 체험 : 해중터널, 미래해양기술체험관, 해양탐사 조망탑, 소형 해양체험선

고소득 일자리 창출

IV. 기업중심의 R&D 체계 구축

1] 메가트렌드와 R&D 현황

1. R&D 개념 및 메가트렌드

■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의 공동개념

- ‘연구(Research)’는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 계획적 조사
 - ‘개발(Development)’은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제조법, 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국제 회계기준위원회(IASC)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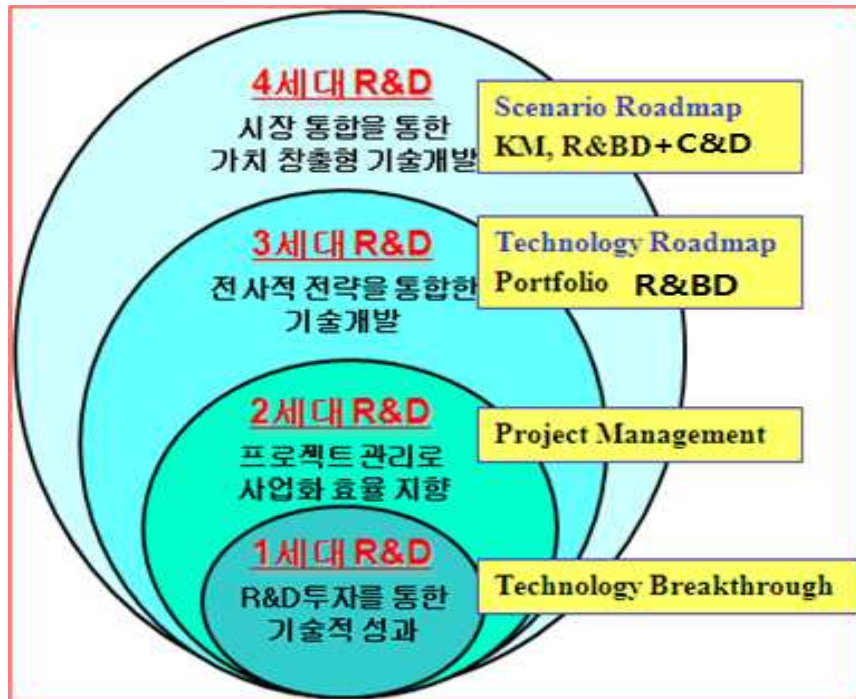
■ 4세대 R&D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¹³⁾

- 오늘날은 1, 2, 3세대를 거쳐 4세대 R&D¹⁴⁾ 혁신 추구가 추세이며, 최적화된 신제품 개발 시스템 확립 및 제품개발 역량 강화에 중심
 - 기업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중장기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전략 수립 및 목표지향적 R&BD 기술 전략과제 전개, 고품질/저가격/무결점의 고객 만족형 제품 개발이 새 트렌드
- 연구한 결과물을 사들인 후 개발만 내부에서 하는 A&D(Acquisition and Development)단계를 넘어 지식을 가진 외부의 조직과 유연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함께 개발하는 C&D(Connect and Development) 방식으로 진화

13) 최근 연구개발(R&D)의 핵심 키워드로, 기업 내부의 자원만을 활용한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 활동에서 벗어나 외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신생기업과의 협력을 중요 요소로 인식

14) 1세대 R&D는 우수연구자를 통한 기술성과, 2세대 R&D는 프로젝트 관리, 3세대 R&D는 프로젝트 관리와 사업화(BUSINESS) 연계, 4세대 R&D는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초 경쟁 환경에 맞는 외부자원 활용 R&D(개방형 혁신)로 발전

○ 현재 R&D는 R&BD(3세대)와 C&D를 포괄하는 4세대 R&D 범위로 이해



▲ 연구개발(R&D)의 포괄범위

주 : (주)KR컨설팅(2009)자료를 재구성

■ R&D의 메가트렌드 : 효율화, 성과 확산, 네트워킹

- 선택과 집중 및 경쟁과 협력, 융합과 실용을 통한 사업화, 글로벌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시장(기업) 친화적 연계(수요 대응형) 및 브랜드화로 요약
 - 다양한 미래 첨단산업 중 미래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인 BT, NT, CT 등과 융합 연계전략을 통한 기술혁신과 사업화 선도
 -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R&D, C&D에 바탕을 둔 기업 간 R&D의 전략적 네트워크 및 현장밀착 R&D 중시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중심으로, 산업정책은 제조 중심에서 연구개발(R&D)과 브랜드 중심으로 전환(스마일 커브화)
- R&D 성장동력 메가트렌드는 IT융복합, 녹색에너지(원자력, 태양광 등), 나노,

바이오, 정보통신,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시관리산업, 해양환경, 인공위성, 우주항공, 친환경 생물자원, 지능형 로봇, 생물기능 신소재·의약, 신약, 제약 부문

2. R&D 정책동향

■ 1980년대 : 국가 및 정부 주도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

- 1960~70년대에 이어 1980년대 초까지 R&D는 국가 주도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수립·집행
- 경제발전 혹은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단으로서 기술 개발, 기술인력 창출에 더 큰 관심이 있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등 과학연구 활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틀 마련

■ 1990년대 후반 : 과학기술의 지방화 진전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지역 R&D 정책 실시
 - “1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00~‘04년)”이 실시된 이후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짐
- “2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05~‘07년)”에는 기술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노력으로 지역별 R&D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 되고, 지역의 연구개발비, 인력, 연구개발 거점이 대폭적으로 확대

■ 2000년대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 2000년 초 지역의 연구개발기능 활성화와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2000년대 중 후반에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자로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 부각
- 정부의 과학기술정책(577전략, 2008.8월 확정)은 7대 중점 분야, 50개 중점 육성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로 요약¹⁵⁾

15) 2012년 국가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5% 수준 확대, 과학기술 7대 기술분야(R&D) 중점육성, 7대 시스템 선진화 및 효율화로 과학기술 7대 강국 실현, 신성장 동력 창출, 기초원천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50% 확대

- 원자력과 우주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한국연구재단 출범 등 큰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성과 확보
- 현재(2010년) 정부의 R&D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은 창조형 기초·원천연구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09)1.5조원, (‘10)1.8조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개발 강화, 국민안전 공공부문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 향후(2010년 이후) 정부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창조·융합형 R&B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기술개발위주 R&D에서 신성장동력 창출 R&BD 방향을 위해 기술중심에서 제품이나 산업중심으로, 정부주도에서 새로운 민간 파트너십 중심으로, 칸막이 분산 지원에서 융합 집중지원으로, 폐쇄적 국내경쟁에서 개방적 글로벌 경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
 -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전략기획단 설치, R&D 프로그램 재설계(성과중심), (기획, 평가,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R&D 프로세스의 전면쇄신, R&D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들 수 있음¹⁶⁾

1960 ~ 1970년대	1980 ~ 1990년대	1990 ~ 2000년대	2010년 이후
요소 투입형	자본 투입형	선진기술 추격형	혁신 창조형
- KIST, KAIST 설립 · 기술기반 구축 · 고급인력 양성	- 대덕연구단지 조성 · 국가 R&D사업 추진 · 민간 R&D 촉진	-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 첨단제품 독자개발 · 지자체 R&D 정책대응	- 기초연구역량 확충 · 기초 원천 연구를 통한 창조적 혁신 · 창조·융합형 R&BD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주 : 나중규, '대경광역경제권 장기발전 구상'(2010) 재구성

16) 정동희,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과학기술정책」, 제 20권 제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② 대구경북 R&D의 문제점 진단

1. 거시적 측면

■ 지역 R&D투자 미흡, 혁신역량 및 인적자원 부족

- 낮은 R&D 투자(기반시설투자 위주), 지역 R&D 사업 중앙의존 과다, 연구개발 인력 부족
 - 지역 R&D 사업은 기반조성(연구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에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투입활용하고, 지역 R&D 사업비 중앙중심의 의존형 사업에 매칭투자
 - 대구와 경북의 기술개발전담 평균 보유인원은 기관당 각각 2.8명, 3.3명으로 전국 수준(4.1명)에 미달(중소기업청(200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R&D 투자비 빈약(2008년 기준, 전국 : 3.5%, 대구 : 1.6%, 경북 : 2.0%)

▼ 대구경북 지역내총생산(GRDP) 및 연구개발(R&D)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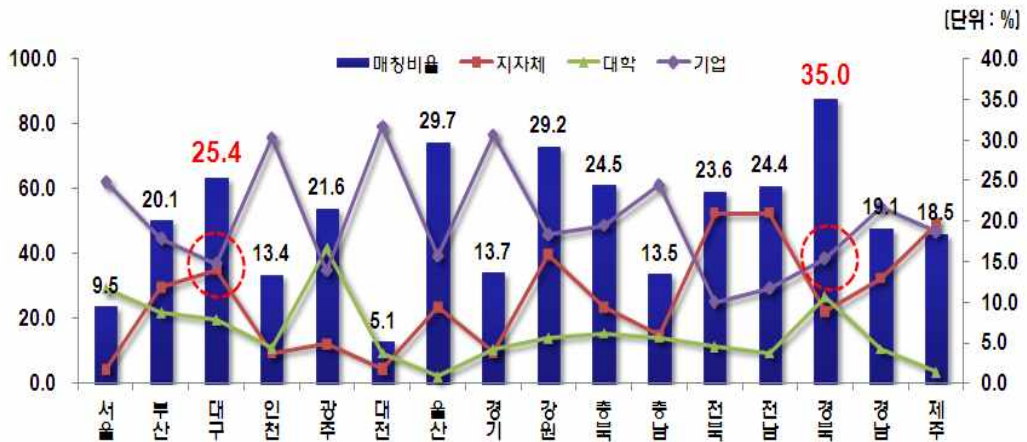
(단위 : 천억, %)

구분		1995	2000	2005	2008
전국	GRDP	5,735.0	6,914.7	8,693.0	9,876.3
	(증가율)	7.8	8.3	4.1	2.3
대구	GRDP	245.7	259.6	287.6	316.5
	(증가율)	9.2	7.9	0.1	1.3
경북	GRDP	341.3	453.3	617.6	691.0
	(증가율)	5.8	9.9	4.3	1.6
전국GRDP대구비중		4.3	3.8	3.3	3.2
전국GRDP경북비중		6.0	6.6	7.1	7.0
연구개발투자비	전국	94.41	138.49	241.55	344.98
	대구	1.34	1.91	3.76	5.08
	경북	5.51	6.17	12.88	14.11
GRDP 대비 R&D비중	전국	1.6	2.0	2.8	3.5
	대구	0.5	0.7	1.3	1.6
	경북	1.6	1.4	2.1	2.0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GRDP), 연구개발비 각 년도

■ 지역 기업 R&D 매칭, 전국 평균 수준에 못 미쳐

- 2008년 정부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역(지자체, 대학, 기업) 매칭펀드 비율은 대구경북 각 25.4%, 35.0%로 전국 평균 13.4%의 약 2배 이상으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편
- 민간부문인 대구경북 지역기업의 자체 R&D 투자 매칭금액은 비교적 낮은 편
 - 지자체 매칭펀드 비중은 대구경북 모두 35.1% 이상으로 전국 평균 19.6% 보다 높은 수준인데 반해, 기업 매칭 펀드 비중은 약 37.0%(대구), 39.0%(경북)로 전국 평균 55.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지역 매칭펀드 투자 및 유형별 비중

주 : 전국 평균 매칭비율 13.4%, 지자체 비중 19.6%, 대학 비중 18.0%, 기업 비중 55.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R&D 주체 간 · 산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취약

- 지역 R&D 주체인 산·학·연·관 모두 중앙정부 상대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몰두하며, 지역기업 연구지원기관(대학포함)들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 몰두 (주로 Paper Work 중심이며, 실제 기업 대상 기술지원 컨설팅은 약한 상태)
-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연구기관-대학-산업체(산·학·연)간 연계 및 공동협력 미흡
- 산업생산-연구개발·인적자원 양성-대학특성화 선순환 시스템 구축 필요

2. 미시적 측면

■ 지역 소재기업, 낮은 비율의 연구인력

- 대구와 경북의 기술개발 전담 평균 보유 인원(연구원)은 2.8명, 3.3명으로 전국(4.1명)과 수도권(4.7명) 수준에 미달
- 대구와 경북의 생산직 대비 연구개발직 비중과 총인원 대비 연구개발직 비중은 각각 15.7%, 15.7%와 9.9%, 10.8%로 전국과 수도권에 비해 낮은 편(전국 19.2%, 11.2%, 수도권 23.0%, 12.4%)

▼ 기술개발 보유인원 및 연구개발직의 비중(2008년)

구분	기업체수	기술개발 전담 평균 보유인원			총인원 및 생산직 대비 연구개발직 비중	
		연구원	연구보조원	합계	생산직대비 연구개발직 비중	총인원대비 연구개발직 비중
전국	21,272	4.1	0.5	4.6	19.2	11.2
수도권	11,096	4.7	0.5	5.3	23.0	12.4
대구	1,261	2.8	0.3	3.1	15.7	9.9
경북	1,339	3.3	0.5	3.8	15.7	10.8

주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자료 : 중소기업청(200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기술개발의 외부 지원 중심과 낮은 R&D 성과의 사업화

- 지역소재 기업의 기술개발비 사용은 자체 기술개발 사용보다는 외부지출을 통해 평균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공동개발비, 위탁개발비 위주로 많이 사용
 - 이는 기업내부 자체 기술개발 역량이 낮은 것에 기인 → 자체 기술역량 보유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

▼ 기술개발비 사용실적 및 비중(2008년)

구분	기업체 수	자체 사용 (내부 사용) (A)	외부 지출금액(백만원)				합계 (A+B+C+D+E)	자체 사용 비중	외부사용 비중(%)			
			공동 개발비 (B)	위탁 개발비 (C)	기술 도입비 (D)	기타 (E)			공동 개발비	위탁 개발비	기술 도입비	기타
전국	21,272	307.4	68.6	13.7	5.6	0.1	395.5	77.7	17.4	3.5	1.4	0.0
수도권	11,096	283.2	56.0	12.5	4.4	0.1	356.3	79.5	15.7	3.5	1.2	0.0
대구	1,261	231.7	68.1	33.1	0.9	0.0	333.7	69.4	20.4	9.9	0.3	0.0
경북	1,339	303.1	105.6	31.5	2.5	0.0	442.7	68.5	23.9	7.1	0.6	0.0

주 : 1. 사용실적은 기업체당 평균 금액 기준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자료 : 중소기업청(200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낮으며(전국 59.3%, 대구 57.9%, 경북 56.5%), 기술개발 성공 후 제품화 및 상품화 역량이 부족하고(전국 39.4%, 대구 38.6%, 경북 30.4%), 출원 등록 등 지식재산권 비중도 낮음
-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R&D 투입과 성과의 상관관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최근 2년간('07~'08년) 기술개발 성과

구분	기업체 수	기술 개발 시도 (A)	기술개발				기술개발성공후 제품화(상품화)				지식재산권	
			진행중	실패	성공 (B)	성공률 (B/A)	진행중	실패	성공 (C)	성공률 (C/A)	출원	등록
전국	21,272	5.9	1.8	0.6	3.5	59.3	1.1	0.1	2.3	39.4	0.6	0.4
수도권	11,096	7.5	2.3	0.8	4.4	59.2	1.4	0.1	2.9	38.9	0.7	0.5
대구	1,261	3.8	1.1	0.5	2.2	57.9	0.7	0.0	1.5	38.6	0.3	0.1
경북	1,339	3.6	1.4	0.1	2.0	56.5	0.9	0.0	1.1	30.4	0.5	0.1

주 : 1. '07~'08년 2년간 기술개발성과기준이며, 진행중은 2008년 12월말 기준임
 2. 기술개발 성공률은 전체 기술개발 시도 대비 성공건수 비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자료 : 중소기업청(200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신제품 개발보다 기존 제품 개선에 기술개발 집중

- 지역소재 기업 기술개발 중점투자분야는 주로 기존 제품의 개선 비율이 높으며, 신제품 개발은 대구와 경북이 각 27.2%, 33.2%로 전국의 45.9%, 수도권 의 52.6%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구조를 가진 영세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
- 향후 2년간 기술개발 중점 투자분야도 최근 2년간의 응답 비율과 유사하여 지역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유인이 약한 상태
 - 향후 신 제품개발 혹은 신공정개발의 투자비율 지원 증대가 필요

▼ 기술개발 중점 투자 분야(2008)

(단위 : %)

구분	기체수	최근 2년간				향후 2년간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전국	21,272	45.9	41.3	7.5	5.3	49.4	32.8	8.6	9.3
수도권	11,096	52.6	38.0	6.1	3.2	56.3	31.4	6.5	5.9
대구	1,261	27.2	58.4	9.9	4.5	38.9	34.7	6.9	19.6
경북	1,339	33.2	53.7	5.3	7.8	33.6	50.0	7.6	8.8

주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자료 : 중소기업청(200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지역 기업의 낮은 신기술 개발 사업화 능력

- 대구경북지역 소재 기업의 제품(상품)기획 능력, 신기술(신제품)개발능력, 개발기술의 사업화 능력은 전국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며, 수도권보다는 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 지역 기업의 대기업 납품위주 생산구조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독자적 기술 확보 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제품기획능력,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능력(2008)

(단위 : %)

지 역	기업수	제품(상품) 기획 능력	신기술(신제품) 개발 능력	개발기술의 사업화 능력
전 국	21,272	73.2	73.9	73.8
수도권	11,096	73.9	76.4	75.4
대 구	1,261	66.2	66.2	68.9
경 북	1,339	66.3	66.3	67.7

주 : 1. 세계최고 기술능력을 100% 기준으로 적용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자료 : 중소기업청(200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 정책적 측면

■ 지역 중소기업 잠재역량 수준에 맞는 지역 R&BD 정책 필요

- 국가가 요구하는 R&D 수준과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R&D 수준과의 큰 괴리 존재
 - 대구경북은 원천기술, 고급기술도 중요하지만 지역 R&D는 지역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효과를 미치는 생산기반 R&D, 공정기술 개발에 특화 필요
- 지역(대구) 스타기업 육성사업(2007년부터 시행)이 매출액과 고용에 성과가 있었으나, 대구를 대표하는 전국수준의 기업은 거의 없는 상태(2010년 현재 까지 84개 기업 선정, 상장된 기업은 2개사)
 - 지역 중소기업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 대구스타기업 연도별 매출액 및 고용현황

구분	매출		고용		상장 기업수
	매출액(억원)	증가율(%)	고용자수(명)	증가율(%)	
2007	15,733	-	7,088	-	-
2008	18,180	5.6	7,272	2.6	1
2009	19,484	7.2	7,693	5.8	1

자료 : 대구광역시 및 영남일보 2010년 9월7일자 보도자료

-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World Class 300)'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더불어 보다 영세한 기업들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갈 수 있는 R&BD 정책지원 마련이 필요

※ 스타기업으로 지정¹⁷⁾된 업체에는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스타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차상위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BD) 지원이 필요

■ R&D 투자 지속적 증대 불구, 지방 R&D 사업 비효율성 노출

- 중앙차원에서는 지방 R&D 지원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지역 R&D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지원체계가 미숙하여 사업들의 연계성이 부족(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R&D 사업 사례)
- 지역 R&D 추진실태를 조사 분석할 체계가 부족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지자체에서는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R&D 투자에 관심이 부족하고, 지방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정역량 부족
- 지역단위 R&D 기획, 집행, 평가 등 지방 R&D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R&D 사업 추진기반 허약, 지자체 R&D 사업 추진역량 제고가 관건

■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대구경북의 실질적인 산업기술정책(R&D)부재, 지역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정책(R&BD)에 대한 성과 불명확

- 지역산업발전정책(R&D) 및 중소기업정책(R&BD) 부재
 - 대구시는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경상북도는 투자유치본부, 일자리 본부 등의 조직이 있으나 행정적 기업지원 업무중심이며, 중소기업청 사업과도 연계가 되지 않고 있음
 - 기업 수요에 대응 못하고 지자체, 지원기관, 대학은 정부 과제 수주에 몰입
- 지역전략 및 선도산업의 연계 및 성과와 기여도도 불명확

17) 2010년 스타기업에 선정된 17개 기업들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대구시의 스타기업육성 직접사업비 지원, 각종 정책 및 시설자금 이자금리 우대, 지방공단 분양 가점 부여, 세무조사 유예, 육성전담기관 기업지원 프로그램 우대 등의 맞춤형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R&D 관련 지원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음

-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TP(전략산업기획단 포함),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지역의 연구지원기관간 단절적 운영 및 네트워크와 연계협력 부족
- 기타 연구지원기관들간의 업무 중복과 협조 및 연계 부족
-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정책, 전략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간 기능적 화학적 융합을 통한 지역산업정책의 효율화 필요
- 지역 중소기업청 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 불명확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 R&D 정책 지원기관의 기능 중복 조정 필요
 - (정부)기관들(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지역기업 지원 사업에 불필요한 경쟁, 협조 및 연계 부족
 - 지역중기청은 지역기업에 대한 R&BD 컨설팅 지원보다는 대행적 행정적 역할
 -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사업 전담 전문기관 필요
 - 지역 중소기업청 일괄 사업 발주 후 사업 관리
 -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 문제해결 대응 미흡
 - 지방중기청 사업별 지원 자금 분배 중심
 - 현장 밀착형 지원 부족(기업현장기술지원 능력 미약)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장비, 특허, 지원사업 등)의 상시적 제공과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 창구 지원기관이 필요

3 비전과 전략

1. 비전 설정

- ‘지역 기업 중심 R&BD 지원체제 구축’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3가지 목표와 6가지 추진전략을 설정
- 연구개발(R&D)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시장에 중심을 둔 시장수요 반영 기업(수요자) 중심의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지원 강화가 중요¹⁸⁾



▲ 기업중심 R & BD 지원체제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 지역 생산성 향상 중심 R&BD 기반 확립의 목표에는 ‘R&BD 성과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
- 실효성 있는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에는 ‘R&D 개방형 혁신’과 ‘클러스터 활

18) ‘R&D’ 정책은 거시적 측면에서 대구경북 지역산업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며, ‘R&BD’ 정책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기업지원형 R&D(비R&D 포함) 정책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성화' 전략을 제시

- 기업 R&BD 제도 및 시스템 보완 목표에는 'R&D 지원제도 개선'과 'R&D 시스템 보완'의 전략을 수립하고 각각의 추진전략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

4 주요 전략사업

1. 생산성 향상 중심 R&BD 기반 확립

■ R&BD 성과 확보

- 기존 및 주력 기업 구조고도화와 중소기업 중심 뿌리산업 육성
- 지역 기업구조 전환 지원(Restructuring) : 기업 친화형 R&BD 강화¹⁹⁾
 - 중소기업 R&BD 역량 제고와 지원 강화를 통한 산업의 생산성 효율성 증대, 전문계고·대학 현장 연계 강화
-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기술경영 닥터 혹은 코디네이터 운영, 현장인력 지원 육성
 - 기업의 기술개발 기획단계부터 전주기적 사업화를 위한 기획역량 제고(예측, 기획, 개발, 평가, 기술이전, 사업화의 전주기적 기술경영(MOT) 지원)
 - 핵심기술(신제품) 개발능력 강화, R&BD를 통한 공정혁신 필요
- 대구경북 협력을 통한 (가칭)'대경R&D특구' 사업 수행
 - 대구와 경북의 강점을 활용·연계하고, R&D 특구 내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한 협력 발전이 필요(특구명, 특구면적, 특구내 역할 분담 등)
 - 지역의 산업발전축을 지원 및 선도하는 R&D의 핵심거점 사업 마련
 - 대구 중심(테크노폴리스, 구미 포함)과 경산 중심(진량 공단 등, 포항 영천 연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중점

19) 구조고도화는 기업이 동일 업종에서 첨단화 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전환은 기업이 이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예) 의류용 섬유기업이 생산공정개선(IT 관련 장비 및 기술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이며, 의류용 섬유생산기업이 산업용 섬유생산기업으로 발전하거나 부품소재 기업화 하는 경우를 구조전환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산업)기술경쟁력 강화20)

- 산업경쟁력을 통한 내생적 성장기반 확보와 R&D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집중, R&D 지원을 통한 전통 및 주력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뿌리산업(용접,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지원 강화
- IT융복합·의료·그린에너지산업과 뿌리산업 연계 강화, 지역산업 첨단화 견인
 - 핵심기술(신제품) 개발능력 강화, R&D를 통한 공정혁신 필요
 - 공공의 그린에너지 시장 견인 및 원자력 비발전 분야 육성



▲ 대구경북의 산업발전축 연계 R&D 선도 및 지원

2. 실효성 있는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 R&D 개방형 혁신

- R&BD 개방형 혁신 : Outside-in의 R&D 프로세스 필요

20) 기술경쟁력 강화의 구체적인 R&D사업은 '전통주력산업의 첨단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부문의 R&D사업 참조. 뿌리산업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대구경북의 산업기반은 뿌리산업(전국의 13%)과 연계된 기업이 많은 만큼 이들의 경쟁력 확보가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R&BD 과제를 발굴·제안할 때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내부적 기획을 통한 사업 발굴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찾은 후 기술 확보와 과제 기획을 하는 외부적 프로세스가 필요²¹⁾
- 가상연구조직(Virtual Lab)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역량 제고²²⁾
 - 대학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장비, 생산공정 활용(산업단지공단이나 미니클러스터에서 운영)
 - 기술개발 수요자(중소기업)와 기술공급자(대학, 출연연구소)간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불일치 해소
- 기업수준별 차별화 지원(R&D Support Segmentation)과 일반대-전문대간 역할 분담 및 협력
 - 중간급 역량 기업(30~300인 미만), 가공 공정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
 - 낮은 역량 기업(30인 미만), 현장기술 및 생산기반 연구개발 지원

		A그룹	B그룹	C그룹
		← 최상위(100) 최하위(0) →		
구분	특성	지원 내용		지원 주체(비고)
A그룹 (상위)	- 기술개발 선도기업(300인 이상) - 스타기업 혹은 중견기업	-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일반대 중심 - 연구지원기관, 국가, 지자체 등
B그룹 (중위)	- 기술개발 (잠재)역량 선도기업 - 중간급 역량 기업(30-300인 미만) (장기적 생존역량 확보 필요)	- 공정기술, 응용기술 지원 - 기술트렌드 전수 등		- 전문대 중심(일반대 일부 참여) - 연구지원기관, 지자체
C그룹 (하위)	- 독자생존능력 검증 필요 - 낮은 역량 기업(30인 미만)	- 현장기술 지원 - 생산기반 연구개발 지원		- 고졸, 전문대졸 등(일반대 일부참여) - 연구지원기관, 지자체

▲ 지역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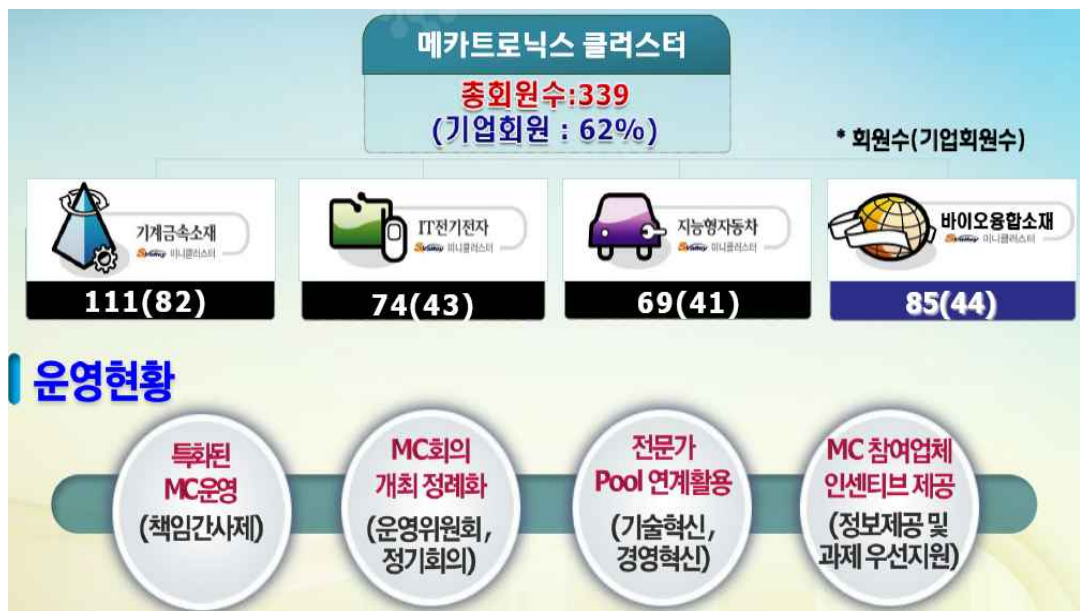
주 : 지자체의 주요 정책 관심영역 기업은 중간급 역량기업(B그룹)과 낮은 역량기업(C그룹)이어야 할 것임

21) 현재 기업지원기관들의 연구개발 과제를 정부에 제안할 때의 대체적 프로세스는 R&BD기획→기술개발→수요기업/사업부서이전→사업화단계의 Inside-out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향후에는 과제기획←기술 확보←기술 확보 대상 탐색←시장수요/비즈니스모델기획의 Outside-in 방식에 의한 R&BD 프로세스 간소화가 필요

22) 중소기업은 자체 기술개발 조직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산학연 협력업체가 컴퓨터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여 각 대학(연구자) 및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정보, 장비, 생산공장, 판매조직의 정보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교환 운영. 가상연구조직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조직 설비 인력 노하우를 소유한 것처럼 공유 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임. 많은 돈을 들여 우수한 연구 인력을 모으고 대규모 실험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 지역기업들이 대학 등 전문집단과 네트워크로 가상연구조직을 만들어 훨씬 적은 돈을 들여 더 많은 정보와 연구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음(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가능)

■ 클러스터 활성화

- 산·학·연 미니클러스터(MC : Mini Cluster) 구축사업²³⁾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성서산업공단 사례, 워킹그룹(WG) 운영을 통한 기업간 이익공동체²⁴⁾ 사례 확산
 - 기업 CEO 중심의 미니클러스터 회원제 운영(총회원수 339명 -기업 210명, 대학 31명, 연구소 34명, 지원기관 64명)
 - 현재(2010년 6월 기준) 성서산업단지공단 내에는 메카트로닉스 클러스터[총회원수 339명(기업회원 210명)]가 구축되어 있으며, 메카트로닉스 클러스터 산하에 미니클러스터인 기계금속소재[111(82)], IT전기전자[74(43)], 지능형자동차[69(41)], 바이오융합소재[85(44)]가 구성·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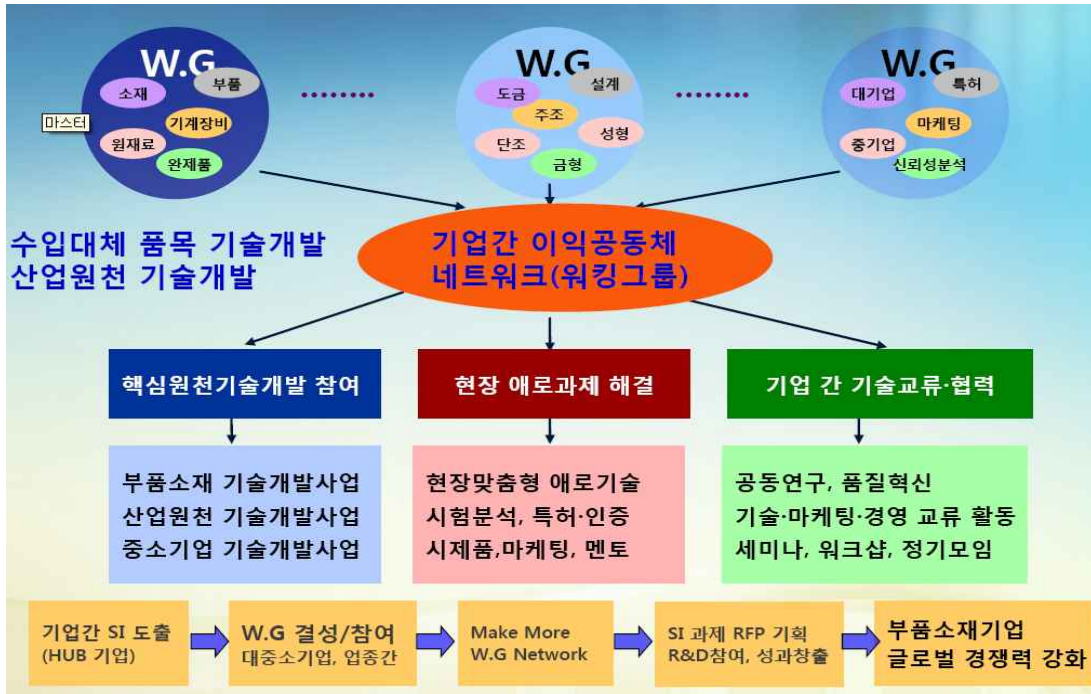


▲ 성서거점 미니클러스터 사례(2010년 6월 현재)

자료 : 박광석, “지역내 산학연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미래전략아카데미, 2010.6.

23) 산업단지내 미니클러스터사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식·정보교류를 확대하고, R&D 및 기업경쟁력을 높여 기존 생산 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기술지식과 가치창출이 선순환 되는 산업집적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

24) 특화된 MC운영(책임간사제), MC회의 개최 정례화(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전문가 Pool 연계활용(기술혁신, 경영혁신), MC 참여업체 인센티브 제공(정보제공 및 과제우선지원 등)



▲ 기업간 이익공동체인 워킹그룹(W.G) 운영모형

주 :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임
 자료 : 박광석, “지역내 산학연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미래전략아카데미, 2010.6.

- 핵심 원천기술개발 참여, 현장애로 과제 해결, 동업종 및 이업종 간 기술교류 협력
- 지역 내 네트워크 협력 성과-산산 간 공동 창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산업 집적의 공간구조와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연계 일치
- 산·학·연·관 신뢰 구축 사업(지자체 중심 운영)
 - 신뢰 구축을 통한 미니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성과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기업중심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산·학·연 협의체 활성화
 - Mini Cluster Complex(MCC)화 가능(산업발전축 중심 형성)²⁵⁾
 - 대학과 기업 즉, 학과 산이 한 팀이 되어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통한 성과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반 확립이 필요

25) 영주, 문경의 지방산업단지(바이오)와 구미국가산업단지(전기전자부문), 칠곡(전자부품), 대구(성서, 메카트로닉스), 경산(신소재부품), 영천(자동차부품), 포항(철강)을 연결하는 C자형 미니클러스터가 가능

- 섬유 분야, E&H(임베디드 & 홈네트워크) 외 의료, 에너지 산업 등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특히 에너지 분야)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필요(클러스터 내 대학 입지)



주 :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편제, 생활양식에 익숙해 있어 수평적 거래와 협력적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지만 소규모 기업간 미니클러스터 활동 등으로 기업의 역량과 참여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향후 가능 미니클러스터 사례와 활동

3. 기업 R&BD 제도 및 시스템 보완

■ R&D 지원제도 개선

○ 대경권산업발전청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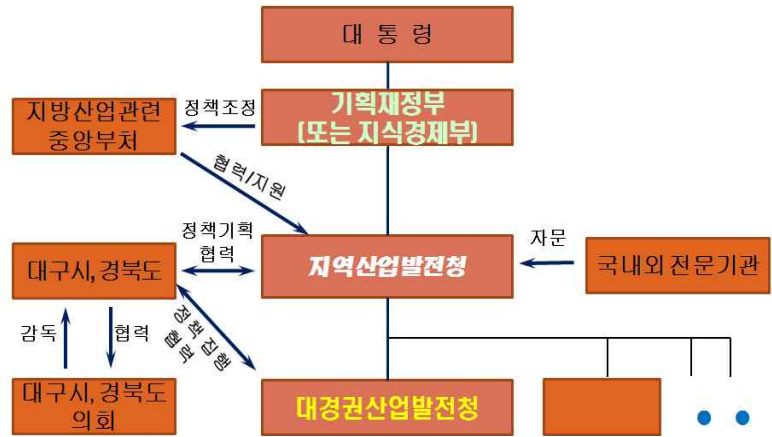
- 지자체의 행정업무와 독립적으로 지역 산업기술정책(R&D 정책)을 총괄조정 집행할 수 있는 '지방산업발전청'의 하나
- 지역 기업에 대한 R&D 정책의 구체화, 실질화,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청 기능(융자, 자금지원, 창업벤처지원, 컨설팅 정보화 등) 확대 재편²⁶⁾
- R&D 지원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내 R&D 종합기획조정, R&D 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 지역 R&D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²⁷⁾
- 지역 전략 및 선도산업의 R&D 정책 조정 및 총괄과 집행업무를 하고 관련

26) '대경권산업발전청'에서는 현재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테크노파크, 전략산업 및 선도산업 관련 기관 그리고 필요시 지방노동청까지 통합할 수 있음

27) 기업대표 및 R&D 지원기관들이 참여 가능하고, 향후 대구경북지역 과학기술진흥업무도 구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기업지원 연구기관의 통합 운영과 기능 조정
- 지역 산업에 적합한 기능인력과 현장인력 양성 사업 수립
- 중소기업청의 거버넌스 변경(기획재정부 혹은 지식경제부), 업무 확대 조정(전략·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 포괄)을 통한 지역산업발전청으로 재편

- 영국 RCU(Regional Co-ordination Unit)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지역산업발전청은 광역권산업발전청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으로 설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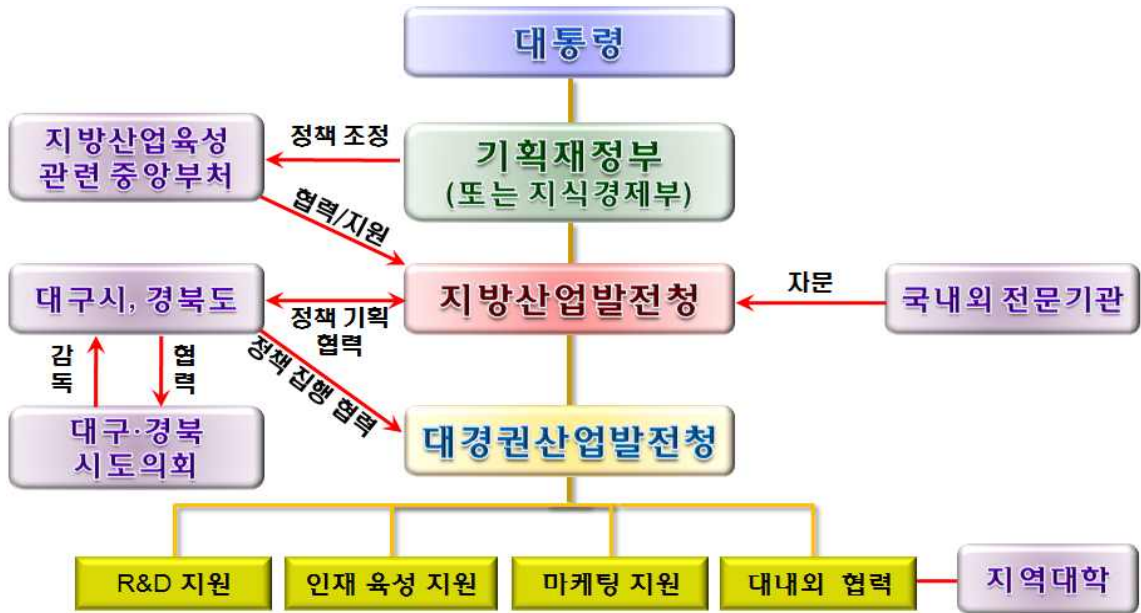


- Government Office 및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기능 사례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통합형 정부기구'인 '대경권산업발전청' 설립 필요

▲ 지역경제 발전추진을 위한 적용모델

■ 대경권산업발전청 구상도(안)

- 대경권산업발전청은 지역의 기업 및 산업정책 총괄 및 조정과 집행을 담당하며, 의회는 감시, 행정은 정책을 지원해주는 형태
- 대경권산업발전청 내에는 R&D 지원, 인재육성 지원, 마케팅 지원, 대내외 협력 업무를 두어 R&D 기획, 중소기업진흥, 산업진흥, 기술인력 양성, 전시 및 박람회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대학은 지역 기업과 관련한 연구나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 대학은 원천기술 개발이나 국가 수준(단위) R&D 과제를 수행할 경우 중앙정부와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 지역 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지역 대학과 협약을 맺어 지자체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기업과 관련성이 낮은 원천기술 개발 및 연구의 경우는 정부의 전액 편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대경권산업발전청 설립 구상도(안)



주 : 대경권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지역산업발전청에서 수립하고 대경권산업발전청은 집행업무 담당

- 지자체 내 중소기업 R&BD 사업팀 상설화(대경중소기업 R&D 지원 추진단 구성)
 - 지자체의 지역기업에 대한 R&D 정책의 구체화, 실질화, 현실화를 위해 대경권산업발전청을 진행하면서 우선(단기)적으로 운영
 - 지자체 내 지역 중소기업 ‘국책사업수주지원사업팀’ 한시적 운영을 통해 정부(중소기업청 및 지식경제부 등) R&D 사업 수주 기획

- 중소기업에서 바라보는 R&D 애로 요인 해소 제도화(예 : 중기청의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개선)
- 지역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조 연계, 정책공조 필요
-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²⁸⁾ 지자체 수준에서 정착



▲ 중소기업 R&D 사업팀 가동

■ R&D 시스템 보완

- 정부 R&D 지원 정책을 지자체 수준에서 관리 및 역매칭 제도 도입
 - 정부의 ‘13년까지 녹색 및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에 R&D 집중지원 정책을 대구경북 지역에서 활용방안 모색
 -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에서는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R&D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맞는 지역단위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이를 위해서는 지역수준에서 중소기업 R&D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
 - 대구경북 스스로 기획한 대형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타당성 검토 후 매칭펀

28) 중소기업은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임치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과 납품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제품 공급 및 유지보수 가능(현재 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제도가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지역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혹은 관련 기업지원총괄기관(대경권산업발전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드를 역으로 제공하는 R&D 역매칭 제도 도입

○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정책 효율화를 통해 수요자인 지역 기업의 R&BD 성과 확보 중심 지원체제 구축

- R&D 지원과제 평가기준 ‘기술성’ 중심에서 ‘사업성’ 위주로 전환(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중시)
- 지자체 및 정부의 R&D 사업이 외형상 기업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실질적(내부적)으로는 대학 및 연구소 중심 연구개발 자금의 흐름이 있으며,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대한 기업과 연구기관(대학)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
- 기업의 필요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 및 시스템 보완이 시급²⁹⁾

예) 모터생산 시 기술적 애로 문제 발생(기업) → 기업의 지원기관 탐색 및 자문 → 지원기관 DB 활용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 연결 → 문제해결 위한 기업과 공동의 사업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수립 → 기업에 R&D 지원, 대학교수에게는 R&D 예산에서 인센티브 제공 및 교수평가에 반영 등 제도화

○ R&D를 위한 R&D가 아니라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R&BD가 필요

- 국가수준에서 요구하는 R&D(주로 원천기술)와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R&D 수준(생산기반기술) 사이의 갭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R&BD가 필요
- 연구개발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지원 R&D는 기업이 사업화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 대학의 산학협력단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의 산학협력 전담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

29) 지역대학의 교수평가지 지역기업에 대한 공헌의 경우 교수실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부(교육과학기술부)도 이에 대한 대학에 지침 마련 권장과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우선순위 선정

■ 기업 중심의 R&BD 제도 및 시스템 보완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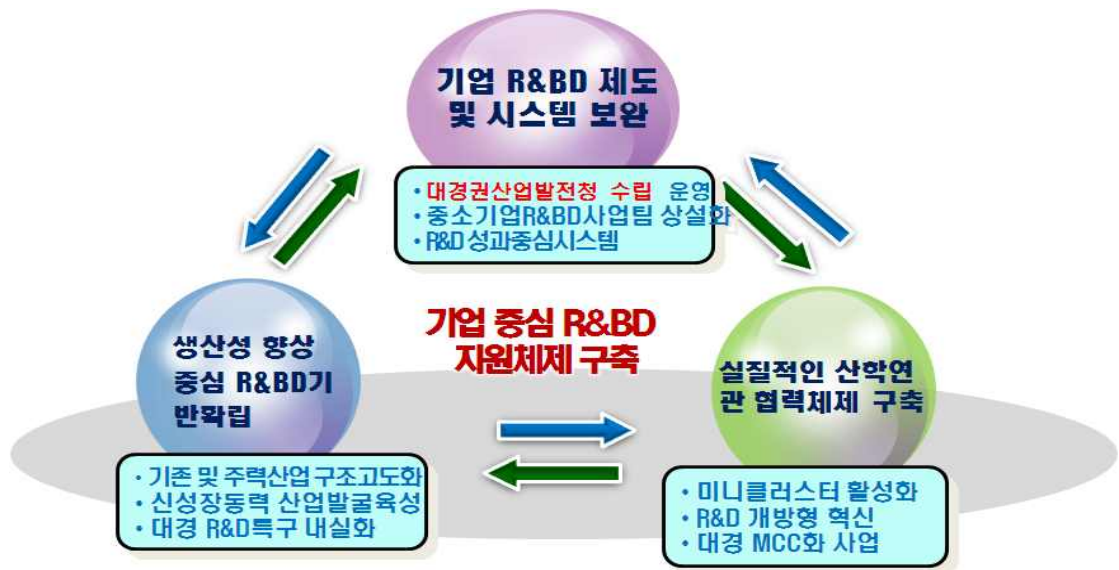
- 지역 R&D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R&BD 제도 및 시스템 보완이 시급
 - 지자체 R&D 사업의 우선순위를 경제성, 지역적합성, 정책효과성으로 살펴볼 때, '기업 R&BD 제도 및 시스템 보완'이 가장 중요하며, '생산성 향상 중심 R&BD 기반 확립',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

구 분		전략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2020	
생산성 향상 중심 R&DB 기반 확립	R&BD성과 확보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2011-2012]					
		기업 친화형 R&BD 강화 및 맞춤형 인력지원	[2011-2015]					
	기술경쟁력 강화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발굴/육성	[2011-2015]					
		내실 있는 '대경RD특구' 사업수행	[2011-2015]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R&D개발 영역신	가상연구조직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제고	[2011]					
		Outside-in R&D의 프로세스 간소화	[2011-2015]					
	클러스터활성화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2011]	[2011-2015]				
		산학연 신뢰구축사업	[2011-2015]					
기업 R&BD 제도 및 시스템 보완	R&D지원 제도 개선	대경권산업발전청 수립 운영	[2011-2015]					
		중소기업 R&BD 사업팀 상설화 (대경중소기업 R&D지원 추진단 구성)	[2011]					
	R&D시스템 보완	정부 R&D지원 정책 지자체 수준에서 관리 및 역매칭제도 도입	[2011-2012]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정책 효율화	[2011-2012]					

▲ R&D 사업 기간

■ ‘대경권산업발전청’ 설립 및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우선사업으로

- 지역 기업에 R&BD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효과적인 사업은 R&D 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것
 - 구체적인 사업은 ‘산학연관 신뢰 구축’,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중소기업 R&BD사업팀 운영’ 및 ‘대경권산업발전청’ 설립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기술정책의 구심점 마련과 총괄 조정 및 집행 등이 가능
 - ‘대경권산업발전청’ 설립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며, 중소기업 R&BD 사업팀 상설화 등은 산업발전청 설립 과도기에 우선(단기)사업으로 진행 가능
-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연관 협력체제도 지속적으로 마련



▲ 수요자 중심 R&BD 지원체제 관계성

2. 요약

■ 지역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R&D 추구해야

- 대구경북에는 지역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 산업정책(R&D정책)과 지역 기업지원정책(R&BD 정책)은 거의 없으므로, 지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산업이 발전하며,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활력 넘치는 희망찬 대구경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 R&D 주체인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모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몰두하고, 대부분의 지역 산업정책이 전략 및 선도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R&D를 위한 R&D’를 추구
 - 기업지원기관들의 기업지원 사업도 기관 간 협조와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지역 중소기업청은 중앙단위 행정업무 대행에 치중함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며, 지역 기업도 자체 역량이 부족한 실정
 - 대구경북 소재 기업의 기술개발 전담인력은 전국 평균에 훨씬 밀들며, 지역 기업의 상품기획, 신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능력도 수도권이나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 및 기업정책의 초점을 ‘지역 기업 중심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지원체제 구축’에 두고, 지자체를 비롯하여 지역 대학, 연구개발 지원기관들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함께 매진하여야 할 것임

■ 지역기업 중심 R&BD 지원체제 구축 시급

-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BD 지원체제 구축’ 목표와 추진전략 마련이 시급
- 첫째로, ‘지역 생산성 향상 중심 R&BD 기반 확립’을 위하여 ‘R&BD 성과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
- 둘째로, ‘실효성 있는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R&D 개방형 혁신’과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이 요망
- 셋째로, ‘기업 R&BD 제도 및 시스템 보완’을 위하여 ‘R&D 지원제도 개선’과 ‘R&D 시스템 보완’ 전략이 필요
- ‘R&BD 성과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 구조고도화 및 구조전환 지원과 함께 대경 R&D 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

해서는 뿌리산업과 IT 융복합산업, 의료산업, 그린에너지산업을 연계한 성장 기반 확보가 중요

- ‘R&D 개방형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는 ‘R&D 기획 및 제안 프로세스 현실화 및 간소화’와 ‘가상 연구조직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제도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으로는 산업단지의 ‘산학연 미니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핵심원천기술개발 참여, 현장애로 과제 해결, 동업종 및 이업종 간 기술교류 협력, 공동사업 인증제도 확립, 산·산 간 공동 창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산업집적의 공간구조 내 대학 유치 등의 사업 추진 가능

■ '대경권산업발전청' 설립, 지역산업정책 선도·총괄조정

- ‘R&D 지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영국의 지역경제 발전시스템인 RCU(Regional Co-ordination Unit), Government Office 및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사례를 원용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통합형 정부기구인 ‘대경권산업발전청 설립’ 검토 필요
- 대경권산업발전청은 지자체의 행정업무와 독립적으로 지역 산업기술정책을 총괄조정 집행할 수 있는 ‘지역산업 발전청’의 성격을 보유
- 대경권산업발전청에서는 지역 내 R&D 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지역 중소기업청의 거버넌스 변경과 업무의 조정 확대(선도산업과 전략산업 통합 조정, 인력양성사업 포괄)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산업 발전정책을 선도

■ '대경 중소기업 R&BD지원추진단' 운영 통해 기업 지원

- 산업발전청 설립과 함께 지역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국책사업수주지원사업팀(대경중소기업 R&BD지원추진단)’ 운영도 필요
- 지역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와 연계를 통한 정책 공조로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국가프로젝트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
- 중소기업 시각에서 R&BD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지자체 단위의 지역기업 기

술자료 임치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제도 정비도 고려

- ‘R&D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는 ‘R&D 역매칭 제도 도입’과 지역의 핵심 연구 개발사업 진행 및 R&D 지원과제 평가기준을 ‘기술성’ 중심에서 ‘사업성’ 위주로 전환하는 지역 기업의 R&BD 성과 확보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지금과 같은 ‘R&D를 위한 R&D’가 아니라,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R&BD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청의 확대 재편, 기업지원 기관들의 통합 운영 및 기능조정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
 - 기업중심 R&BD 제도가 지역에 제대로 정착되어야 비로소 기업 생산성 향상과 산·학·연·관 협력체제도 실질적으로 구축 가능

고소득 일자리 창출

V.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

■ 높은 성장 가능성

-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국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성장과 고용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부상
 - 1995년 51.8%와 54.8%였던 서비스업의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2007년 57.6%와 66.7%로 각 5.8%p와 11.9%p 증가³⁰⁾
 -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의 51.8%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³¹⁾ 고학력자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
-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2007년 현재 제조업의 40%에 불과³²⁾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국가 중 24위에 머무는 등 취약한 상태
 - 2003년 74.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서비스 수지는 2008년 167.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5년 만에 적자폭이 125.5% 증가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20% 수준이며 금융업, 의료보건업 등의 경우에도 50~70% 수준
 - 2008년 사업서비스에서만 145.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경제규모에 비해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인적 자원은 풍부하여 큰 성장 가능성 보유

30) 이에 반해 제조업 동기간 부가가치 비중은 0.3%p 증가에 불과하였고 고용비중은 -6%p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200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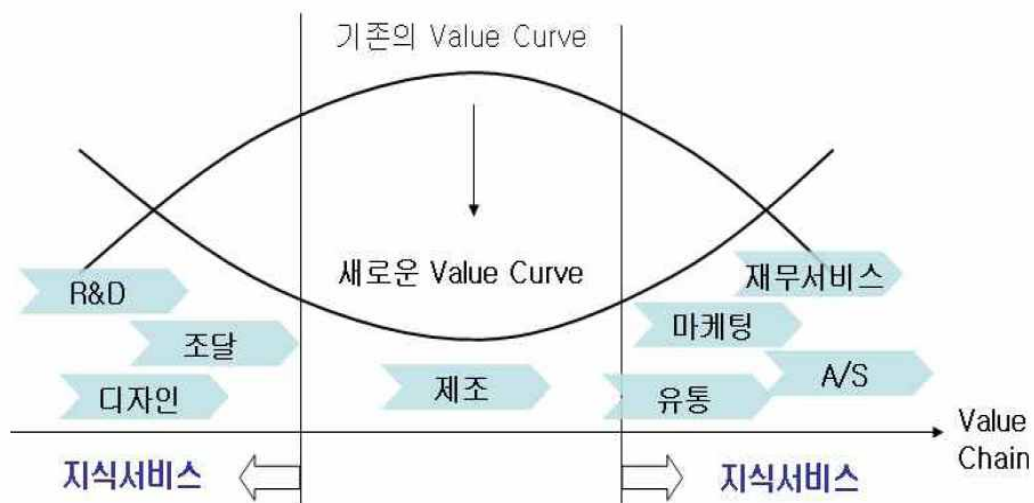
31) 산업연구원, 「지식서비스 수요 활성화 정책방안」, 2009

32)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 R&D 투자 현황과 시사점」, 2008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관련되는 교육, 의료 등 개인·사회서비스, 통신 등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 금융, 물류, 사업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³³⁾

■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성장의 돌파구

- 경쟁 심화와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로 제조업 부가가치의 원천이 조립·가공 영역에서 디자인 등의 지식서비스로 이동
- 신흥경제국의 추격, 국가·기업 간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 환경 악화로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용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



자료: 산업연구원, 「지식서비스 수요 활성화 정책방안」, 2009

▲ 산업의 가치곡선 변화

-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경북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
- 2008년 제조업의 지역총생산비중(37%)은 전국 평균(26%)보다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62.2%)보다 낮은 52%³⁴⁾

33) 중앙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8

34)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2009

■ 높은 취업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 제조업보다 큰 고부가가치 유발 가능성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19인데 반해 제조업은 평균 0.566³⁵⁾
- 우리나라의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는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가 훨씬 큰 상황
 - 2005년 제조업 취업유발계수 10.1에 비해 서비스업은 18.4
 -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 12.6으로 제조업의 7.2에 비해 크게 높아 고용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 수행 가능

■ 소비형 서비스업, 서민 일자리 제공

- 소비형 서비스산업³⁶⁾은 국내 취업자의 1/4이 종사하는 서민형 산업³⁷⁾
 - 2008년 소비형 서비스산업에는 전국 취업자(2,343만 명)의 약 24%인 567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생산은 국내총생산의 10.5%만을 담당
 - 지역 소비형 서비스업에는 지역 전체 취업자 249만 명의 23.8%인 59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생산액은 지역 총생산의 7.9%에 불과하며, 1인당 생산액도 약 13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19백만 원)에 크게 미달

2. 서비스산업의 트렌드

■ 경제의 서비스화

-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상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교육과 의료, 금융, 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부문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
-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 및 품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력의 시대로 변화

35)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36)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포함

37) 통계청, 「행정구역, 산업별 취업자 자료」, 2009

-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연구개발(R&D),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물류, 유통 등 서비스기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 서비스산업의 융합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이종 기술 간, 학제 간 융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대두
 - 애플사의 아이팟(ipod)나 아이폰(iphone)의 세계적인 히트는 기기의 성능과 함께 온라인 서비스가 연계됨으로써 가능³⁸⁾
 - 금융산업은 공학, 수학 등과의 결합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 금융위기 전까지 높은 수익을 달성
 - 의료서비스산업에서도 IT를 활용한 u-Health 서비스 및 기기, 병원전산처리를 포함하는 EHR(Electric Health Record) 등이 등장

■ 서비스산업의 세계화

- 경쟁이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어 가고 있으며 서비스업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체의 대형화가 진행
 -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산업 부문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도 글로벌화가 진행
 - 한·미 FTA를 비롯하여 각 국가들과의 FTA 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제적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금융부문을 시작으로 서비스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있는 추세

38) MP3 플레이어인 ipod는 온라인 음악 상점인 itunes와 스마트폰인 iphone은 다양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app store를 연계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3. 정부정책동향

가. 중앙정부

■ 2000년대에 들어와서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 2003~2004년 총 18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2005년에는 27개 분야로 대상범위를 확대한 ‘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2006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3차에 걸쳐 발표
 - 경영환경개선, 경쟁력 강화, 관광·레저, IT의 서비스 활용,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포함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2008~2009)

- 규제 합리화, 경쟁 촉진, 제조업과 차별 해소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
 - 1단계 :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
 - 2단계 : 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3단계 : 인재양성, 직업훈련, 서비스 R&D 등 성장기반 구축 방안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9개 추진 분야 선정
 - 고부가가치 분야 : 의료, 물류, 컨설팅, 디자인, IT 서비스
 -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수지 개선 : 교육, 콘텐츠, 방송통신, 고용지원

■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2009)

- 5개 서비스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육성 방안 제시
 -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문화콘텐츠·S/W, MICE³⁹⁾·관광

39)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의미

▼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세부사업

신성장동력사업	세부사업
글로벌 헬스케어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외국인 환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의료분야 R&D 확충 / u-Health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교육서비스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u-러닝 기반 조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교육과정·정보화·인력 해외 진출 확대
녹색금융	배출권시장 활성화 / 녹색산업 금융지원 /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문화콘텐츠·S/W	콘텐츠산업 창작기반 확충 /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융합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조성 / S/W 기업 해외 진출 지원
MICE·관광	총체적 MICE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 생태·공연·쇼핑 등이 연계된 융합관광 활성화

자료: 국무총리실, '신성장동력 세부 사업조사', 2009

■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은 공급정책 위주

-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공급 위주의 정책⁴⁰⁾
 - 총 51개의 사업 중 35개가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 창업, 경영안전, 기술 개발 등 공급 위주 정책으로 전체 예산의 94.4%를 차지
 - 수요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판로 및 수출 지원 등으로 구성

나. 지방정부

■ 대구시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

- 2006년 3월 '대구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
- 2007년 2월 '대경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연합회' 출범
- 2008년 5월 '창조적 광역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 8월에는 경제정책과 내에 지식서비스 담당 신설
- 2009년 12월 대구성서산업단지 내 '성서비즈니스센터' 기공식 실시

40) 산업연구원, 「지식서비스 수요 활성화 정책방안」, 2009

▼ 성서비즈니스센터 주요 내용

투자주체 및 규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시가 268억 원 투입 예정
센터면적	부지 6,612㎡, 연면적 14,522㎡, 지상 10층 규모
주요내용	법률, 회계, 금융, 수출입 등 기업지원기관을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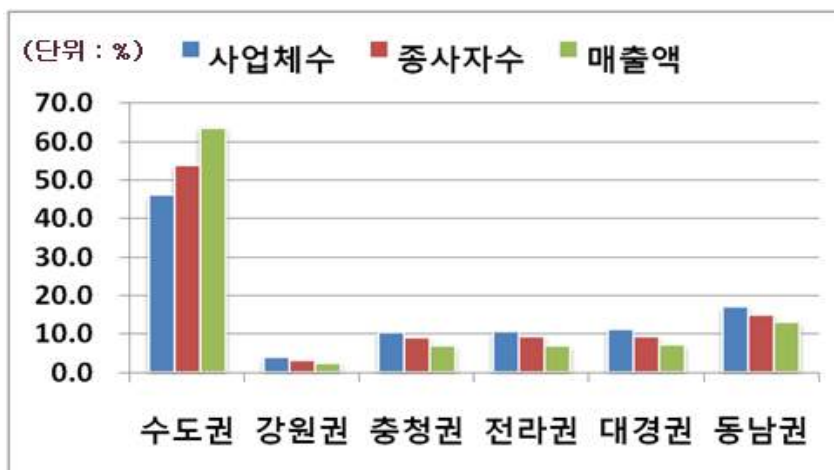
■ 경상북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전담 조직은 없으나 유통경제담당은 별도로 조직
- 2009년 11월 ‘경상북도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상주, 구미, 김천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육성하여 기업 지원 추진

4. 대구경북의 서비스산업

■ 대구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증가하고, 경북은 감소

- 대구의 GRDP 기준 서비스산업⁴¹⁾의 비중은 2000년 75.0%에서 2008년 80.4%로 증가한 반면 광공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경북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9%에 이르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8년에는 44.8%의 비중 차지
 - 경북 광공업의 비중은 2000년 42.8%에서 2008년 49.2%로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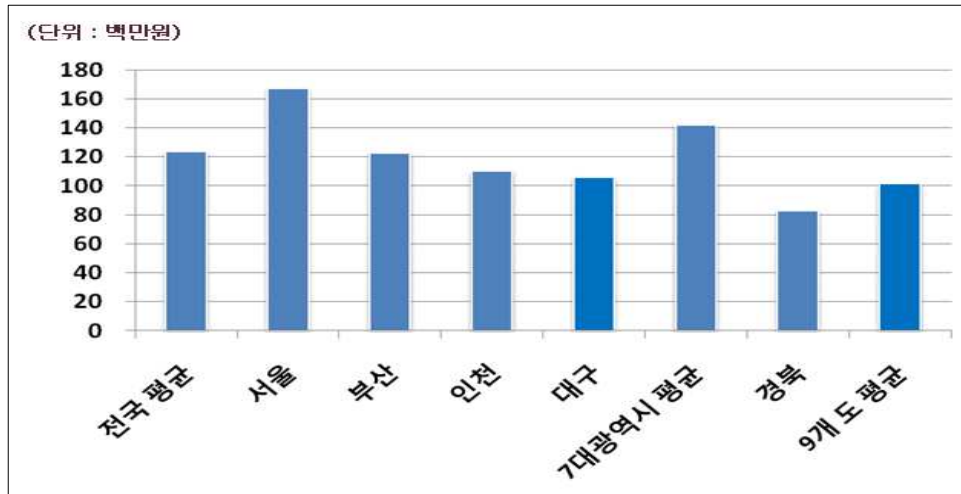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 2008 광역권 서비스업 전국 비중

41) 전기, 가스 및 수도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수치

■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⁴²⁾

- 2008년 대구경북 서비스업의 전국 대비 비중은 종사자 기준으로는 9%, 매출액 기준으로는 6.9%에 불과
 - 우리나라 서비스업 매출액의 63.6%가 수도권에 집중
- 2008년 지역 서비스산업의 1인당 매출액은 0.94억 원으로 서울(1.67억 원)과 수도권(1.46억 원)에는 물론, 전국 평균인 1.23억 원에도 크게 미달
 - 대구시 서비스산업의 1인당 매출액은 1.05억 원으로 7대 광역시 중 4위
 - 경북 서비스산업의 1인당 매출액은 0.82억 원으로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 2008 지역 서비스업 1인당 매출액

- 2008년 현재, 지역은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특화⁴³⁾
 - 소비형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평균 수준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낮은 특화도
 -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입지계수는 1.3으로 높은 특화도 보유

42) 서비스업의 범위로 통계청 9차 개정의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를 사용(금융 및 보험업, 연구개발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4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매출액 기준 입지계수가 특화의 기준이 되는 1.3에 근접

- 2008년 지역의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는 전국의 8.67%를 차지⁴⁴⁾
 - 종사자수 기준 입지계수⁴⁵⁾는 0.96으로 도소매업보다 낮은 특화도
 - 대구는 평균적인 특화도(1.05)를 보이고 있으나 경북의 입지계수는 0.87로 전국 평균 이하의 특화도

▼ 2008 대경권 서비스산업 입지계수

세부산업	대구경북		대구		경북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도매 및 소매업	1.04	1.03	1.09	1.03	0.99	1.03
숙박 및 음식점업	1.13	1.08	0.98	0.89	1.29	1.3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8	2.14	0.67	1.05	1.75	3.6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39	0.31	0.46	0.32	0.32	0.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0.78	1.10	0.93	1.59	0.61	0.4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79	1.07	0.90	1.20	0.67	0.87
교육 서비스업	1.08	1.04	1.18	1.14	0.96	0.9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3	1.30	1.10	1.27	1.15	1.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1	0.73	0.93	0.60	1.10	0.91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1	1.22	1.15	1.04	1.28	1.48
전문서비스업	0.61	0.40	0.83	0.51	0.36	0.2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58	0.57	0.58	0.52	0.58	0.6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0	0.44	0.78	0.48	0.61	0.38
연구개발업(*)	0.36		0.25		0.48	
금융 및 보험업(*)	0.96		1.05		0.87	

주(*) :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의 종사자수 입지계수는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사용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 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은 지역 내 법원의 분포를 고려할 때 높은 비중이 예상되지만 기업 등 기관 대상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낮은 비중과 생산성 보유

▼ 2008 대구 법무 관련 서비스업 현황

사업체 전국비중	종사자수 전국비중	매출액 전국비중	사업체 입지계수	종사자수 입지계수	매출액 입지계수
5.16%(4위)	4.16%(4위)	2.14%(5위)	0.95	0.87	0.52

자료 : 통계청, 도소매·서비스 통계

44)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45) 여기서는 ‘금융 및 보험업’ 통계가 조사되어 있는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입지계수를 계산

■ 대구경북의 중점 육성 분야 선정

- 본 계획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지역의 특화산업과 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을 선택하여 향후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
 - 중점 분야로 의료서비스,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BS)⁴⁶⁾, 소비형 서비스, 건설 부문 선정

▼ 서비스산업 중점 분야

선정 산업	선정 이유
비즈니스 서비스업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서비스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한 산업
금융업	지역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의 역할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
소비형서비스업	2008년 기준 지역 서비스업 종사자의 43.9%와 매출액의 71.5% ⁴⁷⁾ 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지역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산업
건설업	고정자본 및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의 특성과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정책산업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산업
의료서비스업	지역 내 특화되어 있으며 신성장동력 확보 외에도 정주여건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

② 서비스산업별 현황과 문제점

1.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

- 지역 BS산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 전국의 5% 이내로 수도권에 비해서 규모가 미미
 - 대부분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수도권에 50% 이상 집중

46) 통계청 산업 분류 9차 개정에 따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으로 분류

47) 통계청, 시·도 산업 사업체 구분별 사업체수·종사자수

- ‘사업지원서비스업⁴⁸⁾’은 BS 산업 중 종사자의 수도권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08 지역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전국 비중

(단위 : %)

비즈니스 서비스	대구		경북		수도권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5.02	2.55	3.54	1.97	58.96	72.66	
전문,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	3.14	1.15	4.51	2.12	60.82	70.03
	전문서비스업	5.29	2.77	2.35	1.41	63.74	79.8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69	2.73	4.46	2.49	53.66	65.3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7	3.67	4.69	2.65	54.85	69.1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5.49	4.24	3.79	2.87	49.79	63.4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12	3.01	5.10	2.98	47.08	66.61
	사업지원 서비스업	5.85	4.60	3.59	2.84	50.21	62.5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세부산업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중에서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에서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업’이 비교우위 보유
 - 이외에 대구는 전시산업이 포함된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등에 비교우위 보유
 - 경북의 경우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의 매출액 전국 비중이 높은 편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대도시인 대구에서 장기적 시각으로 육성해야 할 부문이나 현재 전국 비중과 경쟁력은 낮은 편
 - 기업 등 기관들의 수요 부족으로 개인 대상의 저부가가치 서비스 중심
 - 대구의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BS 산업의 평균보다 조금 나은 수준
- 2001년~2005년간 지역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1,300여개 업체와 23,000여 명이 증가하였으나 전국 대비 매출액 비중은 1995년보다 0.27%p 감소

48)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경비경호 및 탐정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 대구경북 BS 세부산업 매출액 전국 비중 및 경쟁력

(단위: %)

산업별	세부산업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	
		매출액 전국비중	경쟁력	매출액 전국비중	경쟁력	매출액 전국비중	경쟁력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2.1	0.51	1.2	0.56	3.4	0.5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3.8	0.82	1.9	0.90	5.7	0.84
	광고 대행업	0.9	0.57	0.0	0.27	0.9	0.54
	기타 광고업	3.5	0.74	0.4	0.28	3.9	0.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3	0.25	0.0	0.00	1.3	0.25
	비금융 지주회사	0.0	0.00	0.0	0.00	0.0	0.00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1.6	0.62	0.4	0.82	2.0	0.6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3	0.77	1.5	0.69	4.8	0.7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0.9	0.56	1.1	0.58	2.0	0.57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4.1	1.13	3.5	0.91	7.6	1.0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1.9	0.98	5.4	1.12	7.2	1.0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	0.76	4.8	0.84	7.7	0.81
	수의업	1.4	0.53	0.2	0.36	1.6	0.51
	전문디자인업	4.9	0.90	2.5	0.59	7.4	0.76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3	0.20	0.4	0.38	0.7	0.28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4.2	0.89	1.9	1.46	6.0	1.0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1.1	0.82	4.6	0.98	5.7	0.94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1.8	1.22	2.4	0.81	4.3	0.95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5.2	1.60	5.5	0.92	10.7	1.16
	고용알선업	2.4	0.46	3.6	0.55	6.0	0.51
	인력공급업	3.3	0.78	3.1	0.91	6.3	0.84
	여행사업	3.3	1.08	2.4	0.90	5.8	1.0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8	0.98	1.3	0.53	7.1	0.8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3	1.00	2.0	1.01	4.3	1.0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4	0.78	4.5	1.55	8.9	1.04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0.0	0.00	0.0	0.00	0.0	0.00
	사무지원 서비스업	2.9	0.61	1.2	0.51	4.1	0.57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7	1.33	1.6	1.06	10.3	1.28

주 1) 경쟁력은 (지역 1인당 매출액)/(전국 1인당 매출액)
 2) 매출액 비중 상위 25%, 경쟁력 1이상 부분은 녹색으로 표시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2. 금융산업

■ 지역 금융의 위상 저하

- 2008년 지역의 GRDP와 사업체수의 전국 비중은 각각 9.3%와 11.1%인데 반해, 예금은행 예금 등 금융부문은 6%대에 불과
 - 대구지역 예금은행 예금의 전국 비중은 2000년 4.5%에서 2009년 3.5%로 감소했고, 경북은 2.5%에서 2.3%로 감소
 - 예금 및 대출의 절대적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의 예금은행 예금과

- 대출은 2000년에 비해 각 1.5배, 2.4배 증가
- 지역 내 금융기관 점포수도 2008년에는 감소
 - 전국 예금은행 점포의 35.5%가 서울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구에 5.2%, 경북에는 3.5% 분포
- 2008년 대구경북 금융산업의 입지계수는 0.67로 지역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
 -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 1.15로 일정 정도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도권(1.36)보다는 낮은 특화도

▼ 대구경북 금융산업 입지계수 추이

구분	2000	2003	2005	2008
수도권	1.34	1.31	1.34	1.36
대구경북	0.71	0.73	0.69	0.67
대구	1.05	1.14	1.16	1.15
경북	0.52	0.52	0.48	0.45

- 2009년 8.6조원의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
- 금융산업은 글로벌화와 함께 복합화, 겸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지역 금융은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3. 소비형 서비스산업

■ 소비형 서비스산업은 구조 재편 중

- 2008년 기준 소비형 서비스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의 약 8.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가 경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대구 약 14.6%, 경북 5% 차지
- 소비형 서비스산업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대형화
 - 2000~2008년 사업체수는 만 개 이상 감소한 반면 종사자수 변화는 미미

▼ 2008년 대구경북 소비형 서비스산업 생산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구	경북
유통산업	4,065,658	2,473,944
숙박 및 음식점업	808,975	907,926

- 지역의 유통산업은 ‘생산 → 도매 → 소매’ 구조에서 도매업이 쇠퇴하면서 ‘생산 → 소매’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존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중
 - 대형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유통산업 재편이 진행
 - 부산 센텀시티와 같은 인근 지역의 고급소매업과 온라인 유통업의 등장은 거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의 지역 상권을 위축

4. 건설산업

■ 정체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

- 2005년 이후 건설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지역 내 비중은 일정 수준 유지
 - 2005년~2008년 간 대구의 사업체수는 3.6%에 머물러 있으며 종사자수는 4.3%에서 4.7%로 0.4%p 증가에 그쳤고, 경북의 경우 사업체수는 3.2%에서 3.3%로, 종사자수는 5%에서 5.1%로 각 0.1%p 증가
- 2009년 지역 건설업 수주액은 전국에서 7.8%를 차지하였으나 토목부문만은 14%를 차지, 2005년의 10.1%에서 약 4%p 증가
 - 이에 반해 건축부문은 2.6%에 불과하고 비중도 계속 감소 중
- 2008년 대구·경북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인 100.7%보다 높은 103%와 109.9%로, 당분간 주택시장에 의한 건설업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

5. 의료서비스산업

■ 수도권 이남 최고의 의료서비스산업 보유

- 건강보험진료비를 기준으로 볼 때, 대구 의료서비스산업은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큰 지역수지⁴⁹⁾ 흑자를 기록

- 대구와 서울 간 의료서비스 지역수지에서 적자규모는 빠르게 줄어들어 2006년 260억 원에 달하던 적자가 2008년에는 100억 원 수준으로 감소⁵⁰⁾

▼ 대구경북 의료서비스 지역수지 현황

(단위 : 천만 원)

지역	대구 의료서비스 지역수지			지역	경북 의료서비스 지역수지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서울	-2,625	-1,499	-988	서울	-8,517	-7,555	-7,055
부산	51	140	224	부산	-1,434	-1,516	-1,492
울산	312	920	1,391	대구	-18,946	-18,615	-18,277
경기	72	1,589	2,806	인천	-215	70	265
경북	18,946	18,615	18,277	울산	-1,138	-142	483
경남	2,394	2,507	2,594	경기	-1,350	200	1,543
				경남	-48	-24	102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2008 지역 간 의료이용량 분석, 2009

- 대구 전체 의료서비스기관의 병상당 매출액은 서울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나 기타 광역시의 의료서비스 기관에 비해서는 높은 편
- 2008년 대구 11개 종합병원의 총매출액은 약 1.02조 원으로 서울아산병원의 매출액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병상당 매출액은 절반 수준

▼ 2007년 7개 대도시 병상수 및 병상당 매출액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병상수(개)	70,857	39,966	24,217	20,728	16,883	16,698	10,248
병상당 매출액(백만 원)	180.55	87.62	101.26	89.67	90.52	90.37	89.33

주: 병상당 매출액은 2008년 자료 이용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일반병원 비중이 높은 구조

- 대구는 7개 대도시 중 두 번째로 많은 일반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서비스 매출액 중에서 일반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전국 평균(13.5%)보다 크게 높은 수준

49) 의료서비스 지역수지는(관내 유입 환자 건강보험진료비 - 관외 유출 환자 건강보험진료비)를 의미

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2008 지역 간 의료이용량 분석」, 2009(단, 이 통계는 비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는 포함하지 않아서 비보험진료비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의 실제 격차가 과소평가되고 있음. 실제로 대구 의료서비스 매출액 중 건강보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8%로써 서울의 45.9%보다 많이 높음)

▼ 2008년 7대 대도시 의료서비스 기관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14,862	4,246	2,994	2,499	1,614	1,883	1,113
종합병원	60	27	11	12	19	9	4
일반병원	153	73	88	45	44	26	36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

■ 산업적 잠재력 보유

- 5개의 대학병원과 포스텍 등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이 집중되어 의약품·의료기기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개임상연구 등 연구개발 잠재력을 보유
 - 2010년 상반기 임상시험 수행실적에서 경북대 병원과 영남대 병원이 전국 9위 차지
- 지역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해 해외 환자 유치사업을 중점 추진 중
 - 2009년 대구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전국의 4.7%에 불과
 - 대구에는 2010년 현재 전국 외국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5.6%인 89개소가 분포⁵¹⁾하고 있으나 실적 보유 기관은 극소수
- 대구지역 병원협회는 2009년 메디시티 대구를 선포하고 서비스 개선,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 JCI 공동 인증 추진 등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노력

2. 문제점

■ 기반이 부족한 지역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역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역량은 전국 평균에도 미달
 - 지역 BS 기업 중 종업원 4인 이하의 비율이 67%로 대부분 영세한 수준
- 지역 내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지식서비스 수요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업이 관련 수요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
- 지역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 운영

5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9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2010

이 비효율적

- 성서비즈니스센터(2009년 12월 기공), 대구지식서비스센터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의 역할 및 역할 분담이 미흡
- 대구와 경북의 BS 광역적 추진체계 조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존 대경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연합회 등의 네트워크 활동도 미약

○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

-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주요 애로사항은 아웃소싱 대상과 강도 선정, 서비스 이용이 기업에 가져올 영향 사전 평가, 업체 선정 등의 ‘아웃소싱 사전단계’⁵²⁾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대표적 수요 촉진 정책인 ‘지식서비스 바우처 제도’⁵³⁾는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비즈니스 서비스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개선이 필요

■ 지역밀착성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금융

○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금융시책이 거의 전무

- 금융정책의 수립과 감독기능이 모두 금융위원회에 집중

○ IMF 이후 지역금융은 안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산업지원기능이 약화

- 2000년 이후 지역금융의 가계대출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지역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비이자 수익에 대한 비중이 상승

○ 비예금은행의 엄격한 대출심사 및 대출이자의 상승은 지역 기업과 서민층의 자금접근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화

- 비예금은행의 수신은 늘어나는 반면, 여신은 줄어드는 추세

○ 대경창업투자 등의 벤처·엔젤 펀드가 일부 형성되어 있으나 유망기업에 대한 중복 투자 등 보수적 투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벤처 산업생태계 형성이 미흡

- 우리나라는 빠른 투자 회수가 가능한 M&A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52) 산업연구원, 「지식서비스 수요 활성화 정책방안」, 2009

53)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기업이 5개 서비스분야(디자인, e-러닝, IT 서비스, 시험분석, 컨설팅)중 한 분야에 대해 지식서비스를 받을 경우 최대 5천만 원, 비용의 7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은 해당 광역경제권 소재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소재 기관의 50% 이하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자금 회수 수단인 IPO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⁵⁴⁾

- 또한 벤처자본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우선 손실충당 관행⁵⁵⁾으로 투자나 위험 부담이 큰 투자 기피⁵⁶⁾
- 지역금융은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하고, 차별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향상 필요

■ 쇠퇴하고 있는 지역 전통 유통산업

- 유통산업의 구조가 ‘대형유통점 중심의 소매’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상권이 잠식되고 이로 인한 고용의 감소, 자본 역외유출 심화
 - 기존 지역 유통산업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경쟁력의 악화와 이로 인한 상권 잠식을 겪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그 만큼의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비용 전가 등의 요구는 지역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유발
- 지역 유통업체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고안 필요성 대두

■ 지역 건설산업, 성장 잠재력 부족

- 지역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상당수 파산하여 중견 건설업체가 부족하고 지역 내 업체의 지역 공사수주 비중도 저조한 상태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친환경적 건축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정책적·기술적 연구 부족
 - 정부의 건설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지역 업체의 활용도는 낮은 편
- 민간 주택건설의 비중이 높아 민간 수요 변화에 민감

54) 2009년 현재 코스닥과 프리보드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전체기업의 1.7%에 불과(현대경제연구원, 「2기 벤처시대의 도래와 활성화 과제」, 2010)

55) 벤처투자조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투자자에 앞서 손실을 떠안는 방식

56) 한국금융연구원, 「벤처 캐피탈시장의 동향과 향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19권 35호, 2010

■ 의료서비스산업, 산업화 역량 보강 필요

- 대구 의료서비스 기관의 생산성⁵⁷⁾ 향상을 위해서는 ‘비급여아이템’ 등 고부가가치 고급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시설의 대형화·첨단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이러한 인식에 따른 병원의 대형화 등 공급 증대에 맞는 환자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역외·해외 환자 유치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미흡
 - 의료사고 관련 법·제도, 보험 관련 인프라 등이 미흡하여 사업이 건강검진 등 일부 의료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문통역인력 등 관련 인력도 부족
 - 메디시티 대구에 대한 국외 홍보가 미흡하고, 각 의료서비스 기관의 해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관심도 부족
- 지역의 중개임상연구 잠재력에 비해 연구 성과물의 산업화 미흡
 - 임상시험이 가능한 6개 센터가 분포하고 있음에도 2010년 상반기에 임상시험실적을 보유한 기관은 경북대, 영남대 병원 2곳뿐이며 보유하고 있는 고급 시설·장비들을 운영할 우수인재 부족
-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일반병원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부족

57) 병상당 매출액 기준

3 비전과 전략

1. 비전 및 목표



▲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지역경제의 지식기반경제 전환을 추진

■ 기본목표

- (의료서비스) 지식산업 역량 강화
 -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인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 나아가 아시아의 치료와 임상 거점으로 발전
- (비즈니스 서비스와 금융산업) 제조업과 동반 성장
 - 지역 BS업체의 효율적 제조업 지원으로 동반 성장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 지역금융의 지역밀착경영 강화로 실물경제의 효율적 지원 및 경쟁력 확보

- (소비형 서비스업 및 건설업) 서민생활 안정화
 - 지역 소상공업의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 서민 경제 안정화
 - 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발주 건설공사 수주율을 2020년 50% 이상으로 확대

2. 추진전략

■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

- 지역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첨단화, 융합화, 지식서비스화, 고부가가치화하여 고도화함으로써 지역 실물경제의 효율적 지원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연계협력 강화

- 규모가 영세한 지역기업의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 지원정책 강화
- 지역 제조업과 연계 협력 강화로 지역 제조업 성장과 BS산업 기반 강화

■ 지역 밀착금융 강화

-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역고객 전담관리제 실시 등으로 지역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

■ 경쟁력 있는 녹색건설산업 육성

- 친환경 녹색 건설 확대, 등급인증제 도입, 핵심 인력 확보 등을 통한 녹색화, 재개발, 도심 재창조 등 신분야 진출을 통한 차별화로써 고부가가치화 추진

■ 지역 유통시장의 특성화와 조직화

- 지역 유통시장의 특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대화, 배달서비스 강화, 정찰제, 상인조직 강화 등 지역 유통시장 규모의 경제 지향

■ 환자 유치 · 연구 역량 강화

- 해외환자 유치사업 여건 확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연계한 임상시험 사업화를 통한 지역 의료서비스의 지식산업화 추진

4 주요 전략사업

1. 수요 발굴 및 맞춤형 BS 육성

- 지역 BS산업 DB 구축 및 평가 : 지역 BS산업에 대한 D/B 및 홍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역 BS 공급기관의 역량을 홍보함으로써 수요·공급 기업 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BS 시장 활성화
-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체들의 주요 애로요인인 ‘아웃소싱 사전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리컨설팅(Pre-Consulting) 서비스 활성화
 - 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식서비스 필요 분야, 기대효과, 그리고 수행수준 등을 파악하고 지식서비스 RFP 작성 지원
- 미래 수요가 증대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

▼ 미래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서비스 주요 육성 분야

육성 분야	내 용
시험 ·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지식서비스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이며 지역 기업의 상품 연구개발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 • 지역 입주 연구지원기관⁵⁸⁾과의 협조로 보유 장비의 통합 관리 및 일괄 지원 시스템 강화
환경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에 대한 요구 및 규제 증대로 향후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부문으로 현재 지역 BS산업 구조의 문제점 중 하나인 수요 부족 문제 해결 가능 ex) ESCO⁵⁹⁾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분야의 하나 • 지역 내 수요가 활발하고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산업 중심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내 디자인 기업과 연계하여 디자인 개발 지원 ex)의료기기 등

- 전시컨벤션산업은 EXCO를 비롯, 우수 호텔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국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 전문전시·회의 기획사의 육성을 지원하여 전시컨벤션 기획 역량 강화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전시·컨벤션을 지원하여 지역 내 수요 확보
- 컨벤션 행사를 선정, 지역의 대표적 문화·관광행사와 연계 전 지역 행사 추진

58)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이후 한구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식약청,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 국가기관과 지역 내 분원설치 MOU 체결

59)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2. 사업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 지역 BS산업의 통합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 개선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서비즈니스센터는 기업들에 대한 BS 제공을 중심으로, 대구지식서비스센터는 지역 BS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
 - 대구와 구미, 포항, 안동 등 지역 내 산업도시별로 지원서비스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제조업체와 지식서비스업체 간의 협력 연계 체계 구축

- 역외 기업과의 컨소시엄 지원을 통한 정책 효율화

- 지식서비스바우처 사업, 컨설팅쿠폰사업⁶⁰⁾ 등에 지역 내 BS기업과 역외 우수 BS기업 간 컨소시엄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BS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투명성 강화 및 신뢰 구축



▲ 비즈니스 서비스 지역 간 연계 방안

- 퇴직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 지식서비스 지원사업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들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노력 유도
- 지역 대학 내 BS 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하고 기존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실무형 인재 육성
 - BS 인턴십 활성화 사업 :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 등 지자체의 BS산업 지원 사업에 교육과정 그룹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형 인재 양성
 - 컨설팅, 디자인, 전시기획 등의 실무형 인재 육성

60) 중소기업청 주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

3. 지역밀착형 금융 강화

- 대구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
 - 현재 1,000억 원 수준인 출연금을 2015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유통 지원
-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 대한 대출과 사업전망 등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계적 금융 강화
 - 담당고객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고객정보 축적으로 니즈 파악 및 지원
- 지역 금융기관의 독립성 강화로 관계적 금융 강화
 - 금융기관 지역본부들의 독립성을 자금운용과 인사 등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강화하여 지역기업들의 자금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

4. 전통 유통산업 조직화 및 특성화

- 상인 의식개혁교육, 서비스교육 등을 통한 상인들의 자체적인 조직화를 지원하여 물류비용의 절감과 공동 마케팅, 차별화 유도
 - 동네 슈퍼마켓의 프랜차이즈(나들가게)화로 지역 유통상인들의 조직화 유도
 - 사업전환과 신규 창업에 필요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 중소 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으로 지역 중소기업 생산 제품과 농산품 등을 전문 취급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상권 형성 지원
- 전통시장의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특성화 도모
 - 방천시장과 같은 도로를 활용한 문화 체험시설 설치, 지역 주요 문화사업과 연계하는 행사 등 주민들이 찾아오는 콘텐츠 발굴 및 사업추진 지원
 - 편의시설 확충,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의성 증대

5. 지역 건설업 녹색건설 혁신역량 강화

- 예정되어 있는 지역 건설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분할 가능한 사업을 소규모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등 건설 물량 확대로 지역 건설업 성장기반 조성
- 예비 중견 건설업체를 발굴하여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금융, 해외 진출, 경영혁신 인력 육성 지원

-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친환경 녹색건설 등급인증제를 도입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
- 조세 지원정책,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에너지 및 자원절약, 친환경 리모델링에 대한 수익성을 개선함으로써 차별화된 건설수요 창출

6. 해외환자 유치 여건 구축

- u-Health 등 첨단기술 도입과 JCI 공동인증 등으로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를 강화하고 해외환자유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해외환자 유치사업 단계적 추진

단계	유치대상	주요 사업
단기	국의 한인사회	• 건강검진과 함께 모발 등 미용성형, 치과 등 위험성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 뷰티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글로벌로 확대	• 한자문화권을 중심으로 한방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 각 국 의료시스템 및 수급현황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해외환자 유치 컨소시엄 구축으로 규모의 경제 도모
 - 메디시티 대구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해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비전 및 전략 공유
 - 종합병원과 일반병원들 간의 컨소시엄을 형성, 전문 통역사 등 공동 인프라를 구축, 사업의 상시적 진행, 경험 축적, 기관별 전문화·특성화를 유도

7. 첨단 치료·임상역량 개발

- 향후 선정 예정인 연구중심병원을 유치, 지역 R&D 및 상업화 거점으로 육성
- Central Lab 등 핵심 시설 운영 역량 강화
 - 지역 내 구축된 첨단 시설 활용과 임상시험을 위해 PI 등 우수인재 유치
- 2008년 말 지역에서 형성된 임상 네트워크인 전임상·임상협의체의 내실화
 - 참여기관별 특성화, 역할 분담, 공동임상시험 협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와 연계 방안 수립 등
 - 장기적으로 기관별 특정질환에 대한 전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5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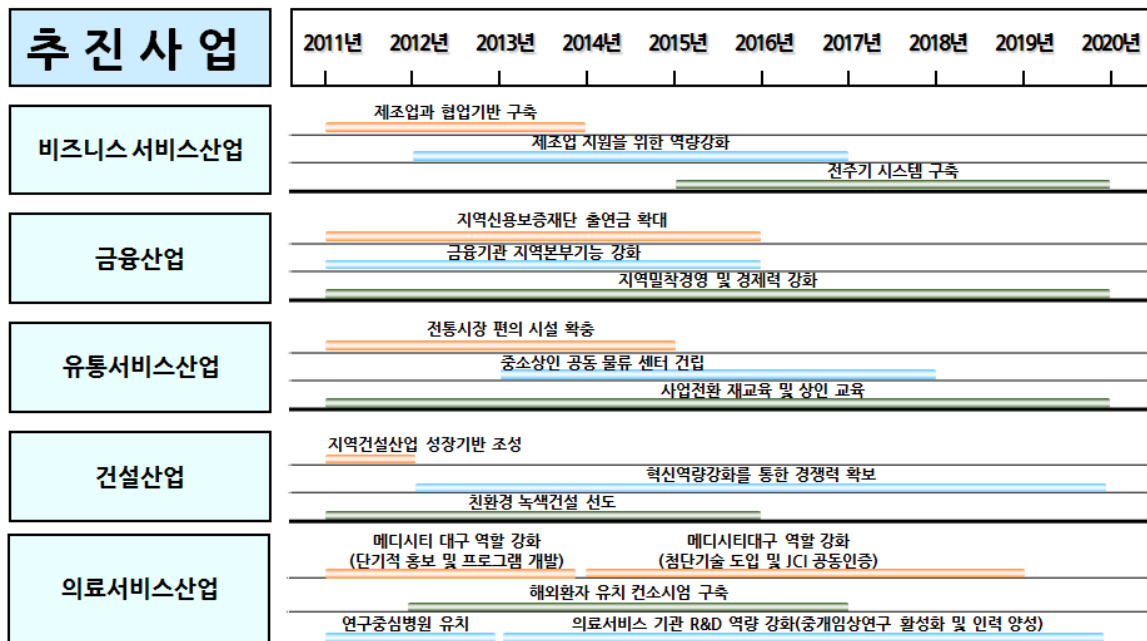
■ 선정 기준

- 사업우선순위는 사업의 정책부합성,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 5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분야별 산업별로 프로젝트화 할 수 있는 핵심 전략사업과 기타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

■ 핵심 전략사업

- BS산업 : 제조업과의 협업기반을 구축하여 수요 발굴 및 수요맞춤형 BS 육성
- 금융산업 :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를 통한 지역밀착형 금융 강화
- 소비형 서비스산업 :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 건설산업 : 지역 건설업 성장기반 조성
- 의료서비스산업 : 메디시티 대구 역할 강화와 해외환자 유치 컨소시엄 구축

2. 추진로드맵



고소득 일자리 창출

VI. 문화 · 관광산업의 글로벌화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 메가트렌드

■ 문화 · 관광산업은 21세기형 황금알을 낳는 거위

- 굴뚝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문화 · 관광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성장 엔진으로 2019년 관광산업의 세계 GDP 비중은 9.5%를 차지할 전망
- 문화산업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관광은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
- 문화를 접목한 장소마케팅으로 새로운 관광목적지가 탄생할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

■ 아시안 컬처코드의 세계화와 동북아의 급성장

- 아시아 문화가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며 일시적 호기심을 넘어 주류 문화로 정착
- 2020년 중국이 세계 관광시장 1위를 차지하며 동북아가 세계 관광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문화산업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8.9%, 세계시장 성장률인 7.4% 증가

■ 문화 · 관광의 융 · 복합화와 광역경제권 시대

- 문화 영역에서 문화콘텐츠 장르 간 융 · 복합으로 시너지 창출 증대
- 관광은 어떤 산업과도 융합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산업과 융 · 복합화 도모
-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주변도시와 연계하는 문화 · 관광 네트워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확보



▲ 문화·관광 네트워크 대표적 사례 : 포르투갈 리스보아 지역과 일본 간사이 지역

■ 사회구조 변화가 시장과 정책의 혁신 촉발

- 뉴시니어 계층 등장, 우머노믹스 증대, 중국의 성장은 21세기형 관광시장(노인, 여성, 중국)을 형성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아젠다로 급부상하며 영향력 행사
- IT·CT 발달로 온라인 시장 확대와 E-마케팅 확산, 소비자의 프로슈머 역할

2. 정책동향

■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광역화 및 협력체계 강화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지역발전정책 체계 개편과 포괄보조금, 지역발전 인센티브 도입, 평가체계 강화 등
-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의 하드웨어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확충과 지역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심화

■ 관광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MB정부, 관광산업 구조 고도화와 활성화에 적극적 : 대통령 주재 정례회의
- 관광기능을 민간주도로 개편, 관광자원의 문화적 품격 제고, 관광산업을 고수익구조로 전환

■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초한 문화정책 추진

- 신성장동력 22개 분야에 문화콘텐츠 선정, 디지털·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산업 핵심역량강화 목표 설정
-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 강화

2 현황과 문제점

■ 문화원형은 풍부하나 고부가가치화 미흡

- 대구경북은 신라, 유교, 가야의 3대 문화권의 분향인 유서 깊은 고장으로 가장 한국적인 문화자산을 보유
 - 국내 세계유산 10건 중 3건 보유, 전국의 20%에 달하는 지정문화재 보유 등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 존재
- 반면 이들 자원의 활용도는 단순 관광자원화와 초보적인 문화콘텐츠 제작 단계에 머물러 시장의 확대와 멀티 상품화에 한계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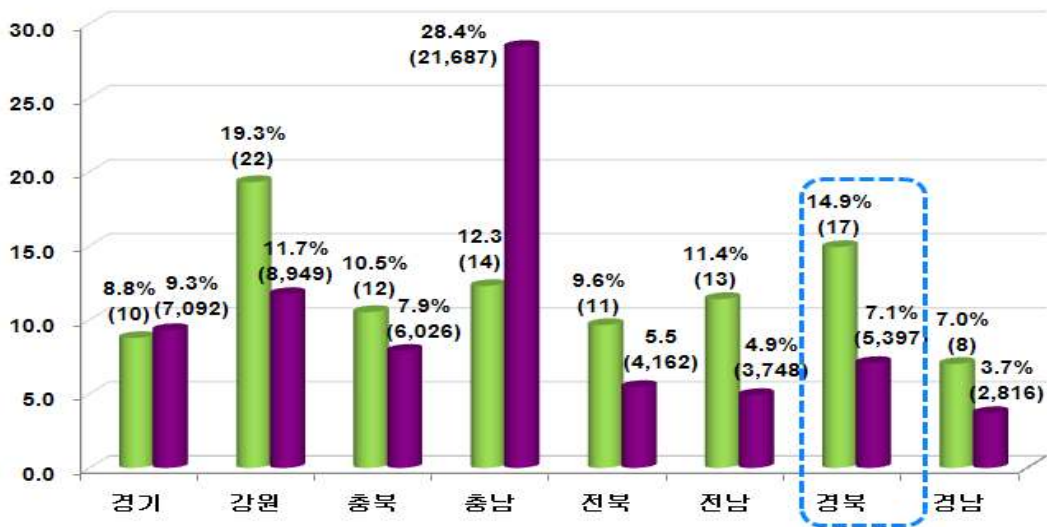


▲ 대구경북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 산림 및 생태자원의 보고, 수요맞춤형 자원 활용은 미흡

-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으로 둘러싸인 대경권은 타 지역에 비해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보유

- 경북 북부지역이 새로운 장수벨트라는 연구결과 보고, 이 지역의 먹거리와 생활습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원화 시도는 부족한 형편
- 특히 전국 국립공원의 20%, 자연휴양림의 15%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 이용률은 전국 대비 7%에 그치고 있는 실정



▲ 광역자치도별 자연휴양림 보유 현황 및 전국 대비 점유율(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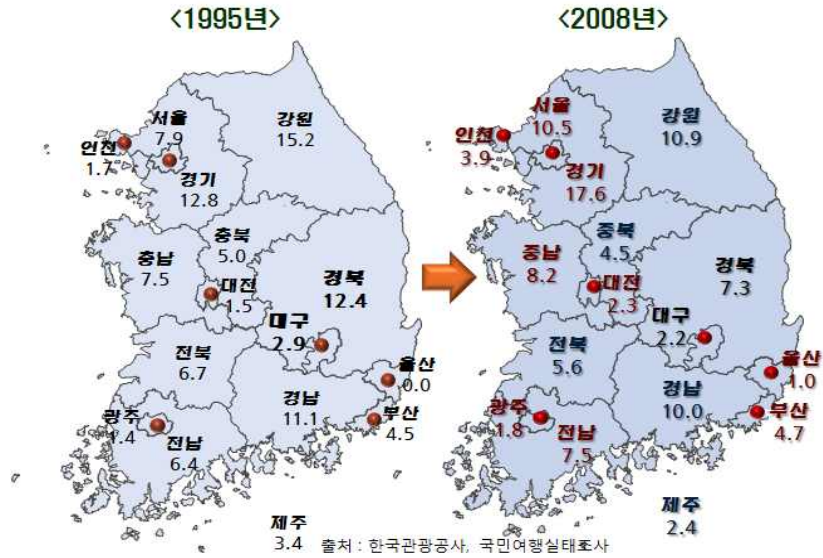
■ 풍족한 문화·관광 인프라 대비, 콘텐츠 내실화 부족

- 대구권의 대형공연장(1,000석 규모) 10개, 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경주문예회관 신설로 대형문화시설은 풍족한 반면 운영 내실화 부족
- 대구는 공급이 수요를, 경북은 중소규모 시설이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지역 내 수요공급의 불합리성 문제 발생
- 경북 내 법정관광지는 29개소에 달하나 민자 유치 부진으로 사업추진성과가 저조하며 관광지 유형 또한 트렌드 변화에 뒤처지는 형편

■ 관광시장 점유율 하락이 지역 매력도 저감을 반증

- 한국관광공사의 국민관광실태조사 결과는 타 지역 대비 우리 지역 문화·관광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

- 내국인 관광시장 점유율에서 경북은 지난 1995년 전국 대비 12.4%를 차지 하던 것이 2008년 7.3%로 감소



▲ 시·도별 관광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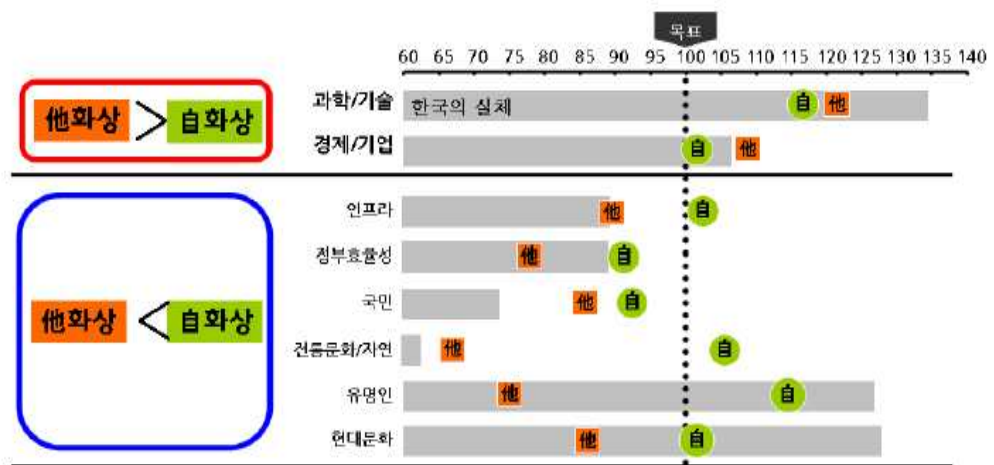
- 경북 외국인 관광시장 점유율 또한 시장점유율과 관광객 수 모두 감소
 - 동 기간 외국인 관광시장이 3배 정도 상승한 것을 감안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태



▲ 주요 지역별 전국 대비 외국인 관광시장 점유율 변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지역문화와 자원의 세계화가 급선무

- 한국하면 연상되는 대표이미지는 ‘김치’, ‘축구’, ‘불고기’, ‘인삼’, ‘태권도’ 순 (국가이미지위원회, 2002)
 - 인삼과 태권도는 대경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품화 방안 마련 시급
 - 고택, 한식 등 한국 대표 관광상품과의 연계 가능한 대경권만의 브랜드화 필요
-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50개국 가운데 ‘과학/기술’이 실체와 이미지 면에서 모두 10위권에 진입한 반면 전통문화/자연(34위), 현대문화(24위), 국민(22위)면에서는 모두 하위권(삼성경제연구소와 국가브랜드위원회, 2009)
 - 특히 전통문화/자연은 실체수준에 비해 자화상이 매우 높은 항목으로 적절한 조율과 함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으로 파악



▲ 한국 국가브랜드 지수별 타화상(이미지-외국인 평가)과 자화상(한국인 평가)간 격차(%)

- 따라서 대경권의 독창적 문화와 자연생태를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마케팅 하여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 대두

3 비전과 전략

■ 비전

- 대구경북 문화·관광산업의 비전은 ‘동북아 일류 문화·관광지대’로 설정
 - 문화·관광산업 중흥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관광 지역 창조

■ 목표와 추진전략

-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로 대구경북 컬처노믹스, 지역특화 그리노믹스, 융복합 선도지대를 설정
- 비전과 3대 목표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도출
 - 거점별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 대도시권 문화·관광 역량 강화
 - 녹색·생활 체험관광 기반조성
 - 문화·관광 소프트시스템 혁신



■ 대경권 문화·관광 공간구상도

- 대경권 관광산업은 대구와 경북 남부권 및 경남 북부의 대구생활권 해당 지역을 포괄하는 대구권, 경주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포괄하는 경주·동해안권, 나머지 경북 북부지역을 포괄하는 북부권으로 구분하여 접근
 - 각 권역별 거점인 대구, 경주, 안동과 권역별 부거점인 고령, 포항, 영주·문경을 중심으로 대도시관광축, 역사·해양관광축, 백두대간관광축, 낙동강관광축으로 구성
- 문화산업에서는 대구, 경주, 안동을 거점으로 하며, 구미를 부거점으로 설정
 - 문화산업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대구와 구미는 문화콘텐츠 비즈니스지대로, 경주와 안동은 문화리소스 창작지대로 특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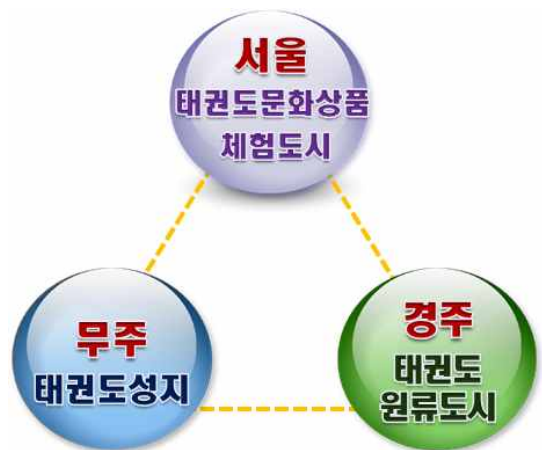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 대구경북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자!

4 주요 전략사업

1. 경주 · 동해안권 : ‘화랑=태권도’ 글로벌 브랜드화

■ 10년 후 한국관광의 리얼 아이콘은 태권도!

- 태권도는 전 세계 수련인 수가 7천만명 이상인 글로벌 스포츠이자 국가 대표 브랜드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태권도원류 도시인 경주의 글로벌 마케팅 필요
- 세계태권도연맹(WTF) 본부 유치
 - 2011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계기로 태권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간직한 경주에 WTF본부를 유치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태권도의 고향 도시 브랜드 창출
- 경주 태권도 성지 마케팅
 - 관광상품화 : 관련 유적 연계
 - 관광자원화 : 동해안 일주 화랑가도 조성
 - 문화상품화 : 창작공연 기획, 게임, 영화드라마 제작, 관광상품개발 등
- 대한민국 초광역 태권도 관광벨트 구축
 - 현재 추진 중인 무주태권도공원은 대한민국 태권도성지로, 경주는 태권도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태권도의 원류도시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태권도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트윈프로젝트로 추진
 - 향후 서울(태권도 공연 및 문화상품 체험도시) ~ 무주(태권도 성지) ~ 경주(태권도의 원류 도시)의 초광역 태권도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태권도를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



▲ 대한민국 초광역 태권도 관광벨트 개념도

■ 태권도 공연관광은 재미와 감동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태권도 창작공연 기획
 - 보문관광단지 내 최대의 극장식 무대를 갖춘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국제적 스포츠인 태권도 발상지로서 경주에 대한 브랜드 홍보와 야간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 신라 정체성이 가미된 난타 형식의 창작 공연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 선덕여왕, 아사달과 아사녀, 김유신, 화랑무예 등
- 세계문화유산극장 조성
 - 일본 아사히신문이 운영 중인 세계유산극장을 벤치마킹하여 전통문화자원과 현대 공연예술을 접목시켜 문화창조 공간 개발
-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체 창업 지원
 -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공연장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시내순환관광업
 - 관광객편의시설업 : 관광극장유희업, 관광유희음식점업
- 장기사업 :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아트팩토리로 리모델링 후 국립 시설화
- 연계사업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조기추진, 도심 역사경관 정비와 문화지구 지정, 보문관광단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화랑(태권도)가도를 걸으며 한국문화를 배우며 체류

- 동해안 일주 화랑가도 조성
 - 부산(UN평화공원)~울산(신불산)~청도~경주~포항~영덕(블루로드)~울진~동해~속초(화랑 영랑호)~강릉(낭만가도)
 - 향후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및 문화체육관광부 해파랑길과 연계
- 외국인을 위한 '태권도 가도' 조성
 - 자전거길, 도보길, 동해안길, 여왕길, 남산길 등 다양한 스토리와 형식을 적용한 태권도 관련 성지순례 코스 개발
 - 단석산, 부산성, 남산, 석굴암 금강역사상, 쾌릉 무인석, 모전탑, 선무도, 화랑도 등

- 방문객의 이용 편리를 위한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 → 도로 정비, 내비게이션 해설체계, 마이크스테이션 등
- 골굴사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연계 상품 개발
 - 기존 선무도체험 위주에 벗어나 태권도 성지와 가도를 접목한 외국인용 체험 관광상품 기획
- 기존 청소년 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청소년화랑문화학교 설립
 - 종합안내소, 레스토랑, 카페, 체험관, 도보여행객 쉼터 등
- 청도 신화랑 에코트레일 조성
 - 신라 화랑의 정신사상인 세속오계와 운문사, 운문산군립공원 등을 연계한 문화·생태 탐방로를 조성
 - 특히 운문산군립공원을 중심으로 경주~울주~청도를 연결하는 산악 탐방로와 관찰데크, 방문객 센터, 전망대 등을 설치

■ 천년고도 경주, 지역특화 국제회의 연중 개최

- 경주 국제회의 도시 지정 및 세계관광기구(UNWTO) 한국총회 경주 유치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존 호텔컨벤션시설을 활용하여 경주시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
- 글로벌 MICE 브랜드 발굴과 육성
 - 국제천년도시재생포럼, 국제T20도시포럼, 글로벌명인포럼, 국제온라인관광클럽인대회, 국제청소년교류박람회 등
- 지역기반형 컨벤션 기획업 육성 및 컨벤션 관광 수용태세 확립
- 장기사업
 - 경주컨벤션기념공원 조성
 - 경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연계사업 : (가칭)대구경북컨벤션뷰로 설립

■ 동해안은 세계 태권도인의 심신을 치유하는 최적의 장소로 탈바꿈

- 낙동정맥 산림테라피 탐방로 조성
 -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청도 운문산 자연휴양림
 - 산림해양치유센터 조성
- 테마형 숙박시설 조성
 - 동해안 한방체험펜션단지 조성
 - 전통민속마을 활용 한방체험 프로그램 개발
- 기존 자원 리모델링
 - ‘칠성보’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경주 별빛기행, 영덕 야간기행을 음양오행 근거의 이색 테마화, 경주 첨성대, 영천 보현산 첨성대 ‘칠성보’체험 공간 조성
 - 경주 허브랜드의 허브테라피 핵심 거점화

■ KTX 신경주역, 경주화랑역 전환 검토

- 지역의 문화와 상징을 알려주는 문화네이밍 전략의 일환으로 KTX 신경주역의 명칭을 경주화랑역을 전환할 것을 검토
 - 프랑스 리용은 지역 출신의 세계적 문인인 썬뉘베리의 이름을 따 리용 사똘라스 국제공항의 명칭을 리용 썬뉘베리 국제공항으로 개칭

■ 강원, 울산, 부산과 연결되는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 강원도 설악산, 부산국제영화제, 울산 현대자동차 등과 연계
- 동해안 크루즈, 해파랑길 등 연계 관광상품 개발

경주 · 동해안 외래 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
충분히 가능하다!

2. 경북 북부, 韓·江·山을 함께 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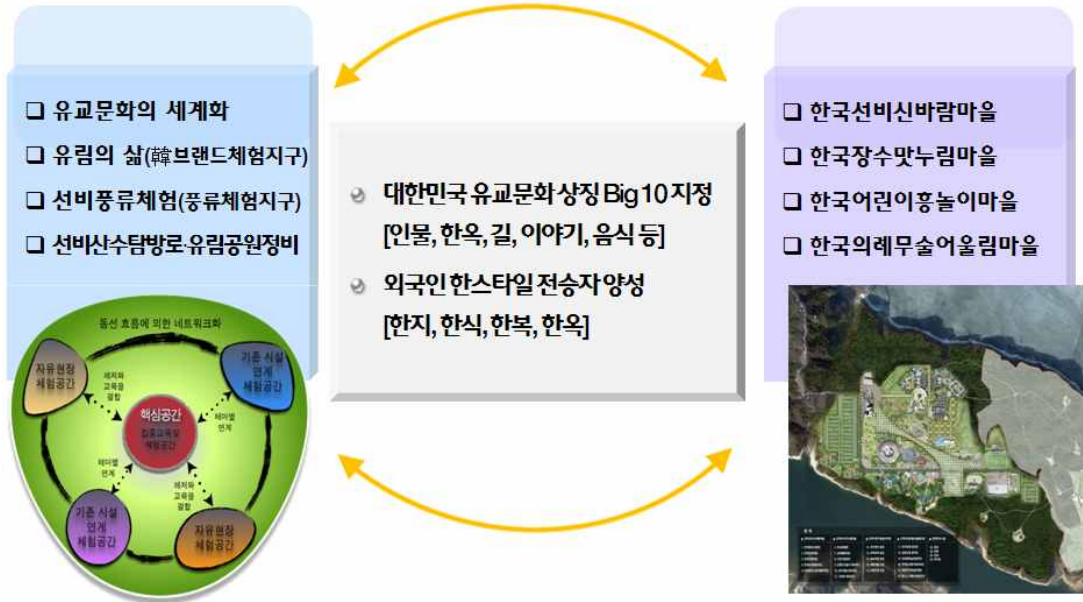
■ 국제 유교문화 허브 구축 : 풍류(멋과 흥), 한스타일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안동 3대 문화권)
 - 세계유교문화박물관 : 세계유교역사관, 한국유교역사관 등 한·중·일 유교사상 집대성
 - 세계유교문화컨벤션센터 : 세계유교문화 포럼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회의·전시회·이벤트 등을 위한 복합시설
 - 선비산수탐방로 조성 : 수립감상형 탐방로, 수변감상형 탐방로
-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영주 3대 문화권)

구분	안동지구	영주지구
도입 시설	① 한국선비신바람마을 - 한국문화대광장, 한국선비서원, 한국전통정원 등 - 한국선비예술극장, 한국선비스토리텔러극장 ② 한국장수 맞누림마을 - 한옥체험촌, 퇴계명상센터 등 - 한식체험테마파크, 가양주테마파크 ③ 한국어린이 흥놀이마을 - 개구쟁이광장, 무럭무럭광장, 솜씨자랑광장, 바른생활서당, 전통인형극장 등 ④ 한국의례무술어울림마을 - 국가의례대극장, 한국문화실경공연장, 한국무예체험관 등	① 한국문화 R&D지구 - 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산업관, 한문화전시관 - 한음악스튜디오, 풍물공연장 등 ② 전통숙박지구 - 전통호텔, 전통음식촌 ③ 전통문화지구 - 마장무예장, 국궁장 - 전통인형극장, 전래동화 4D상영관 - 풍물놀이, 탈춤 등 마당놀이 오픈공연장

- 대한민국 유교문화 상징 BIG 10 지정 사업
 - 인물 : 퇴계 이황(한국 지폐 1,000권 주인공)
 - 고서 : 음식디미방(최초의 한글조리서)
 - 관혼상제 : 관례(성인식), 혼례(전통혼례), 상례, 제례(불천위)
 - 고택 : 온돌 등

- 외국인 한(韓)스타일 전승자 양성(새마을 운동 세계화 연계) : 한지(문경, 안동, 청송), 한식(전통주 포함), 한복(명주, 안동포), 한옥(건축, 디자인)



■ 백두대간 청정자원의 비즈니스화

- 백두대간 슬로 관광지대 조성
 - 백두대간 슬로우 관광체험 코스 및 상품 개발 : 슬로시티(상주, 청송), 슬누리느림보세상(청송), 산촌문화누림터(영양), 슬로푸드(영양 음식디미방, 슬로푸드스쿨), 백두대간 문학가도
- 백두대간 관광관문지대 조성
 -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상주), 레포츠체험·옛길(문경), 인삼·소백산 자락길(영주)
- 백두대간 에코거점지대 조성
 -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봉화),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예천, 영주), 녹색문화 상생벨트(예천)
- 백두대간 청정생활체험 기반 조성
 - 백두대간 무병장수 체험마을 : 특산물(오미자, 인삼, 산삼, 송이), 문화(도자

- 기, 용기, 보부상), 생태(금강송, 피톤치드)
- 백두대간 웰빙온천 특화 : 예천, 영주, 안동, 상주, 청송, 의성, 문경

■ 풍류가 흐르는 낙동강 살리기

- 낙동강 신(新)나루체험 거점지대 조성
 - 안동 의촌나루, 예천 삼강나루, 문경 화포나루, 상주 회상나루
- 낙동가람 풍류가도 조성 : 가칭 ‘낙동미로(樂動美路)’
 - 풍경소리, 비봉산 푸른 문화길(의성), 상주 투어로드 연계
 - 낙동강변 들판길(신규), 강변 산악레포츠 탐방로 등
- 낙동강 부활 거점지대 조성
 - 녹색상생문화벨트(예천), 낙동강 이야기나라(상주)
- 낙동강 고대국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콘텐츠(게임) 개발
 - 의성 조문국, 상주 고령가야, 안동 기저국 등

■ 충북, 강원 남부권과 연결되는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 충주호, 단양팔경, 청풍명월, 영월 등 자원 연계
- 백두대간 야생체험, 단종애사, 백두대간 비경체험 등 상품 개발

한국의 전통적 삶 · 문화 · 자연을 체험하는 Little Korea

3. 대구권 : 매력적 도시문화 관광지대로!

■ 지방 최고의 공연문화도시로 육성하자!

- 공연문화도시 기반 강화
 - 공연창작파크 조성 : 공연의 기획 · 창작 · 제작 · 보관 기능 일괄 지원
 - 공연콘텐츠마케팅전담센터설립 : 티켓 매니지먼트 및 유통 합리화 지원
 - 수성문화예술지구 조성 : 수성유원지 리모델링

- 대표 공연축제의 세계화 : 대구뮤지컬페스티벌, 대구오페라축제

■ 비즈니스관광 기반 구축 및 상품개발 : 의료, MICE, 스포츠, 패션

- 대구형 의료관광 브랜드 확립
 - 대구의료체험프로그램 존 조성 : 약령시와 도심골목 연계 및 주말 상설화
- 글로벌 MICE 브랜드 발굴 및 육성
 - 글로벌지식경제포럼, 국제의료박람회, 3대문화권박람회 등
- 대구 스포츠관광 활성화
 - 국내 청소년 스포츠 리그 집중 유치
 -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지속 유치(아시안게임, WBC 등)
- 대구 패션뷰티관광 특화 발전
 - 패션뷰티투어 상설체험장 조성 : 도심 노후 상가 리모델링
 - 지역 대학과 연계한 운영요원 양성

■ 부족한 관광자원은 주변 도시와 연계 : 팔공산, 가야문화, 해인사 등

- 팔공산 광역관광벨트 구축
 - 팔공산 거점관광자원 조성 : 삼국유사 가온누리, 팔공산 문화관광지 리모델링, 팔공산 순환 하이킹트레일
 - 팔공산 특화 관광상품 개발 : 팔공산 템플스테이 특화 콘텐츠 개발(사찰음식, 승마, 한방, 트레킹 연계), 팔공산 와인트레일 및 엑스포 개최(영천~경산~청도), 호국평화체험 상품 개발(칠곡~군위~대구~영천~경산)
- 가야문화도시 트라이앵글
 - 가야문화 거점 관광자원 조성 :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고령, 성주), 무흘구곡 관광자원화(성주, 김천)
 - 근교형 산악자원 개발 : 테마 자연휴양림 조성, 가야산 주말산장 조성 등
 - 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 : 대구~고령~성주~합천 연계

- 네트워크형 관광 기반 구축
 - 청정 농촌관광 체험 : 주말농장 조성
 - 지역 브랜드 연계 체험 : 직지사 스토리텔링, 구미 박정희, 청도 새마을 등

■ 먹거리, 살거리, 야간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도시 만들기

- 야간관광 거점자원 육성
 - 대구 대표거리 조성 및 관광자원화
 - 대구 앞산의 주야간 조망명소화
 - 내외국인 상설공연장 조성
 - 야간 옥외공연과 거리예술이 넘쳐나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 야간 수용태세 개선
 - 야간 웰빙 체험상품 운영, 주요 자원 야간연장운영
 - 야(夜)시장 운영(도심재래시장 요일별 야간운영 등)

■ 경북, 경남 북부권과 연결되는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 팔만대장경, 우포늪, 수승대 등 자원 연계
- 대한민국 세계유산 체험, 양생한방체험투어 등 상품 개발

대구를 지방 최고의 공연문화도시로 만들자!

4. 대구경북인이 변해야 관광객이 몰려온다!

■ 사람이 최고의 관광자원 :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

- 세계 속의 대구경북 자긍심 회복 캠페인(대학 연계)
 - 우리 지역 유무형 자산 알고 소개하기
 - 우리 지역의 명소 알고 소개하기
- 미소 짓는 대구경북인 캠페인 시행(언론 연계)

- 찾아가는 캠페인(대형 식당, 재래시장, 쇼핑시설 등)
- 방송 캠페인 정례시행
- 외국인 응대 서비스맨 글로벌 응대 서비스 마인드 함양(공공기관 연계)
 - 관공서, 택시기사, 식당 상대 글로벌 매너 교육
 - 택시 내 주요 언어별 서비스 카드 비치

■ 내생적 발전기반 마련 : 대학 연계 인력양성, 창업 지원

- 공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1인 예술창조기업 육성, 대구경북 문화·예술·관광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공연 크리에이티브 인력 양성,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나이트 가이드
 - 실버 지역문화 전문모니터 위촉, 실버 하우스매니저, 실버 문화관광해설사
- 대학 연계 인력양성
 - 관광통역안내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한방의료통역사, 한방관광코디네이터, 힐링관광전문가, 대구경북컨벤션기획가

■ 조직혁신으로 대구경북 문화·관광산업 육성

- 거점지역별(경주, 대구) 관광마케팅 조직 구성
 - 대구도시마케팅본부 또는 대구컨벤션뷰로 기능 강화
 - 경주 관광마케팅전담기구
- 주요 도시별 문화·관광 전문 인력 채용 확대
- 기존 관광협의체 활성화(동해안권, 북부권)
 - 중복사업 및 우선순위 검토, 자원확보 공조, 광역연계상품 개발
- 기존 조직의 전문화
 - 대구문화재단 : 기획, 조정 능력 강화 및 전문화

작은 미소와 친절이 행복한 관광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 4 장



격조 높은 대구 경북인



격조 높은 대구 경북인

I.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

① 현황과 정책동향

1. 교육 분야의 중요성

■ 지역인재 양성의 기반, 초중등교육

- 경쟁력 있는 초중등 교육은 지역주민의 중요 관심사이자 “정주 여건”의 중요 요소
- 타지에서의 인구 유입이 미미한 현 상황에서, 지역의 아동·청소년은 미래의 지역주민으로 향후 지역발전을 책임질 인적 자원
 -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 투자는 곧 미래 지역경쟁력에 대한 투자
- 지역대학 역시 여전히 지역출신의 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편
 - 초중등 교육의 수준이 지역의 고등교육 경쟁력으로까지 연계

■ 지역 발전의 핵심 원동력, 대학

- 예전의 국가 간 경쟁 시대에서 이제는 지역 간 경쟁으로 구도 변화
 - 대학은 지역 발전의 “핵”으로, 모든 혁신창출 요소들이 결집
- 대학의 기술혁신 자금·인재 클러스터링 기능 강력 :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 (예) 영남대 : 2009년도 연구개발 관련 국비지원액 총 1,019억 원 확보

- 대학의 지역 내 고용·소비창출 비중 확대
 - 서울을 제외한 국내 최대의 대학 집적지(13개 대학 입지)인 경산의 경우, 총 인구의 약 70%(15만 명)이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관계

- 글로벌 교육서비스는 헬스케어 등과 함께 향후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신성장 선도(leading) 산업⁶¹⁾의 하나

■ 평생교육의 수요 및 중요성 증가

- 2000년대 들어 학령인구(초·중·고 및 대학) 감소 및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교육수요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고령자 등 다양한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

* 대구 평생교육참여자 : 2015년경 38만명 수준
(대구경북연구원 2010년, “대구 평생교육발전 종합계획”)

▼ 대구경북 지역의 학령인구 및 고령인구(65세+) 추이

(단위 : 천명)		연 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학령 인구	대구	초	219	163	121	108	92
		중	104	104	78	59	53
		고	123	112	93	66	56
		대학	189	139	140	111	79
	경북	초	222	162	120	104	94
		중	104	95	72	55	48
		고	129	100	86	60	50
		대학	188	134	129	106	75
고령인구 (65세+)	대구	148	244	298	365	460	
	경북	316	418	454	506	590	

* 자료 : 통계청(2007),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 사회발전, 직장이동 및 경력전환이 빈번해지면서 재교육 수요 증가
 - 전직, 재취업 등을 위해 다양한 재교육 필요성이 증가
-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평생교육 대두 :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복지 수요 증가

61) 대구경북 지역의 앞으로의 신성장산업군 중에서,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생태관광 등이, 지식제조업 분야에서는 태양·연료전지, 해양심층수, IT융합 등이 선도(leading) 산업군으로 분류됨 (대구경북연구원, 「대경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2010)

- 교육 소외계층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필요성 증대
 - * 경북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학력이 낮고, 비문해자 비율이 높은 실정
- 지식의 자산화, 지식기반사회 형성
 - 새로운 생산적 지식수요 급증
 - 대구의 지식경제도시 지향

2. 관련 정책동향

■ "주입식 교육 탈피" 유도를 위한 입시제도 변화

- (대학입시) 입학사정관제 도입·확대(전체 대입자의 10% → 15%), 수시전형 확대
 - 수능 등 학력 중심에서 학생 잠재력(수행과정에서의 능력 함양) 중심으로 인재상 전환 중
- (고교입시) 사실상의 고교입시 부활(전기·후기의 2단계로 구분), 자기주도학습 전형 도입
 - 학력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상 설정을 통한 중등 교육과정의 다양화 유도
 - 특목고 등 우수고교 진학을 위한 기존의 각종 "스펙 쌓기" 및 사교육 의존성의 완화 목적으로 실시

■ 교육 선도모델의 전략적 육성

- 현 교육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들을 검증·개발하여 전체 학교에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고교다양화(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공립고), 교과교실제, 교과중점학교 등
 - 이들 선도모델을 통해 우수 사례들을 확보한 후 일반화할 계획

■ 대학 구조조정 및 질적 도약 추진

- 그 간의 양적성장 위주 대학교육 정책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공급 과잉문제에 대응하고자 대학 구조조정 추진
 - 국립대학 발전계획('00), 대학 구조개혁방안('04), 국립대학 법인화('05) 등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부족 및 사회적 요구와의 괴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 추진
 - BK21('99~'12), 대학경쟁력 강화방안('03)

■ 연구-교육의 이원화 등 대학의 전문화 유도

- 연구중심·교육중심의 이원화된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특성화·전문화 유도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08),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08)
-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 기여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NURI사업(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 '04~'08), 대학 특성화 추진방안('05)

② 문제점 진단

■ 지역 교육 경쟁력의 심각한 약화

- 수능 등 지역의 학업성과지표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 :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은 옛말이 된지 오래
 - 반면,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월 25만1천원)은 서울, 수도권 다음으로 대구가 전국 최상위권
 - (원인) 공교육 수업의 전반적인 질 저하, 지역 내 교육격차 심화(수성구 vs. 그 외 지역), 특목고·국제학교 등 상위권 우수학교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 정책 등으로 인해 지역 전체적인 학력부진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흡
- 지역 대학의 위상 및 경쟁력의 대폭 약화
 - 과거에는 연세대·고려대와 비슷한 정도의 위상을 지녔던 경북대, 지금은 일개 지방대의 하나로 전락
 - * 전국 대학평가 순위 : 경희대(7위), 인하대(10위), 아주대(13위), 서울시립대(16위), **경북대(18**

위), 부산대(20위), 충남대(22위), 전남대(24위) (2010 중앙일보 대학평가)

- 대학교육의 공급과잉, 수도권대학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한 입학생 수준 저하

* 경북대 학과별 합격 예상점수 : 수십 년 간 지속 하락(1985년~2003년)

○ 교육 경쟁력의 전반적 약화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 초중등 교육의 약화는 대학 공급과잉 및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 등과 맞물려 지역 대학 입학생의 수준이 하락
- 이러한 현상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저하 및 졸업생의 수준 하락, 지역 대학 생 취업난 및 지역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연결
- 결국 지역 교육의 약화는 지역경제 및 산업의 둔화, 정주여건 약화 등 지역 주민의 삶에 다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

■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 및 취업난 심화

○ 단계별 인재 유출 현상 가속화

- ① 고교 졸업 시 수도권 대학 진학, ② 지역 대학 입학 후 편입을 통해 수도권 대학 진학, ③ 대학 졸업 후 수도권 기업 취직
- 우수대학 입학 또는 좋은 기업 취직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생각 보편화 : 지역의 정주여건 약화

○ 2006년 이후 전국 최하위 수준의 대졸자 취업률

- (2009년 취업률) 전국 평균 68.2%, 대구 65.2% 경북 65.6%
- 취업 소요기간도 전국 최장(영남권 11.3개월, 수도권 7.9개월)

■ 지역에 필요 인력공급 기능 약화 : 신규 인력공급 및 기존 인력 재교육

○ 지역 대학 졸업생 - 지역 기업 간 인력수급 미스매치

- 지역 대학 졸업생의 대다수가 수도권 기업으로 취업 희망
- 결과적으로 지역 대졸자의 미취업률은 높고, 지역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 심각

- 산업체 재직자 및 CEO 대상 직무재교육 부족
- 전문계고 졸업생의 과도한 대학진학률 :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부족
 - 남들 다 가는 대학 나도 가고 보자, 대학 안 나오면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식의 사회 분위기로 인한 “묻지 마 진학” 보편화
 - 결과적으로 지역 기업은 실무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학생은 대학에는 갔지만 졸업 후 취직을 잘 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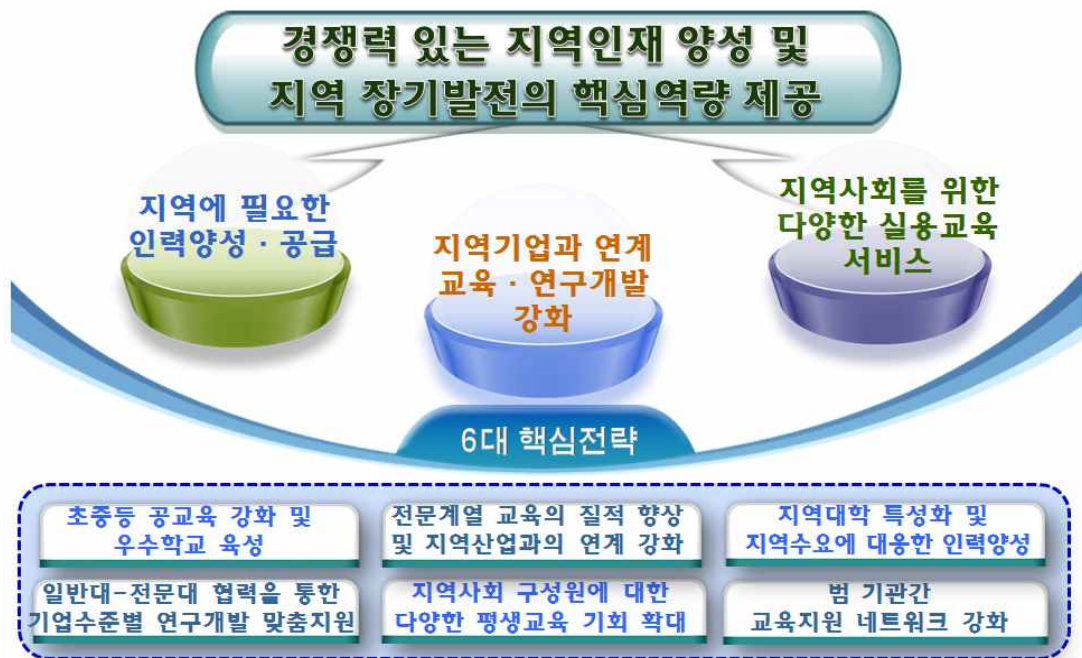
■ 지역사회 · 지역기업과 단절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

- 지역 대학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다수는 학술논문(SCI중심) 생산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순수 학술연구 성격
 - 지역 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등 산학협력은 우선순위 낮음
 - * 현재 대학평가, 교수업적평가의 가장 큰 기준이 학술논문 실적
 - 지역 대학의 존재 목적 및 대구경북 지역의 열악한 기업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기업과의 실용적 연구개발 확대가 시급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 프로그램 · 인적자원이 대부분 재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제공
 - 대학은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면서도 지역사회 기여도는 낮음
 -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 개방 필요
 - * 전국 7개 대도시 중 대구의 비문해자 비율(15.4%) 최고
 - * 낮은 경제활동참가율(59.0%), 높은 실업률(4.3%) ('09 대구) :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평생교육 필요

3 비전과 전략

1. 비전

- 교육 분야의 비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장기발전의 핵심역량 제공”을 제시



▲ 교육분야 비전-목표-전략

2. 목표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목표
 - 지역에 필요한 인력양성·공급
 - 지역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교육 강화
 -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용교육 서비스 제공

3. 추진전략

-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
 - 초중등 공교육 강화 및 우수학교 육성
 - 전문계열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
 - 지역 대학 특성화 및 지역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 일반대-전문대 협력을 통한 기업수준별 연구개발 맞춤지원
 -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 범 기관 간 교육지원 네트워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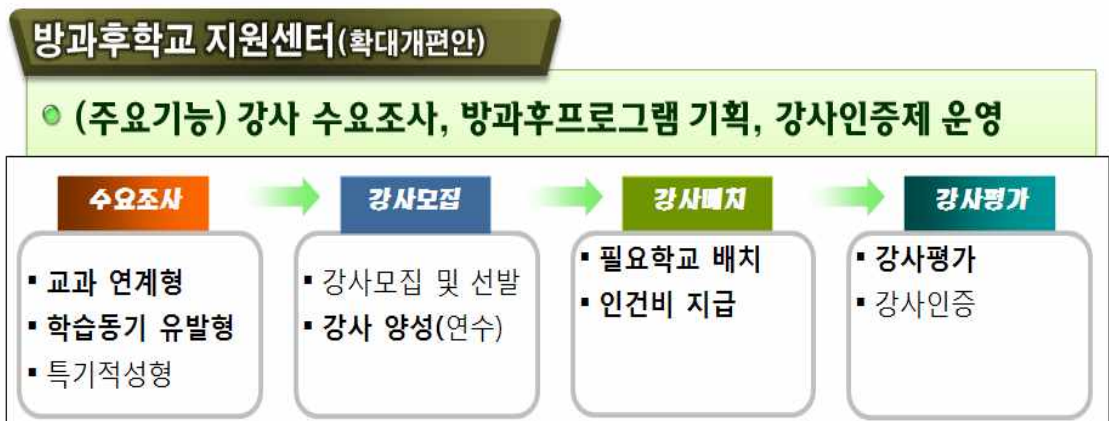
▲ 생애단계별 교육목표 및 전략

4 주요 전략사업

1. 초중등 공교육 강화 및 우수학교 육성

■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현황)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완화를 위한 중점 정부정책이면서도, 현재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규교과 수업과 별 차이 없는 중복적인 내용으로 각 학교 책임 하에 운영 중
 -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아 원래 의도한 사교육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력기반 형성 및 미래사회의 전인적 능력 함양을 위해 정규교과와 함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방과후프로그램 확충이 필수적
 - (대책)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확대 개편으로 지역 내 각 학교별 수준과 필요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지원
 - 주요 기능 :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유형별 수요조사, 프로그램 기획, 강사모집 및 선발, 학교별 강사 배치 및 총괄 관리
- * 현재는 지원예산관리 및 기본통계 취합 기능만 수행 중(전담직원 1인)
- 초등저학년은 “방과후 돌봄” 기능도 강화해 들어가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확대 개편안

■ 자율형 고교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우수고교 육성

- 고교 다양화, 교과교실제 등 현재 추진 중인 교육선도모델 각 지정학교로부터 우수사례들을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지원단 운영
- 자율형 사립·공립고, 기숙형 공립고 등을 지역의 우수 명문고교로 육성
 - 사교육에 매달리지 않고도 보통 시민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공교육 수준을 선도적으로 제고

2. 전문계열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 지역특화산업 연계형 마이스터고 육성 및 전문계고 현장실습 강화

- 공연문화, 의료·건강, 게임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우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특목고)로 육성
 -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상 중인 “전문계고 정예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산업의 주관부처와 연계해 지원 확대
 - 향후 해당분야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우수 실무인력 양성
- 전문계고 현장실습 강화
 - 고급화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실습 교육이 매우 중요
 - 학교(교육프로그램 기획) - 지역기업(현장학습 공간 및 지원인력 제공) - 지자체(현장학습 가능 업체 선발 및 행정·재정적 지원)간 협력을 통해 우수 전문계고의 현장교육 강화

■ 전문계고·전문대 연계교육 체계 구축

- 전문계고·전문대로 이어지는 질적 수준의 동반 추락 및 그 결과인 수준 낮은 산업현장인력 배출 문제의 해결 필요
- 전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자재 및 지역 기업과 연계한 현장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개방, 전문계고에서 충분한 수준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3. 지역 대학 특성화 및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 지역 대학의 특성화 : 연구중심형 vs 교육중심형

- 대학의 특성화는 입학생 충원 및 졸업생 취업에 유리⁶²⁾
- 경북대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심각하게 약화된 현실 하에서, 지역대학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대학별 특성화”가 필수적
- (일반대) 크게는 연구중심형과 교육중심형(인재양성)으로 구분하고, 교육중심형은 각 대학별 주력 분야에 맞게 보다 세분화
 - (연구중심형) 충분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대표 대학들
 - (교육중심형) 고급기술인력, 특화인력(예: 대구한의대), 현장중심 기능인력 등
- (전문대) 공학계열, 보건·의학계열, 예체능계열 등으로 특화해 지역 현장인력 양성에 주력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우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지역 발전을 이끌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관련 기초연구기관(대학)이 필요
-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우수 대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의료, 신소재, IT 등 핵심적인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으로 육성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안)

분야	중점 육성대학(안)	비 고
의료·바이오	DGIST	뇌연구원 유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중심센터 역할 - 지역 내 기존 대학병원 및 POSTECH 등 우수대학 공동 참여 - 사회복지·재활분야 특성화 대학(예:대구대)도 참여
금속·신소재	POSTECH	지역 중점산업의 다변화 등 지원 :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연계
IT 융복합	경북대	경쟁력 있는 전자공학 및 관련분야 중점 육성

6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2) : 「대학특성화알리미」서비스 실시와 관련한 조사에서, (1) 대학 특성화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일반대 98.3%, 전문대학 96.6%)이 전체학과의 평균 충원율(일반대 91.8%, 전문대 9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특성화 참여 학과의 취업률(일반대 73.4%, 전문대 88.7%)이 전체 학과의 평균 취업률(대학 69.7%, 전문대학 85.6%)보다 높게 나타남 → 대학의 특성화가 신입생 충원 및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지역 내 인력수급 원활화 중개·지원

- 지역의 심각한 인력수급 mismatch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수요 및 공급의 기초 현황 자료를 우선 구축
- (1단계) 지역 기업의 인력수요, 지역 대학·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별 인력양성 및 취업 현황 등을 조사하여 DB화 및 정기적 업데이트
- (2단계) 지역 기업들의 구체적인 인력 수요를 정기적으로 각 대학에 전달, 그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대학 컨소시엄 등을 통해 수요-공급처 간 조율

■ 동종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주문식 교육 확산

- 주로 수도권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문식 교육(영진전문대 등)이 대구경북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확산되도록 할 필요
 - 지역 기업은 입사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 확보
 - 대학생은 졸업 전에 직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 지역의 각 분야별 중소기업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 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기능을 선별, 해당 분야 전문대(또는 일반대)와 계약을 체결해 체계적으로 교육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가능

4. 일반대-전문대 협력, 기업수준별 연구개발 맞춤 지원

■ (일반대) 우수역량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지원

- 지자체 매칭예산이 투입된 대학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의무 부여
 - * 기업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만족도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실용적 평가지표 비중을 강화
 -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매년 지원예산 조정, 해당 대학에 대한 전반적 평가(각종 지원사업 관련) 등에 반영

○ 산학협력 참여에 대한 보상·유인체계 대폭 강화

- 매년 교수업적평가 및 승진심사 등 대학 내 각종 인사고과에 다양한 산학협력 실적(특허, 기술이전 등)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지자체가 다각적으로 유도

* 산학협력 실적반영비율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각종 대학 지원 사업의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 국내 대학평가(중앙일보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의 반영 및 비중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

* (예) 산학협력 우수지역대학에 대한 사례보고서 등을 매년 해당 중앙부처장, 중앙언론사 대학평가단 등 영향력 집단에 자치단체장 명의로 송부

○ 기업-대학 간 신뢰 기반의 연구개발 장기협력체계 구축

- 서로 다른 지향점의 대학(학술연구)과 기업(구체적인 시장성과)이 만나 실효성 높은 연구개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패키지화된 장기협력체계 도입이 필수적

-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활동*을 대학연구실이 패키지로 연중 상시 지원하는 산학협력체계를 도입·확산

: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기술적 필요와 역량범위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연구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도

* 자문, 강의, 현장지도, 애로기술 해결, 장비지원, 정부연구과제 응모, 공동기술개발 등

■ (전문대) 중견 역량업체에 대한 현장기술 및 실무인력 지원

○ 전문대-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지역의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공정기술 및 현장 실무인력 지원의 대폭 강화 필요

- 이공계 전문대와 지역기업 간 각종 기술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을 현재보다 충분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전문대에 대한 연구지원 예산 비중은 대학 전체의 8.1%에 불과 ('08 대구시)

* 대구지역 대학(11개) 중 7개가 전문대, 공학계열 교수 및 학생 수는 일반대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 ('09, 지방과학기술연감)

- 전문대 교수의 연구보조인력 지원
 - 돕는 대학원생 없이 교수 혼자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대의 활동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보조인력 지원
- * 일반대와 연계해 학부 고학년생, 석박사생 등을 인턴십 형태로 전문대 교수에게 지원 (취업 기회와 연결)

5.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지속적인 직무 재교육 및 전직·재취업 지원

- 전문대 중심의 산-학-관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계속근로”
 - (지역기업) 사내·외를 통한 지속적인 직무 재교육 실시
 - (전문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실무교육·평생직업교육 위탁실시
 - (지자체) 학습이 고용으로 연계되도록 행정·제도·재정적 지원

■ 취약계층 사회통합 지원 교육

- 비문해자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지원교육(한글, 요리, 자녀교육),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지원 등 실시

■ 은퇴준비 및 노년기 생애설계 교육

- (대상) 40~50대 중장년층, 은퇴를 앞둔 직장인, 이미 은퇴한 고령자 등
- (교육내용) 재무, 건강, 여가, 가족관계, 사회참여, 정보/교양 등 성공적인 노후 삶 영위를 위해 다양한 영역별로 미리 설계·준비하도록 교육하고 지원

■ “우리지역 제대로 알기” 프로젝트

- 지역의 여러 중요현황에 대한 대학생 및 일반시민들의 무지가 심각
 - 지역 대학 졸업생의 경우 모르기 때문에 지역에 취업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 →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한 원인
 - 일반시민들의 경우 지역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지역정체성 및 자긍심 약화

- 지역의 대학·지자체·연구원·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종합강좌를 개발해 대학생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교육
 - 지역 주요 역사·문화, 미래성장기회와 관련 현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 산업·경제 현황 및 우수 지역기업, 기타 거시적 중요현황 등

6. 범 기관 간 교육지원 네트워크 강화

■ "초중등 교육발전협의회" 기능 확대

- 법적 의무에 따라 구성만 되어 있는 수준의 현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의장 : 교육감)를 확대 개편해, 지역 내 초중등교육 관련 기관 간의 공동참여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
 - 교육계 원로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지자체·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



▲ '초중등 교육발전협의회' 확대 개편안 (대구시)

■ 대구경북 대학 연합협력체(컨소시엄) 추진

- 대구경북 대학 다수가 참여하는 대학 컨소시엄으로 구성
- 지역의 인력수급 문제, 대학 중심의 지역 장기발전전략 수립, 지역기업 지원 중심의 대학 연구개발 강화 등 지역의 여러 대학 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중요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 (해외사례) “대학컨소시엄 교토”

[개요]

- (성격) 대학컨소시엄 교토 : 교토지역 50개 대학의 연합대학
- (설립시기) 1994년 3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설립
 - 설립 이후 일본의 전국 대학컨소시엄협회의 창설을 주도하고 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발전과 대학 간 협력의 좋은 모델로서 큰 평가를 받고 있음

[주요 사업]

- (대학 간 연계교육사업) 학점상호인정제, 시티칼리지, 대학-고교 간 연계사업 등
- (조사연구사업) 교토지역대학 연구자DB사업, 교토학 및 21세기학 연구, 교직원 훈련사업 등
- (산학관 및 지역 연계 사업) 학생 인턴십사업, 교토기업가학교, 학생벤처스쿨사업
- (학생교류사업) 교토 학생제전, 교토 국제영화제, 예술계 대학작품전, 유학생을 위한 주택보증제도 시행, 기타 국제교류 사업

[운영 및 재원]

- (운영 인력) 각 대학에서 파견된 직원(20명), 컨소시엄 교토 소속 직원(18명)
 - * 파견 직원은 각 소속대학으로부터 인건비 수령
- (재정 조달) 각 대학의 회비(전체의 37%), 사업수입(45%), 교토시 보조금(6%) 등

*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 '대학컨소시엄 대구경북의 설립에 관한 연구', 2006.

■ 산-학-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성

- 지역기업, 지자체, 교육청, 대학, 노동기구를 연결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사업 활성화
 - 각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가, 지역 내 인력수요기관 등 참여

격조 높은 대구 경북인

Ⅱ.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 저출산 ·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여파 확산

-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제로 성장률 도달할 것으로 예측
 - 합계출산률 하락 : 2.1명(1983년) → 1.15명(2009년)으로 세계 최저
 - * 2008년 OECD 평균 1.71명
 - 2020년부터 인구감소 시작 → 2050년 -1.07%에 이를 전망

▼ 고령화 추이

구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생산가능인구 (15~64세)	3,561만명	→ 3,551만명 (↓10만명)	→ 3,130만명 (↓431만명)	→ 2,242만명 (↓1,319만명)
유소년(0~14세)	790만명	→ 612만명 (↓178만명)	→ 552만명 (↓238만명)	→ 376만명 (↓414만명)
(인구대비 비율)	16.2%	12.4%	11.4%	8.9%
노인(65세 이상)	536만명	→	→ 1,181만명 (↑645만명)	→ 1,615만명 (↑1,079만명)
(인구대비 비율)	11.0%	15.6%	24.3%	38.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6

-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3%),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8%)에 진입 예상
 - 2030년 노인인구 비율이 G20 국가 중 4위에 이를 전망
 -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세계 최고 수준
 - * 유럽 · 북미 등 선진국 평균은 25.9%로 예측

- 2010년 대비 2050년 노동인구 37% 감소
 - 노동력 및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국가(중앙·지방)의 사회복지 역량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농후

■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와 복지수요의 다양화

- 다양한 가족 유형 확산 : 핵가족(부부+자녀) 보편화
 - 독신 등 1인 가구, 조손가구, 무자녀 가정(부부가족), 한부모 가정, 이혼·재혼가정 등
-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대 :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
 -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인식 및 기능 저하 → “돌봄”의 사회책임 가속화
-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 외국인 이주자 지원정책에서 탈피 → 다문화주의 차원에서 사회통합 논의
 - * 2009년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돌파, 2050년 10명 중 1명이 외국인

■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선제적 개입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사회투자형 복지 강조
 - 경제성장(생산)과 사회정책(분배)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중요
 - 현금 지급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재편입
- 사회 재설계 추구 : 비용 경감 및 정책 영역 융합
 - 인재 양성, 빈곤층 추락 예방, 여성 노동력 확보를 통해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지식기반경제 운용에 기여
 -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기술의 정책적 영역 융합화
- 정책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현재)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사후지원 → (향후)잠재 취약계층 및 예비 고령자의 소득·건강·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② 현황과 문제점

1. 복지예산 급증 : 지방재정 부담 크게 증가

■ 연평균(2004~2010년) 16.3% 증가(일반예산 6.0% 증가)

- 전국 사회복지예산은 2004년 기준 10.7조였으나 2010년 당초 기준 26.5조로 연평균 16.3% 증가
 - 총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6.0% 상승
- 이로 인해 사회복지예산 비중도 2004년 10.8%에서 2010년에는 18.9%로 1.8배 증가



▲ 사회복지예산 변화 추이

▼ 전국 복지예산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감률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2002~2010년	2004~2010년
총지출	91.1	97.5	98.9	107.1	115.5	112.0	125.0	144.5	137.5	156.7	139.9	5.5	6.0
사회복지	8.6	9.4	10.7	12.9	15.3	17.3	21.7	23.7	24.1	29.2	26.5	15.1	16.3
(%)	9.5	9.7	10.8	12.0	13.3	15.4	17.4	16.4	17.5	18.6	18.9	9.0	9.8

주 : 사회복지예산은 저소득,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보육, 기타(해당과 행·재정비)를 기준으로 집계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기능별 세출예산 총규모 각 연도

■ 대구경북 복지예산 2조원(일반예산의 21.7%), 연평균 20% 증가

- 2010년 복지예산 : 대구 9,189억 원(19.4%), 경북 10,735억 원(24.4%)
- 일반예산 증가율(대구 16.9%, 경북 12.3%)의 1.5배 수준



▼ 대구경북 복지예산 추이(2004년~2010년)

(단위 : 억원, %)

구분	2004	2007	2010	연평균 증감률(04~10)	
대구	일반회계	18,580	26,390	47,421	16.9
	복지예산	2,950	5,572	9,189	20.8
	일반회계 대비 비중	15.9	21.1	19.4	3.4
경북	일반회계	22,018	31,517	44,051	12.3
	복지예산	3,835	6,181	10,735	18.7
	일반회계 대비 비중	17.4	19.6	24.4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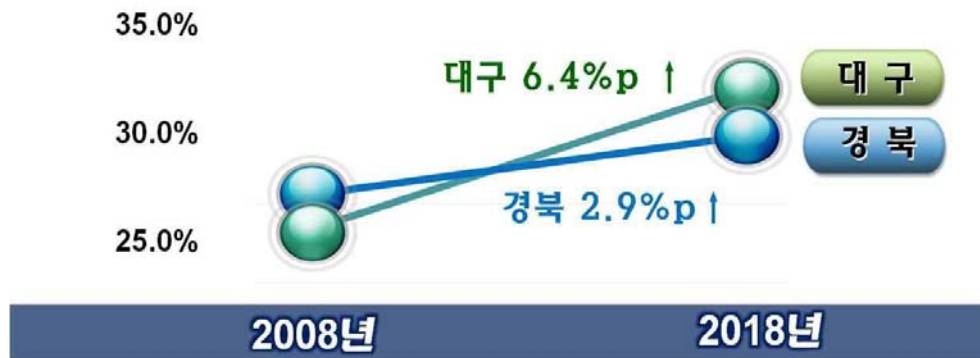
자료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각 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기준

■ 2018년 복지비 : 전체 예산 대비 대구 31%, 경북 29%로 추정

- 2018년 대구경북 복지 수요자⁶³⁾ 규모를 추정한 결과 대구의 복지 수요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경상북도는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대구 : 2008년 대비 65세 이상 인구 40.9%, 기초생활수급자 34.6%, 장애인 24.8% 증가
- 경북 : 2008년 대비 65세 이상 인구 4.1%, 기초생활수급자 10.8%, 장애인 18.2% 증가

63) 지역 복지지출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고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수, 장애인수를 고려하여 추정

- 복지 수요 증가율의 가중평균만큼 사회보장 비율 및 사회복지비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2008년 대비 2018년 복지비 비중은 대구 31.0%(6.4%p 증가), 경북 28.9%(2.9%p 증가)



▼ 대구경북 복지비 비중 증가율 전망

구분	2008년	가중평균 증가율 ⁶⁴⁾	2018년
대구	24.6%	0.260493	31.0%
경북	26.0%	0.11214	28.9%

2. 현금급여 중심 : 사회투자적 지출⁶⁵⁾ 저조

■ 현금급여 비중 : 대구 63.1%, 경북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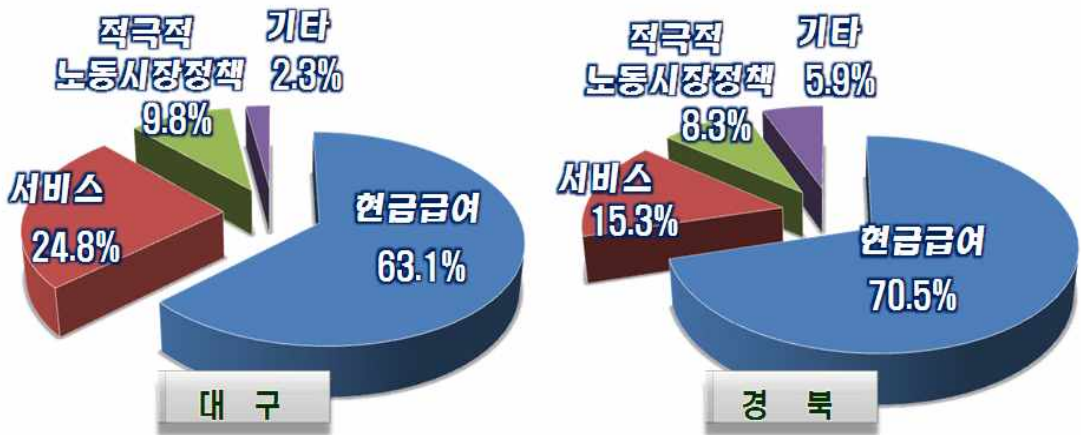
- 복지 지출 항목은 노령, 유족, 장애, 보육,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 주거, 기타 등으로 구성
- 이 가운데 보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⁶⁶⁾, 실업 관련된 것은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
- 각종 수당 및 노령연금, 장애연금, 자녀 양육 보조, 출산·육아를 위한 사회지출은 현금급여로 분류

64) 대구경북 사회복지비 예산 중 복지 수요 관련성이 높고 비중이 가장 큰 네 개 항목의 상대적 크기로 계산(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지원은 장애인, 노인청소년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보육·가족·여성은 14세 이하 인구를 대표 항목으로 보고 상대적 가중치 측정)

65)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66) 직업훈련, 구직지원, 재활서비스 등

-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재활치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 돌보미 지원 등
- 이러한 분류에 근거할 때 대구경북의 복지 분야 세출구조는 지나치게 현금급여 중심(대구 63.1%, 경북 70.5%)이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부문 지출 비중의 경우 현저히 낮게 배분



▲ 대구경북 복지 분야 사업유형(2010년 당초)

- 대구경북의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 비중은 1~4% 수준에 불과
- 교육, 훈련, 고용, 복지 융합화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간 연계 미흡

▼ 대구경북 복지 분야 세출구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	총계	현금급여	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타
대구	918,907	580,028	227,963	89,654	21,261
	(100.0)	(63.1)	(24.8)	(9.8)	(2.3)
경북	1,073,564	757,176	163,970	89,528	62,891
	(100.0)	(70.5)	(15.3)	(8.3)	(5.9)

자료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세출예산서 기준

3. 정책의 중복, 유사한 사업 내용, 지역고유 사업 미미

■ 정부 부처별 유사사업 전개 & 사업간 중복 시행

-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 부처별 산발적 정책 추진으로 집행의 효율성 저하
 - 부처 간 실적주의로 인해 다수의 복지사업 생성과 세분화로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유사·중복사업의 중복수혜로 예산 누수 발생(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 동일한 서비스 대상의 비슷한 사업 혼재 :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편
 - 예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vs. 노인돌봄종합서비스 vs.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vs.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등

■ 지역 고유의 창의적 사업 추진 미흡

- 사회서비스 내용이 전국적으로 유사 :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사업 내용도 유사하여 지역적 차별화 여지 부족
 - 대도시인 대구와 광범위한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경북의 사회서비스 유사
- 대구경북 자체 발굴 사업도 다수 있으나, 소규모, 단기(일회성, 행사성)위주여서 지속적·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편

■ 자체사업 미미 : 지역 간 복지격차 심화

- 대구의 자체사업 비중은 인천의 1/3에 불과
 - 재정 분권이 뒤따르지 않은 단순 행정사무 지방 이양과 국고보조 사업 매칭펀드 부담으로 지역 자체 발굴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 곤란
 - 자체사업 비중 : 대구 4.3%(1인당 1만6천원), 경북 8.5%(1인당 3만4천원), 인천 12.3%(1인당 4만1천원)

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리 부실 : 예산누수

■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 : 중복수혜, 부정수급

- 2006년부터 4년간 복지예산 2900억 원이 누수(연평균 720억)⁶⁷⁾
 - 사망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수당 지급
 - 보장시설 중복 지급
 -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 수령,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과다 지급 등 다수

▼ 예산누수 발생사례(2009)

집행체계	복지주체	정부 (중앙+지방)	서비스 공급자 (시설,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수혜자
예산 지출 부정지급(횡령) / 중복지급 / 부당지출		누수발생 (7.8%)	누수발생 (0.4%)	누수발생 (14.9%)
사업 추진 법규위반 / 부적정한 집행(관리)		누수발생 (5.6%)	-	-
사후 관리 보조금 관리 소홀 / 기금운용의 부적정		누수발생 (71.2%)	누수발생 (0.08%)	-

자료 : 감사원(2009) 자료, 고경환(2009),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 보건복지포럼

- 주민참여 등을 통한 외부통제 차원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정책 모니터링 기능에는 한계점 노출
- 또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서비스 전달 과정의 부작용과 비리 발생
- 이는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구경북 복지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 초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시설 운영관련 평가와 모니터링체계 구축 시급

67) 2009년 감사원 자료

5.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흡

■ 기초조사 미비 : 시책별 지원 대상 · 적용범위 상이

- 차상위 계층은 추상적인 개념 정의⁶⁸⁾로 전반적이고 철저한 기초조사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적용을 위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 미흡
 - 기초 및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시책별로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 적용 범위 상이
 - 2009년 현재 대구광역시 차상위 계층 규모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 저소득 보육료 지원 가구를 제외하면 대략 13,600세대 25,000명으로 추정
 - 경상북도는 270만 주민의 6%인 16만 명을 차상위 계층으로 추계
- 차상위 계층 규모 확인이 불확실하므로 빈곤 확산을 차단하고 저소득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 곤란 → 예방적 복지정책 실행환경 열악

■ 일부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생계, 주거, 의료) 집중 → 소득역전 발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의 복지제도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혜택 쏠림현상 및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 발생
 - 사업별 수급기준 및 급여액 등 지원범위 재조정 필요

6. 복지정책 대상별 문제점 종합

■ 빈곤층 : 사후관리 치중

- 사후관리에 치중
 - 최종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후 관리 수단에 의존하면서 사전 대비 성격의 정책 발굴에 다소 소홀 → 빈곤층의 노동시

6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장 활동 배제와 재진입 역량 약화라는 부정적 결과 초래

- 행정 이원화로 정책집행경로 비합리적
 - 중앙행정처럼 복지와 노동이 분리되어 효과 미흡 → 고용 및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빈곤정책 집행 불가능
- 교육 및 훈련 등 예방적 복지정책 실행환경 열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더불어 차상위계층 규모 파악 부진

■ 노인 : 지역주도 노인정책 미흡

- 지방재정 취약 → 지자체는 국가 급부 전달 통로 역할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은 국가가 제공하는 천편일률적인 급부를 그저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
- 지자체 주도 노인복지사업 미흡
 - 대부분의 예산을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지출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의 대부분이 각종 행사 지원 등 일회성의 단편적 사업 위주로 구성
- 신노년층 대비 마스터플랜 부재
 -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다양한 욕구를 지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인정책 부재

■ 장애인 : 복지체감도 저조

- 탈 시설-자립생활은 장애인정책의 큰 흐름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미흡
-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등 타 지역에 비해 복지 지표 열위
- 장애예방정책의 미흡 :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산업안전교통사고 예방교육, 홍보 등)사업 미진

■ 아동·청소년 : 지자체 정책 사각지대

- 보육지원정책의 이원화(보육 vs. 유아교육)로 정책 및 사업 중복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 중복
 - 주무부처, 행·재정체계, 관리·감독체계, 교사자격, 교육·보육과정 등 제반 영역의 이원화 심화
- 주변정책으로 인식 : 정책결정자의 관심부족, 정책 시행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중요성 저하

■ 다문화 : 통합적·체계적 정책 미흡

- 결혼이민자에 편향 : 예산의 결혼이민자 편중 현상 심각
- 관계 기관별로 산발적인 정책 추진 : 대구·경북 모두 외국인지원 주무부서가 없어 여성청소년가족과, 자치행정과, 국제통상과, 경제정책과, 기업노사지원과 등에서 대상별로 나누어 관련 업무 추진
- 재원의 불안정성 : 매년 외국인 지원예산 증가하고 있지만 국비출처는 복권기금으로 지원되어 불안정

3 비전과 전략

■ 비전과 목표 설정의 기본전제

- 미래세대가 꿈을 키울 수 있는 정책개발
-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서비스 구현
- 자립과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으로의 추락 막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효율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설계



▲ 비전 및 목표

1. 비전 : 소통-통합-준비하는 복지사회

- 대구경북 복지분야 비전은 “소통-통합-준비하는 복지사회”로, 소통과 통합을 통해 보호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 분배적인 것과 성장적인 것을 잘 조화하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를 구현하고 지역의 발전 역량을 더하려는 의지 가시화

2. 목표

■ 예방적 복지(선제성) → 자립성 키운다

- 지역민들이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적응력을 갖추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 고용, 교육을 통한 기회 재분배로 취약계층으로의 추락 예방

■ 효율적 복지(경제성) → 지속가능성 높인다

-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예산 누수가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의 투명성 제고

■ 협력적 복지(통합성) → 사회통합 실현한다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복지로 시너지를 제고하고 공동체 회복

3. 추진전략

■ 고용 확대로 복지의존성 해소

- 적극적 노동을 통해 수급자의 자립 유도
 - 취업·고용지원, 재활·자활 서비스 강화

■ 학습복지(Learnfare)의 일상화

- 학습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급대상자로의 추락예방
 - 보육지원, 직업훈련, 평생교육을 통해 고용으로 연결

■ 예산운용 효율화

- 중앙의 비효율적 성과 평가 지양
- 일회성·전시성 사업 축소 → 지자체의 창의적 사업 확대
- 정책·서비스 유기적 연계 → 부처 간 연계, 유사사업 구조조정, 정책 패키지화

■ 서비스 전달체계의 투명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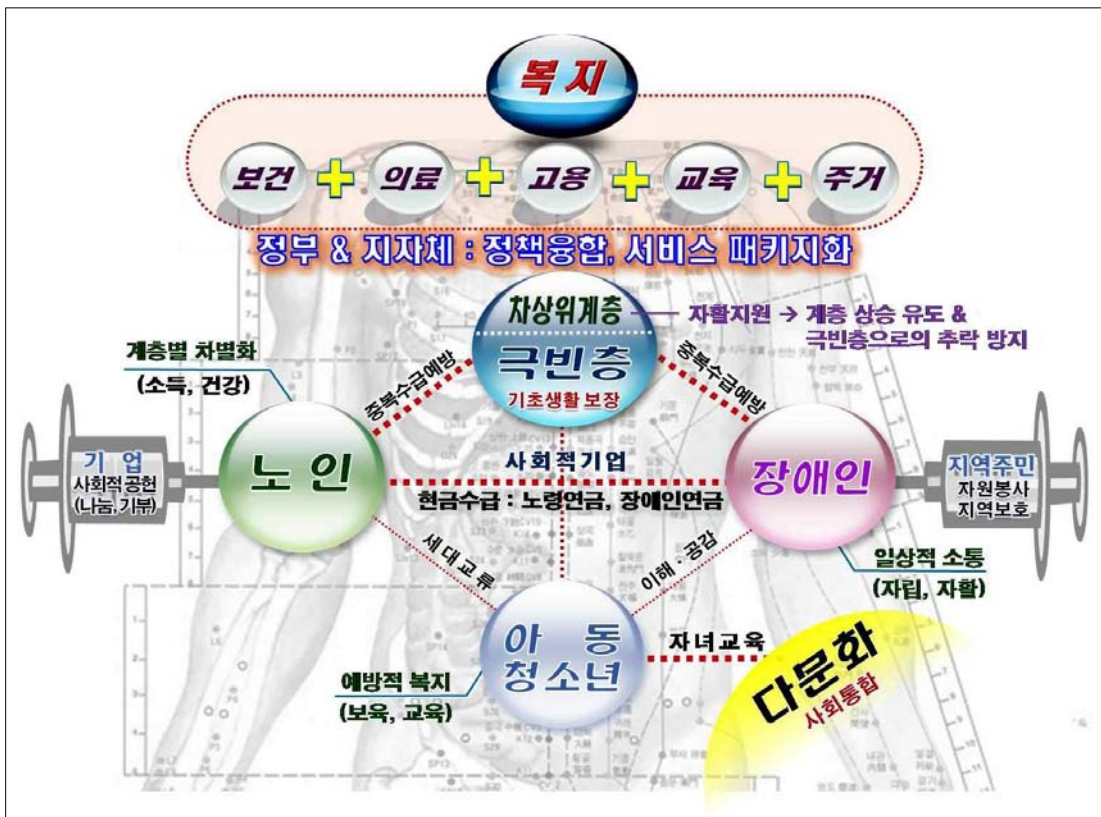
-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정부 : 지자체 재정운용 책임 권한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서비스 공급자 : 투명한 재무회계 시스템 마련
 - 수혜자 : 부정수급 방지 위한 경각심 환기 및 페널티 제도 도입

■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자원을 연계
 - 나눔과 기부,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지역, 계층, 세대간 갈등해소

- 소통, 협력 및 화합으로 연대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자본을 증대



▲ 대구경북 복지정책 연계체계

4 주요 전략사업

1. 핵심전략사업 & 연계사업 개관

-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라 핵심전략사업과 분야별 연계사업으로 구분
- 분야별 연계사업은 복지정책 대상(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별로 전략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구성
 - 저소득층 : 성과 관리형 탈수급 사업⁶⁹⁾ 도입, 21세기형 청년리더 봉사프로그램 운영
 - 노인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 노인복지사업평가단 운영, 노소동락(1·3세대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인 : 대구경북 장애인취업상담센터·고용포털사이트 구축, 대구경북 장애인 정책참여 기획단 설치
 - 아동·청소년 : 영유아 도서관 설치 확대, 아동정책협의회 운영
 - 다문화 : 다문화 지원 사업·인프라 구조조정, 다문화 기여 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지역기반 선진화

▼ 핵심전략사업 및 분야별 연계사업

목 표	추진전략	핵심 전략사업	분야별 연계 사업
예방적 복지	고용 확대로 복지 의존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활성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 수급자 복지수혜기간 일몰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관리형 탈수급 사업 도입 • 대구경북 장애인취업상담센터·고용포털사이트구축
	학습복지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형 조직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 영유아 도서관 설치 확대
효율적 복지	예산운용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도 사회서비스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지원 사업·인프라 구조조정 • 아동정책협의회 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노인복지사업평가단 운영 • 대구경북 장애인 정책참여 기획단 설치
협력적 복지	민간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유통업체 참여 「간병·도우미 전문 봉사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기여 프로그램 운영 • 21세기 청년리더 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과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지역기반 선진화 • 노소동락(1·3세대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69) 취업이나 탈수급(수급자가 최저생계비이상 소득 버는 경우) 등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 지원

2. 핵심전략사업

1 사회적기업 활성화

■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효율적 대안으로 대두
-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빈곤층, 장애인, 노인, 결혼이주 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노동 참여 기회 제공

■ 주요 내용

- 시니어 사회적기업 : 시니어 카페, 시니어 마켓 등
 -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아이템 선정이 중요
 - 아이템이 선정되면 사전 시장 수요조사를 거치는 등 사업을 이끄는 기관장의 사업추진 의지와 전략이 필요
- 장애인 사회적기업
 - 장애가 문제되지 않는 직종이나 업종의 선정과 배치를 통해 노동생산성 확보
- 자활 사회적기업
 -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화 추진
 - 행정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민간위탁사업은 우선적으로 자활공동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수급자 복지수혜기간 일몰제 도입

■ 배경 및 목적

- ‘일하게 만드는 복지’(welfare to work)정책 실현 : 복지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공공급여에 대한 수혜보다 노동을 통해 자립·자활 실현
- 복지예산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용 필요

■ 주요 내용

- 복지 수혜 후 일정 기간 안에 노동을 통해 자활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제공
 - 복지급여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노동 참여 의무화
 - 일정기간 이상(통산 5년) 복지 수급자로 잔류 불가능
-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
- 복지 수급자를 노동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제공 기관 : 정부보조금 지급
- 장기수급자 고용 기업 : 세금공제



3 융합형 조직 구성 및 운영

■ 배경 및 목적

- 21세기 복지는 복지에 대한 개념이 ‘협의’에서 ‘광의’, ‘최광의’로 확대
 - 복지 서비스 대상이 ‘사회적 약자’에서 ‘중산층’, ‘모든 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서비스 내용도 ‘최저생활수준 확보’로부터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으로 점차 고도화되어 서비스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예측
- 따라서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 지역사회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체계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여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 방지

■ 주요 내용

- 사회투자 및 예방적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 확보
- 사업 중복 시정,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가능성 제고
- 직업교육·훈련, 평생교육 영역 통합
- 지역 고유의 사회투자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 (예)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 간 연계망 구축(networking) →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4 지역 주도 사회서비스 설계

■ 배경 및 목적

- 중앙이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존 중앙주도의 하향식 사업 전개 방식 극복 필요 → 중앙의 비효율적인 성과 평가 지양
 - 중앙주도의 사업 전개 시 재정지원이 일률적 예산배분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수요에 부합되는 유연한 예산집행이 매우 제한된 구조로 고착
-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기능과 복지관련 자원마련의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앙은 사회서비스 체계와 자원조달을 담당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 정착화

■ 주요 내용

- 지역 수요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 권한 이양 요청
 - 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거나 장애인, 외국인이민자 등 대상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중심 : 예) 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사회서비스 사업 설계 시 고려 사항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맵핑, 참여 주민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참여자들의 욕구에 대한 근로설계,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서비스 연계체계 등

5 예산집행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배경 및 목적

- 지역 복지관련 시설과 개인의 불합리한 서비스 수령, 규정에 어긋난 관행을 검토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설치 필요
-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낭비신고센터 가동 중
 -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행정안전부 종합,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식의 절차
 - 예산관련 제도, 집행 방법 개선을 통해 예산 절약이나 지방세입 증대를 가능케 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공무원, 주민 등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예산 성과금제도 병행
 - 신고에 의존, 가시적 성과 미흡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정급여 관리 강화 및 권리 구제를 위해 2009년부터 내부에 기초보장관리단 설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
 - 향후 기초보장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

■ 주요 내용

- 대구경북은 보건복지부 기초보장관리단 확대 설치에 앞서 자발적인 모니터링 실행 필요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운영비 지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광역의회 조례에 근거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되 민간부문에 위탁 운영
 - 구성 : 시민단체,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업무담당자 등
 - 점검항목 : 예산 배분·전달체계 및 집행실태, 수급 대상자 선정, 지급시기·금액산정 적정성, 수령기관 운영관련 관리감독의 공정성·적정성

6 대형 유통업체 참여 간병·도우미 전문 봉사단 설치

■ 배경 및 목적

- 백화점, SSM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진출하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골목상권 황폐화와 저조한 지역 기여도에 따른 비판 고조
-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지역 사회공헌 유도

■ 주요 내용

-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경제활동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이익의 일정액을 저소득층 복지사업 자금으로 제공
 -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
- 교보 다솜이 간병봉사단 운영 사례 참고
 - 간병사 활동을 원하는 저소득 여성 가구주를 교육과정 거쳐 전문 간병사로 채용한 후 빈곤층 환자 및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 서비스 공급
 - 저소득층 여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건강 회복에도 기여
 - 삼성생명 비추미 산모도우미사업단,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간병도우미사업단 사례 검토



7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과 측정

■ 배경 및 목적

- 최근 계층간·집단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의 물질적 및 비물질적 조건에 따라 지역간 사회적 갈등도 첨예화 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속력이 사회통합성
-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 대한 객관적 작업 미흡
 - 사회통합 관련 체계적인 지표 개발과 그것을 토대로 한 지수생성, 그리고 이를 적용한 실태 분석 부진

■ 주요 내용

- 지역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계량적 접근 시도
 - 사회통합 장애요인에 대한 수치화 작업, 사회통합 통계에 대한 기준 마련
- 지역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 마련
 - 지역간, 분야간 사회통합 장애요인 비교 통해 지역 사회통합 수준 파악
- 대구경북 사회통합성 제고를 위한 목표치 제시
 -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한 현황 분석과 지역예의 시사점 도출
- 지역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척도 마련
 - 지역 사회통합 장애요인 극복방안 모색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도모

3. 분야별 연계사업

가. 예방적 복지를 위한 연계사업

■ 성과 관리형 탈수급 사업 도입

-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 개인의 특성과 조건에 적합한 일자리 연결, 취업 욕구와 목표의식 부족한 대상자 상대로는 자립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가동
- 취업자에게는 정부의 저소득층 수급자 지원정책인 자산형성지원사업⁷⁰⁾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
- 저소득층이 취업할 경우 각종 급여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데, 성과 관리형 탈수급사업에서는 새로운 직장 취업 후에도 3년간 자활특례⁷¹⁾ 보장

■ 대구경북 장애인 취업상담센터 · 고용포털사이트 구축

- 지역재활센터와 직업능력개발센터 부설 장애인취업상담센터 운영
- 취업 희망 장애인과 사업주 연결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 계층별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문해교육(한글교육), 경제교육(노후재테크, 상속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생활교육(컴퓨터, 가전제품 사용법, 은행 이용법 등) 등

■ 영유아 도서관 설치 확대

- 영유아 체험, 교육, 놀이를 위한 차별화 공간 조성(공공시설 활용)

70) 자산형성지원사업(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3년간 10만원 저축 시, 지자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만원을 매칭하여 저축, 3년간 최대 720만원 및 이자 획득 가능)

71) 자활특례 : 수급자가 취업 등으로 탈수급 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의료급여 등 유지

- 엄마와 함께하는 도서관(장난감 대여, 육아상담, 보육 정보제공), voice 자원 봉사활동

나. 효율적 복지를 위한 연계사업

■ 다문화 지원사업 · 인프라 구조조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략적 합병 유도
- 기관별 특성화 → 핵심서비스 개발
- 시·도 조직내 다문화 전담 설치

■ 아동정책 협의회 운영

- 지자체 및 교육청 사업의 경우 시행 부서가 달라 별도의 정책협의체 필요
- 추진부서 및 정책 중복 조정, 정책 모니터링

■ 지역 노인복지평가단 운영

- 시·도 위탁·보조금 받는 복지시설의 노인복지사업 지도·점검
- 노인전략그룹, 전문가, 시설종사자, 회계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우수시설 인센티브

■ 대구경북 장애인 정책참여 기획단 설치

- 장애인 당사자주의 실현 : 시·도 상설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복지정책·계획·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참여 명문화를 자치법규에 반영

다. 협력적 복지를 위한 연계사업

■ 다문화 기여 프로그램 운영

- 장기체류자 출신국에서의 대구경북 홍보사업(민간 친한·대경 대사)
- 다문화가족 새마을지도자 육성

■ 21세기 청년리더 봉사프로그램 운영

- 지역 대학의 우수 학생이 저소득층 재학생에게 공부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파트너십 형성 :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지역기반 선진화

- 교육기관의 전문성 제고 : 프로그램, 인력, 행정적 지원 내실화
- 지역·개별적 특성 기반한 패키지 프로그램 : 출장서비스, 그룹 이수제 운영

■ 노소동락(1·3세대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플레이 시터 : 5~7세 전후 어린이 돌보는 할머니 놀이방(경로당 활용)
- 북 시터 : 저소득 미취학 아동 독서 도우미(지역아동센터 연계)
- 가드 시터 : 취학 아동 등·하교 도우미
- 러닝 투어 시터 : 지역 역사문화관광 자원 활용한 체험 교육

격조 높은 대구 경북인

Ⅲ. 수준 높은 문화기반 조성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 메가트렌드

🎯 지식·정보 중심 + 🎨 감성·콘텐츠 중심의 시대

○ 지식·정보 외 감성·콘텐츠 등의 ‘문화와 창의성’ 이 중시되는 시대

■ 적극적 문화향유 및 자생적 문화커뮤니티 촉진

- 문화적 체험 및 향유욕구 증대로 자생적 형태의 민간 문화활동 확산
- 민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내발적 문화도시’ 지향
 - 이야기(스토리텔링) 중심의 창의적 상상력 표출 확대
- 창작공간, 문화거리, 공공미술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문화와 산업의 통섭 지향

- 경제는 ‘몸통’, 문화는 그 속에 깃들이는 ‘정신’
 - 문화예술적 요소를 통해 상품성 증대 및 고부가가치화
- 문화예술분야의 엔터테인먼트 신규 사업군으로 진출 확대
 - 대기업·영화사의 공연사업 병행, 전문화 가속

■ 장르 간 융합화·다원화로 문화예술 영역 확대

- 영화의 뮤지컬화, 소설의 오페라화 등 장르 간 쌍방향 교류 확대
 - 문화예술 요소들 간, 장르 간 창조적 융합

- 공연예술은 융합시대 소프트파워를 대표하는 경쟁력
- 문학과 공연, 문학과 관광 등 ‘이야기하기’로서 부각

■ 지역 및 국가 간 전략적 제휴 등 국경 없는 문화시장

- 지역 간 네트워크 및 해외 Major와의 전략적 제휴 활발
- 캐나다·싱가포르·중국·홍콩과 함께 세계 5대 공연시장으로 부각
 - ‘한국에서 공연이 뜨면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갈 수 있다’(중앙 SUNDAY)
- 문학의 경우 ‘번역’작업을 통해 전 세계 보급 추세
- 미술은 창작스튜디오 및 국제아트페어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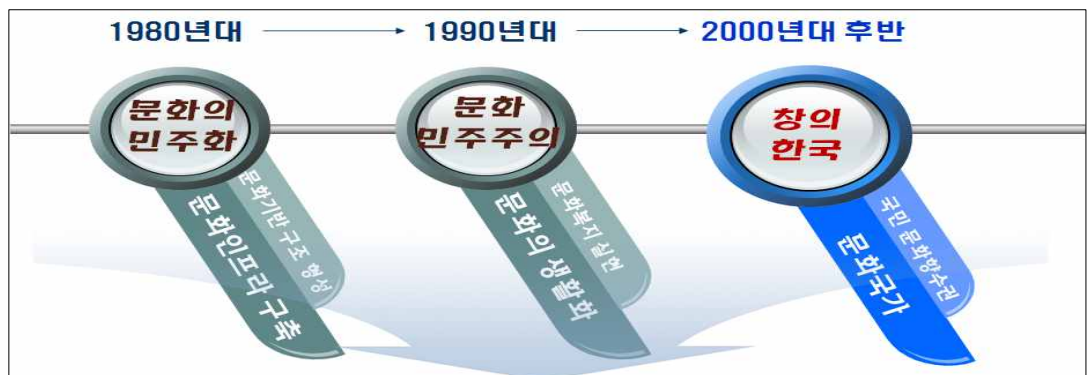
▲ 문화 분야 메가트렌드

2. 정책동향

■ 정부의 문화정책 전개과정

- 1980년대 : 문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둔 문화의 민주화
 - 문화정책의 목표는 민족문화 주체성의 확립, 문화향수기회 확대, 문화 창조력 제고, 문화의 국제화

- 정책의 대상을 전통문화예술 부문에서 다양한 예술창작부문과 문화향유자인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
- 1990년대 : 문화의 생활화에 중점을 둔 문화민주주의의 표방
 - 관리·통제·규제보다는 참여·진흥·조장에 초점을 둔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문화의 생활화에 중점
 - 1990년 문화부의 신설과 함께 현재의 문화행정이 시작되었으며, 국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국가발전과 연계시켜 추진
 -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의 자발적 노력으로 다양화·특성화된 문화예술정책사업 추진
- 2000년대 : 문화관광부, 문화국가와 창의 한국
 -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앞두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진흥에 관심을 두기 시작
 -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부각되면서 이에 따라 문화의 산업화, 즉 문화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기 시작
 - 2001년 6대 국가 전략기술 중 하나로 CT(Culture Technology) 선정
 - 이러한 기조는 2008년 이후 보다 강화되어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초한 문화정책 추진체계로 개편
 - 현 정부는 '신성장동력 22개 분야'에 문화콘텐츠 선정, 문화산업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 표명



▲ 정부의 문화정책 전개 과정

■ 최근의 문화정책 동향

- 정책대상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 장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적·대안적 문화를 중시하고, 예술인에서 시민으로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정책을 직접 집행하거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획과 조정을 중요시
- 국고나 문화진흥기금에의 의존도가 높으나, 기업메세나 등 재원 다각화 노력
- 정부 주도, 중앙정부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부-자치단체-민간의 역할 분담을 중요시
-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향유부문에까지 지원을 행하고 간접지원



▲ 정부의 문화 정책동향

② 현황과 문제점

1. 대구

■ 창작·파일럿 중심의 공연문화도시 조성 추진

- 타 지자체와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연콘텐츠를 차세대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공연문화도시 조성 추진
 - 서울(Hub)과 대구(Spoke)가 연계된 이핵 분산형(二核 分散型) 발전거점 추구
 - 특화된 공연인프라의 확충 : 뮤지컬전용극장, 문화창작교류센터, 문화창조발전소 건립 추진,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 테마별 공연페스티벌 특성화 추진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 등

■ 문학 자원에 대한 관심 고조

-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 중 상화문학동인체험관 조성계획('09~'10년)
- 향촌동 전후문화 재현관, 대구문학관 건립('10~'12년)
-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계획('10~'14년)

■ 미술관련 H/W 건립 및 S/W 지원 확대

- H/W : 시립미술관 건립,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창작스튜디오
- S/W : 대구아트스퀘어(대구아트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대구미술대전, 이인성기념사업

2. 경북

■ 문화원형, 축제(탈춤)를 중심으로 문화분야 성장발전 마련

-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으로 자생적 성장 플랫폼 구축 지원
- 축제, 컨벤션 관련 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안동대) 신설 운영 중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특화된 공연페스티벌 개최 지원
- 안동문화산업진흥지구(탈춤공연, 공예로 특화) 조성 추진
- 전통소재의 공연물기획 및 개발
 - 오페라 ‘원이엄마’, 뮤지컬 ‘강아지똥’, ‘450년 사랑’ 등
-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 문학관 건립 및 문학제(단체활동) 등 지원 강화

- 영양의 이문열 광산문화관과 조지훈문학관, 칠곡의 구상문학관, 안동 이육사 문학관,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중, 김천문학관 건립 중
 - 영양 두들마을에 Book-Cafe 구축 지원
- 각종 문학제 및 문학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향토문학 발전과 문학인의 자질 향상 및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
- 미술 관련 하드 인프라 건립·운영 및 소프트 인프라 지원
 - 공립미술관 운영(청송군립야송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0년 현재 13개-공립 6, 민간 7)
- 도민의 문화향수권 확대
 - 문화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민간 예술단체들이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사업 등
 - 국악 전문인력의 학교방문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3. 문제점

■ 문화생산 측면

- 창작 기반과 수익의 연계 시스템 미흡
 - 창작물의 작품성과 함께 작품을 포장하는 기술,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저작권 문제 해결 등 미흡
 - 생산적 기반과 산출물 활용의 확대 반복이 가능한 사이클 부족
- 문화예술과 시장(산업)과의 공식적 통로 구축 미흡

- 문화 창작물 시장의 수요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실질적 통계시스템 미흡

■ 문화인프라 측면

- 하드웨어 편중 투자 & 시설 대비 내실화 부족
 - 현재 문화정책의 중심은 포괄적 의미에서 시설 확충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시설별 특성화·유형화 등 구체적 내실화 계획은 부재
 - 하드웨어 구축 후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재정 계획 부족
- 문화시설마다 상이한 운영규정과 제도로 인해 생산성 저하

■ 프로그램 측면

- 차별화되지 못한 단순 이벤트 형태
 - 단순 나열식·집합식 프로그램 제공, 계층별(아동/청소년/노인) 특색 있는 프로그램 제공 부족
- 문화예술 지원범위는 넓어지나, 가용예산은 한정적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환류시스템 미흡
- 문화예술단체(기관), 대학, 기업 간 협력프로그램 개발 미흡
- 기업메세나 및 문화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 미흡

■ 시민 측면

- 풀뿌리 문화활동 지원이 제한적·비정기적·사업중심적
 - 시민 생활문화단체 활동내역 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 미흡
 - 문화동아리에 대한 상시적 공공지원시스템 구축 부재
 - 문화축매 잠재인력의 미개발
- 소프트 사업의 획일화로 시민의 관심 및 참여율 저조
- 소득·지역간 문화향유 격차 심화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 대구(시설 증가) ↔ 경북(활동, 의향 高)

■ 전문인력 측면

-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전략 부족
 - 문화단체(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 미흡
 - 크리에이티브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 시스템 부족

3 비전과 전략

■ 비전 : ‘문화력 넘치는 Creative 대구경북’

- ‘문화의 힘’이 넘치는 창의적인 지역으로 대구경북 창조

■ 목표

- 문화창조, 문화향유, 문화발신 등 문화력의 선순환 구축
 - 문화를 창조하는 힘(문화생산력)
 -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힘(문화소비력)
 - 지역 문화가치를 확산시키는 힘(문화발신력)



▲ 대구경북 문화정책 비전 및 목표

■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 인력 : 창조계급의 양성
 - 창작·실험·교육의 선순환시스템, 창의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시설 : 先 프로그램 개발, 後 인프라 확충
 - 문화센터로서의 역량 강화, 시설의 문화마케팅 강화
- 프로그램 : 차별성이 배어나는 프로그램 정착
 - 나열식 축제행사 지양, 경연과 경쟁을 통한 수준 향상
- 시민 : Cultizen(Culture + Citizen)
 - 시민의 내발적 문화활동, 시민들의 소프트 문화력 증강
- 문화생산 : Culturenomics 실현
 - 가치 창조적 생산기반 강화, 공연산업의 전국 거점 중심지화



▲ 대구경북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4 주요 전략사업

1. 주요 전략사업 도출

■ 지역 문화정책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전략사업 도출

- ‘문화력 넘치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 대구경북’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메가트렌드, 지역의 잠재력과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전략과 사업을 구상
 - 문화시설의 특성화와 내실 강화, 창의적 인력양성,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화생산기능 강화, 네트워크 강화 등의 전략 방향에 맞춰 주요 전략사업 도출



▲ 대경권 문화분야 발전구상

2. 주요 전략사업 내용

가. 특성화·내실 강화 ⇨ 문화센터 육성

■ 각종 문화시설을 특화시켜 ‘문화센터’로 조성

- 대구 도심의 ‘문화창조 기지화’ (※ KT&G → 문화창조발전소 등)
- 기존의 문화시설들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내실 강화

■ 문화단체행사 리모델링 및 경쟁력 강화

- 시민 문화컨설팅, 문화단체 행사 평가 메커니즘 구축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등 아트마켓 역할 및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나. 창의적 인력양성 ⇨ 창조계급

■ 공연 크리에이티브 인력양성

- 주체 : 계명대(계명아트센터) 아카데미,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센터 등
 - 지역 대학과 기자재 공유, 강사 및 커리큘럼 교류 등 연계, 시너지 창출
- 내용 : 교육훈련에서 피드백까지 맞춤형 교육
 - 무대기술인력, 프로듀서 및 기획자,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공연 전 분야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운영

- 문화콘텐츠 기획 및 창작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 스토리와 미디어산업, 스토리 창작방법론 등 커리큘럼 운영
-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건립 중) 내 부속기관으로 운영

■ 문화시설 연수단원제 운영

- 문화 전공 미취업자 대상, 시·도립 전속예술단체 등 배치, 실전업무 경험 제도

- 연수단원 유형 : 배우, 무대시설관리, 홍보 및 관객 관리
- 시립예술단 및 극단의 현장경험과 무대실습의 체험적 훈련

다. 문화향유 확대 ⇨ Cultizen(Culture + Citizen)

■ 유희시설의 문화예술 창의 공간화

- 지하주차장, 공터 등 사용 가능한 유희공간 및 운영시스템 정비
 - 근린생활권 창작발표 공간으로 제공

■ 시·도민이 함께하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학생층 및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연 꿈나무 공연기획 체험 커리큘럼, 아웃리치 프로그램
- 국제 축제기간, 도심·골목 등을 예술공간으로 탈바꿈

■ 문화동아리 활성화

- 지역단위 활동가 실태분석 및 네트워크 강화
 - 문화사랑방, 자생단체, 자치센터 등
 - 주민과 문화시설 간, 시설과 시설 간 문화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라. 문화생산 기능 강화 ⇨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 공연창작파크 구축 : 공연문화도시 조성의 일환

- 공연창작·실험(창작스튜디오) → 제작(장치제작센터) → 보관(용품보관센터) 구축
- 서울 중심의 일극 집중형 → 이핵 분산형(二核 分散型) 발전거점 추구
 - 이핵분산형 : 수도권(Hub)은 상업공연의 생산·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대구(Spoke)는 창작·파일럿(시범) 공연의 공급거점으로 육성

■ 콘텐츠 팩토리 구축

- 지역 문화콘텐츠의 판로개척 지원, OSMU(One Source Multi Use) 실현 모델
- 글로벌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확보와 콘텐츠뱅크 구축

■ 1인 예술창조기업 육성

- 문화예술의 2차 상품화
 - 예술인의 작품소재 문화상품 제작, 마케팅 지원 → 1인 창조기업 성장
 - 사례 : 전혁림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욱심원(동양화가) 등

마. 공간·지역·시설·프로그램 간 네트워크 구축

■ 대구 대도시권 문화예술정보센터 운영

- 문화예술정보 아카이브, 프로그램은행, 문화예술정보전달시스템 구축

■ 대구 경북 콘텐츠 공방 구축

- 콘텐츠자원(문화예술품) 아카이브 구축 : 온라인 마켓 시스템
- 콘텐츠 창작스튜디오 운영 : 특화 콘텐츠, 작업 공간 제공, 창업교육 등

■ 광역권 간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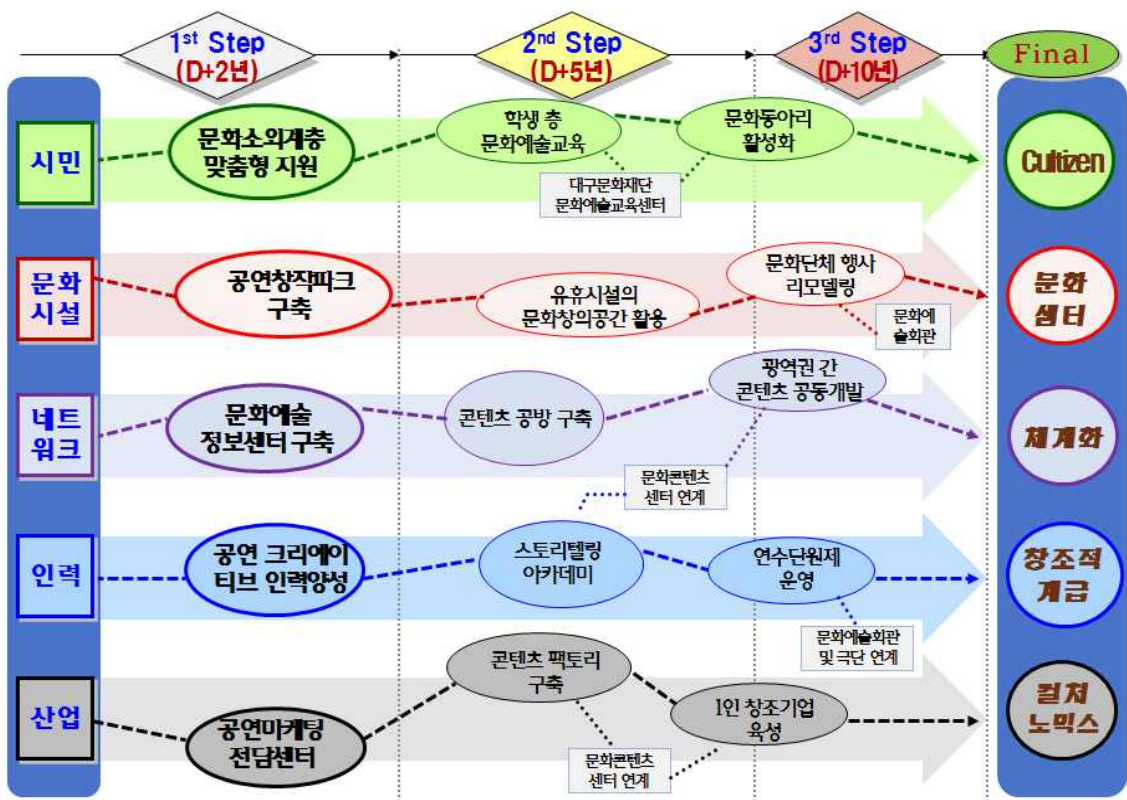
- 정부 지원체계 개편방향 감지 : 5+2 광역경제권을 기반으로 문화시책 지원
- 대구/경북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경쟁력 분야 선도 프로젝트 개발
- 광역권 간 가치사슬별 연계와 협력 : 콘텐츠 기획·제작, 인력양성, 마케팅 등

3. 사업 추진 로드맵

- 각 전략사업은 크리에이티브 대구경북 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중요성과 시의성, 지역적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사업 추진
 - 전략사업으로 도출된 모든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시에 연계

해서 추진될 때 크리에이티브 대구경북 조성에 가속

- 실무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택을 통해 필요성이 높은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지역 문화창조의 기반이 되는 사업추진이 우선 필요
- 전략사업과 수요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후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 사업 추진 로드맵

격조 높은 대구경북인

IV. 건강한 시민을 위한 헬스케어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 주요 트렌드

■ 저출산 및 고령화

-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2015년을 기점으로 국내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202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030년에는 노령화지수⁷²⁾가 200을 넘고 노년부양비⁷³⁾는 37.7%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대구는 모든 구·군이 고령화사회⁷⁴⁾에 진입하고,⁷⁵⁾ 중구는 고령사회에 진입
 - 경북은 구미를 제외하고는 전 시·군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14개 시·군이 초고령사회로 분류⁷⁶⁾
-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만성질환 및 노인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상시적인 질환 관리가 중요해지는 추세
 - 만성질환 진료비는 2007년 전체 진료비의 8.75%를 점유하였으며, 2003~2007년 간 4대 만성질환자⁷⁷⁾ 수는 49.7% 증가
-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부양 부담과 그 중 주요 원인을 차지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72) 노령화지수 = $100 \times (65\text{세 이상 인구}) / (14\text{세 이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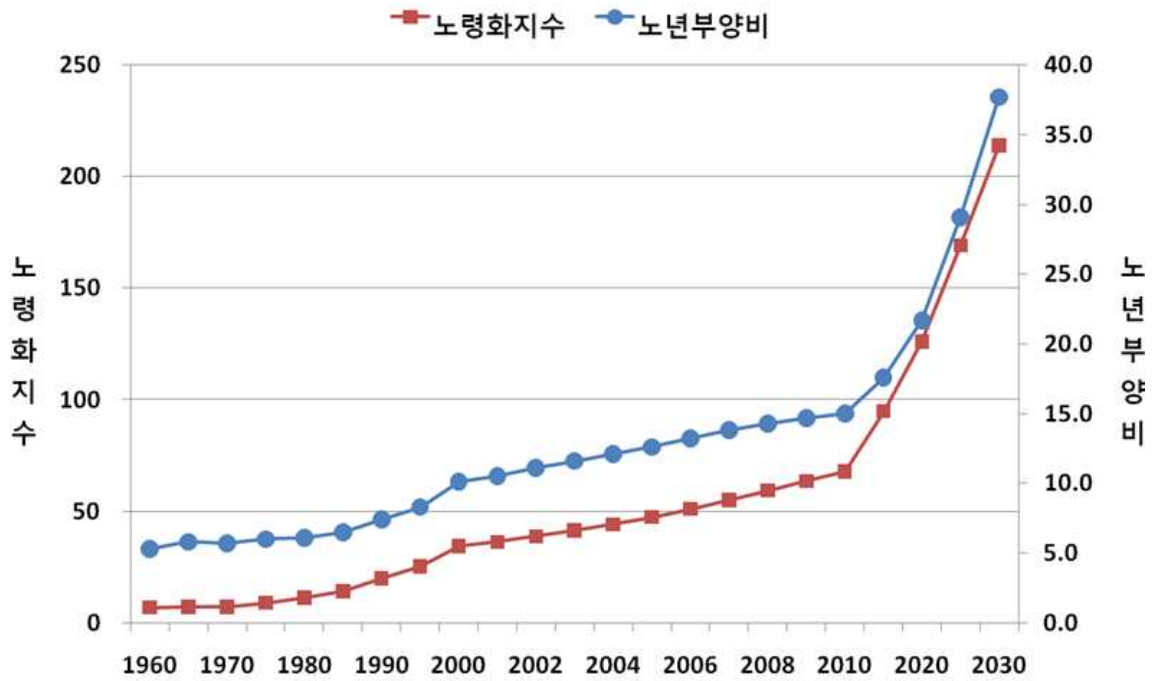
73) 노년부양비 = $100 \times (65\text{세 이상 인구}) / (15\text{세 이상, } 64\text{세 이하 인구})$

74)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

75) 통계청, 「고령자통계」, 2010

76) 영천, 문경, 고령, 울진, 성주, 상주, 청도, 봉화, 청송, 영덕, 예천, 영양, 군위, 의성

77) 4대 만성질환은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의미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

▲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

■ 도시화

- 우리나라는 2000년까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2005년 도시화율⁷⁸⁾이 90%를 초과, 2009년 현재는 90.8% 도달
 - 2009년 경기의 도시화율은 91.6%인데 반해 경북은 76.9%
- 도시화는 신종플루 등 공기나 접촉으로 전염되는 전염병 발생 시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건강 문제 야기
- 도시로의 경제력과 인구 집중은 농촌 지역의 인구와 경제력을 감소시켜 농촌 지역에 민간 의료서비스 공백을 야기
 - 공공의료정책이 투자 대비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농촌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치될 가능성 존재

78) 도시화율=100×(용도지역상 도시지역거주인구)/전체인구

■ 가족구조 변화

- 정보화와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핵가족 중심이었던 가족구조가 변화 중
 - 7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흔한 가족유형이었던 핵가족이 2000년 3위(20%)로 하락하고 2010년에는 독신가구가 1위(35%) 차지
-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 의한 돌봄보다는 각 개인의 독립적인 건강관리와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해지는 추세

■ 국가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 개입

-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은 고부가가치 창조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육성 및 유지가 관건
 - 개인 행복의 요건이자 국가가 가꾸고 키워야할 사회적 자본으로서 건강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는 추세⁷⁹⁾
- 각국 정부는 질병의 진단과 예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건강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중
 - 기존의 대중적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는 수명의 연장,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
 - OECD는 2004년 Health Project를 발표하면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2. 정부의 보건정책

■ 보건정책의 기초

-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게 노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투자 강화
 -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학교보건 강화
 - 지역산업보건센터를 활용하여 청·장년 대상 정기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지원

79) 보건복지부, 건강 증진 정책 홈페이지

- 노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요양시설 및 서비스 지원
- 정부는 의료수월성 강화를 위해 u-Health⁸⁰⁾를 추진 중⁸¹⁾이며 2009년에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개년 응급의료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
-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
- 대구경북은 2009년 ‘u-Health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ETRI와 MOU를 체결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
- 대구시는 LG 전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u-Health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며, 경북은 영양군을 중심으로 2009년 2월 까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 U-Health 관련 대구경북 수행 시범사업

지역	시범사업명	시범사업 내용
경상북도 영양군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주관 - 2009년 2월 완료 -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양군민을 비롯한 주민들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종합병원인 영남대학교 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으로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피부질환, 내분비대사질환 등 전문과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 - 정부는 원격진료센터의 지속적 확산 추진
대구광역시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주관 - LG전자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 고위험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진행 - 주요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격모니터링·상담·전자처방서비스·원격영상진료, ②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운동, 식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서비스, ③ 환자 수용성 유도·강화를 위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④ 건강정보 데이터 정리·가공서비스 등

- 생활체육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의 수월성을 강화
 - 금연, 절주 프로그램 등 개개인의 건강 행태 개선사업 추진
 - 주요 질환별 권역별 센터를 지정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 개선
 - 1990년 3개년 계획인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5년마다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추진

80) u-Health의 정의는 ‘네트워크 또는 휴대용 진단센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데이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환경’(보건복지부 홈페이지)

81) 기존 시범사업을 통해 u-Health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측정됨 : 기존의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서비스 이용 시마다 평균 6시간 교통시간의 절감, 평균 61천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독도경비대, 첨단 u-Health 서비스 덕에 안심’, 2009.7.23)

2 현황과 문제점

1. 보건의료

■ 대구 :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 중

- 대구 의료서비스는 대구지역 병원 연합인 메디시티 대구⁸²⁾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2009년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 2차 사업 진행 중
 - 1차 사업에서는 병원별 서비스 개선을 위한 T/F 운영 등 서비스 개선과 홍보 강화에 역점
 -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 JCI⁸³⁾의 인증⁸⁴⁾ 공동 획득 추진

▼ 메디시티 대구 연도별 목표 및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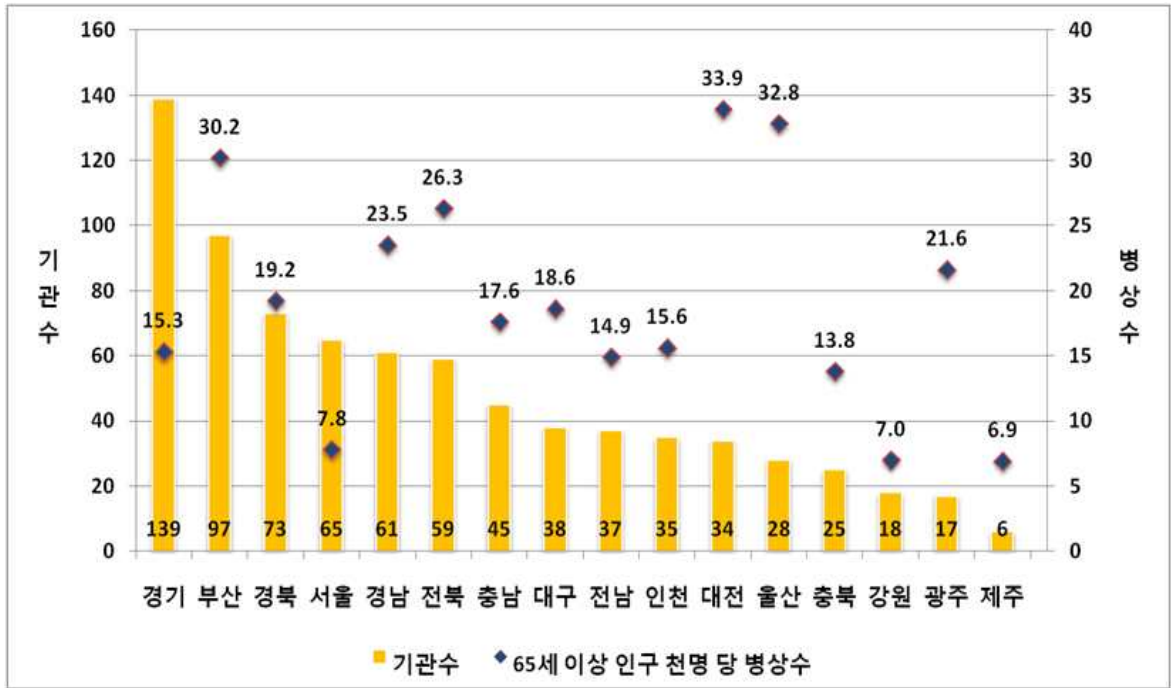
연도	목표	브랜드
2009	병원 서비스 향상 만족도 개선 추진체계 구축	
2010	추진체계 정착, 시민참여 추진역량 강화	
2011	병원 간 협력·경쟁체계 구축 확대	
2014	국내 제일의 의료서비스 선진도시 달성	

- 노인요양병원의 빠른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하여, 일부 병원들이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우려 팽배
 -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3년 68개소에서 2008년 690개소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

82) 메디시티 대구는 대구지역 병원연합의 브랜드이자 대구광역시가 내세우고 있는 의료도시로의 비전을 표현하는 브랜드

83)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84) 모든 의료서비스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수행되어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도 요양병원 평가', 2010

▲ 지역별 요양병원 수 및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2009년 현재 지역에는 대구 38개소, 경북 73개소 등 111개의 요양병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전국 평균 수준
-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105개의 지역 요양병원 중 19%가 1~2등급으로, 41.9%가 4~5등급으로 분류되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서비스 품질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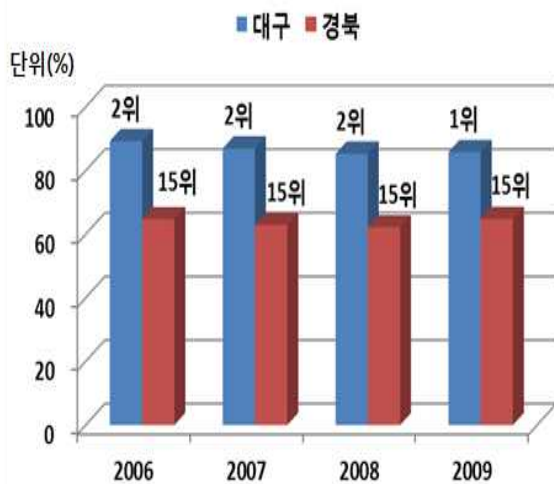
▼ 2009년도 대구경북 요양병원 평가 결과

지역	평가대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제외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전체	718	100	33	4.6	137	19.1	271	37.7	212	29.5	49	6.8	16	2.2
대구	37	100	0	0.0	6	16.2	14	37.8	12	32.4	5	13.5	0	0.0
경북	68	100	6	8.8	8	11.8	23	33.8	24	35.3	3	4.4	4	5.9
대구경북	105	100	6	5.7	14	13.3	37	35.2	36	34.3	8	7.6	4	3.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도 요양병원 평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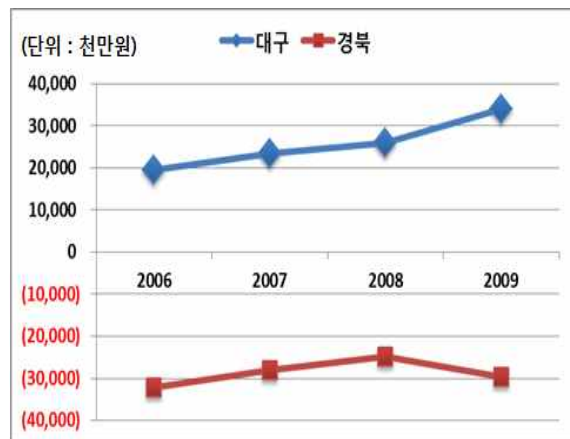
■ 대구와 경북, 의료서비스 품질 격차 심화

- 2008년 현재 경북의 1000명당 의사 수는 1.13명으로 대구(1.83)나 전국 평균(1.5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전국 15위 수준
 - 안동(1.53)을 제외하고는 도내 모든 기초지자체가 전국 평균에 미달
- 경상북도의 의료서비스 관내이용률⁸⁵⁾은 전국 15위로 전국 최하위권
 - 반면, 대구는 부산에 이은 2위를 유지하다 2009년 1위 차지
- 2006~2009년 간 대구는 의료서비스 지역수지⁸⁶⁾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경북은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적자를 기록
 - 경북 의료서비스 지역수지 부문에서 적자의 70%는 대구에 기인
 - 또한 서울과의 의료서비스 지역수지 적자⁸⁷⁾도 총 적자의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북 환자들이 서울 소재의 의료기관 이용이 잦음을 의미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 2009

▲ 대구경북 의료서비스 관내이용률 추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및 2010 국정감사 자료

▲ 대구경북 의료서비스 지역수지 추이

85) 지역민이 자신의 지자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86) 의료서비스 지역수지 = 관내유입진료비 - 관외유출진료비

87) (서울 소재 환자가 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 (경북 소재 환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 경북 : 취약한 응급의료체계

- 경상북도의 인구 대비 응급의료기관⁸⁸⁾ 수는 전국 평균 이상이나 응급의료기관을 갖추지 못한 지역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10개 군
 - 인구 하위 10개 지역 중 군위군을 제외한 9개 군에 응급의료기관 부재
 - 그 결과 경상북도의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수는 13.4개소로 전국 평균(11.5개소)을 상회하나 공간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지역이 다수
- 경상북도는 정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지구를 포함하는 지역도 19개 지역
 -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30%에 불과
 - 응급의료이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를 의미하는 응급의료취약지역도 19개로 전남 다음으로 많은 수준⁸⁹⁾

▼ 2008 경북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구 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전체	%	충족/전체	%
전 국	67/102	68	115/322	36
경 북	4/8	50	6/26	23

자료: 보건복지부, '2008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2009

▼ 2009 경북 내 응급의료 취약지역

구 분	지 역
경북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미보유 지역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
경북 내 도서산간 응급의료 취약지역 ⁹⁰⁾	경주시, 영주시, 예천군, 청도군, 김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칠곡군, 문경시,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청송군의 19개 시군

자료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2009

88)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종합병원 이상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의원급 이상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

89) 보건복지부, 2009, 2008 의료기관 평가결과

90) 응급의료이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현황

■ 지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역학조사 미흡

-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과가 있으나 식중독, 전염병 관련 역학조사 등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석에 중점
- 지역 환경이 지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역학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
 - 예를 들어 2002~2008년 간 전국적으로 환경성질환⁹¹⁾ 환자는 연평균 5.3%씩 증가했으며 특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연평균 8.9% 증가⁹²⁾
 - 2007년 지역의 환경성질환 환자는 천식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
 - 지역 내에서는 대구 동구에 환경성질환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경북에서는 질환별로 포항, 영천, 안동, 경산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가 거주, 원인 분석이 필요

▼ 2007 대구경북 환경성질환 인구1만 명당 진료환자 수

(단위: 만 명)

구분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구분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구분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전국	892	226	480	안동	674	280	728	포항	1,042	194	505
경북	845	189	569	영덕	1,056	146	721	대구	849	185	498
경산	992	195	829	영양	506	149	493	남구	666	179	398
경주	809	193	425	영주	487	217	443	달서구	850	166	496
고령	470	114	444	영천	1,159	175	824	달성군	810	180	550
구미	900	209	576	예천	535	147	418	동구	979	201	637
군위	509	127	698	울릉	817	134	376	북구	952	202	529
김천	711	163	538	울진	894	135	379	서구	752	157	443
문경	595	178	372	의성	577	118	583	수성구	845	209	476
봉화	634	167	410	청도	753	133	579	중구	704	167	376
상주	681	158	773	청송	733	188	577				
성주	677	131	552	칠곡	881	201	58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07년 환경성질환 분석보고서

91)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질환으로 정의

9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08년 주요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759만 명', 2010.2.5.

2. 생활체육

■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체육시설 다수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공공체육시설을 살펴보면 간이운동장을 제외할 경우 실제 운동시설은 소수
 - 2009년 대구시 339개 공공체육시설 중 78%인 265개가 간이운동장이며 경북은 1,089개 공공체육시설 중 82%인 894개가 간이운동장
- 일부 기초지자체는 전략적 접근 없이 생활체육시설의 단순 증설에 노력
 - 2008년 생활체육 참여종목 중에서 걷기가 2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보디빌딩 및 헬스 14.2%, 등산이 13.6%를 차지⁹³⁾
 - 지역민들의 인구 구성, 주변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생활체육시설의 구축 및 운영으로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경영 전문성 미흡

- 지역의 대다수 체육시설의 경우 시·도 행정조직이나 체육관련 단체, 시민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 운영 전문성 부족
 - 체육시설의 복지·문화적 복합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
 - 선진국에서는 체육시설을 문화 및 복지기능 수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관리 전문가 활용
- 전문적 관리방식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와 자립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체육시설 운영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직영 또는 위탁운영과 상관없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 필요

9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백서」, 2009

3 비전과 전략

1. 비전 : 건강한 시민, 활기찬 대구경북

- 현대 사회에서 건강은 개인의 행복의 조건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건강 수준 유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이러한 관점에서 대구경북의 비전을 지역민들이 항상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 활기찬 대구경북’으로 설정

2. 목표 및 추진전략

- 사회적 자본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건강 유지와 빠른 회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품질 제고가 필요
 - 이를 위해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 손쉬운 건강유지 여건 조성을 목표로 설정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 조성, 기초보건의료서비스 강화, u-Health 시스템 구축, 그리고 생활체육 여건 강화를 설정



▲ 비전 및 추진전략

4 주요 전략사업

1.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 조성

■ 의료서비스 선진화

- 메디시티 대구⁹⁴⁾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메디시티 대구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공급과정을 기관별로 진단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 민간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특성화·전문화,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의 역할 분담 유도
 - 종합병원은 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기지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u-Health의 권역 중심센터로서 역할 수행
 - 일반 병·의원은 종합병원과의 협진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역할 담당

■ 역학조사를 통한 지역 건강지도 작성

- 주요 질환에 대해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건강과 관련한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의 기초를 제공
 - 아동의 아토피 관련 건강지도 작성, 호흡기 질환 건강지도 작성 등 지역 내 건강 관련 정주여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과 정주여건 제고 추진

■ 안심할 수 있는 요양환경 제공

- 요양병원 감시, 감독 및 지도를 통한 신뢰 구축
 - 요양병원에 대한 감독 강화, 우수 병원 지원을 통해 지역 요양병원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⁹⁵⁾

94) 이 장에서는 ‘메디시티 대구’를 대구지역 병원연합의 의미로 사용

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 홈페이지에 게재

2.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 119 구급대,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성 강화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삼고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본부로 활용⁹⁶⁾
 - 장기적으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u-Health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내 응급환자 조기 발견 및 대응 역량 제고

■ 보건소 역량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

- 지역 보건소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초의료서비스 제공
 - 단기적으로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
 - 장기적으로 통신장비와 의료인력의 배치로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3. u-Health 시스템 구축

■ 의료 취약지 중심 u-Health 서비스 확대

-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u-Health 중심센터를 대구와 안동에 구축하고 권역별 만성질환 관리
 - 영양군과 대구의 u-Health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u-Health 서비스를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확대함으로써 만성질환의 관리와 응급상황에 대비
- 장기적으로 응급상황 시 최적화된 대응전략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응급의료체계 구축

96)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2010년 초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5시 보건소'를 추진하고 몇몇 기초장비를 구비하여 간단한 응급환자인 설사, 급체, 통증환자 등을 진료할 응급의료서비스센터로 가동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인력 확보, 예산문제, 야간 약국 확보 문제 등으로 난항 끝에 무기한 연기

4. 생활체육 여건 강화

■ 생활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및 다양화

- 수요맞춤형 생활체육시설 구축
 - 인구 분포, 생활환경, 그리고 민간 생활체육시설 분포 등 주변 환경 및 지역민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가장 활용도가 높은 생활체육시설 구축
- 생활체육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운영 효율화
 - 공원, 문화시설 등과 생활체육시설의 통합 관리·운영으로 문화·복지와 연계된 생활체육시설 활용
 - 대학, 초·중·고와 협조하여 학교스포츠 프로그램,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 아동 놀이치료,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노인 그룹운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생활체육과 복지 기능의 융합
 - 경기장 등 주요 생활스포츠 시설의 운영에 문화, 복지, 건강을 이해하는 경영전문가 채용
- 생활체육 리그제 도입
 - 기존의 행사용 대운동장을 활용하여 단발성 이벤트 중심이었던 생활체육 행사를 리그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속적 체육활동 유도

⑤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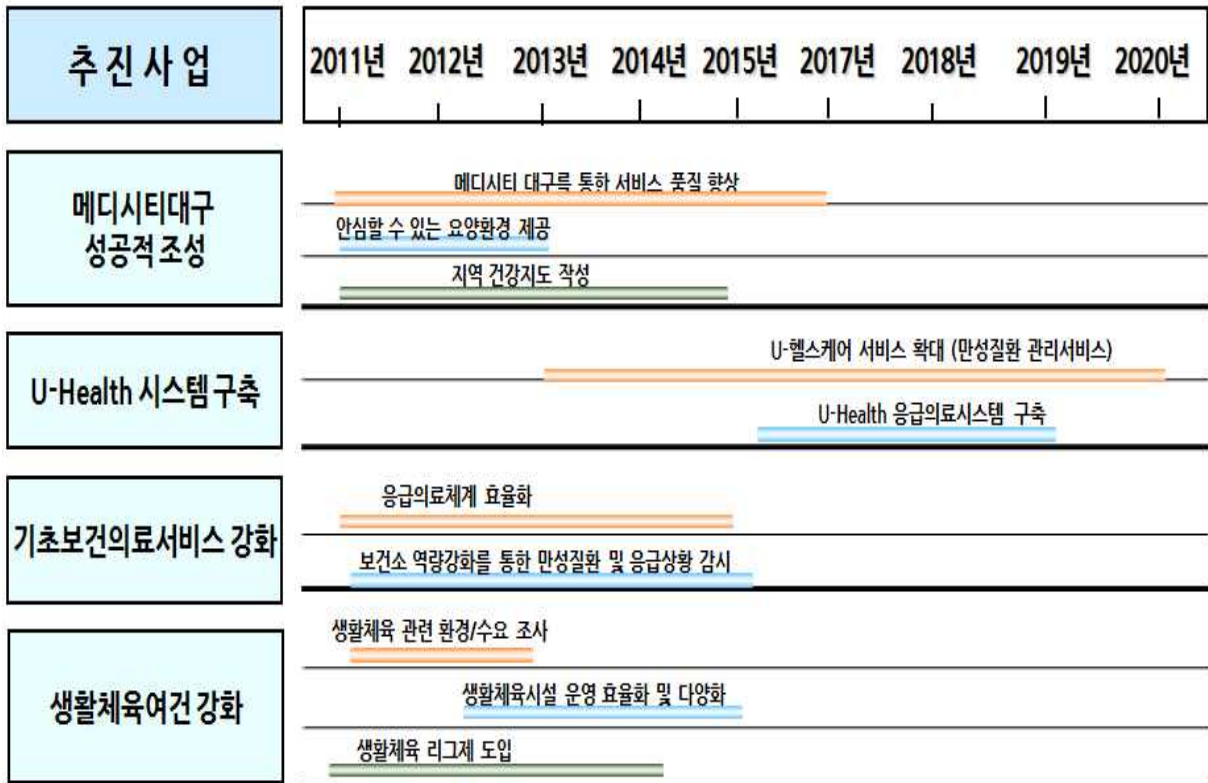
■ 선정 기준

- 효율성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 대비 효과성
- 시급성 : 사업 수요자가 사업추진을 필요로 하는 시기
- 지역적합성 : 지역 역량과 잠재력을 고려한 사업 적합성
- 정책부합성 : 전반적인 트렌드 및 중앙 및 지방정부 추진 정책과의 부합성

■ 우선순위

구분	전략사업	비용	시급성	지역필요성	정책효과성	우선순위
메디시티대구 성공적 조성	의료서비스선진화및 전문화, 특성화					4위
	요양병원품질제고					3위
	지역건강지도작성					2위
U-Health 시스템 구축	U-Health 서비스확대					6위
기초보건의료 서비스강화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1위
	보건소 역량강화및 U-Health 구축					4위
생활체육 여건 강화	생활체육시설운영 효율화및 다양화					7위
	생활체육 리그제도입					8위

2. 추진 로드맵



격조 높은 대구 경북인

V. 문화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① 문화공동체란?

1. 문화공동체의 정의

■ **공동체** :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집단

- 인간의 삶은 지역성을 가진 공동체 간의 ‘소통’에서 시작
-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geographical area), 사회관계를 말해주는 사회적 상호 작용(social area), 집단의식을 나타내는 공동의 연대(common tie)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가 합의 중

■ **문화공동체** : 지역성 + 창조성 + 공공성 + 문화성

- 기존의 공동체적 정의에서 의미의 확대가 필요
 -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성, 주민의 정서 그리고 지역공간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답는 공동체
 - 지역 고유의 잠재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잠재되어 있는 지역성을 부각시켜 만들어내는 품격 있는 공동체
 -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상승을 위해 문화 혹은 문화예술이라는 매체가 활용되는 공동체
- ‘문화공동체’는 문화로 욕구를 드러내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커뮤니티
 - 주민이 개별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즐거움을 추구
 - 주민들이 문화를 통해 타인과 소통
 -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모인 커뮤니티

2. 문화공동체의 중요성

■ 공동체적 지역사회 해체와 재건의 시급성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진행으로 인해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공동체적 관계 해체와 쇠퇴
- 최근 들어 공동체 정신 회복과 재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공동체 실현을 통한 풀뿌리 발전의 중요성 재부각
- 주민참여 유도의 중요성 부각되면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변화
 - 창조도시(creative city),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도시(social city), 슬로시티(slow city) 등 새로운 개념 창조
- 2005년부터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태동

■ 지역문화공동체는 여론 형성과 시민 교류의 핵심 매개체

- 최근 지역의 매력성과 주체성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 고조
- 현대사회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의 단초로 공동체의 필요성 제기
- 공동체는 지역여론 형성과 시민교류의 핵심적 매개체 역할 수행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

2 현황 분석

■ 문화공동체 재건, 싹이 트고 있다!

- 현재 대구지역 내 20여개의 지역문화공동체가 활발히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
- 현재 활동 중인 지역문화공동체를 공동체 재건의 발판으로 활용
- 다음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되, 공공성, 자발성, 지역성, 창조성, 문화성을 기준으로 파악된 단체⁹⁷⁾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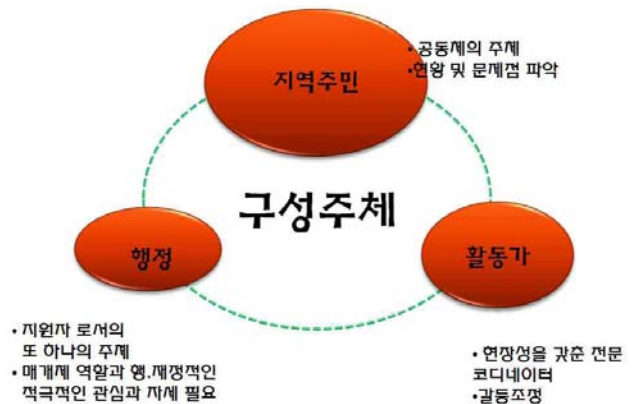
97) 김재경(2010), 『문화창조공동체만들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한 단체 기준

▼ 대구지역 문화공동체 현황

이름	주요 활동
한들도서관	책을 통한 주민 교육과 친목 활동
동구주민회	어린이도서관 마련 등 주민자발적 문화기반 조성
공간 앞산달빛	실천을 통한 마을공동체 건설(환경지킴, 도농직거래 등)
수성주민광장	수성구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감나무골 새터공동체	생활환경운동
와룡배움터	교육과 학교문화 개선
서구문화복지센터	교육·문화 활동
동요만찬	동요를 통한 민주시민육성
문화나눔 옷골	지역 문화예술학교 만들기
청소년공동체 틈새	청소년 문화환경 개선활동 및 복지
생활문화장터지킴이	전통문화 복원
성서공동체FM	지역 내 라디오 방송국 운영

■ 구성 주체는 지역주민, 행정기관, 활동가

- 지역주민 : 지역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대상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
- 행정기관 :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율적인 활동조직을 지원하며 행정적 매개체 역할
 - 주민이 최대한 창조성과 자발성, 공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보조
 - 지역사회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활동가 : 마을리더, 공동체 활동의 핵심인력(Key person)



▲ 문화공동체의 운영 주체

- 지역 현장성을 갖춘 전문 코디네이터
-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 수행
-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조직운영을 촉매·중개하거나 조언·자문하는 역할에 머무를 때 비로소 문화공동체가 성공

3 문제점 및 과제

1. 공동체 활동의 문제점

■ 내부적 차원

-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
 - 개인과 공동체의 관심사에서 나아가 공공성을 강조한 공적인 문제로 의제화할 경우 갈등 발생
 - 이웃과 비관심사에 대한 무관심
-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
 - 사회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미비
- 활동가 리더십의 한계
 - 활동가 역량(리더십) 한계와 전환계기 미비
- 재정적 어려움
 - 모든 공동체의 당면 문제로 대부분 자립적 조달 노력이나 재정적 어려움 극복이 한계 상태에 도달
 - 외부 지원은 공동체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저해하고, 구성원들이 사적 이익을 쫓게 되는 등 내부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관점 견지

■ 외부적 차원

- 지역사회 이해 부족
 - 공동체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 부족
 - 공동체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교육기회 전무

-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어려움
 - 공동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은 중요
 -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활용가능성은 무한한 편
 - 지역사회의 물적 자원은 많으나 활용가능성은 낮은 편
- 홍보 부재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사회적인 홍보가 필수이나 이에 대한 통로가 전무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주요 현안과제

- 공동체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구축
 -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한 관차원의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필요
- 공동체 공간과 활동성과물에 대한 홍보와 관심 제고
 -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잠재적 주민들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필요
 - 대중매체 및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통해 공동체 공간과 활동성과물 홍보
- 마을학교와 작은 도서관 설치
 - 지역단위 공동체 조성과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으로서의 마을학교와 작은 도서관 설치 필요, 이를 발판으로 공동체 활성화
-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마을도서관운영지원 조례 제정, 안정적 예산 확보
 - 소모임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공동체 초기단계의 재정적 외부지원 필요성(ex 공동체 펀드)
-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지역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식 전환 프로그램 개발
 - 주민 및 활동가 교육에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가 활용
 - ‘엄마’를 문화공동체의 주요한 선생님이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양성

나. 주체별 과제

■ 지역주민

- 공동체 철학과 가치의 공유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
-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 제고
- 서울에 뒤지지 않는다는 지역 자존감 회복이 절실

■ 행정기관

- 공동체 조직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조력자로서의 측면 지원
- 공동체 활동에 대한 공감 유도 및 개별 공동체 조직의 적극적 홍보수단 강구
-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 활성화 등 기존 조직과의 연계 모색
- 공동체의 자생적 재정구조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

■ 활동가

- ‘주민’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라는 공동체 철학과 가치로 무장
-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의 중복성 해소
-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핵심 파트너들과 숨은 지원자들의 네트워킹 원활화
- 교육을 통한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 전문성 제고

4 정책화 방안 및 전략사업

1. 기본전제

- 문화공동체와 지역발전의 잠재력 이해
- 경제적 활용보다 지역민의 공동체 구축이 우선
- 문화공동체의 탈정치화

2. 기본원칙

- 문화공동체는 개방적인 여론 형성의 장(場)이자 사회문화적 공간
- 문화공동체의 우선 목표는 자생성(自生性)
- 주민 주도하에 행정기관은 지원 역할을 담당
-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간접 지원형태를 추구

3. 정책화 방안

■ 공동체 네트워크 소통기반 마련

- 지역리더의 양성
 - 활동가 중심 인적자원 네트워크 형성, 민간부문의 활력 동기화 인프라 구축
 - 발굴된 인력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NGO등과 협력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갈등관리 및 합의 도출 기법 등의 전문적 학습 지원
- 지역 활동가 및 촉진자의 네트워킹 : 문화공동체 포럼 운영
 - 지역 활동가들의 경험 교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축 필요
 - 공식·비공식 조직에 상관없이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공동체로 운영하는 방법

■ 지역사회 소통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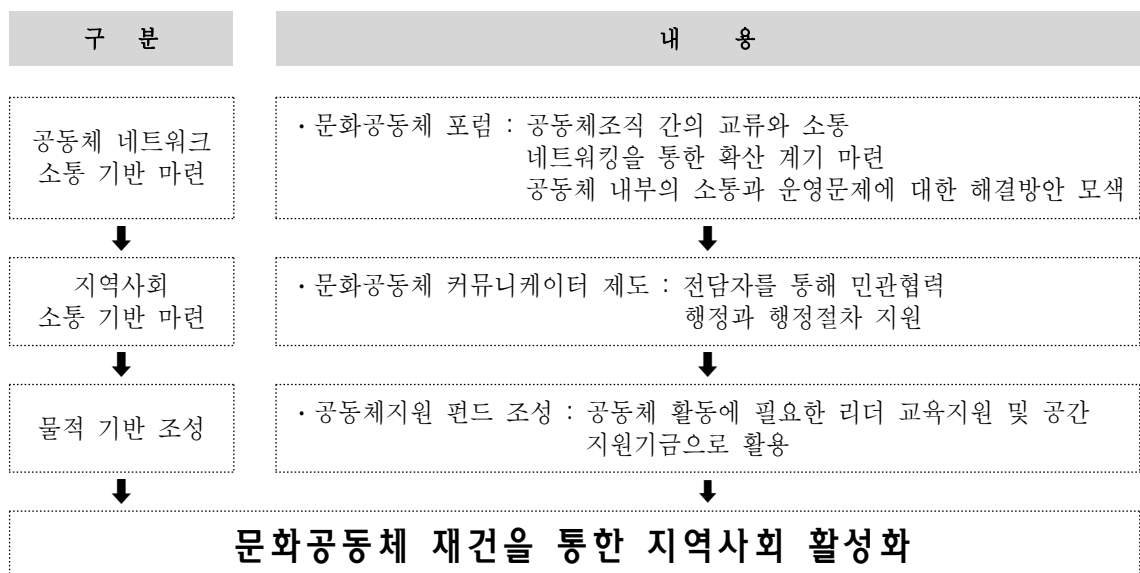
- 지역민 대상의 '공동체 교육' 필요
 - 공동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공감대 형성
 -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시장 등 다양한 장소를 활용, 교육효과 제고
- 구정소식지 활용 등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
 - 시민접근성 높은 홍보매체를 통해 문화공동체 활동 홍보 지원
 - 다양한 사례, 활동 및 행사 정보 제공 : 지역과 시민들의 선택 가능성 확대

-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공동체 모범사례 발굴
- 외부 협력체계 구축 : 문화공동체 커뮤니케이터 제도 운영
 - 행정의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공동체의 갈망은 절실한 상태
 - 민·관 협력 차원의 지원사업단을 구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유도
 - 다만, 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가치인 주민주도, 주민참여, 내발성, 아래로부터, 지역성 등의 고유한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
-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가동
 - 민·관 협력 공동체 사업 추진 : 행정기관은 “보조한다”는 원칙을 우선시
- 공동체 활동가들의 주민자치관련 위원회 참여
 - 공동체 활동가들을 제도권 내의 주민자치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추천하여,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물적 기반 조성

- 향후 공동체지원 펀드 조성
 -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리더 교육지원 및 공간 지원기금으로 활용

4.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격조 높은 대구 경북인

VI.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의식 개혁

① 시민의식 개혁의 목적과 의의

- 낡은 가치관과 의식구조로부터 탈피, 새로운 시대 흐름에 적응(개인 차원)
-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으로 기술 향상과 부(富)의 창출 도모(개인 차원)
- 시·도민의 전반적 의식수준 및 지적 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 도시경쟁력 향상 추구(도시 차원)
- 시·도민의 부정적 시각과 패배주의 극복,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구조 형성, 참여와 협력의 도시발전 기여(도시 차원)
- 회고주의에서 벗어난 미래지향적·발전적 지역정체성 형성으로 희망적 미래비전 디자인(지역 차원)

② 대구경북 주민의식 : 현황과 문제

■ 회고주의적·전통지향적 경향이 여전히 강세

- 주민의 50% 이상이 지역에 '유교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며
- 주민의 75%가 '전통에 대하여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
-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는 '보수적 지역정서'를 가장 많이 지적(약 39%)
 - 특히 젊은 연령대일수록 '보수적 지역정서'를 강하게 지적
 - 이는 '비전과 희망의 상실'과 '타 지역 이주 희망'이라는 부정적 성향으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

(이상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 지역 주민 정체성 및 의식조사』, 2005)

■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보다 외부에 원인을 전가·의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주민의 91%가 동의하며, 36%는 ‘가장 필요한 것’이 중앙정부 지원이라고 판단
 - 반면 산업구조 개편(8.0%), 노사화합(1.0%), 신기술 개발(5.1%), 근검절약 풍토 조성(2.4%) 등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대경연, 2005)
- 산업 및 경제의 문제점으로 ‘정부지원 및 정책의 미비’(25%)를 가장 높게 지적(대경연, 『경상북도 종합발전 계획 설문조사』, 2007)
- 대구가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외국인 기업 유치’를 든 주민이 45%인 반면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에 불과(대경연, 『대구시 종합계획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2008)

■ 자긍심의 점진적 약화, 부정적 사고의 증가 경향

-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이미지를 ‘보수적’이고 ‘낙후된’ 지역으로 보는 경향
- 청소년들조차도 긍정적 시각(33%)보다 지역을 ‘혼잡하고, 보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고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60%) 인식(대경연,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의식조사 연구』, 2000년 조사)
- 대구의 경우 약 62%의 주민이 현재 발전수준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낙후’되었다고 인식
 - 특히 일반시민, 공무원, 전문가로 구분할 때 시민과 공무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분석(대경연, 『대구시 종합계획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2008)

■ 지역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비전과 희망

- 향후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8%에 불과(대경연, 2005 조사)
- 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59%)이 ‘결혼하고 직장을 가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생 (지역에) 살고 싶다’는 응답은 5%에 불과(대경연, 2000)

- 최근 조사에서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항목에 대해 높은 비율(대경연, 2005 조사)

■ 여전히 높은 비문해자 비율, 전반적으로 미약한 지식기반

- 대구경북의 비문해자 비율은⁹⁸⁾ 2008년 기준 대구 1.3%, 경북 4.8%
 - 대구는 대도시 평균 0.7%에 비해, 경북은 전국 도(道) 평균 3.7%에 비해 훨씬 상회하는 비율(국립국어연구원,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2008)
- 경북의 독서 인구 비율은⁹⁹⁾ 2005년 기준 37.3%로 전국 평균(2004) 62.2%의 절반 수준에 불과

③ 비전과 전략

■ 비전 :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시민, 참여하고 협력하는 시민정신

■ 목표

- 미래지향적·발전적 정체성의 확립
- 지역도시의 국제화 수준 향상
- 공동체적 시민정신과 글로벌 의식의 확립
- 지역민 외국어 능력 및 외국문화 이해도 증진
- 사회계층별·직업그룹별 의식구조 개혁과 정신력(Mentality) 향상

■ 전략

- 학교교육·평생교육·직무교육 등을 통한 지역정체성 및 의식개선 교육 확대
- 지역민 외국어 및 외국문화 교육 확대, 정책적 장려 및 지원

98) 비문해자란 20세 이상의 성인 중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의미함(국립국어연구원 위 보고서 p. 16)

99) 독서인구비율은 주민 중 연 1권 이상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을 말함(경상북도, 「경북의 사회지표 2008」, 2009.7 p.325)

- 의식구조 및 시민정신 교육을 위한 NGO 활동의 지원
- 지역 학교 및 도서관 활용, 지역민 지식수준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지역민을 위한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교류활동 지원
- 의식개혁 및 국제화 수준 향상 관련 행정지원 및 예산투입 확대



▲ 비전 및 목표

4 주요 전략사업

1. 정체성 정립 및 의식개선 교육·홍보자료 제작 사업

- 대구시와 경북 공동으로 정체성 정립 및 의식개선 T/F 구성
 - 학자뿐 아니라 전문가, 기업인, 시민단체, 젊은 연령층, 여성대표 등 다양한 계층과 그룹 참여
- 회고주의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체성 및 의식개선 관련 내용 정립
- 정립된 내용을 기초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2. 지역정체성 및 의식개선 교육사업 확대

- 초·중·고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사회, 국사, 윤리 등) 내에 지역정체성 및 의식개선 관련 내용 삽입
- 지역대학 교양과정에 ‘대구경북학’(가칭) 과목 개설, 수강 장려 및 지원(지역 명사 특강, 현장답사 등)
- 지역 공무원교육 전 과정에 대구경북 정체성 및 의식개혁 관련 과목 개설
-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구경북 정체성 및 의식개선 관련 과목 또는 활동 프로그램 포함,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 예산 지원

3. 공무원 외국어 교육 확대·강화

- 공무원 교육과정 중 외국어 과목 비중 확대
- 외국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포상, 수당지급, 인사우대 등
-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습득 유도

4.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학습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학 및 중·고교에 지역민을 위한 외국어학습프로그램 설치·운영
- 각 기관별 외국어학습활동 장려·지원
 -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 대상. 지자체와 기관 공동부담 방식으로 동아리 활동, 순회 외국어교사 고용, 외국인 초청 강연, 외국문화 소개 행사 등 추진
- 지역도서관의 외국어 및 외국자료 섹션 설치, 자료의 양적·질적 확대

5. 도시 국제화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 외국어판 도시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 공공기관, 공공시설, 문화시설, 주요기업, 학교, 대형 음식점 등

- 각종 도로안내, 시설안내 등에 외국어(영어) 안내문 함께 설치
- 각종 유적지, 관광시설 등의 잘못된 외국어 안내문 재정비
- 상인·서비스업체 종업원·관광안내원 등 외국인 상시 교류 계층에 대한 외국어 교육 의무화

6. 각 지자체별 국제화 업무 담당부서 설치

- 지자체별로 과(課) 단위의 국제화 업무 전담부서 설치(의식개혁 업무도 담당)
- 관련 활동 계획 수립·추진 및 예산 지원 업무 수행
- 외부 전문가 영입, 외국인 채용도 검토

7. 사업추진 로드맵



제 5 장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New Design

Daegu

Gyeongbuk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I. 뉴 디자인, 공간전략 구상

① 공간전략 기초 및 과제

1. 공간전략 수립의 문제인식

■ 대경광역경제권, 대한민국 내 경제적 위상 최저 수준

- 국내 5대 광역경제권 중 대경광역경제권은 GRDP 규모 5위로 경제적 위상이 극히 떨어지는 실정
 - 면적(19,909km²), 도로포장률(90.1%) 등 물리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
- 수도권·충청권 등 중부지역과 동남권·호남권·대경권을 포함한 남부지역의 경제력은 59.1% 대 37.3%로 큰 차이를 보이고, 향후 격차가 더욱 커질 전망
 - 중부경제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부문에 대한 시장(Market)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 활력이 기대되는 반면, 남부경제권은 이를 견인할 구심체의 부재로 침체 우려

▼ 대한민국 5대 광역경제권의 주요 지표 비교

구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면적(km ²)	11,744	16,571	12,347	20,685	19,909
도로포장률(%)	96.1	88.1	93.2	86.4	90.1
재정자립도(%)	78.4	47.4	56.8	32.6	46.4
경제활동인구비율(%)	67.3	65.7	66.2	61.3	64.4
인구(천명, %)	24,106 (49.3)	4,927 (10.1)	7,769 (15.9)	4,959 (10.1)	5,110 (10.5)
GRDP(십억원, %)	409,292 (47.7)	98,025 (11.4)	147,192 (17.2)	86,453 (10.1)	85,374 (10.0)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인구는 2008년, GRDP는 2006년, 나머지는 2007년 기준)

■ 대구경북,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다

- 대경광역경제권은 자체적인 성장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제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인접 경제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권역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
 - 위로는 서울 중심의 중부경제권의 확장, 아래로는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동남 경제권 강화, 좌측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힘입은 호남권의 점진적 성장 전망
 -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경북 북서부지역 도시는 중부경제권으로, 포항·경주 등 남부지역 도시는 동남경제권으로 흡수될 우려

■ 공간적 결속력 점차 떨어질 전망

- 대구권 : 김천·구미 KTX 개통 ⇨ 수도권과 직접 교류
- 북부권 : 수도권과의 교류 확산
- 동해안권 : 울산·부산에 흡수 우려
 - 도청 이전이 이루어지면 공간적 결속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

2. 공간전략 구상 기본방향 설정

■ 밀양 신국제공항 유치는 대경권 발전의 최우선 과제

- 대경권과 동남권 및 호남권을 아우르는 침체된 남부경제권의 발전 기폭제로써 밀양 신국제공항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국제관문의 부재로 글로벌 접근 곤란, 환동해경제권 형성 지체에 따른 러시아·북미 진출의 어려움, 환황해경제권 부상에 따른 국토발전축 서해안 이동, 수도권 확장 및 중부경제권 가시화와 남부경제권 침체 등의 제반 문제에 정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 ‘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최대 공간변화 요인

- 경북 도청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도청신도시’는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

- 예정부지 : 안동·예천 일원 약 11km²(약 330만평)
 - 사업규모 : 인구 10만명, 사업비 2.1조원(청사건축 4천억원)
 - 사업계획 : 도청이전 → 2014년, 신도시 조성 → 2027년
 - 개발컨셉 : 국제적인 첨단명품 행정도시
-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 공간전략 수립의 핵심으로 설정
- 경북 북부권 발전의 거점으로서 ‘도청신도시’ 위상 정립
 -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북부지역 도시 연계 및 공동발전전략 모색

■ 대경권 산업벨트 구축, 동남권 산업발전축과 연계

-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역의 강화를 위한 산업벨트 구축은 동남경제권산업별 연계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 자동차(그린카포함)·기계·모바일·섬유·금속·원자력(연료전지)·태양광·조선 등의 측면에서 동남권 산업과 연계하여 역 C자형의 산업축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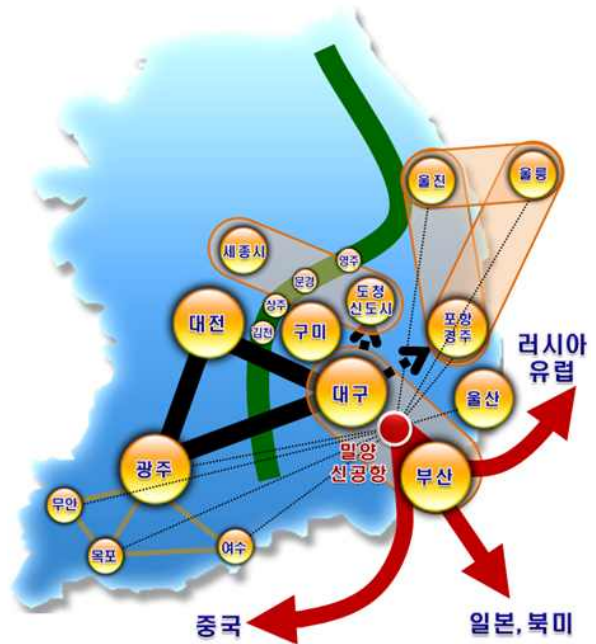


▲ 대경권과 동남권 산업도시의 초광역 연계 현황

■ 동남권 신국제공항(밀양) 중심, 초광역적 도시 네트워크 구축

-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밀양에 유치하여 국제관문을 확보하고 글로벌 대도시권과의 교류 확대
- 대구~부산~광주, 3 City 기반 남부경제권 구축 추진
- 대구~부산 경제회랑 구축 및 광주와 전략적 연계

- 밀양 신국제공항과 남부지역 공항도시 연계
- 대구·광주 R&D특구 지정 및 내실화로 대구~대전~광주를 잇는 내륙 연구개발 삼각벨트 구축
- 도청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으로 세종시와 행정·업무 연계 강화
- 수도권외곽의 광역화 대응 및 환동해경제권시대 준비 강화
- 수도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문경·상주·김천 등 4대 관문도시를 집중 육성
- 환동해경제권시대를 대비하여 에너지관광벨트 및 해양자원 R&D 역량 강화



▲ 초광역 도시네트워크 개념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공간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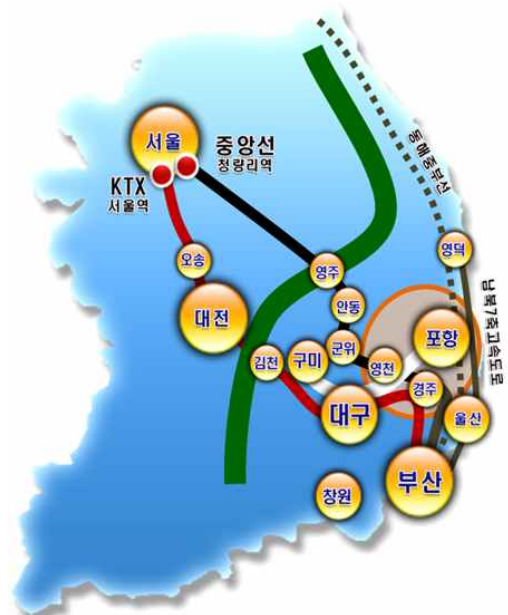
-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여 육상·해상·항공교통 등 국가종합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제시된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구경북 공간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
 - 동서6축 고속국도(상주~영덕)
 - 동서5축 간선도로 고속화(영주~울진)
 - 동해남부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 88고속도로 확장(대구~광주)
 -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울산~경주~포항 등)



▲ 대구경북 관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의 주요 내용

■ ‘대구~구미~포항’ 산업벨트 연계를 위한 광역통근전철망 구축

- 현재 추진 중인 중앙선 복선전철화(2011~2019)와 남북7축 고속도로(2019), 동해중부선 철도(2014) 건설이 완료될 경우 대구경북의 대내외적 접근성은 커다란 변화를 맞을 전망
 -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틸팅(Tilting) 열차 운행은 경북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 간 시간거리 크게 단축
 - 남북7축 및 동해중부선 개통은 포항·경주·울산·부산축 강화 전망
- 구미~대구~포항 간 대경권 산업벨트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통근전철망 구축 필요
 - 대구~영천 간 대구선 복선전철화 조기 완공, 영천~포항(안강) 철도 신설



▲ 교통망 변화 개념

■ 대구경북 『양생한방관광벨트』 공동 추진

- 삶의 질에 대한 지구적 관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양생(養生)한방관광벨트’ 구축을 대구와 경북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대경권은 예방의학의 핵심인 양생(養生) 사상의 핵심 콘텐츠와 풍부한 문화·웰빙 관광 자원을 보유
 - 본초학(향산 이만도 「본초강목」), 침구학(서애 류성룡 「침구요결」), 양생학(퇴계 이황 「활인십법」) 등
 - 산림(백두대간·낙동정맥), 물(낙동강 700리·온천·동해안), 고택·사찰(안동·경주·영주·성주 등)

Hub & Spoke 양생한방관광벨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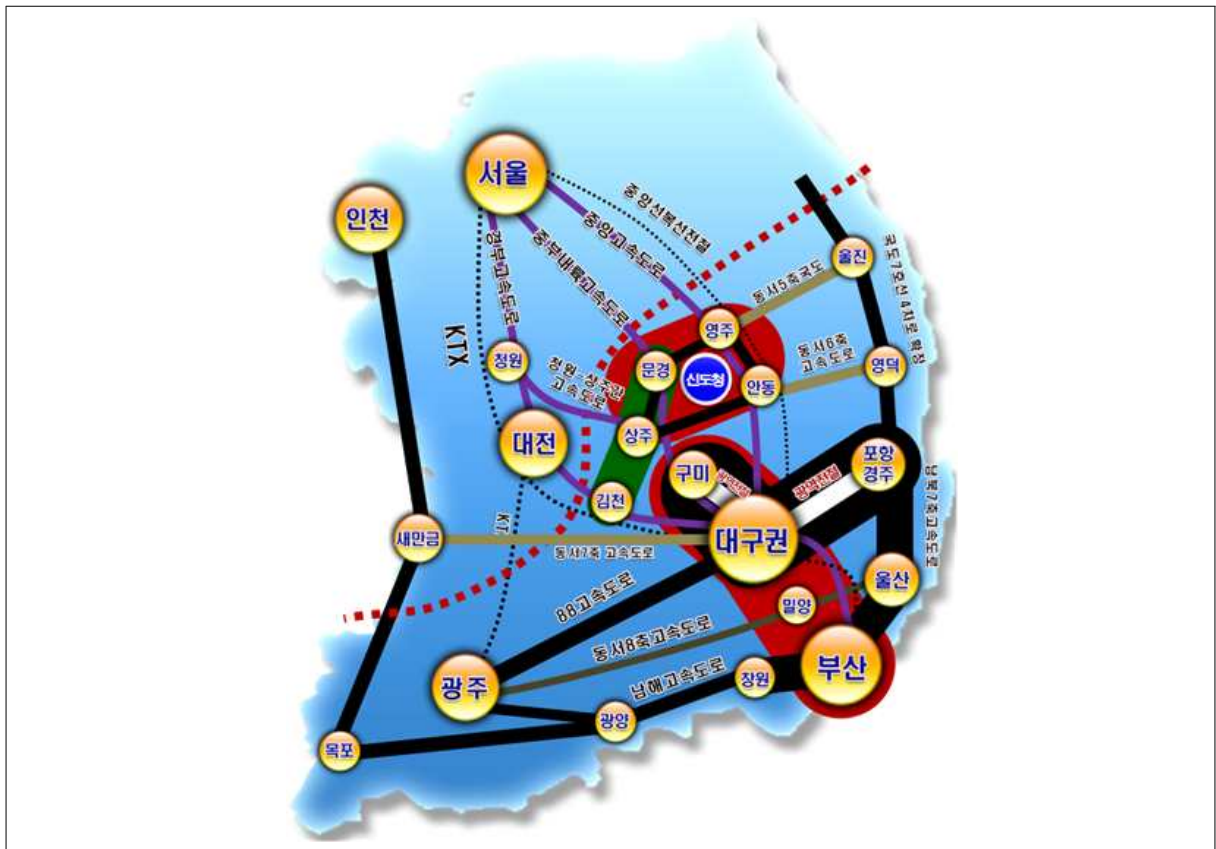
▲ 양생한방관광벨트 개념

- ‘양생한방관광벨트’는 Hub & Spoke의 개념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과 통합의료센터 등 의료관련 잠재력을 활용하고, 밀양의 신국제공항과 연계하여 관광객 수용 기반을 구축
 - 경북은 다양한 양생한방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양생사상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 종합 : 5대 Grand Design 중점 추진

- 첫째, 대구대도시권의 중추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중심성 강화
 - 구미~대구~포항을 잇는 산업벨트 연계 강화
 - 핵심 인프라로서 광역통근전철망 구축
- 둘째, 도청이전 신도시 기반 경북 북부권 발전 모색
 - 신도청은 경북의 행정·업무기능을 담당
 - 수도권·충청권의 관광객을 흡수하고 동해안 관광과 연계

- 셋째, 대구대도시권과 포항경주권의 연계 강화
 - 포항은 대구대도시권과 동남경제권의 연계 거점화
 - 경주는 역사문화도시 및 에너지산업의 거점화
- 넷째, 영주·문경·상주·김천 등 관문도시를 중점 육성하여 중부경제권 확산에 대응
- 다섯째, 장기적으로 3-City Region 기반 남부경제권 구축
 - 대구와 광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대경권과 호남권의 상생분위기 형성
 - 밀양 신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구-부산 경제회랑(Corridor) 조성
 - 대구~광주~부산 3-City Region 완성



▲ 5대 Grand Design 개념

2 기존 공간계획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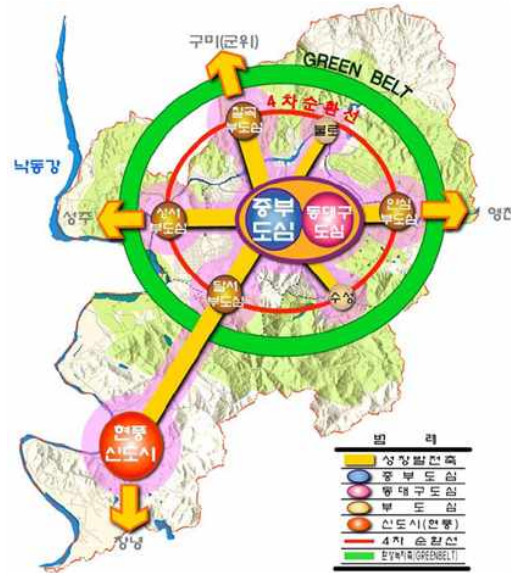
1.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 (2007.2)

■ 2도심, 4부도심, 1신도시

- 도심 : 중부(CBD), 동대구
- 부도심 : 칠곡, 안심, 달서, 성서
- 신도시 : 현풍

■ 검토의견 및 시사점

- 대구 행정구역만의 구상
 - 대구대도시권 개념 부재
- 구미 방향 연계축 미약
- 안심부도심·수성축 역할 미흡



▲ 대구 도시공간구조

2.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1)

■ 동서3축 & 남북3축 격자형 구상

- 동서3축 : 생태자원축, 지식융합축, 혁신지향축
- 남북3축 : 특화지향축, 지식기반축, 해양개방축
- 문화관광벨트
 - 안동~성주·고령~경주



▲ 경북 발전축

■ 검토의견 및 시사점

- 동서3축 및 남북3축의 개념적 타당성 의문
- 도청이전 계획 미 포함, 대구 및 타 광역권과의 연관 계획 미약

3.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2005.1)

■ 대구광역권 : 대구 포함 인접 7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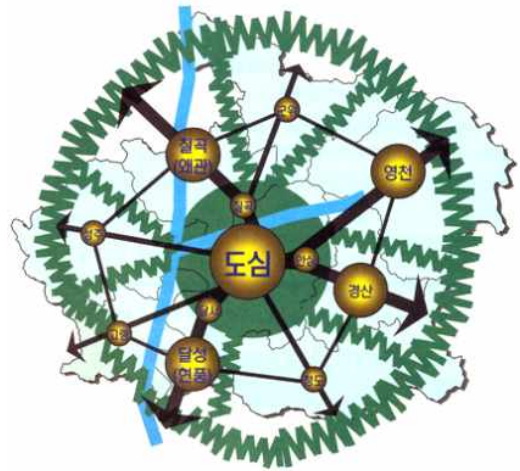
- 칠곡, 성주, 고령, 군위, 영천, 경산, 청도

■ 1광역도심, 4부심

- 광역도심 : 대구도심
- 부심 : 달성, 칠곡, 영천, 경산

■ 검토의견 및 시사점

- 대구광역권 최초 설정 시도
- 구미 : 권역 내 미포함
-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계획으로서 타 광역권과의 관계 설정 부재



▲ 광역도시구조

4.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 (2009.8)

■ 2대 초광역축 : 낙동강축 · 동해안축

- 4대 발전축 중심 녹색성장 지향
 - 지식기반축, 문화경제축, 생태환경축, 해양연계축

○ 4대 경제권 설정

- 생태문화권, 첨단산업도시권, 중추도시권, 과학·에너지산업권



▲ 2대 초광역축과 4대 경제권

■ 검토의견 및 시사점

- 본격적인 광역권 개념 정립 및 초광역적 연계 고려
- New Design 공간전략 구상의 준거 틀로 활용 가능

③ 뉴 디자인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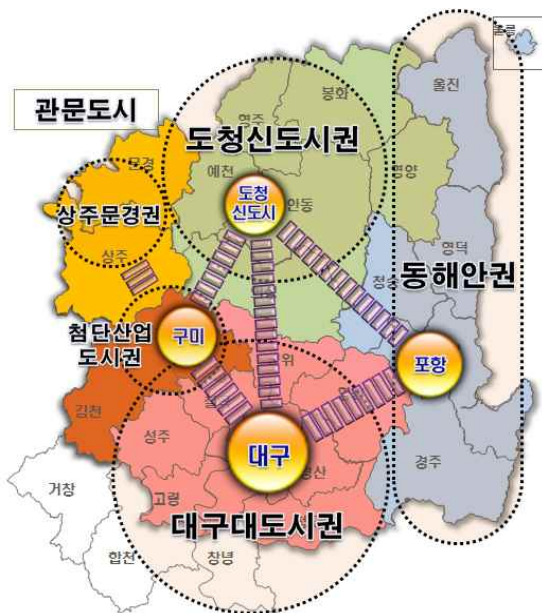
1. 『3+2』 도시경제권 설정

■ 3대 경제권

- 대구대도시권 : 대구 중추도시 & 주변 7개 시·군
 - 주변 7개 시·군 :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 경남 3개 군(거창, 함천, 창녕) 포함
- 동해안권 : 포항, 경주, 청송, 영덕, 울진, 울릉
- 도청신도시권 : 안동, 영주, 의성, 영양, 예천, 봉화

■ 2대 소경제권

- 첨단산업도시권 : 구미, 김천
- 관문도시 : 상주·문경 중심(김천, 영주 포함)



▲ 3+2 공간 설정 개념도



▲ 권역별 기능 설정

2. 도시권별 기능 설정

■ 대구대도시권 : 대구 중추도시 & 주변 7개 시·군 등

- 글로벌 지식경제 중심지, 대경권 중추관리기능
- 인재양성, R&D 지원, 공연문화 (※ 구미와 상생 협력)

■ 동해안권 : 포항, 경주, 청송, 영덕, 울진, 울릉

- 과학기술·에너지산업 거점, 역사문화·해양관광 중심지

■ 도청신도시권 : 안동, 영주, 의성, 영양, 예천, 봉화

- 행정·업무 등 중추관리서비스 기능, 유교문화·문화웰빙관광 거점

■ 첨단산업도시권 : 구미, 김천

- 구미 : IT 융복합산업 거점 및 주력산업 고도화
- 김천 : 녹색산업 관문

■ 상주문경권

- 녹색산업·문화관광 관문, 농생명산업/유교 전통문화

■ 관문도시 : 영주, 문경, 상주, 김천

- 영주/문경 : 문화관광 관문, 상주/김천 : 녹색산업 관문

3. Twin-City MCR 구축 : 영남경제권 형성

■ 2대 발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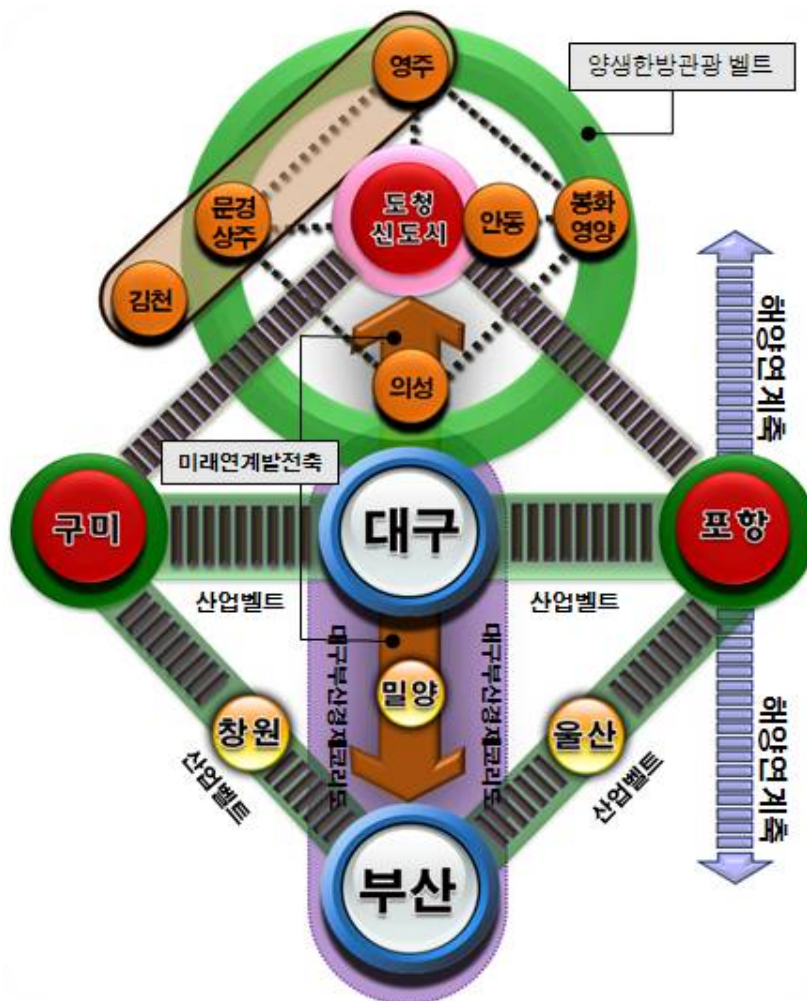
- 미래연계 발전축 : 신도청~대구~부산
- 해양연계축 : 동해안~포항·경주~울산·부산

■ 2대 산업벨트 & 관광벨트

- 영남권 그랜드 삼각산업벨트
 - 구미~대구~포항~울산~부산~창원
- 대구경북 '양생(養生)한방관광'벨트
 - 江·山·海 및 고택(古宅)·사찰(寺刹) 등 연계

■ 대구·부산 Twin-City MCR

- 2대 중추도시(대구·부산) + 3대 거점도시(도청신도시, 포항, 구미)
- 대구~(밀양)~부산 경제 Corridor



▲ Twin-City MCR 구축 개념

4 대구대도시권 발전방향

1. 현황과 문제점

■ 산업구조 전환 지체 및 고급 일자리 부족

- 지역의 산업구조는 전기전자산업(반도체, 모바일), 1차금속, 자동차부품, 금속 가공 및 섬유제품 등으로 주로 구성
 - 지역 제조업체의 85%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구성된 저부가가치 제품의 단순 생산기지
 - 산업기반은 우수하나 핵심 R&D 기능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외부 유출로 인하여 구조전환 지체와 고급 일자리 감소로 연결
- 고급 인적자원(전문대졸 이상)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급인재의 지역내 취업은 지속적으로 감소
 - 대경권 고급인적자원의 최대 유출지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동남권과 비교시 낮은 지역잔존율¹⁰⁰⁾ 및 순대졸유입률¹⁰¹⁾(동남권:0.91/1.12, 대경권: 0.8/0.9)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유입률은 높게 나타남

■ 전통적 교육도시 대구, 경쟁력 저하 및 우수학생 이탈 증가

- 지역 대학 수준 저하 심각
 - 지역 대표 대학인 경북대의 자체 경쟁력(교수 확보율 42위, 학생당 교육비 59위, 외국인교수 비율67위, 영어강좌 비율 48위 등) 약화 및 입학생 수준 지속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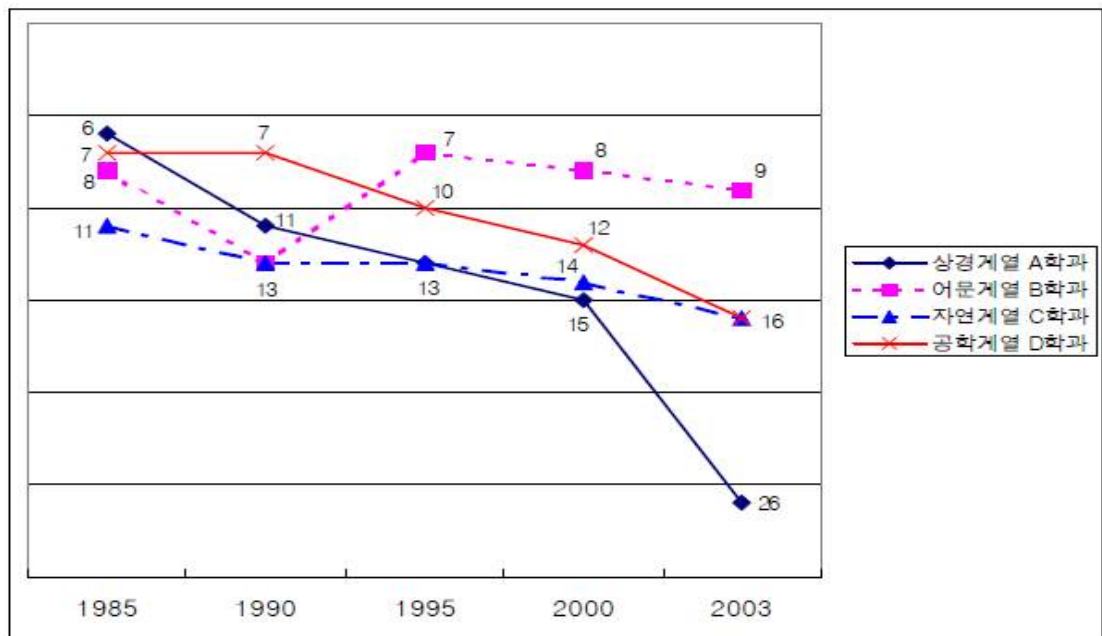
100) 지역잔존율 = 해당 광역권에 남은 대졸자/해당광역권 총 대졸자 유출

101) 순대졸유입률 = 해당 광역권의 총 대졸취업유입/해당 광역권의 총대졸자 유출

▼ 광역경제권간 고급 인적자원 이동 현황(2006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총 대출자 유출	지역 잔존율	수도권 유입율
수도권	4,492	119	94	127	113	63	222	5,030	0.89	0.893
충청권	287	1,346	28	90	19	29	1	1,800	0.75	0.159
호남권	179	29	1,648	8	17	5	2	1,888	0.87	0.095
대경권	231	65	15	2,297	248	29	3	2,888	0.80	0.080
동남권	93	6	3	68	1,852	4	4	2,030	0.91	0.046
강원권	200	18	10	13	13	487		741	0.66	0.270
제주권	20		7	2	3		317	349	0.91	0.057
총 대졸 취업 유입	5,502	1,583	1,805	2,605	2,265	617	349	14,726		
총 대출자 유출	5,030	1,800	1,888	2,888	2,030	741	349			
순 대졸 유입률	1.09	0.88	0.96	0.90	1.12	0.83	1.00			

자료: 김동수 외,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 2005



▲ 입학시험 점수로 본 경북대학교 순위 변화

자료: 김영철·이민환, 2003, "지역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 경제력 유출 효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19권 2호 pp.119~141.

- 경쟁력이 약한 부실화 대학을 의미하는 대출 제한 30개 대학 중 대구대도시권(대구 및 경산 소재) 4개 대학(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공업대학, 영남외국어대학) 포함
- 우수학생의 타지역 이탈 증가
 - 대구지역 우수 중3생의 타 시·도 특목고교(외국어고, 과학영재고, 자사고, 예체능고 등) 진학 증가 : 2007년 192명에서 2009년 312명으로 증가
 - 2007~2009년 지역 내 특목고교 재학생의 지역 대학 진학률은 14.6%(대구), 21.3%(경북)으로 부산, 대전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특목고 학생들의 지역대학 진학률

구분	진학생(명)	자기 시도 대학 진학(명, %)	
부 산	3,040	750	24.7
대 구	796	116	14.6
인 천	771	25	3.2
광 주	209	0	0.0
대 전	905	214	23.6
울 산	545	27	5.0
경 기	6,829	490	7.2
강 원	577	2	0.3
충 북	1,587	438	27.6
충 남	152	4	2.6
전 북	1,308	158	12.1
전 남	1,636	129	7.9
경 북	1,715	365	21.3
경 남	1,051	146	13.9
계 주	340	57	16.8
계	21,461	2,921	13.6

자료: 교과부 자료 재정리

■ 주변도시 주민의 서울 이주 증가

- 대구의 대경권 중심기능 약화로 주변도시로부터 서울로의 이주 증가
 - 부산 주변도시들은 부산으로 이동하는데 비해, 경북 도시 중 최대 유출지가 대구권인 경우는 구미와 영천뿐

▼ 대구권과 부산권의 인구유출 비교(2005년)

광역도시 통계권	총유출	최대유출지	총유입	최대유입지	순유입
대구권(대구+경산)	504,753	서울권	486,772	서울권	-17,981
구미	66,508	대구권	71,934	대구권	5,426
영천	15,060	대구권	13,053	대구권	-2,007
포항	75,487	서울권	73,480	서울권	-2,007
경주	38,580	울산	35,270	울산	-3,310
상주	13,295	서울권	11,504	서울권	-1,791
안동	25,206	서울권	22,568	서울권	-2,638
영주	16,861	서울권	14,543	서울권	-2,318
문경	9,401	서울권	8,269	서울권	-1,132
부산권(부산+김해+양산)	687,358	서울권	669,876	서울권	-17,482
창원/마산/진해권	183,201	부산권	177,516	부산권	-5,685
울산	170,073	부산권	169,681	부산권	-392
진주/사천권	78,280	부산권	74,508	부산권	-3,772
거제	28,114	부산권	31,972	부산권	3,858
통영	23,479	부산권	23,161	부산권	-318
밀양	14,759	부산권	13,151	부산권	-1,608

자료: 김동수 외,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 2005

■ 지자체별 유사사업 추진으로 무리한 경쟁과 사업추진 어려움 발생

- 지자체별 유사사업 추진으로 무리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의 차이로 구역 간 연계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구역별 특성화 부재, 구역상호 간 연계성 부족, 인근 산단과의 업종 중복, 제조업 위주의 분양 추진 등으로 분양의 어려움과 낮은 사업성 초래

국제문화산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명대 대지소유권 유지, 사업성 저하로 투자유치 예로 • 사업성 강조되면서 게임산업보다 쇼핑몰 등에 의존할 우려
수성의료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원가 문제로 공원용지를 개발용지 변경, 정주환경 하락 • 계획 변경으로 늘어난 주거, 상업용지의 분양문제
국제패션디자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19%), 상업(17%)에 비해 산업용지는 13% 불과 • 3,600여 가구의 주택과 상업지(쇼핑몰) 분양 걸림돌
대구혁신도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중복 오송과의 경쟁으로 활성화 미지수 • 높은 분양가로 기업유치 어려움
경산지식산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명칭 변경, 개발계획 대폭 수정 • 학원 및 지식산업에서 부품산업 위주의 용지 크게 확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식서비스권역의 주요 문제점

■ 대구대도시권 쇠퇴 가능성 내포

- 2005~2008년 동안 대구의 인구 감소수가 주변 도시의 인구증가수를 상회하면서 역도시화¹⁰²⁾ 우려
 - 대구의 인구 감소를 주변 도시들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대구 및 주변도시 전반에 걸친 쇠퇴 진행

▼ 2005-2008년 대구 및 주변도시 인구 증감 현황

구분	2005년	2008년	증감수
전국	48,138천명	48,606천명	468천명
대구	2,525,836명	2,512,604명	-13,232명
주변 7개 도시 (경산, 영천, 칠곡, 성주, 군위, 고령, 청도)	607,771명	616,182명	8,411명

자료: KOSIS

2. 비전과 전략

■ 비전, 목표, 추진전략

- 대구대도시권의 지향점
 - 인재(Human Capital), 기회(Opportunity), 생산(Production), 자산(Equity)이 넘치는 희망(Hope) 가득 찬 대도시권
- 인재, 기회, 생산, 자산으로 가득 찬 대구대도시권의 실현을 위해 비전은 ‘글로벌 지식경제 중심’으로 설정
-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기본목표
 - 대경권 중추관리 거점 구축
 - 남부경제권 지식기반산업 거점 형성
 - 글로벌 인재양성 거점화

102) Klaassen(1980)과 山田浩之(1980)는 도시화의 과정을 도시화(집중적 도시화), 교회화(분산적 도시화), 역도시화로 구분하고, 역도시화는 도시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역도시화의 과정은 먼저 중심도시의 인구감소가 교외에서의 인구증가를 상회하여 도시권 전체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 중심도시뿐 아니라 교외에서도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김호철: 1998).

- 5대 추진전략
 - 통합적 대구대도시권 형성
 - 주력산업 지식산업화 및 신성장지식산업 육성
 - 타 지역과 전략적 연계 협력 추진
 - 연구중심 대학 육성 및 지역대학 네트워크 구축
 - 특성화 고교 육성



▲ 대구대도시권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3. 주요 전략사업

① 통합적 대구대도시권 형성

■ 기본방향

- 대구대도시권을 하나의 대도시로 보고, 도시 역할 설정 및 공간구조 재편 시도
- 대도시권 내 도시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 강화 방안 모색
- 포항, 구미 등 경북 도시들 및 대구경제권에 포함되는 거창, 합천, 창녕¹⁰³⁾, 밀

103) 하창연(2007)의 공간계획권역에 설정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창녕은 1차 중심도시가 대구시로, 합천 및 거창은 2차 중

양 등과 경제적·기능적 연계 강화 방안 모색

■ 주요 계획내용

- 도시 규모 및 특성 인접 도시와의 기능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구, 인접 7개 시·군 및 구미의 주된 도시 기능 및 역할 설정
 - 대구는 중추도시, 구미는 산업거점도시, 경산·영천·칠곡·달성은 신산업화 도시, 군위·성주·청도·고령은 특성화도시

○ 대구대도시권 도시별 주요 성격 설정

- 대구 : 지식경제 중심도시
- 경산 : 학원연구도시
- 영천 : 신산업도시
- 칠곡 : 산업연계도시
- 군위·성주 : 근교농업도시
- 청도 : 전원도시
- 고령 : 배후산업도시



▲ 도시별 주요 성격

○ 산업입지 체계화 및 재편 추진(장기 과제)

- 각 도시의 위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성격 체계화 및 업체의 이전 추진
- 대구 도심은 비즈니스 서비스 및 첨단산업, 경산, 달성, 칠곡 등은 R&D 및 제조업 일부, 영천, 군위, 고령, 청도 등은 제조업 위주로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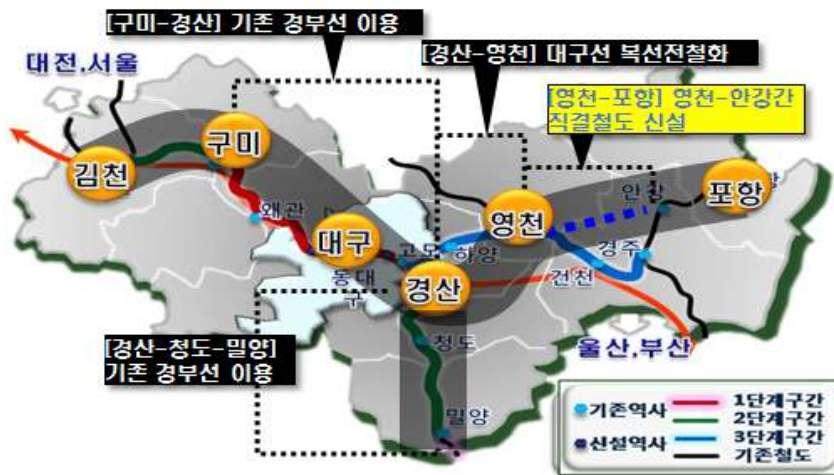


▲ 산업입지 기본방향

심도시가 대구시로 나타남.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버스운행횟수에서도 창녕, 거창, 함천의 경우 부산으로 운행되는 버스횟수보다 대구로의 운행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권 연계 강화를 위해 광역통근전철망 구축

- 산업단지 및 R&D 기능이 집중된 김천,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영천, 포항을 연계하여 산업 및 도시발전의 시너지 창출 도모
- 밀양 신공항 입지 시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여 경산~청도~밀양으로 이어지는 전철망 구축(장기 사업)



▲ 광역통근전철망 구상

- 대도시권 도시 간 도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강화를 위해 대구 4차 순환선 조기 완공, 대구진입 도로 개선, 달성군 국도 확장 및 경전철 건설로 접근성 제고



▲ 대구대도시권내 주요 도로 개선 방안

- 법제 개편 추진 및 기구 강화
 - 지침적 성격으로 직접적 개발행위 및 토지이용 행위 구속에 제한을 가진 광역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력을 갖춘 ‘(가칭)지방대도시권 구축에 관한 특별법’ 추진 필요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준의 구체화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광역적 통합 거버넌스(예 : 미국의 MPO) 구축에 대한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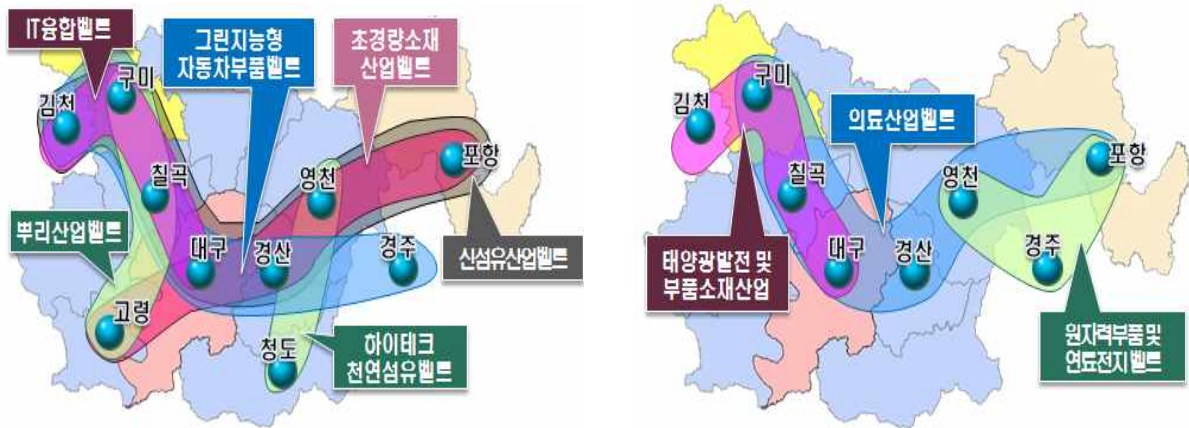
② 주력산업 첨단화 및 신성장 지식산업 육성

■ 기본방향

- 기존 단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해 전자, 자동차, 섬유·소재 등 주력산업의 지식산업화 추진
- 산업단지 간 벨트 구축을 통한 기업 간 연계 협력 활성화
- 제품·기술·산업 간 융합화 촉진으로 첨단산업융합기반 확충
- 의료, 원자력, 태양광 산업 등을 대구대도시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주요 사업내용

- 구조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주력산업 첨단화
 - 구미 및 성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구미, 성서, 경산 등 거점단지 연계 통한 주력산업기반 광역클러스터 구축 및 산학연관 협력체제 강화
 - IT 부품소재, 금속소재가공업, 그린융합 자동차 부품 등 주력산업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 IT, MT, BT 등 대경권 성장기반 통해 신성장 지식산업 육성
 - 대경 R&D 특구 신지식 거점화 등 신지식창출 R&D 역량 강화
 - 신성장동력산업(의료, 태양광, 원자력 등) 그린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주력산업 첨단화 구상

▲ 신성장 지식산업 육성

③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지역대학 네트워크 구축

■ 기본방향

- 지역의 R&D 규모 및 지역기여도 강화, 연구인력 유입 추진
-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위한 지역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 대학-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포스텍, 경북대, DGIST 등을 중심으로 R&D 인력양성 및 외부 고급 인력 유입 추진
 - 지역 거점대학인 경북대학교의 연구기능 강화
 - DGIST 중점 육성 및 산업 R&D 기능 강화
 - 다학제 간(Multi-disciplinary)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및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우수학생 유출 억제 및 제3세계 우수유학생 유입 강화
- 지역 대학 연합협의체 구축 및 산·학·연·관 컨소시엄 구축
 -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대학 간 연합협의체 구축
 - 기업지원형 R&D 인재양성 위한 산·학·연·관 컨소시엄 구축

④ 특성화 고교 육성

■ 기본방향

- 우수학생 유출 및 외국인 증가 대비, 특수목적학교 확충
- 기존 전문계고 특성화 및 신성장산업 맞춤형 고교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기존 우수 고등학교의 자사고화 추진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입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학교 확충
- 기존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배출을 위한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
- 의료, 공연, 게임산업 육성 위한 특목고 신설 검토

⑤ 타 광역권과의 전략적 연계협력 추진

■ 기본방향

- 동남권, 호남권과 함께 남부경제권 형성
- 산업, 과학기술, 인재 교류 등의 측면에서 상생방안 모색

■ 주요 사업내용

- 전국 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 중 8개를 보유한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간 과학기술교류 통한 협력 추진
- 광주목포권(클린디젤, 금형 부문), 부산·울산·경남 및 광양만권(자동차, 일반기계 부문) 등과 산업밀착형 남부경제권 구축 노력
- 광주와의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88고속도로 확장 조속한 완공 추진

▼ 남부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현황(2008년 9월 현재)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면적(천평)	주요 입주업체
광주	2004.10 - 2008.10	7,566억원	3,020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지원본부,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창원	2009-2013(예정)	450억원	25,302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두산중공업(주), LG전자, (주)효성
울산	2009-2013(예정)	427억원	46,747천㎡	RIST 울산산업기술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분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애경유화
전북	2004.10-2009.9	266억원	1,946	현대자동차, KCC, 한솔케미칼, KIST 분원
대구	2007.4-2011.12	300억원	1,007	대구기계부품연구원, DGIST, 희성전자(주)
부산	2007.12-2011.12	300억원	2,109	(주)씨플러스, (주)동화엔텍, 케이알디(주)
전남	2008.4-2012.12	300억원	18,867천㎡	(주)현대삼호중공업, (주)대한세라믹스
구미	2008.4-2012.12	310억원	24,566천㎡	삼성전자(주), LG전자(주),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주)코오롱, (주)효성, 금오공과대학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9.

4. 사업추진 로드맵

추진전략	우선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통합적 대구대도시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대도시권 구축 특별법(가칭) 추진 -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및 광역 거버넌스 구축 - 광역통근전철망 (김천~구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통근전철망 (경산~밀양)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체계화 및 재편 추진
주력산업 첨단화 및 신성장 지식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주력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 - 그린에너지 특화단지(의료 및 원자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식창출 R&D 역량 강화 - 그린에너지 특화단지 활성화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지역대학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연합협의체 구축 - 산학연관 컨소시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GIST의 산업 R&D 기능 강화 - 경북대학교의 연구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학제간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및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 지역우수학생 및 제3세계 우수유학생 유입 강화
특성화 고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우수 고등학교 자사고화 추진 - 기존 전문계고의 지역산업 맞춤형 특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공연, 게임산업 관련 특목고 신설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교 확충
타 광역권과의 전략적 연계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고속도로 확장 조속한 완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권 지방과학연구단지간 과학기술교류 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밀착형 남부경제권 구축 노력

5 동해안권 발전방향

1.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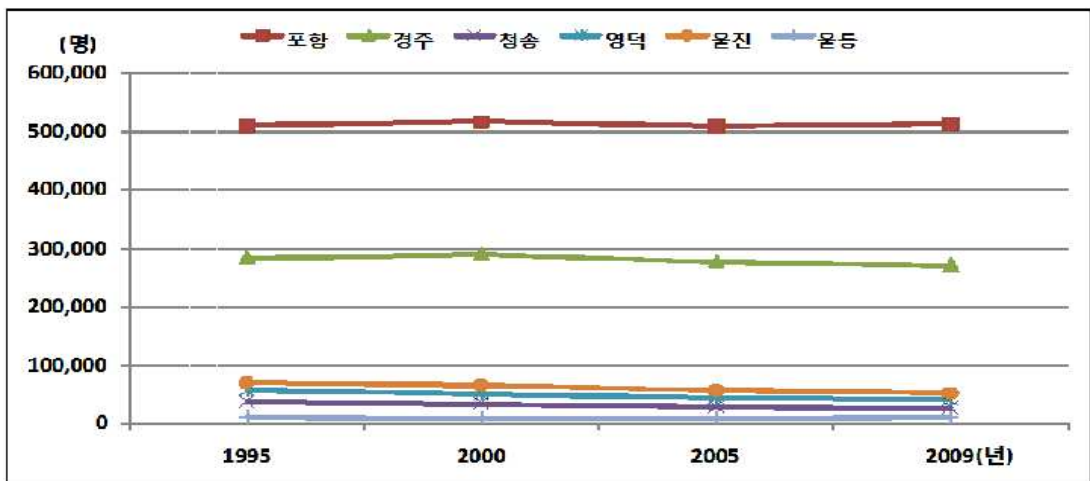
■ 동해안권의 경제성장 둔화 및 기간산업 성장 한계

- 2000년대 이후 실질 지역총생산(GRDP)은 상대적으로 성장세 저하
 - 2001~2007년 경북 동해안지역의 실질 GRDP는 연평균 4.0% 성장에 그쳐 경북 연평균 6.0%,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기타 경상북도 지역의 연평균 7.0%에 비해 크게 부진한 실정
 - 특히 2000년대 초반(01~04년)의 연평균 6.3% 성장에 비해 후반(05~07년)에는 연평균 1.0%로 크게 하락
 - 같은 기간 중 시·군별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울진(8.4%)을 선두로 울릉(5.0%), 경주(4.2%), 포항(3.5%), 영덕(0.9%) 순(이는 중심도시 포항·경주가 동해안권의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함에 있어 그 기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 1차 금속제조업 중심의 단순 산업구조 및 주력산업의 성장 한계
 - 전체 제조업 중 1차 금속 및 기계제조업이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항의 철강산업은 전국대비 2000년 26.2%에서 2007년 22.8%로 하락
 - 이는 철강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추가 성장을 위한 공장 증설 등의 움직임이 정체되고, 국내(광양, 인천 등) 및 해외(중국, 인도 등) 철강업의 급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에 기인
 - 철강산업 등 기존의 성장기반을 대체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발굴·육성에 한계
- 첨단과학 및 해양산업 R&D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중심 구조로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 미흡
 - 특성화된 포항공대를 비롯하여 5개 대학과 대학원 입지, 최근 울진군에 포스텍 해양대학원 건립 예정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 및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 향상, 생명공학연

- 구센터, 국가나노기술집적센터, 지능로봇연구소, 양성자가속기(경주) 건설,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GMSP) 등 첨단연구개발 인프라 구비
- 그러나 지역의 주력산업은 철강 등 원자재 중심 또는 원자력 등 발전중심의 산업구조로 첨단 R&D 인프라를 활용가능한 산업기반 미구축
 - 따라서 지역의 첨단연구개발 시설을 토대로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필요

■ 지속적인 인구 감소, 성장 견인 거점도시기능의 부재

- 동해안권 도시의 인구는 916천명으로 지난 15년(1995~2009년) 동안 연평균 0.4%씩 감소
 - 포항 0.03%, 경주 -0.31%, 청송 -2.28%, 영덕 -0.28%, 울진 1.92%, 울릉 -0.39%



▲ 동해안권 인구 변화

- 동해안의 거점도시인 포항과 경주의 인구는 거의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동해안권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도시기능 부재
 - 행정구역 중심의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도시기능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분위기 미조성
-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서해안지역의 전략적 개발로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

■ 다양한 관광자원의 보고, 상품화된 콘텐츠 및 자원 간 연계는 미흡

- 역사·문화·생태·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과 울릉도·독도 분포
- 경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3대 문화권 중의 하나인 신라문화권이 형성되어 다양한 역사유적 및 다수의 문화재 분포
 - 경주 311점, 포항 54점, 영덕군 67점 등 다수의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산재
 -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의 역사문화지구, 석굴암·불국사, 양동마을 등
- 428km의 청정해안, 수려한 자연경관과 온천, 계곡 등 자연관광자원 보유
 - 국립공원(경주, 주왕산), 군립공원(보경사, 불영계곡, 덕구온천 등), 삼사해상공원, 문무왕릉, 해수욕장, 해안경관도로 등
 - 울릉도·독도는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 기암절벽, 원시림, 약수 등 섬전체가 문화관광자원의 보고(특히 국가안보 및 영토수호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새로운 명소로 부각)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특구(경주 백암온천), 관광단지(경주 보문단지, 감포단지), 관광지(호미곶, 경주양남, 장사해수욕장, 고래불, 백암온천, 성류굴, 울릉도) 등 11개소 지정
-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 부족
 -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 등 기초적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방문객이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는 부족
 - 지역의 관광지에는 대부분 공공기반시설 외에 숙박시설·상가시설·휴양시설·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 경주를 제외하고는 지역거점관광시설 부재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인하기에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 간·자원 간 연계프로그램 등 관광시스템 미구축

■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 접근성 열악 등으로 지역발전 지체

- 경북 동해안지역은 서·남해안 지역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광역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포항과 경주는 고속도로, 철도, 항공편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청송, 영덕, 울진, 울릉은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전무한 실정
- 동해안으로 접근하는 광역고속도로는 ‘대구~포항고속도로’가 전부, 최근 동해안 시·군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광역 및 지역 간 연계 교통망이 미흡한 실정
-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 5축 간선도로(봉화~울진), 동서 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동해고속도로(울산~포항) 등이 착공되었으며, 향후 이들 사업이 완공되면 동해안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환동해경제권 시대를 대비하여 2009년 개항한 영일만항은 항만해운 관련시설의 집적 미흡, 접근교통망 취약 등으로 아직까지 활성화 미흡

2. 비전과 전략



- 동해안권의 비전은 ‘신해양시대 첨단산업·관광의 중심’으로 설정
 - 동해안권 거점도시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청송, 영덕, 울진, 울릉이 첨단과학과 관광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
 - 대구권, 부산·울산권, 강원권과 연계함으로써 동해안권이 첨단과학산업과 산

림·해양관광으로 특화된 동해안권 조성

- 기본목표 : ‘첨단R&D기반의 녹색산업의 거점’, ‘오감체험형 문화관광지역’
- 추진전략 : 첨단 R&D 클러스터 구축, 주력 및 신성장산업의 구조고도화, 역사문화 정체성 강화, 해양산림의 복합관광산업 육성, 대경권의 동해안 관문기능 강화, 광역협력 거버넌스 구축

■ 공간구조 설정

- 중심 발전축 : 울산~포항~영덕·울진~강원을 연결하는 동해안 발전축
- 동해안권 공간구상 : 1 Hub, 3 Tour Area
 - 1 허브 : 포항과 경주, 중심거점기능 수행
 - 4 지역거점 : 청송, 영덕, 울진, 울릉 등 허브지원기능 수행
 - 3 관광권 : 역사문화권, 내륙휴양권, 해양관광권
- 3대 경제관광벨트 구축
 - 산업경제벨트 : 포항~경주~울산을 연계
 - 내륙관광벨트 : 포항~청송~영덕을 연결
 - 해양관광벨트 : 포항~울릉~울진을 연계



▲ 동해안권 공간구조

3. 주요 전략사업

① 영남권 R&D 거점화를 위한 가속기클러스터 조성

■ 기본방향

-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친화형 R&D 기반 강화를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업종 다각화
- 지역산업 특화 중심의 R&D 기반 확충과 이를 활용하여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소 유치 등

■ 주요 사업내용

-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 기 구축된 포항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경주 양성자가속기와 상호 연계시켜 영남권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 이를 통해 지역의 철강산업 등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신소재·부품, 신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 한국가속기 연구원 설립
 - 국가 대형 R&D 기반 연구시설인 3대 가속기의 직접적인 활용 및 개발된 장치응용기술의 활용,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제공 등을 통해 관련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
 - 가속기 관련 첨단의료 및 IT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과 대형가속기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촉진,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체 등 산업지원
- 원천융합기술 산업화 지원
 - 3대 가속기를 활용한 원천기술과 원천기술 간 융합화로 핵심 신기술 개발
 -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을 조기에 산업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
- 연계사업으로 막스플랑크 연구소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센터 건립, 글로벌 친환경 정주환경 조성

②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육성

■ 기본방향

- 포항을 중심으로 철강 및 첨단소재 R&D 기능 강화로 신소재부품 관련 기술 개발로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포항, 경주, 울산지역의 기간산업 간 연계성을 원활히 하며, 업종간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원자력 및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 주요 사업내용

- 첨단소재 R&D 클러스터 조성
 - 첨단소재 R&D 및 신소재산업 육성(비철금속, 나노전자, 바이오·의료, 에너지, 지능로봇부품 등)
 - 신소재 산업별 기술개발, 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화 시스템 구축 등
- 포항~울산 기간산업 테크노벨트 조성
 -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포항의 철강, 울산의 자동차·조선산업을 연계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 이를 위해 첨단소재 R&D클러스터(포항)와 그린에너지 집적단지(경주) 조성
- 포항~울산간 초광역 준산업단지 조성
 - 포항~경주~울산지역 간의 무질서하게 들어선 개별입지 밀집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개별공장 난립지역 재정비, 지원서비스센터 조성 등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 원자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 공급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R&D와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발전시설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부품 생산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선도

③ 문화관광산업 거점 구축 및 자원의 지역 간 연계

■ 기본방향

- 세계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관광 거점화
- 동해안과 낙동정맥을 연계한 산림과 해양의 복합웰빙관광지대 조성
- 경북 동해안뿐 아니라 강원, 울산 등 동해안권을 연계한 관광소프트웨어 발굴

■ 주요 사업내용

-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거점화
 - 불국사, 석굴암, 양동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경주새천년공연관광, 컨벤션관광산업 육성 등
- 해양과 산림이 융합된 복합관광 육성
 - 대게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
 - 낙동정맥 주변지역의 산림, 유양, 레포츠 등 융·복합형 관광기반 구축
 - 산림~해양~생태가 어우러진 복합웰빙의 치유관광지대 조성
- 울릉도·독도 국제관광 기반 조성
 - 울릉도의 독특한 자연 및 해양자원과 독도의 영토수호차원 상징성을 바탕으로 사동항 건설, 일주도로 건설 등 국제적적인 관광기반시설 확충
 - 울릉도·독도를 활용하여 해양과 내륙을 연계관광패키지 상품 개발
- 관광자원의 지역 간 연계 강화
 - 경주~포항~영덕~울진의 관광지, 해안경관 등을 연결하는 동해안 일주경관도로 조성
 - 동해안지역에 관광자원과 경관이 뛰어난 10곳을 지정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해돋이 명소 등을 지정
 - 망양정, 월송정 등 관동팔경으로 이어지는 강원과 연계한 관광코스화 추진

④ 광역협력 거버넌스 구축

■ 기본방향

- 권역 내 및 권역 간 도시의 비교우위의 기능을 상호 접목함으로써 동해안권의 거점기능 강화 및 도시별 경쟁력 강화 도모
-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동해안권 중심거점기능 강화
 - 포항과 경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심거점기능 강화
 - 중장기적으로 포항과 영덕의 도시통합 검토
- 권역간 비교우위의 도시기능의 연계 협력 추진
 - 대구대도시권 : 의료, 교통, 쇼핑 등 서비스산업
 - 울산·부산권 : 철강 및 신소재부품, 에너지 등 기간산업
 - 강원권 : 역사문화, 해안경관 등 관광산업
- 광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존 ‘동해안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의 활성화
 - 도시간 공동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과제 발굴을 통한 공동 추진
 -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⑤ 광역 및 지역간 연계교통망 조기 확충

■ 기본방향

- 동해안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간선교통망의 조기 완공
- 동해안권 발전 잠재력 제고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및 물류항만 거점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동서 및 남북 광역교통망 확충
 - 동해안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서 5축 간선도로, 동서 6축 고속도로, 남북 7축(영덕~울산)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영일만항 물류거점 육성 및 연계교통망 확충
 - 영일만항 및 항만배후단지 조기 조성
 - 기계~영일만항 고속도로, 영일만항 인입철도 등 항만물류산업 지원인프라 확충을 통한 항만물류시스템 경쟁력 제고
 - 항만과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물류클러스터 조성

4. 사업추진 로드맵

구분	우선사업	중점사업	장기사업
영남권 첨단 R&D 거점화	양성자가속기 건설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 향상 추진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양성자가속기 연계)	한국가속기 연구원 원천융합기술산업화 지원 막스플랑크 연구소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센터 건립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녹색산업화	신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첨단소재R&D클러스터 조성 그린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구축	원자력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중산업단지 조성 철강단지 생태산업단지화
문화광의 특화 및 자원 간 연계화	세계문화유산 등 도시 정체성 확립 특산물 활용 관광기반 구축	경주새천년 공연관광 해양스포츠 기반 조성 산림휴양레즈 조성 울릉도 독도관광기반 조성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컨벤션관광산업 육성 동해안 일주경관도로 조성 및 10경 명소화사업 낙동정맥 생태탐방로 조성
광역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존 광역행정협의체 활성화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동해안권 중심거점기능 강화 도시간 공동발계획 수립 공동사업과제 발굴 및 사업의 공동추진	비교우위의 도시기능 연계 협력(대구대도시권, 울산·부산권, 강원권 등)
항만 및 연계 인프라	동서 5축 간선도로 동서 6축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KTX 포항직결선 신설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 조성 동해중부선 부설 울릉일주도로	울릉(사동)항 건설 기계~영일만항 고속도로 영일만항 인입철도

⑥ 도청신도시권 발전방향

1. 도청신도시권의 총체적 문제

■ 낙후지역 이미지 탈피

- 중앙정부 산업경제정책은 농림어업 희생 위에 제조업의 성장을 이루었고, 도청신도시권은 국가발전축에서 소외됨에 따라 광역인프라 투자 미비
 - 영세 제조업과 농림업 중심인 도청신도시권은 산업의 낙후로 지역민의 지속적인 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지역혁신역량 저하
 - 지방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역혁신 기반 인프라 투자 여력이 없으며, 중앙정부의 하향적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정책 수립 곤란
- 도청신도시권은 산지, 수질, 문화재 보호 등의 과도한 규제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 불가능
- 아울러 지식기반사회 도래는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의 인적 혁신역량의 부족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적인 대처 곤란
- 중앙정부의 낙후지역개발이 국지적·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사회간접자본이 계획적·광역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비효율성 양산
- 도청신도시권은 산업화의 부진, 자연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규제,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곤란 등 새로운 접근을 통한 비전과 발전전략 필요

■ 새로운 접근방향의 설정 필요

- 도청신도시권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발전축에서의 소외로 인한 지역혁신역량 부족
 -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는 있으나 이에 따른 보상은 전혀 없었고, 물류인프라의 건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빈곤의 악순환 계속
- 이러한 악순환의 탈피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각 시·군의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정책 필요성 제기 필요

- 이를 위해 지역이 지닌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자원과 메가트랜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적합한 정책선택과 집중투자 필요

2. 도청신도시권의 자원과 트렌드

■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자원

-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에 따른 규제로 보존된 한반도 핵심 생태의 보고
-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풍광
 - 안동 하회마을, 영주 부석사, 예천 용문사 등 가장 한국적인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문화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
 - 상주 경천대, 봉화 청량산, 영주 무섬마을 등 산과 강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보유
- 친환경 농축산물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약·한방자원 보유
 - 의성 마늘, 영양 고추, 영주 도라지, 예천 참깨, 봉화 배추 등 농축산물이 풍부하고, 작목반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됨
 - 풍기 인삼, 의성 작약, 안동 마 등 생약·한방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B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준비 중

■ 도청신도시권의 트렌드를 최대한 활용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 증가 예상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도청신도시권의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 활동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세수입 감소와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연결되어 결국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예상
- 노인인구의 증가와 부양연령층의 감소에 따라 생활서비스 변화 필요
 - 도시 기능적 측면에서 고령자 부양 연령층 감소에 따라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되어 생활서비스 시설의 구성과 운영에

- 있어서 고품자 중심의 변화 필요
- 녹색자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 추진
 - 낙동강 프로젝트, 백두대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에는 한계
 - 낙동강 및 백두대간, 낙동정맥 등 자연환경을 녹색성장축으로 활용하여 물과 초록이 풍부한 자연도시 창출 필요
 - 대규모 산업도시가 아닌 소규모 산림도시, 워터프런트 농업도시 등 다양한 자연도시 형성 필요
 - 스위스 등 산악국가에서는 중소규모의 산림도시를 조성하고, 독일 등 강이 중심인 국가는 강을 따라서 네트워크형 농업 및 상업도시를 형성
 - 세계적으로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중
 - 저탄소녹색도시는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성과 환경성을 적극 반영한 신규개발형과 기존 도시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환경을 높이는 도시 재생형의 두 가지로 동시에 진행
 - 세계 각지의 낙후지역에서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과 문화, 과학 기술 등 창조성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 추진
 - 지역의 문화유산과 이벤트(스포츠·문화)를 활용한 창조도시 구현
 - 도청신도시권은 문화중심형과 유산보전·활용형을 추구하고 이벤트를 최대 활용



▲ 창조도시 유형 사례

- 기초적 공공서비스 조건이 현저하게 저하된 취약지역에 고립되어 있거나 산재해 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단위 재편 노력
 - 이전단지에 개별 세대의 의향에 의해 이전하게 되는 집락이전형
 - 취약과 영농, 농특산물의 가공 등 동일 농특산업의 세대가 중심이 되고 자치활동의 기능만 재편하는 집락비이전형

▼ 집락재편 유형

집락재편 타입		사업 내용
거주지이전형	집락이전형	집락의 합의에 의해, 집락의 대부분 세대가 동일한 이전단지에 이전
	이전유도형	공공이 사전에 준비한 이전단지에 개별세대의 의향에 의해 이전 집락합의 형성이 필요 없음
거주지비이전형	커뮤니티 편성형	자치활동 종합형 복수의 집락을 대상으로 거주이전 없이 자치기능만 재편
	신규거주 전입형	신규거주자의 전입에 따라, 집락구성원을 재편

3. 비전과 목표

■ 비전 : 백두-낙동 그린파라다이스

- 도청신도시권은 백두대간, 낙동정맥, 낙동강 등 청정자원의 보고이며 환경생태자원을 전국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
- 낙동강 전역이 국가 환경의 주력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 및 바이오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 이러한 도청신도시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환경경제의 시대에 대비한 국가발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 4대 목표

- 세계적 문화환경 지역
- 국토의 신발전 거점
- 녹색산업 기반 지역
- 고품격 WELL 정주도시



▲ 도청신도시권 발전 비전

4. 추진전략

■ 도청신도시의 성공적 조성과 중추관리도시화

- 전통문화와 생태환경, 행정·지식이 융합된 압축도시로 성공적 도시 조성
 -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 경북 신성장을 선도하는 행정·지식산업도시
- 경상북도의 중추관리도시로서 허브기능 강화
 - 경북의 다차원적인 허브와 종합지원기능 부여
 -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 부여

■ 산업의 공동 연계 발전방안과 신산업 발굴·육성

- 지역별 핵심전략 산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발전 거점화
 - 거점별 중점 육성산업의 클러스터 형성 및 광역 네트워크 구축

- 그린바이오, 생태산업집적지, 해양특화 전략 등 내생적 혁신기반 구축
- 기존산업 구조고도화
 - 산업 참여 핵심인력의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화 전략 및 연계 협력 특성화 방안 강구
 - 농림어업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구축
 - 생산기업 근접성과 공공재, 인력, 정보, 기술접근성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 도청신도시권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여 환경경제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신산업지대 구축
 -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 생물 및 신소재·문화관광산업을 광역클러스터 벨트화

■ 관광부문의 부가가치 제고 및 경쟁력 기반 구축

- 산림자원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종합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 특히 전통문화·산림자원과 산업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 21세기 관광환경 변화에 지역 간 연계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문화·관광특구 개발을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
- 문화유산,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 산업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의 벨트화로 관광부문의 부가가치 제고 및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여 청정환경기반 국제관광문화벨트 구축

■ 고령화, 다문화사회 등 지역사회 변화에 대비한 정주기반 강화

- 도청신도시권은 고령친화형 도시로의 공간 및 지역사회시스템 대응 필요
 - 집락재편 등 마을단위 공간체계 변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 고령친화모델을 도시에 확대 적용하여 고령친화형 도시 조성
 - 기초생활권 및 읍·면 단위 개발사업에 고령친화형 사업 도입

-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화
 - 지역공동경영체(지역농업법인, 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기업) 육성
 - 농촌마을사업에 있어서 고령자 경제활동 사업 우선 도입
 - 농림부문 사회적 노인일자리 지원
-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노인인구의 활용
 - 폐교 또는 소규모 학교를 지역사회센터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강화
- 농·상업 중심 워터프런트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 강과 호수 등 수변공간과 도시농촌지역과 연계형 발전
-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중소도시의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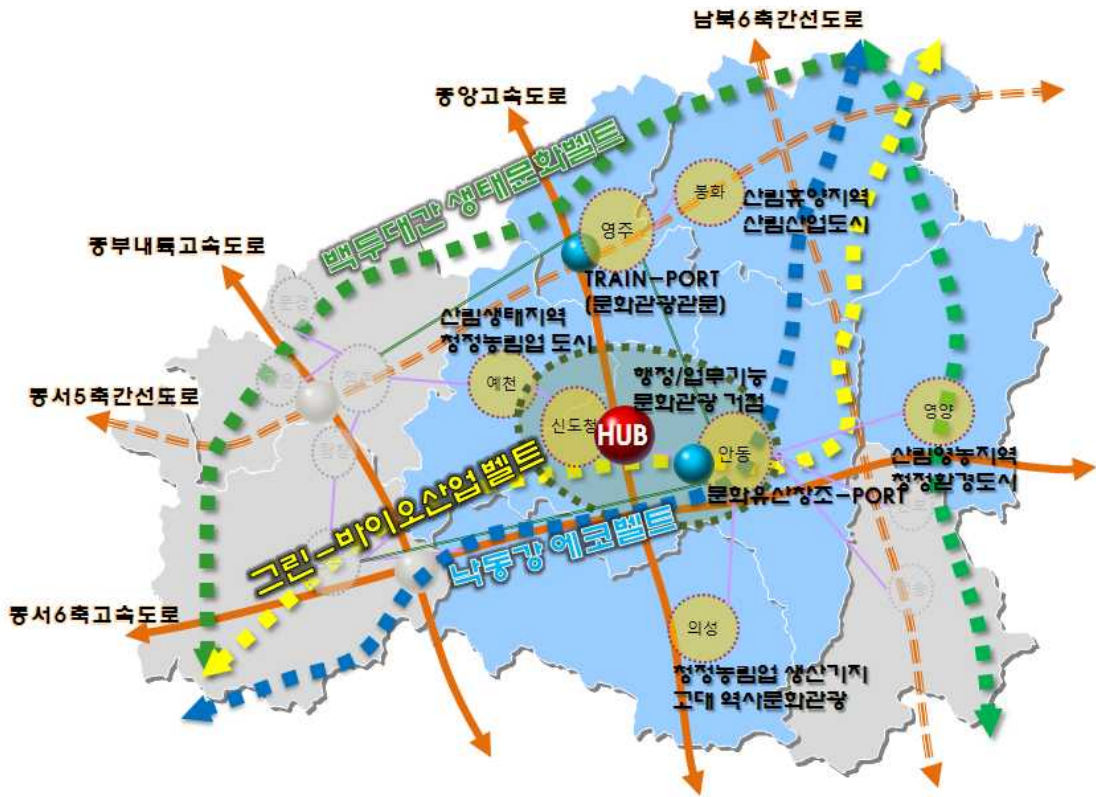
■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환경경제의 흐름 강화

- 지리적으로 대도시의 발달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청신도시권은 네트워크방식에 의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개발 필요
- 네트워크화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화합 방법론의 하나, 이를 위해 지역 간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하지만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도청신도시권은 교통·물류 SOC의 낙후 지속
- 통합시스템 측면에서 계획되어야 할 주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역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한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확충

5. 공간구조 설정

- 도청신도시권의 공간적 연계는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1개의 허브와 3개의 PORT로 2×3 네트워크로 설정
- 도청신도시권 공간구상 : 1 Hub, 2 Port
 - 1 Hub : 도청신도시 (신도시)
 - 2 Port : 안동, 영주 Twin-Port(도청신도시권의 주요 거점도시)

- 2×3 네트워크(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남북6축 간선도로와 동서5축 간선도로, 동서6축 간선도로)
- 3특화벨트(백두대간 생태문화벨트, 낙동강 에코벨트, 그린-바이오산업벨트)



▲ 도청신도시권 공간구조

6. 주요 전략사업

■ 경상북도의 행정중심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 기본방향 : 전통문화와 생태환경, 행정·지식이 융합되는 압축도시
- 추진전략
 -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 경북 신성장을 선도하는 행정·지식도시

○ 신도시 조성계획

-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 계획인구 : 10만명, 전체 면적 약 11km²
- 테마형 주거단지 조성(원주민 마을, 생태마을, 예술촌 등)
- 목표년도 : 2027년
- 신청사 건립
 - ▶ 규모 : 부지 288천m², 건물 127천m²
 - ▶ 지사업비 : 4,073억원
 - ▶ 사업기간 : ~ 2013년

■ 문화·건강·엔터테인먼트산업과 산림자원 활용, 녹색산업 육성

○ 기본방향 : 지역특성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 추진전략

-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풍부한 산림자원
-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풍광
 - ▶ 한국문화의 원형과 산과 강 등의 아름다운 풍광을 활용
- 친환경 농축산물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약·한방자원
 - ▶ 풍부한 농축산물과 생약·한방자원 등에 BT 기술 활용, 신성장기반 마련

○ 전략사업

- 엔터테인먼트산업과 녹색산업
 -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 : 안동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영주를 중심으로 건강산업, 문경을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 ▶ 산림과학벨트 형성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 : 산림자원과 관련 기관의 입지 기반 산업화, 그린바이오, 생태산업집적지, 산림과학벨트 내생적 기반을 활용한 녹색산업 육성, 봉화(수목원), 영양(산채), 청송(산악레포츠), 예천(곤충), 영주(테라피), 문경(식품), 안동(R&D) 등
- 지역 특화산업의 기반 조성

- ▶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 한방, 생약, 산약초, 식품 등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조성
- ▶ 농림업 비즈니스파크 조성 : 지역별 특화생산품과 연계 농촌테마공원 및 농업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산림비즈니스지구 조성
- ▶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 영주 인견, 문경 오미자, 영양 고추, 청송 사과 등 지연산업의 구조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 그린-컬처노믹스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기본방향 :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체험·휴양목적지 구현
- 추진전략
 - 문화와 생태관광 개발의 새로운 모델 창출
 - 문화체험과 자연생태관광 융합 성공모델
 - 지역간 협력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이색체험 관광상품 개발
 - 산림·해양, 문화·건강휴양관광의 클러스터화
- 전략사업
 - 코치투어 프로그램 연계·운영 : 영주와 문경을 출발점, 안동을 허브로 공동 여행버스 운영
 - 고택관광자원화 : 고택 리모델링으로 관광인프라 확충과 고택체험프로그램 발굴
 -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강화 : 도청신도시권 유교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연계화
 - 청소년 캠프장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영주, 문경, 봉화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캠프장 조성·운영
 - 산촌휴양마을 조성 : 산촌생태 및 자연생태 우수지역에 치유를 테마로 하는 웰빙형 산촌휴양마을 조성
 - 물도리마을 강수욕장 조성 : 낙동강의 물도리마을 중심으로 수자원과 경관자원을 활용한 강수욕장 개발

■ 환경·자원관리를 통한 경쟁력 기반 강화

- 기본방향 : 백두-낙동 환경기반 협력발전모형 구축
- 추진전략
 - 백두-낙동의 생태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공동협력
 - ▶ 자연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공동협력 체제 구축
 - ▶ 광역적 재난발생에 대한 연계체계 구축
 - 주변지역 사업과 차별화 및 연계
 - ▶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 특화를 통한 생태체험 및 건강휴양중심으로 차별화
 - ▶ 타 지역 백두대간 및 낙동정맥 연계 광역관광상품 개발
 - 생태, 건강·휴양관광의 클러스터화
- 전략사업
 - 천혜의 백두-낙동 환경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생태거점으로 육성
 - ▶ 자연치유벨트 구축 : 국립산림테라피 단지와 연계하여 한방약재, 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한 자연치유벨트 구축
 - ▶ 친환경 생태 광역네트워크 구축 :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낙동강을 연계하는 친환경적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네트워크 구축
 - ▶ 백두-낙동 공동방재 네트워크 구축 :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광역적 재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재 네트워크 구축

■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기반 강화

- 기본방향 : 지역사회의 자립화와 고령친화모델 구축
- 추진전략
 - 고령친화형 도시로의 공간 및 지역사회시스템 변화
 - ▶ 고령친화모델을 도시부분에 확대 적용을 통한 고령친화형 도시 조성

- ▶ 기초생활권 및 읍·면 단위 개발사업에 고령친화형 사업 도입
- 지역사회단위의 공동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화
 - ▶ 농촌마을사업에 있어서 고령자 경제활동 사업 우선 도입
 - ▶ 농림부문 사회적 노인 일자리와 관광부문 다문화 일자리 지원
- 지역사회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 친화도시 만들기
 - ▶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노인과 다문화 가정의 활용

[고령친화모델의 전개]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전국에 의성군, 부여군, 순창군, 원시 등 4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도청신도시권에는 의성군이 시범지역으로 포함
-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모델』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국고 100억원 이상 지원
-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건복지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노인 서비스 등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

○ 전략사업

- 고령친화모델 구축과 지역사회 시스템 변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 친화형 도시 모델 조성
 - ▶ 고령친화모델 사업 추진 : 고령친화모델 사업을 지역사회마을 또는 읍면 단위로 추진함과 동시에, 고령친화형 마을 조성, 고령친화형 지역사회사업,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
 - ▶ 지역사회 경제공동체 사업 : 지역공동경영체(지역농업법인,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기업) 육성함과 동시에, 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공급(체험교사, 외국어해설)
 - ▶ 지역사회공동체 마을기반 조성 : 폐교 또는 소규모 학교의 지역사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마을단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공동체 육성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창조도시 조성
 - ▶ 지역의 문화유산과 이벤트(스포츠·문화)를 활용한 창조도시
 - ▶ 문화중심형과 유산 보전·활용형을 추구하며 이벤트 활용

■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 및 경제의 흐름 강화

- 기본방향 : 네트워크 방식에 의한 지역 간 연계 발전 기반 구축
- 추진전략
 - 지역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화합
 - 지역 내부를 연결하는 횡망 구축
 - 다차원적 통합시스템으로 네트워크 구축
- 전략사업
 - 고속국도 구축계획
 - ▶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상위계획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도청신도시권의 도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 기존 상위계획사업 : 동서5축(봉화~울진 구간) 조기 건설
남북6축(봉화~청송 구간) 조기 건설
 - ▶ 추진 중인 사업 : 상주~영덕(106.6km, 4차로, 2014년 완공)
 - 철도망 구축계획
 - ▶ 남북 간 철도망 건설 : 경북선·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동해중부선 계획
 - ▶ 동서 간 철도망의 연결 : 봉화~울진 및 김천~영덕간 단선철도 신설계획
 - ▶ 도청신도시권의 순환 철도망 구축

▼ 철도망 구축 사업

번호	사업명	국가기간교통망	국가철도망
I	경북선 복선 전철화 사업 (김천~상주~문경~영주)	○	○
II	김천-영덕 단선철도 신설	○	○
III	봉화~울진 단선철도 신설		○
IV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영천~영주~도담)	○	
V	중부내륙 단선철도 신설 (여주~문경)	○	



〈고속국도〉



〈철도망〉

▲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7. 사업추진 로드맵

■ 우선순위 선정 조건

○ 단기사업

- 도청신도시권의 현재 역량에서 사업의 추진이 용이한 사업
- 도청신도시권의 발전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 현재 사업시행 중이거나 사업시행 예정인 사업

○ 중장기사업

- 정부부처와 오랜 협의가 필요한 사업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
- 선행투자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사업의 효과가 오랜 기간을 요하는 사업
- 상대적인 중요성이 낮은 사업

■ 사업 우선순위 선정

	사업명	2013	2015	2018	2020
산업	농림업비즈니스 파크				
	지연산업구조 고도화				
관광	코치투어프로그램 연계운영		계속운영		
	고택관광자원화				
	유교문화체험		3대 문화권 software차원		
	청소년캠프교실				
	산촌휴양마을				
	물도리강수욕장(안동 영주 예천)				
환경	자연치유벨트(백두대간~대구)				
	친환경생태벨트(백두-낙동)				
	백두-낙동 공동방제네트워크				
복지	소규모마을재편사업		(시범사업) 비이전형	이전형	
	고령친화모델(읍, 면)				
	지역사회 경제공동체 조성		(시범사업) 확대사업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시범사업) 확대사업		
도시	산림도시조성		(수목원 지원지구시범사업) (시범사업)	확대사업	
	워터프론트도시 조성		(도정이전 신도시 시범사업)	확대사업	
	문화유산장조도시 조성		(3개도시 개별추진)		

	사업명	2013	2015	2018	2020
관광	코치투어프로그램 연계운영		계속운영		
	고택관광자원화				
	유교문화체험		3대 문화권 software차원		
	청소년캠프교실				
	산촌휴양마을				
	물도리강수욕장(안동 영주 예천)				
환경	자연치유벨트(백두대간~대구)				
	친환경생태벨트(백두-낙동)				
	백두-낙동 공동방제네트워크				
복지	고령친화모델(읍, 면)				
	지역사회 경제공동체 조성		(시범사업) 확대사업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시범사업) 확대사업		
도시	워터프론트도시 조성		(도정이전 신도시 시범사업)	확대사업	
	문화유산장조도시 조성		(3개도시 개별추진)		

7] 첨단산업도시권(구미·김천) 발전방향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5년간 인구 정체 상태

- 구미 인구는 1978년 시 승격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다소 정체 상태이며, 2010년에 인구 40만 도시 진입
 - 2008년 이후 유소년층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30대 이하 인구 비율이 낮아져 경제활동인구가 점진적 감소
- 김천 인구는 1980년에 비해 4만명 이상 감소하였으며, 2005년부터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어 2009년 현재 인구는 약 13만 8천명 수준
 - 2009년 현재 노령인구가 17.9%에 달하는 고령사회이며, 2013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도시 면적은 김천이 구미보다 넓으나, 인구 및 산업은 구미에 집중
 - 면적 : 김천 1,009.1km²(62.1%) vs. 구미 616.5km²(37.9%)
 - 인구('09) : 김천 135,918명(25.5%) vs. 구미 396,419명(43.8%)
 - 제조업 생산액('08) : 김천 약 3조 5천억(5%), 구미 약 66조 4,577억원(95.0%)

■ 구미,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 새로운 활로 모색 필요

- 구미는 삼성·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IT산업에 특화하여 국내 1위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대기업을 수도권 이탈과 중소기업의 동반이탈로 심각한 경쟁력 저하 위기에 직면
 - 최근 IT 중심 단일산업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다원화·첨단화된 IT 융복합형 그린에너지도시를 지향
- 김천은 포도 중심 단순생산의 농업도시였으나, 최근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합성수지·전기전자·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규모가 2배 이상 증대
 - 농가인구 감소 : 31.9%(2000년) → 23.6%(2008년)

- 기존 산업단지(김천 1, 2차, 아포, 감문, 지례, 대광)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관련 김천일반산업단지 805천㎡를 조성 중

■ 대구 등 주변 도시와의 상생방안 강구 필요

- 열악한 정주여건은 기업유치 및 젊은층·고급인력의 역외유출 초래
 - 수도권 대기업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기피, 낮은 교육기반에 따른 대구 등 대도시로 인구 유출 가시화, 기업 R&D 및 전문인력 공급 한계 등의 문제에 직면
- 대도시권 경쟁시대에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준비 부족
 - 경제자유구역, KTX 및 혁신도시, 낙동강 살리기 등과 같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연계하여 대구·칠곡·상주 등 주변도시와 동반발전을 견인할 협력 시스템 필요

■ 김천과 구미의 연계 협력체계 미흡

- 혁신도시 유치로 에너지 및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과 KTX 역사 건설에 따른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은 대경권 녹색산업 관문으로서 위상 강화
 - 한국전력기술(주) 포함 13개 공공기관과 4,100여명 우수인력 유입
 - KTX역 건설은 기존 경부선·경북선 철도, 경부·중부내륙 고속도로, 4개의 국도와 더불어 교통요충지 위상을 더욱 강화
- 포도 중심 단순생산의 농업도시였으나, 최근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합성수지·전기전자·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규모가 2배 이상 증대
 - 기존 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관련 김천일반산업단지 805천㎡를 조성 중
- 2005년부터 인구감소 둔화로 2009년 현재 13만 8천명 수준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
 - 하지만, 2006년 노령인구가 유년인구를 초월하여 2009년 현재 17.9%에 달하는 고령사회이며, 2013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는 김천은 대도시권 경쟁시대에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태

- KTX 및 혁신도시, 낙동강 살리기 등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대구·칠곡·상주 등과 동반 발전할 협력 시스템 부재

2. 비전과 목표

- 구미와 김천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도시권의 비전을 ‘세계로 열린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설정
 - 대구대도시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대경광역경제권 내 첨단산업에 특화된 강력한 소경제권을 구축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기본목표와 4대 추진전략을 설정
 - 3대 목표 : IT 융복합산업 글로벌 거점 도약, 단일도시형 소광역경제권 형성, 녹색성장 도시화 선도
 - 4대 추진전략 : IT 기반 신산업밸리형 도시권 육성, 낙동강을 활용한 녹색벨트 구축, 공동발전 위한 협력체제 구축, 광역교통체계 구축한 연계성 제고



▲ 첨단산업도시권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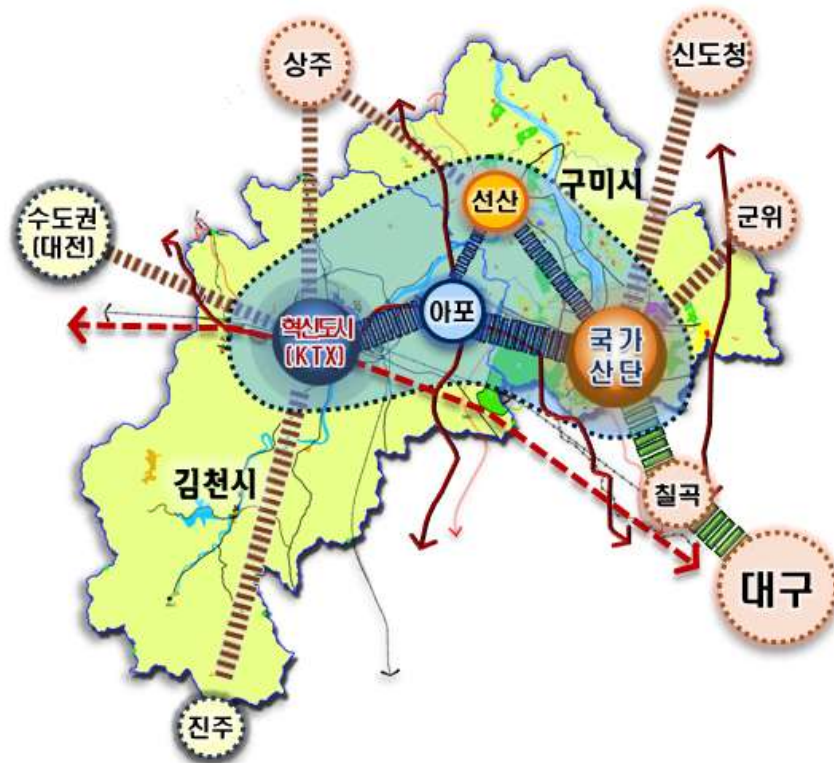
3. 공간구상

■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

- IT융합벨트 구축
 - 김천~구미~칠곡~대구 등
- 광역거점도시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해 소광역경제권 확립
 - 중추도시 대구와 연계 성장
 - KTX 이용권의 확대
-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녹색산업기술을 구미산업단지와 연계함으로써 녹색산업 육성

■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

- 구미~김천 연계발전 협력 기반 마련



▲ 첨단산업도시권 공간계획

4. 주요 전략사업

① IT기반 신산업밸리형 도시권 육성

■ 기본방향

-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특화산업단지로 전환하고 단지별 핵심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밀착형 지원 기반 마련
- 입주수요를 고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구미산업 수요와 연계된 산업단지를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구미 1·2·3단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 구미1단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
 - 차세대 부품소재 생산집적단지로의 전환 및 중소기업 집적화단지 조성
- 구미 신규 산단 업종 다각화를 통한 융합신산업 육성
 - 구미 5단지 조성 : 2차 전지, 솔라모듈 등 관련 기업 유치
 - 그린에너지 부품소재산업, 첨단의료융합산업 기반 구축
- 구미산업단지 배후 지원기능 강화
 - 김천산업단지 추가 조성 및 아포 2차 농공단지 확대 조성
 - 아포지역에 산업기능을 집적하고 구미산단의 배후 정주기능을 강화하여 첨단 산업도시권의 연계 거점화 도모
- 김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 녹색산업기술 육성
 - 이전 공공기관 관련 에너지와 농생명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차세대 전력IT 기술 확보와 안전식품 연구개발에 매진
 - 충북의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녹색산업 관문지대로 육성

② 낙동강을 활용한 녹색벨트 구축

■ 기본방향

-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재창조 및 리버노믹스(Rivernomics) 구현
- 도심 하천 생태환경 복원 및 친수공간 확보로 도시민에게 쉼터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구미 낙동강변 수변도시 재창조
 - 낙동강 및 구미·금오천 일대에 자전거 에코트레일, 생태습지공원 및 비즈니스 업무시설을 도입하여 낙동강 리버노믹스 구현
 - 도심 하천인 구미·금오천 일대를 물 순환형 수변도시로 조성
 -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녹색문화 창조프로젝트와 연계, 공공디자인, 산업단지 문화센터 설치, 생활밀착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 낙동강 지류 생태관광자원화 및 인프라 구축
 - 감천 뚝방길 자전거 투어로드 등 감천 100리 친수공간 조성
 - 직지사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부 친수공간 확대

③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및 연계성 제고

■ 기본방향

- 구미와 김천의 양 도시 간 비교우위를 조화롭게 접목함으로써 하나의 소경제권으로서 첨단산업도시권 형성
- 양도시의 내부적 역량 한계 극복과 자원의 효율적 공유를 위해 김천~구미 협력을 강화하고 연계 교통인프라를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첨단산업도시권 형성을 위한 협력기반 강화

- 구미·김천 공동발전계획 수립과 협력 현장 제정
- 조례 제정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김천~구미~대구대도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 김천(구미) KTX역사~구미5단지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 건설(2015년)
 - 대구대도시권 광역전철망 김천 연장 우선 추진 (2단계→1단계)
 - 구미·김천 시내버스 통합 운영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 김천(구미) KTX역의 종합환승센터화
 - 김천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및 환승주차장 확대를 통한 이용객 환승 편의 제공
 - 버스, 택시, 리무진버스, 렌터카 도입 등 대중교통 우선 연계 교통체계 구축

5. 사업추진 로드맵

추진전략	우선사업	중점사업	장기사업
IT기반 신산업 밸리형 도시권 육성	구미1산단 리모델링 시범사업 구미5단지 조성 (IT융합 중핵기업 육성) 김천 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	그린에너지 부품소재산업 육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련 산업기술 육성	첨단의료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아포 제2농공단지 조성
낙동강을 활용한 녹색벨트 구축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	낙동강 리버노믹스 조성 김천 녹색회랑 친수공간 조성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및 연계성 제고	구미·김천 공동발전계획 수립 KTX역/구미산단 연결도로	구미·김천 연계 협력기반 강화 대구권 광역전철망 조기 완공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우선 연계 교통체계 구축

8 관문도시(상주 · 문경 등) 발전방향

1. 현황과 문제점

■ 상주 : 농업도시에서 녹색산업 관문으로 변모 중

-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1980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듦 200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 삼백(三白, 쌀 · 꽃감 · 누에)의 고장, 농업중심도시로서 농업 인구가 절반에 이르고 농지 비율이 경북에서 최고
 - GRDP는 1조 1,426억원으로 경북의 2.0%에 불과하나, 1990년 대비 제조업 체수 및 종사자수가 2~3배로 빠른 증가 추세
-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수도권 · 충청권의 진입관문이며, 낙동강 700리 본류의 시발점으로 33.4km의 본류가 관통
-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도시로서 시민 1인당 0.7대 보유
 - 자전거 보유대수 8,500대, 전국 1위의 자전거 보급률(80%) 및 교통분담률(21%), 자전거 이용률 30% 수준
- 2개 지방산업단지(상주한방산업단지 · 청리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5개 농공단지 운영 중
 -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태양전지 관련 기업유치로 녹색산업 육성의 계기 마련

■ 문경 : 탄광도시에서 중부권 대표 관광도시로 변모 중

- 전통적인 영남관문인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탄광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우리나라 중부 최고의 스포츠 · 관광도시로 변모 중
 - 2007년부터 관광객 지속적 증가, 2009년 547만명에 도달
- 국토의 내륙 중심지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중심지로서 수도권 · 충청권으로부터 경북으로의 문화관광 진입관문 위상 강화
 -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및 34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경북선 복선 전철화 및 중부내륙철도 구상 중

- 최근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더불어 드라마 촬영지로 부각되고 있어 레저·스포츠 등 체험관광 및 영상산업의 잠재력 증대
- 하지만, 도시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도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 GRDP는 841,853억 원으로 경북 대비 1.4%에 불과하고, 소득 수준도 경북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

■ 영주 : 수도권 관광객 유입 거점, 인구는 지속적 유출

- 중앙선 철도와 중앙고속도로에 의한 광역적 접근성에 기반한 경북 북부지역 관광객 유입 거점으로서 수도권·강원권으로부터 경북으로의 문화관광 대표 진입관문으로 급부상
 - 중앙고속도로를 포함 국도 5호, 28호, 36호선 등 도로교통의 요지이며, 경북선·영동선이 통과하고 중앙선의 복선전철화를 추진 중
 - 소백산의 청정산림 내 부석사·소수서원 등 문화웰빙자원 보고
- 국립산림테라피단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국책사업과 한방관광특구 등의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점
- 지역 대표 브랜드인 인삼 및 인견 등 특산물 자원이 풍부하고, 전국 최대의 하수오·도라지·산약 생산지로서 지역 한방산업 견인
- 하지만, 2000년 이후 지속적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서비스업에 치중된 3차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 보유
 - GRDP는 1조 4,895억원으로 경북 대비 2.6%, 사업체수는 1.6%, 출하액은 1.4%에 불과

2. 비전과 목표

■ 상주·문경

- 상주문경권의 비전은 '낙동강과 백두대간이 잉태한 녹색산업·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설정

- 백두대간 자락의 영주와 문경이 서로 협력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대경광역경제권 내 녹색산업과 문화관광으로 특화된 강력한 소경제권을 구축
- 2대 기본목표
 -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는 ‘청정한 에너지가 흐르는 친환경 강변도시 조성’과 ‘백두대간과 함께하는 스포츠·영상특화도시 조성’
- 4대 추진전략
 - 그린에너지벨트 기반 조성, 낙동강 주변자원 연계개발 추진, 메가 이벤트 기반 스포츠 건강도시 조성, 한류문화의 영상산업화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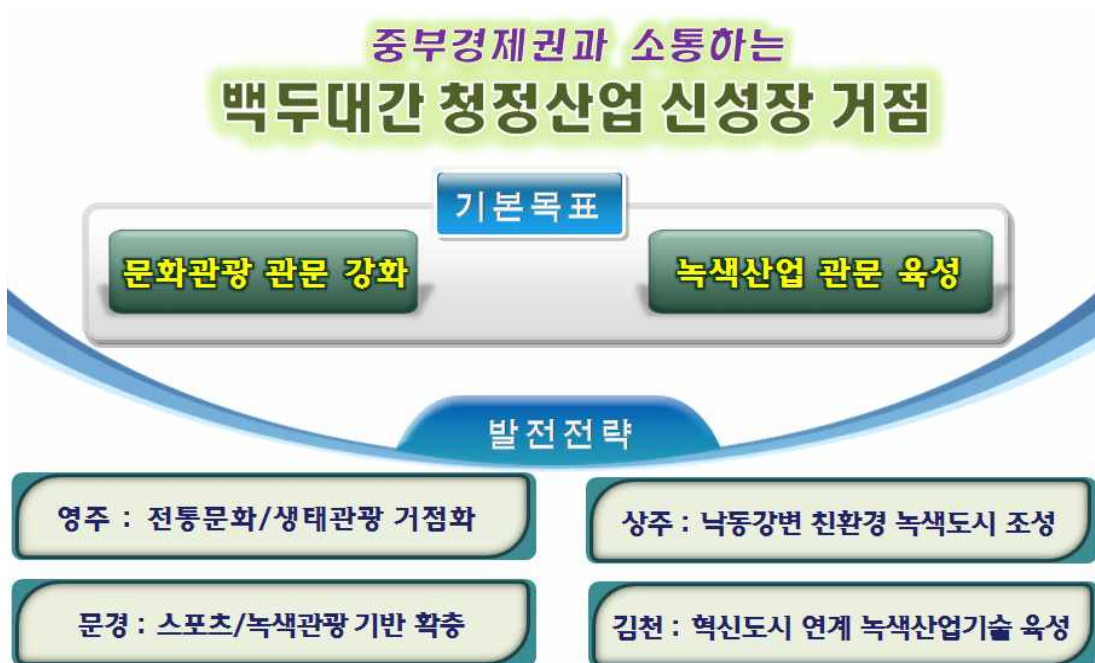


▲ 상주·문경권 비전과 목표

■ 관문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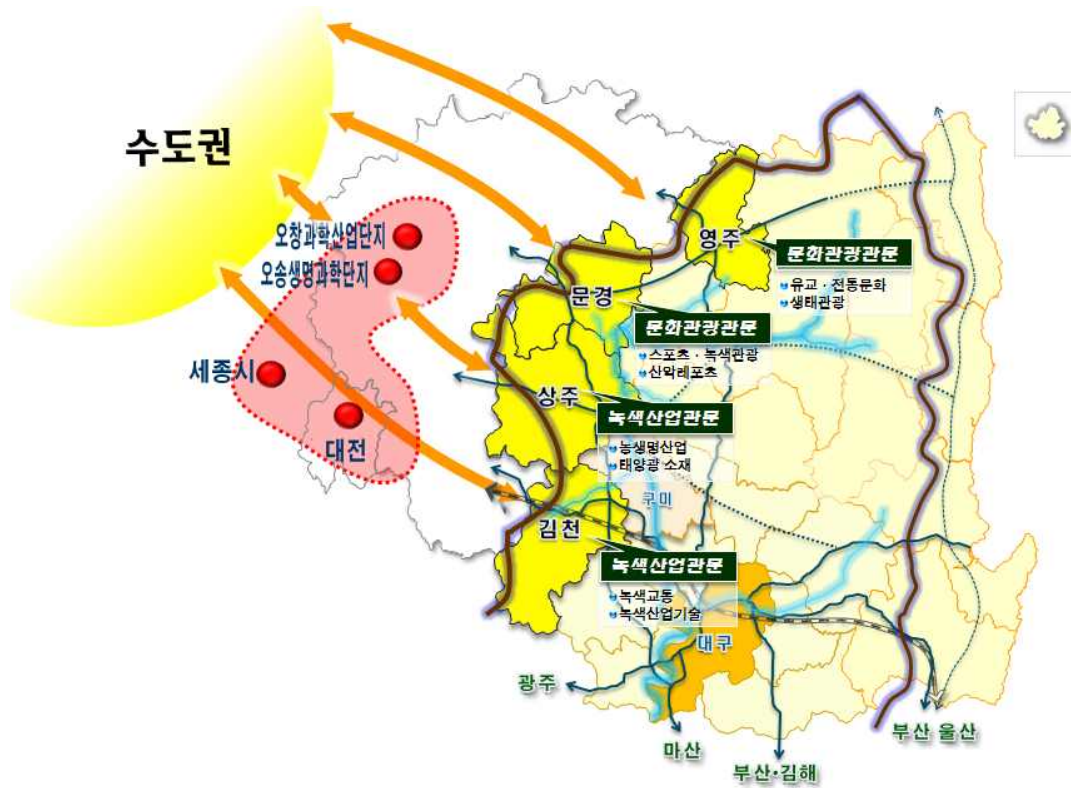
- 영주, 문경, 상주, 김천을 아우르는 4대 관문도시의 비전을 ‘중부경제권과 소통하는 백두대간 청정산업 신성장 거점’으로 설정
 - 백두대간 자락 진입관문을 적극 육성하여 중부경제권의 확산(trickle-down effect)을 발전적으로 수용, 녹색산업과 문화관광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

- 2대 기본목표 : ‘문화관광 관문 강화’와 ‘녹색산업 관문 육성’
- 관문도시별 추진전략
 - 영주 : 전통문화 및 생태관광의 거점화
 - 문경 : 스포츠·녹색관광 기반 확충
 - 상주 : 낙동강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김천 : 혁신도시 연계 녹색산업기술 육성



▲ 관문도시 비전과 목표

- 효과적인 관문기능 수행을 위해 영주·문경은 문화관광 관문으로 상주·김천은 녹색산업 관문으로 기능을 설정하되, 수도권 및 충청권과의 연계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별 특성화 방향을 차별화
 - 영주 : 유교 및 전통문화, 생태관광
 - 문경 : 스포츠, 산악레포츠, 녹색관광
 - 상주 : 농생명산업, 태양광 소재
 - 김천 : 녹색교통, 녹색산업기술



▲ 관문도시권 역할

3. 주요 전략사업 및 연계 인프라 계획

① 영주 : 전통문화 및 생태관광의 거점화

■ 전통문화 관광의 거점 조성

-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 영주 전통문화의 魂(혼)인 선비정신을 홍보하고 전통관광에 대한 잠재력 극대화를 도모
 - 전통건축문화체험시설(사찰·서원), 전통문화체험시설(풍류문화·공예·음식), 한국문화 R&D 시설(한글교육·문화산업), 풍수천문과학시설(풍수지리·천문·민속), 숙박 및 편의시설(호텔·광장) 등
- 바이크문화탐방로 확충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객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영주를 즐길 수 있는 관광체계 정비
 - 영주관통 자전거 탐험로, 도심지 자전거도로 조성 등

■ 생태관광의 거점 기반 강화

- 산림테라피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산림휴양단지 조성
- 백두대간 산림과학단지 조성 : 산림바이오산업을 생약생산에 활용,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 산림과학테크노파크 조성
- 영주댐 워터프런트 조성 : 친수공간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휴양단지 조성
- 인삼기반 한방관광 클러스터 구축 : 풍기 인삼산업의 고도화와 과학화 및 한방관광산업화 추진
 - 풍기인삼클러스터 구조고도화, 인삼생명관·풍기인삼랜드 조성, 산림테라피 연계 한방요양특구 지정, 풍기인삼 세계엑스포 개최
- 친환경 그린섬유 인견 패션로드 조성 : 인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인견과 천연염색을 결합한 고부가가치화 도모
 - 인견테마 패션몰, 팩토리 아울렛타운, 디자이너 중심 고급 부띠크몰, 인견 소재지원센터(대학연계), 친환경 그린섬유패션 비엔날레 개최
- 복합환승센터 건립 : 중앙선 역사를 이전하는 대신 복합환승센터 조성으로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의 환승체계를 효율화

② 문경 : 스포츠·녹색관광 기반 확충

■ 메가이벤트 기반 스포츠 건강도시 조성

- 스포츠 활력 건강도시 프로젝트 :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도심 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활력도시 이미지 구축
 - 스포츠복합단지 조성, 골프장 조성 및 도심체육시설 확충, 국제 규모의 체육행사 유치, 청소년 스포츠 선점, 익스트림 스포츠 및 아시아무술경기대회 유치 등

■ 백두대간 중심의 녹색관광 선도

- 백두대간 녹색성장 프로젝트 : 청정 산림자원을 활용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한 친환경 에코빌리지 조성

- 녹색문화상생벨트 및 산림자원관, 산촌생태마을 및 탐방로, 산림탄소순환마을 등 조성
- 고부가가치 웰빙농촌 프로젝트
 - 문경특산물 명품화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글로벌푸드밸리 조성
- 전통문화 관광도시 프로젝트 : 전통문화 및 역사를 테마로 한 복합관광도시 이미지 강화
 - 전통 찻사발 테마파크·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 마을단위 농경문화 축제 개최, 옛길 조성 및 역사 복원

③ 상주 : 낙동강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그린에너지벨트 기반 조성

- 그린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 대구~칠곡~구미~상주로 이어지는 태양광 벨트의 거점지역으로서 태양광 소재의 생산에 따른 유사업종의 유치를 위한 산업 용지 마련
 - 상주시 공성면·공검면 일원에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단지 조성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제3섹터 개발 방식
- 그린에너지벨트 기반 조성
 - 한방산업단지 활성화, 바이오가스 에너지자원화, 재생에너지·농산물 가공·한방가공 관련 우수기업 유치 등

■ 낙동강 주변자원 연계 개발 추진

- 낙동강 이야기 나라 프로젝트 : 낙동강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 재발견과 낙동강권의 녹색거점 육성
 - 상주시 사벌면·낙동면 일원 체류관광 거점 조성
 - 자전거·승마 중심 레저스포츠단지 조성, 가족체류형 관광객 숙박휴양시설 도입, 자전거테마지구·낙동강 이야기촌 지정 등

- 낙동강 강문화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경천대 리뉴얼, 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학 생태공원 조성, 고향의 강 사업, 문장대 정비 등

④ 김천 : 혁신도시 연계 녹색산업기술 육성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련 녹색산업기술 육성

- 이전공공기관 관련 에너지와 농생명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차세대 전력 IT 기술 확보와 안전식품 연구개발에 매진
- 충북의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연계를 강화

■ 낙동강 지류 생태관광자원화 및 인프라 구축

- 감천 뚝방길 자전거 투어로드 등 감천 100리 친수공간 조성
- 직지사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부 친수공간 확대

■ 김천(구미) KTX역의 종합환승센터화

- 김천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및 환승 주차장 확대
- 리무진버스, 렌터카 도입 등 대중교통

⑤ 관문도시 연계 인프라 계획

■ 경북선 복선전철화로 중앙선과 연계

- 김천~상주~문경~영주~봉화

■ KTX역사와 구미산단 연계

-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 대구권 광역전철망 김천 연장

- 2단계 사업을 1단계로 단축



▲ 관문도시 교통망 구상

■ 상주 ~ 영천간 고속도로 건설

○ 민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4. 사업추진 로드맵

구 분	우선사업	중점사업	장기사업
영주시	바이크 문화탐방로 복합환승센터	한국문화테마파크 백두대간 산림과학단지 산림휴양도시 인삼기반 한방관광 클러스터	영주댐 워터프런트 도시 친환경 그린섬유 패션로드
문경시	도심 체육시설 산촌생태마을 글로벌 푸드밸리 옛길조성	국가 스포츠 복합단지 국제규모 체육행사 유치 스포츠 관련 학교 유치	산림관
상주시	경천대 리뉴얼 생태문화탐방로 문장대 정비	그린에너지 특화단지 낙동강이야기나라 프로젝트 한방산업단지 활성화 낙동강 생물자원관	바이오가스 에너지 자원화 재생에너지 · 한방 기업 유치
김천시	김천일반산단 추가 조성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직지사천 생태하천 혁신도시 성공적 추진 에너지 · 농생명산업 육성 KTX역 종합환승센터화	충북 오창 · 오송 연계 강화 감천100리 친수공간 조성 대중교통 우선 연계 체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연 계 인프라	KTX역 구미산단 연계 대구광역전철망 김천 연장	경북선 복선전철화	상주 ~ 영천간 고속도로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Ⅱ. 도심 재창조와 활력 창출

① 도심 재창조 추진 배경

1. 도심 여건의 변화

■ 도심은 도시의 기능·시설·문화적 중심지

- 일반적으로 도심은 도시의 최초 시가지가 형성된 역사적 중심지이자 도시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대표적 공간
- 도시의 주요 기관(행정,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작은 공간에 집적되어 도시에서 가장 고밀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지역
-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여 대부분의 도시교통이 교차되는 도시의 최대 교통 집결지이자 도시 활동의 중심지

■ 도심 기능의 점진적 쇠퇴 우려

- 공간적으로 한정된 도심은 늘어나는 사회·경제·행정·문화 등의 요구 충족에 한계 발생
 - 도심 환경의 노후와 기반시설 정비의 어려움 등에 따라 도심 인구, 주요 공공시설 등의 외곽지 이전 확산
 - 도심 환경의 양적·질적 저하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고 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를 야기
- 집적된 시설과 토지 이용으로 도심의 신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도시외곽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
 - 도심환경 정비의 어려움은 환경의 노후화로 이어져 새로운 기능의 수용이 어려워지며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도시경제의 부담으로 작용

-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심은 사람의 발길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이는 도시 쇠퇴를 유발

■ 도심 활성화는 살기 좋은 도시의 미래를 보장

- 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전되는 도시인구 구성의 변화 속에서 도심은 기존 자산의 활용과 새로운 기능의 수용이라는 2원적 재구조화를 요구
- 오랜 기간 생성되고 축적된 도심의 도시문화와 도시의 역사적 공간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높이는 것은 도시 매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
- 장차 도시에서 생활하게 될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의 활력원으로서 도심은 자공심과 생활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

■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전개

- 도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각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진행 중
- 주거환경 개선, 도시 디자인,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전략공간 개발, 도시자산의 상품화 등의 유형 등장
 -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형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 도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 가로디자인 개선 등 공공디자인 도입 확산 및 공공건축물 복합화 등을 통한 공공부문 환경 개선
 - 도시의 역사적 자산 활용을 통한 도시 문화·관광상품 개발
 - 도시의 상징적 공간개발을 위한 대형 복합건축물 개발
 -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리를 통한 도시구조 개선

■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 국내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 사업 중심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집중
 -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들 개발사업 성격의 재생사업은 비교적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활발히 진행
 - 중소 규모의 지방도시에서는 사업성 문제상 추진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재원조달 문제에 따라 극히 일부의 시범사업에 한정되어 지자체의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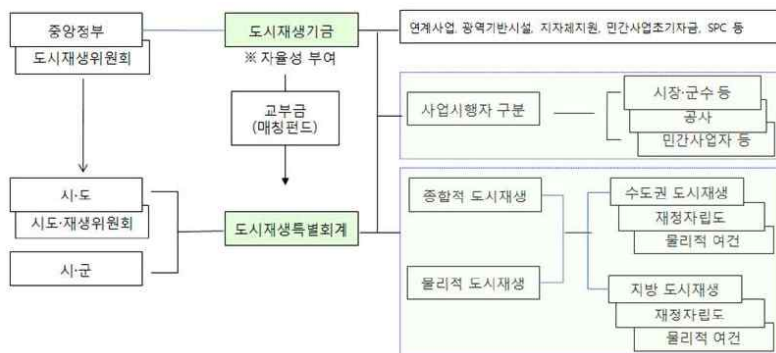
■ 한국형 도시재생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확대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도시재생 활성화법」 또는 「(가칭)도시재생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
 -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우쳐 온 도시재생 사업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와 연관된 도시재생으로 전환¹⁰⁴⁾
 - 중앙정부 지원 의존형 사업이 아닌 지자체,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기반 마련¹⁰⁵⁾
 - 도시재생 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 효율화 및 도시재생 활성화 도모¹⁰⁶⁾
 - 개별적으로 추진된 재생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종합화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¹⁰⁷⁾

104) 지역주민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도시재생,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 등

105) 지자체 주도 사업발굴 및 시행, 지역주민 참여 확대, 인근 지자체간 협력 강화, 도시재생지원체계 구축 등

106)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지원강화와 기금·특별회계 설치·운용체계(이재우, 제10차 도시·건축정책포럼, 전환기의 도시정책-도시재생중심의 도시정책 발표자료)



② 대구경북의 도심 현황

1. 현재의 도심 상황

■ 인구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도심 유형

- 대구경북의 도시는 도시 전체의 인구 규모와 도시의 성격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중추도시 대구, 중소거점도시, 읍급 도시로 구분 가능
- 중소 거점도시는 인구규모 10만 이상으로 몇 개 시·군을 아우르는 권역별 중심도시로서 규모에 따라 중도시와 소도시로 구분
- 읍급 도시는 인구 10만 미만의 해당 군청 소재지로서 군 지역의 중심

▼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구분

구분		인구규모	도시
중추도시		250만	대구
중소거점도시	중도시	인구 30만 이상	포항, 구미
	소도시	인구 10~30만 미만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읍급 도시(군)		인구 10만 이하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도심 쇠퇴의 진행에 따라 다양한 재생방법 시도

- 도시 중심지의 다핵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심 소재 주요 기관 및 시설의 외곽지 이전이 광범위하게 진행
 -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심기능 및 인구의 분산
 - 도심 기존 시설 노후화와 개선 부족에 따른 환경의 질적 저하
 -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확대에 따른 도시의 공간적 분리
- 시설이전 후적지 활용, 노후 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노후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재생 등 다양한 도심재생 사업 추진

107) 자전거도로, 도시 숲, 학교 주변 환경개선, 주차공간 확충 등 일정 구역범위 설정 후 관련 사업의 종합적 사업 추진 방안 모색

2. 도시 맞춤형 도심재생 추진 필요

■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심재생의 고려사항

- 도심재생은 기존 도시의 활력 제고, 정주환경 개선 및 미래 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목표
 - 시가지의 효율적 재구성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도모
 -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정체성 확립
 - 지방자치와 자립적인 도시 정비 및 개발 추진
 - 주민 참여기반의 도시 커뮤니티 활동 강화
 -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의 도시산업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환경 관리
- 도심재생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효과 확산 및 도시마케팅을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 필요
 - 기존 도심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쾌적한 정주환경 마련을 위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방안 검토

■ 대구경북의 차별화된 도심재생 필요

- 대구경북 도시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한 차별화된 도심재생 방안의 선택과 적용 필요
 - 무분별한 도시외곽 신시가지 개발 억제
 -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된 도시공간을 하나의 도심으로 통합
 - 대구, 중소 거점도시, 읍급 도시에 적합한 도심재생 사업 선택
 - 도시의 역사·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적 재생 추진
 - 중앙정부 의존형 재생사업이 아닌 자립적 도심재생 사업 추진 및 민간투자여건 개선에 주력
 - 다양한 재생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화하는 전략 도모

3 도심 재창조 기본방향

■ 도심 재창조는 도시발전의 핵심

- 대구, 포항, 구미를 포함한 대구경북의 24개 도심지역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반영
- 도심 재창조 및 활성화는 도시의 장래를 밝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 사업
- 도심 재창조를 통해 주민들에게 도시발전에 대한 확신과 애착을 부여
 - 이를 위해서는 정부·민간 등 개별 주체에 의한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협의에 의한 사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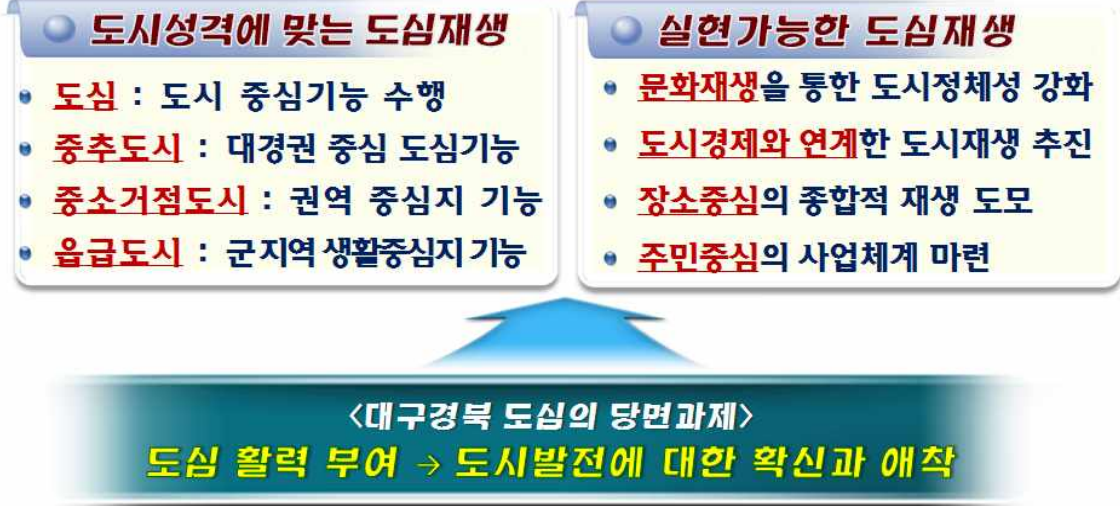
■ 도시 특성에 적합한 도심 재창조 실현

- 대구경북 도심은 “멋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으로서,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
- 이를 위해 도심 재창조는 도심을 ‘도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및 지역’으로 설정하고, 중추도시, 중소도시, 읍급 도시에 적합한 도심재생 추진
- 문화재생, 도시경제 연계, 장소와 주민중심의 도심재생을 통해 도심재창조의 실현 가능성 제고

■ 도심 재창조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심 재창조를 통해 도시 주민의 도시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공공편의의 극대화를 도모
- 정주기반 재생을 통해 주민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 추진

도시의 멋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 도심



▲ 대구경북 도심 재창조 비전 및 전략

■ 도시별 도심 재창조 맞춤형 전략 방향 설정

- 중추도시인 대구는 대경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상감영 등의 역사적 중심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부각
 -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적 재생과 전략적 개발을 통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
- 중소거점도시는 전략적 사업을 통해 도심 변혁을 도모하며 지역의 문화 · 행정 등의 중심기능을 수용
- 읍급도시는 일상생활의 중심지로서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각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시 재생을 도모
- 도시 잠재력 발굴을 통해 도시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도시별 맞춤형 도심 재창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지역민이 주체가 된 다양한 사업 발굴 등이 필요

4 주요 전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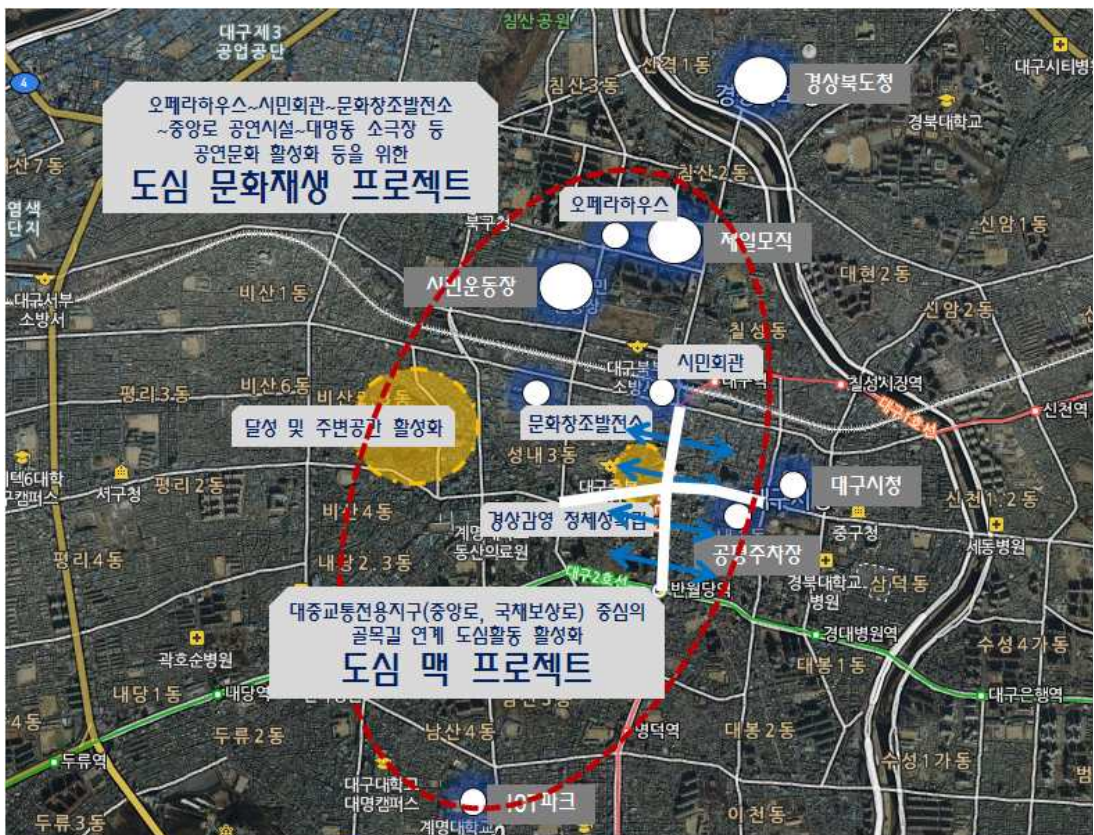
1. 중추도시 대구

■ 영남 도심 재건 프로젝트

- 기본방향
 - 대도시권 중추도시의 도심기능 회복과 중심성 향상
 - 문화, 상업, 업무 등 도심기능 강화
 - 다양한 기능의 집적을 통한 도시활동 가능성 증대
- 대상지 : 대구 중구 중심상업지역 일원
- 주요 사업 내용
 - 도시 잠재역량 강화 사업
 - 도심 복합용도지역 설정 및 개발 촉진, 도심 토지이용 효율화 도모
 - 도심 전통성 확립 사업
 - 과거 : 경상감영공원 및 주변공간 상징화, 읍성길 이미지 구축
 - 미래 : 시청 및 주변공간 복합공간 개발, 국채보상로변 그린웨이 조성
 - 도심 문화재생사업 확대
 - 문화창조발전소, 시민회관 리모델링 등 공공 문화시설 재정비 지속 추진
 - 도심 문화(세대별, 장소별) 활동 지원
 - 도시관광 활성화 촉진 및 도시 간 연계 관광 거점화 추진(쇼핑, 숙박 등)
 - 도심 전략지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 도심 및 주변지역 후적지 개발(제일모직, 시민운동장 등)

○ 핵심사업

- 보행중심 도시가로 형성 : 도심 주요가로의 교통정온화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
- 읍성길 복원 : 대구읍성가로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 경상감영공원 및 주변 공간 개발 : 경상감영공원 복원 및 도시광장 형성
- 신청사 건립 및 복합공간 개발 : 시청사 신축 및 주변 공간 복합 활용
- 국채보상로 그린웨이 조성 : 보행중심 도시상징가로 형성
- 공공문화시설 재정비 : 문화창조발전소, 시민회관 연계 공공문화시설 확충
- 전략지 특별계획구역 개발 : 공평주차장, 시민운동장, 제일모직 부지 등 복합 용도 개발 유도
- 도심 맥프로젝트 : 도심 주요 가로 연계 골목길 활성화 사업
- 도심 문화재생 프로젝트 : 도심 및 연접 주요 공공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 대구 도심재창조 구상

2. 중소 거점도시

■ 포항 : 도시정주여건 개선 및 복합문화예술활동 강화

○ 기본방향

-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한 도심기능 활성화
 - 공공기관이전 후적지 등 복합문화지구, 송도, 동빈내항 등 복원 및 정비
 - 시가지내 보행로 확충을 통한 시민 도시활동 확대 유도
-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 도서관,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등 문화·예술적 안목과 경영으로 시민 문화욕구 충족

○ 주요 사업내용

- 동빈내항 복원 사업
 - 사업규모 : 수로 건설 L= 1.3km
 - 공공시설 : 공원(수로, 녹지, 테마거리, 도로 등)
 - 민자시설 : 휴양시설(호텔, 콘도), 편의시설(수변상가)
 - 특수시설(문화체험테마파크), 유희시설(워터파크)
- 중앙도서관 건립(구 포항시청)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지원, 정책연구개발 및 자문,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육 및 출판, 전통문화예술자원의 발굴, 보존, 육성, 전승사업 추진
 - 지역문화예술 지원조례 제정



▲ 동빈내항 개발구상

■ 구미 : 향(香) 가꾸기 프로젝트

○ 기본방향

- 기존 도심의 회색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민들이 휴식하고 함께할 수 있

는 창조적 공간으로 재구성

- 사계절 안전하고 걷고 싶은 친환경 자유공간 조성

○ 대상지 : 구미 도심, 인동 일원

○ 주요 사업 내용

- 도심 그린코어 정비

- 문화로 특화거리 명소화, 친환경 교통거리 조성(L=1.3km), 철로변 도시 숲 조성 등
-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 생산과 문화가 공존
-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적용, 산업단지 문화센터 설치, 직주밀착형 생활자전거 인프라 구축
- 도심공원 생활문화 여간공간화 : 중앙공원
- 인동 부도심 녹색가로 및 환경정비
- 보행자중심 그린웨이 조성, 인동숲 연계 녹지축 구축



▲ 도심 보행자 도로 조성 예

■ 경주 : 도심 재생 프로젝트

○ 기본방향

- 전통문화유산 및 쇼핑 등 잠재력 활용 극대화
- 신라 고유의 문화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도심거리 특화 추진
- 신 경주 역세권 개발을 고려한 도심기능 전략적 활성화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활기찬 젊은 문화공간(Fun Zone)
 - 동국대 주변의 활기찬 젊은이 문화 활성화 유도
- 전통과 현대문화 체험공간(Experience Zone)

- 신라문화를 상징하는 문화테마거리 조성(관광 명소화 및 도심 경제 활성화 유도)
-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 및 신라 유명 인물 캐릭터 거리 조성
- 전통문화공간(Cultural Zone)
 - 전통한옥지구와 동부사적지 문화지구로 조성
- 구 경주역사 이전 후적지 개발 : 고도 경주의 장소성 강화기능 부여
- 동해남부선 이전 후적지 개발과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 경주 도심재생 구상(안)

■ 안동 : 기성시가지 활성화

○ 기본방향

-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의 보완·상생적인 단계적 발전방안 필요
- 쾌적한 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디자인 적용
-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형성과 도시이미지 브랜딩 유도

○ 주요 사업내용

– 기존 도심 재정비

- 문화적 전략거점 정비(하회마을, 안동수변공원 등 거점 중심)
- 도심내 주거정비와 문화특화지구 및 특화거리 정비

–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 안동시청을 중심으로 도시디자인 시범지구 지정
- 시청 중심의 야간조명 설치 및 주민센터 등에 소규모 공원 조성

– 역세권 신성장거점 정비

- 중앙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역사신축 및 복합지구 조성



▲ 안동 기존 시가지 활성화 구상(안)

3. 읍급 도시

■ 농촌도시 도심성 향상을 위한 재창조 노력

- 인구 10만 명 이하의 군 지역에서의 도심은 중추도시 및 중소 거점도시의 도심과는 차별화된 접근 필요

-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고 농촌도시의 성격을 갖는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
- 농촌도시의 도심을 구성하는 주요 공간은 공공시설, 시장, 버스터미널 등의 다중 이용시설과 그 주변의 상업지역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들의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재생방법 선택
- 도시의 특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도시풍(都市風, 도시스타일)의 발굴과 그를 고려한 도시환경 개선 및 디자인 사업 추진
- 생활 중심지로서 도심 기능 확충
- 도심과 인접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연계한 문화재생의 도모 및 상품화 고려
- 도심 인접 자원(도심연접 하천, 문화재 등)의 도시공간화 도모
- 중심지 주변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위한 기반시설의 점진적 확충 및 정비 추진

■ 도심의 주요 시설 이전 시 고려사항

- 읍급 도시에서의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전은 도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의 하나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시장 및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전 시 기존 도심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하며, 공공시설 이전 시 접근성 및 시설 활용도 등을 고려
- 이전 계획 시 후적지 활용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이전에 따른 영향 최소화 도모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Ⅲ. 안전한 도시 만들기

① 재해 발생과 정책동향

1. 재해발생 동향

■ 전 세계적으로 재해·재난 증가 추세

- 오늘날 각종 재해와 재난은 기상이변을 포함한 지구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화·대형화 추세
 - 1970~2008년의 약 40년 간 재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재민 수 역시 증가

■ 특히 아시아 지역의 피해규모 심각

- 각종 재해와 재난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피해가 속출
 - 과거 30년(1979~2008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재해와 재난 중 아시아 지역의 비중을 보면 건수의 약 40%, 피해액의 약 50%를 차지
 - 사상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해서, 사망자 수의 약 60%, 이재민 수의 약 90%를 차지

■ 세계 주요도시 자연재해 위험지수¹⁰⁸⁾, “한국 14위”

- 한국은 매년 하절기에 태풍과 홍수가 집중되고 있으나, 정부 및 국민의 재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세계 주요도시 자연재해 위험지수에서 한국은 상위 14위에 랭크

108) 자연재해 위험지수(NG-RID)란, 세계에서 인구 1천만명 이상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자연발생 가능성과 2003년의 인구, 2015년의 예상 인구, 토지 면적, 국가경제(GDP기준) 비중 등을 고려해 작성된 지수

■ 대구경북은 전국 재난발생 건수의 약 13% 차지

-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는 총 277,303건의 재해와 재난이 발생했으며, 대구경북에서 35,318건이 발생해 12.7%를 차지
- 특히 대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재난건수 최다 기록

2. 정책동향

■ 대구광역시의 재해 관리(1990~2010년)

- 대구광역시는 1995년 발효된 「재난관리법」을 토대로 1998년 10월경 도시건설국 내에 재난관리과를 신설
- 이듬 해인 1999년에는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개칭, 방재관련 업무를 수행
- 2005년 6월경 건설방재국 민방위과를 건설방재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칭
- 2008년 10월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다시 이원화하여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방재 업무는 현재의 재난관리과로 이관



▲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체계

- 이후 현재까지 재난관리 체계를 자치행정국과 건설방재국, 그리고 소방본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

■ 경상북도의 재해 관리(1990~2010년)

- 1996년 2월경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
- 2005년에 경북재해대책본부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칭
-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으로 나누어 재난에 대비
- 현재는 건설도시방재국에 자연 재난은 치수방재과에서, 인적 재난은 안전정책과에서 이원화하여 담당

■ 향후 정책 전망(2011년 이후)

- 중앙정부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지역주민 참여강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실용적·과학적 연구기능 강화 등을 목표
- 대구경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재해관리 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 기존의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관리정책에서, 1980년대 들어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중앙 의존성을 일정부분 탈피
 - 2000년대 들어 물리적 개선사업, 부처별 예방사업, 시설별 개별복구, 분산적 재난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
- 특히 중앙정부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체계를 추구함에 따라, 대구경북 역시 관리 차원의 정책 추진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 전환 필요

2 문제점 및 과제

1. 제도적 측면

■ 위험요소 및 피해양태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 미흡

- 자연적·사회적 위험요소 및 피해양태의 변화에 따른 관리 주체 및 형태의 다양화 부족

《과 제》

- 중앙 의존적 방재가 아닌, 지역특성을 감안한 방재정책 수립
- 시민들의 방재안전의식 함양

■ 지역마다 획일적인 재난관리 정책

- 지역별로 재난발생의 특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재난관리 정책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유사

《과 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정책 추진
- 재난 유형별 지역방재계획 작성

■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불충분한 활용

- 지역마다 ‘안전관리계획’이 있으나 대부분 대응체계 구성에 관한 내용만 수록되어 있으며, 재난발생 시 매뉴얼 정도로만 활용¹⁰⁹⁾

《과 제》

- ‘안전관리계획’이 재난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단계별, 적용대상별 특성화 추진

109) 대구경북의 경우, 풍수해저감계획 보고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인적재난관리 표준 매뉴얼 수립되어 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체계 부족

- 최근 재해 피해자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구호체계 미흡

《과 제》

- 사회적 약자(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위한 재해 대응책 수립 및 홍보·교육

2. 조직 및 기관 측면

■ 재난 관련 업무의 총괄 담당부서 부재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방재 업무 다원화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애로, 지휘체계 혼선,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¹¹⁰⁾

《과 제》

- 소관실국의 원활한 연계성을 고려한 정보 연락 및 지휘체계 구축
- 종합안전센터(가칭)를 구축하여 일원화를 모색하고 평상시 방재체제 구축

■ 재난 책임소재에 따른 담당자 사기저하

- 재난 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한 규명보다 책임소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관계 부서는 비 선호 자리로 전락
 - 대부분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 감수

《과 제》

- 담당자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담당자의 지위 향상 및 인센티브 제공 추진

110) 최근 신고센터는 119로 통합

3. 시설물 측면

■ 고층 빌딩 · 공동주택의 재난위험 가중

- 가정주택이 감소하고 고층 빌딩 및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 빌딩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가 해마다 증가
 -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대구시 수성구, 중구 일대에 50층이 넘는 초고층 공동주택이 완공될 예정

《과 제》

- 초고층 건물 내 경보 시스템 및 제연시설 등 피해저감시설 정비
- 입주자 대응의 피난교육과 소방대원 대응의 전문교육 실시

■ 재해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분석, 전달시스템 미비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시·도민의 피해 최소화가 관건
 -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되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표준화와 개선방안 제시 및 재해정보 안전관리시스템(웹, 스마트폰 기반) 등의 기술개발사업 전개 중
 - 대구시의 경우, IT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낮다고 판단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과 제》

- 각종 재해유형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로 정확한 정보 수집과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시급

4. 교육 및 홍보 측면

■ 시민들의 여전한 안전 불감증

- 빈번한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며, 민방위 훈련 및 각종 예방 정책에도 무관심

《과 제》

-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자체/중앙정부/시민 네트워크형 안전 관리체계 구축
- 시민 중심의 자주방재조직 구축

3 비전과 전략

1. 비전과 목표

■ 비전

-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구경북 (Safety Daegu-Gyeongbuk)”을 설정



▲ 비전 및 목표

■ 목표

- 비전 수립을 위한 3대 목표로 “재난관리 역량 강화”,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시민참가형 방재교육”을 제시

-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신속한 대응전략, 지휘체계 구축, 재해관리체계 구축
-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재해 정보 제공
- 시민참가형 방재교육 : 교육과 훈련, 시·도민의 재해 경각심 조성

2. 추진전략

■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해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재해대응 능력 강화
- 대구경북 재해관련 공무원, 소방, 경찰, 군, 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구경북 자체의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중앙과의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독립적인 기능 수행 유도

■ 시·도민이 안심하는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 시설물 정비 등을 행함으로서 지역의 재해 대응력 향상
- 각종 재해 정보 및 응급 시의 정보를 시·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시·도민이 함께하는 방재교육 추진

- 재해 상황에만 이용되는 정보가 아니라 일상적·상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방재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 시민들의 의견 제시, 재해관련 활동 등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여 범 시민적 방재 마인드 확산
- 재해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 제공 및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쉽고 빠르게 각종 재해 대응요령 숙지 도모



▲ 3대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4 주요 전략사업

1. 재난관리 통합지휘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처 간 조정기능과 연계성 미흡
- 지역 안전을 책임질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시급

■ 주요 내용

- 소방, 재해, 재난, 민방위 업무를 단일 신고·지휘체계로 통합·운영
 - 현재 대구는 자치행정과, 재난관리과, 소방본부로, 경북은 안전정책과, 치수방재과, 소방본부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
- 분산된 방재관련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조직의 위상을 높여 보다 강력한 권한 부여
- 정보의 집결·전파·지휘·통제를 전문화된 조직으로 일원화하고 재해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

■ 연관 및 지원사업

- 재해관리(구호)네트워크 구축사업, 재해관리 인력 혁신사업, 지역 안전전문가 양성 사업

2. 재해예방 시설 정비 및 보강

■ 배경 및 필요성

- 효율적인 도시 내의 방재 시행에는 도시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
- 도시는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존재하여 재해에 피해를 입을 시 그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 주요 내용

-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방재측면에서의 계획 고려
- 간선가로 등과 연결시가지의 일체적인 정비와 노후주택 개선 촉진

■ 사업비

- 기존 도시관리계획에서 방재측면을 고려하여 정비하거나 보강하기 때문에 각 계획에서 부분적으로 예산 집행

■ 연관 및 지원사업

- 상습침수지역내 안전기준 강화 및 방재시설 정비사업,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사업

3. 재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만 피난 등 개별적 행동 수행이 가능
- 초기대응 단계, 응급대응 단계 등 단계별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을 알리기 위

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각종 재해유형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기능별 표준화 정립
- 현 세대의 신기술을 접목한 IT 인프라 구축으로 다중서비스 전개
 - RFID/RDS 기술, 브로드밴드, 텔레매틱스, 위성통신 등의 구축

■ 사업비(체계 구축 및 시험 추진단계 예산만 산정)

- 대구 : 2,0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경북 : 3,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연관 및 지원사업

- 지역안전도 진단사업, 정보제공서비스 구축사업, IT 인프라 구축사업

4. 시민 홍보 및 교육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가 아니라 발생 후 복구에 치중된 후진국적 사고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

■ 주요 내용

- 재난 사전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 강화
- 방재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 ‘시민안전테마파크’를 활용한 지역 민방위 훈련 추진

■ 사업비(체계 구축 및 시험 추진단계 예산만 산정)

- 연 400백만원(연차별로 시비50%, 도비50%)

■ 연관 및 지원사업

- 관련 민간단체 체계화 및 활성화 사업, 재해안전 훈련모델 개발사업, 방재지도 작성사업, 재해보험 활성화 사업

수 사업 추진계획

■ 2013년까지의 단기 사업

- 재해관리(구호) 네트워크 구축사업, 상습침수지역 내 안전기준 강화 및 방재시설 정비사업, 지역안전도 진단사업, 관련 민간단체 체계화 및 활성화 사업, 재해안전 훈련모델 개발사업, 재해보험 활성화 사업 추진(6개 사업)

■ 2015년까지의 중기 사업

- 재해관리 인력 혁신사업, 지역 안전전문가 양성 사업,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사업, 방재지도 작성사업 추진(4개 사업)

■ 2020년까지의 장기 사업

- 2018년까지 재난관리 통합지휘체계 구축, 재해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제공서비스 구축사업, IT인프라 구축사업 추진(4개 사업)
- 2020년까지 시설 정비 및 보강, 시민 홍보 및 교육 확대사업 추진(2개 사업)

■ 투자계획

- 상기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총 352억원의 소요 예산 발생이 예상되며,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 기금이나 후원 유치에 주력
 - 그 중 국비 50억, 기금이나 후원 30억원을 제외한 272억원은 지방비로 책정
 - 국비 및 민간자본의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추진계획과 보조를 같이하거나 민간에 대한 홍보 및 설득이 필요



▲ 사업 우선순위

▼ 안전한 도시 만들기 투자계획

추진전략	구 분		합 계 (백만원)	국 비	지방비	민 자 (기금, 후원)
	전략사업	연계 및 지원사업				
재난관리 역량 강화	재난관리 통합지휘체계 구축		-	-	-	-
		재해관리(구호)네트워크 구축사업	5,000	-	3,000	2000
		재해관리 인력 혁신사업	1,000	-	1,000	-
		지역 안전전문가 양성사업	3,000	-	3,000	-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시설 정비 및 보강		-	-	-	-
		상습침수지역내 안전기준 강화 및 방재시설 정비사업	5,000	2,500	2,500	-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사업	3,000	-	2,000	1000
	재해정보시스템 구축		5,000	2,500	2,500	-
		지역안전도 진단사업	-	-	-	-
		정보제공서비스 구축사업	-	-	-	-
		IT인프라 구축사업	-	-	-	-
방재 교육	시민 홍보 및 교육 확대사업		4,000	-	4,000	-
		관련 민간단체 체계화 및 활성화 사업	1,000	-	1,000	-
		재해안전 훈련모델 개발사업	200	-	200	-
		방재지도 작성사업	8,000	-	8,000	-
		재해보험 활성화 사업	-	-	-	-
합 계			35,200	5,000	27,200	3,000

주 :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재해정보시스템 구축은 체계 구축 및 시험추진단계 예산만 산정되었으며, 연계 및 지원사업은 패키지 사업임.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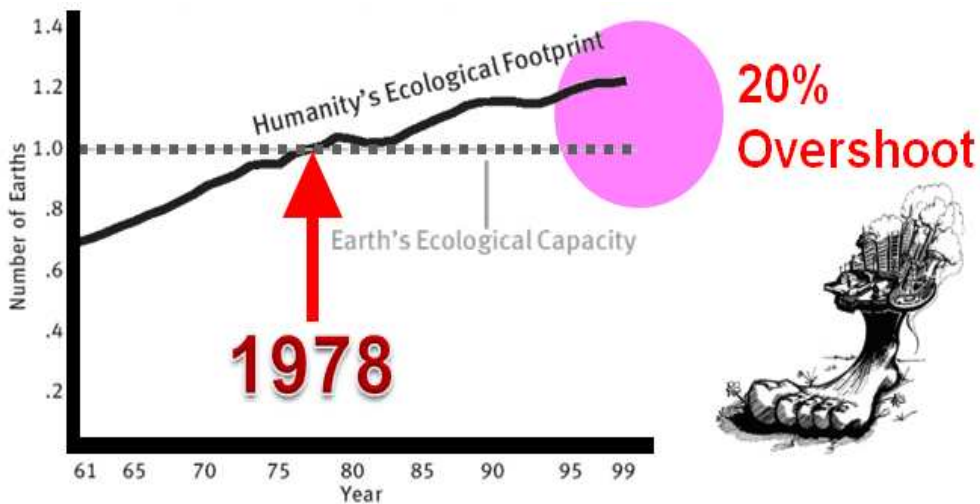
IV. 자원순환형 도시 구현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 글로벌 트렌드

■ 인류 경제활동의 생태부하량, 지구 생태환경 용량 추월

- 1978년 이미 인류 경제활동의 생태부하량(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은 지구의 생태환경 용량을 초월
- 1999년 현재 인류는 생태환경용량 보다 20%를 초과 소비 중
 - 미래 세대의 생태용량을 현 세대가 선취하는 셈
 - 지구촌 인류의 자원소비 패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필요



Source: Redefining Progress, 2002

▲ 인류의 생태발자국 증가 추세

■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 조성 요구 증대

-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이 지구적 현안으로 대두된 이후,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체계 전환 필요
 - ‘폐기물 발생 억제 → 재사용 및 재활용 → 에너지 자원화 → 안전 처리’ 순의 시스템 구축으로 CO² 감축 및 환경영향 최소화 도모

■ 환경·경제·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대두

- 과거의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환경관리에서, 환경(Environment)·경제(Economy)·에너지(Energy)를 통합하는 3Es 패러다임 부각
 -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인식 및 에너지화 정책 강화



▲ 자원순환형 사회 모델 및 환경관리 패러다임 변화

■ 물 부족은 향후 세계 도시가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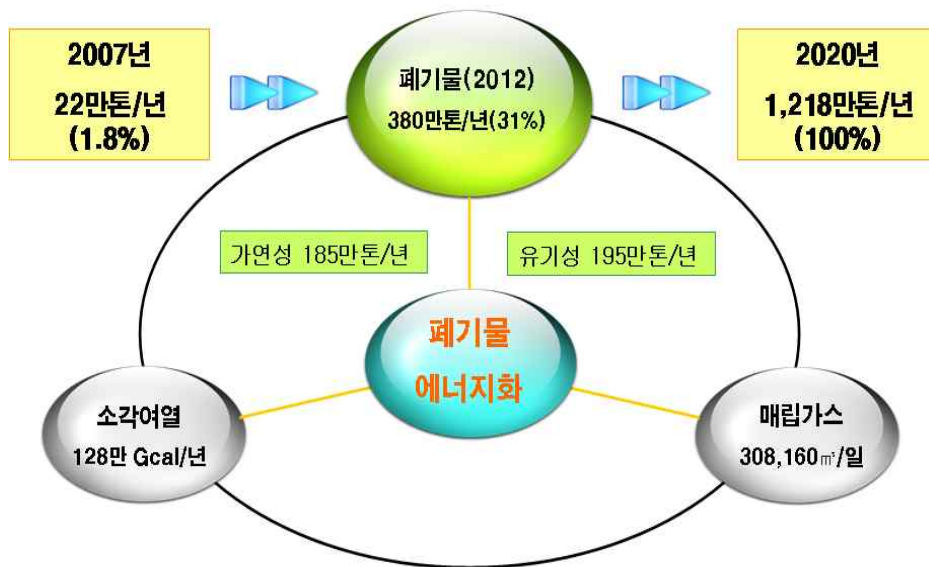
- 2007년 Worldwatch Institute는 물 부족을 세계의 도시가 당면한 9대 현안 중 하나로 강조
 - 세계 도시의 9대 현안 : 도시화, 물 부족과 위생, 도시 농업, 그린 교통체계, 에너지 소비, 자연재해, 공공 건강, 로컬경제, 도시 내 빈부 격차
 - 물 산업이 지구적 블루오션 시장으로 부각

2. 정책동향

가. 폐기물 관리

■ 중앙정부, 국제 환경규범 및 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

- 『1·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1993~2001)』 수립 : Zero Waste Society 지향
 - 1차 종합계획의 4대 핵심과제와 2차 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중점 강조
-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2008~2012)』 수립 : 2020년까지 공공 및 생활폐기물 100% 에너지화 달성을 목표
 - 소각여열과 매립가스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회수 이용 포함



▲ 폐기물 에너지화 달성 목표

- 전국을 8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총 13개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 추진
 -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및 지방 13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 총 14개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을 에너지화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자원 활용 및 경제효과 극대화 추구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의 조기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마을 유형별 표준모델을 개발 및 보급
 - 도시형(폐자원, 바이오매스), 농촌형(바이오매스, 자연력), 도·농복합형(폐자원, 바이오매스, 자연력), 산촌형(바이오매스), 어촌형(폐자원, 자연력) 등
-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 건설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에너지화
 - 현재 대구경북을 포함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

■ 대구·경북, 다각적 폐기물 재활용정책 추진

-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대구·경북 지자체 역시 다각적인 에너지화 정책 방안을 강구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대구 :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02~2011)」 수립,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계획(2008-2015) 추진
 - 경북 :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02~2011)」 수립,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포항·영천 광역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영주·예천 광역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 회수사업, 환경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등),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계획(2009~2014) 추진

나. 물 관리

■ 정부의 물 관리 핵심은 ‘통합 물 관리’ 정책

- 정부의 물 관리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정책 추진의 비효율 초래
 - 국토해양부 : 홍수 및 가뭄 방재, 상수원 수량 확보
 - 환경부 : 상하수도 인프라,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기후변화 대응

- 최근 정부정책은 ‘통합 물관리계획’ 아래 하천과 유역을 각 역할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 ‘물 수요 관리계획’은 수자원 재활용 정책의 근간

- 범 정부 차원 공급위주 물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물수요 관리사업을 활발히 추진
 - 유수율 제고 및 누수율 저감, 노후 수도관 교체, 절수기 설치, 수도요금 현실화, 중수도 설치, 하·폐수 재이용,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홍보 강화 등
 - 도심 내 물 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빗물 저장 및 중수도 시설 확충, 빗물 침투 및 식물 함양율 제고사업 추진
 - 현재 1단계 물수요 관리계획(2005~2011)의 성과를 평가하고 2단계 계획을 수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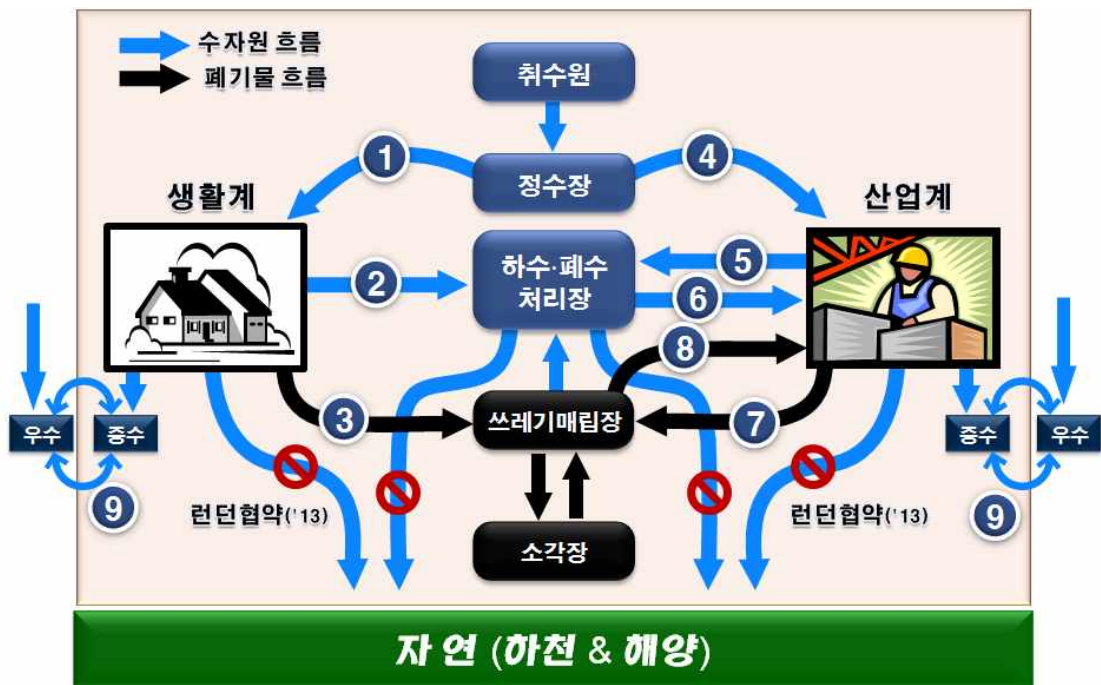
■ 상수도사업 광역화 및 하수처리 고도화에 역점

- 대구·경북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방 상수도의 광역화 움직임 활발
 - 4대강 사업과 함께 경북 내륙지역과 대구지역을 묶는 영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추진 중
 - 경북지역은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으로 세분화 모색
-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 및 총인처리시설 도입 추진
 - 1단계(2004~2010) 총량관리 대상물질인 BOD에 총인(T-P)을 추가한 2단계(2011~2015) 총량관리 착실히 추진
 -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인처리시설 등 초고도 처리시설 도입 예정

2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분석의 접근 모형

- 대구경북의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자원순환의 정책적 대상을 물과 폐기물에 한정
 - 물과 폐기물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개념도를 작성한 후, 각 자원의 순환 단계별 대구경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 지역 내에서 자원의 활용 및 폐기물 발생 주체를 생활계와 산업계로 분류하되, 자원순환시스템은 취수원, 정수장, 하수·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자연(하천 & 해양) 등으로 모형화
 - 생활계와 산업계의 우수 및 중수의 재순환 현황도 함께 점검
 - 런던협약(2013) 시행으로 하수슬러지, 축산폐수, 음·폐수 등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한 제도적 변화요인 고려



▲ 자원순환개념도 : 물·폐기물 중심

2. 자원순환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

① 단계 : 맑은 물 공급의 효율성 부족

- 대구('08)의 상수도보급률은 99.7%로 양호한 편
 - 우수율(84%)은 증가하고 누수율(12.1%)은 감소 추세로 긍정적이나, 관거의 노후화가 문제
- 경북('08)의 상수도보급률은 시부 82.3%, 군부 60%로 보급률 저조
 - 농촌의 경우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체계적 관리가 곤란
 - 우수율(65.3%)은 감소하고 누수율(22.9%)은 증가 추세로 효율적인 물이용이 어려우며, 이는 군 단위로 갈수록 심각

② 단계 : 하수 처리 및 하·폐수 처리시설 운용의 비효율

- 대구('08)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8.3%에 도달
 - 그러나 불명수가 42%에 달해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효율 저하
 - 하·폐수 처리장의 산발적 입지로 처리 규모의 적정화 곤란
- 경북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67%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시 단위 및 군 단위별 보급률 격차 확대
 - 불명수 현황은 대구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을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취약

③ 단계 : 폐기물 감량 및 수집·운반시스템 미비

- 대구는 생활폐기물 비중(57%)이 높은 반면, 경북은 생활폐기물(7%)보다는 사업장폐기물(59%)과 건설폐기물(34%)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가연성 폐기물 관리는 양호하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원천 감량이 시급
- 폐기물 수집·운반 비효율성 및 다양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농촌지역 무단 쓰레기 투기 등은 대구경북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

④단계 : ①단계 맑은 물 공급시스템의 문제와 동일

⑤단계 : 사업장 폐수처리 비효율 문제 심각

- 대구경북 모두 관거 노후화에 따른 불명수 유입 증가로 폐수처리장 부하 증가
- 산업단지의 산발적 입지에 따른 폐수처리 규모의 효율성 저하

⑥단계 : 공업용수 재활용시스템 부재

- 재활용 시스템 부재에 따른 상수·지하수의 이용 확대 및 사용 후 하천 방류 반복으로 장래 수자원 부족 우려
- 현재 발생되고 있는 다량의 재처리수에 대한 수요처를 발굴하려는 지자체의 경영마인드 부재

⑦단계 : 산업계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체계 취약

- 산업폐기물의 대형화에 따른 분류 및 수집·운반 시스템 취약
-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방식은 장비 노후화 및 인력부족 등으로 야적문제 등 심각한 공공위생 문제 야기

⑧단계 :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체계 미약

- 대구는 조만간 설치될 환경자원시설에서 고품원료(RDF)를 생산할 예정이나, RDF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 예상
- 경북은 폐기물 전처리시설 조성을 계획 중이나, 광역적 설치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아닌 다수 시설 설치로 처리의 효율성에 치중

⑨단계 : 생활계 및 산업계 물 수요관리 실적 저조

- 환경부('09) 물 수요관리 평가 결과, 대구(12위)와 경북(9위)은 15개 광역시도 중 실적이 최하위권
-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의 수질에 대한 지역 기업 및 시민의 불신이 높아 재활용 확산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

3.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핵심과제

■ 시민의식 개혁 및 폐기물 수집·운반체계 선진화

- 시민의식 개혁 및 참여 강화로 폐기물발생 원천 감량 및 분리수거 강화
- 생활폐기물 전문집하시설 설치 및 신규 공동주택개발지(Clean Net System)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물 수요관리 강화로 물 흐름 효율화

- 상수 관거 개선을 통한 유수·누수율 제고 및 하수관거 정비
- 하·폐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및 경북지역 마을하수도 관리 개선
- 정부의 하수처리 고도화사업 우선 지원대상 선정 노력 강화

■ 산업폐수 처리 효율화 및 재활용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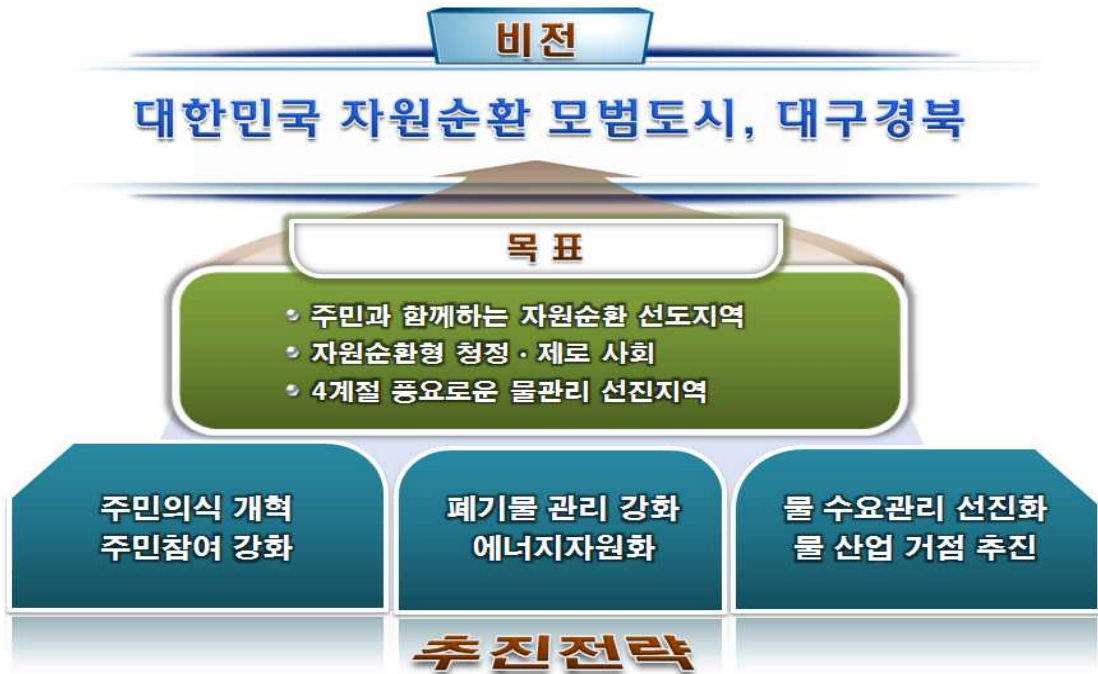
- 산업폐수 처리시스템 효율화 및 공업용수 재이용 강화
- 지속적 관거 개선을 통한 불명수 차단
- 산업단지의 집적화를 통한 폐기물 처리량의 적정 규모화
- 공업용수 재이용 증대를 통한 장래 물 부족 대처
 - 재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및 인센티브 강화
 - 공업용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Sales 사업 전개

■ 사업장 폐기물 운반 효율화 및 에너지화 사업 역점 추진

- 산업체 대형 폐기물 분리수거 자동화 및 수집·운반체계 정비
- 폐기물전처리시설 고도화 및 고품원료(RDF) 고급화와 공급처 확대
- 폐기물처리시설의 권역별 광역화를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

3 비전과 전략

- 대구경북의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을 ‘대한민국 자원순환 모범도시, 대구경북’으로 설정
- 설정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을 제시
 - 3대 목표 :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선도지역, 자원순환형 청정 · 제로 사회, 4계절 풍요로운 물관리 선진지역
 - 3대 추진 전략 : 주민의식 개혁 및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에너지 자원화, 물 수요관리 선진화 및 물 산업 거점 추진



4 주요 전략사업

1. 주민의식 개혁 및 참여 강화

■ 대구경북 생태발자국 줄이기 프로젝트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캐나다 경제학자 마티스 웨커네이겔과 윌

리엄 리스에 의해 개발된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중 하나

- 사람들의 식생활, 교통이용, 주거환경, 소비활동의 생태부하량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것
- 생태발자국사업추진단(가칭) 구축
 - 환경전문가, 민간 환경단체,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생태발자국사업 추진 Task Force팀 구성
 -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www.footprintnetwork.org)와 연계사업 추진,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추진
- 대구경북 생태발자국 지수 측정
 - 매년 대구경북의 주택, 음식, 교통, 기타 서비스 활용 관련 생태발자국 지수를 측정하여 지역의 생태학적 부하량을 가늠
- 대구경북 생태환경용량(Bio-capacity) 측정
 - 대구경북의 생태환경용량을 토지이용 범주별(CO²를 흡수할 수 있는 토지, 경작지, 목초지, 산림, 건조 환경, 어업 면적)로 측정
- 대구경북의 생태학적 적자규모(Overshoot) 산정
 - 대구경북의 생태학적 적자규모(=생태환경용량-생태발자국 크기)를 계산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 정도의 수치화 및 도면화 작업 추진
- 생태발자국 줄이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



■ 연계사업 및 시책

- 폐기물 감량·자원화협의회 운영
- 재활용프라자 설치 및 환경학습 프로그램 실시
- 알뜰나눔장터 확대 실시
- 주민참여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예 : 1마을 1하천 가꾸기 등)

2.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 폐기물 관리 광역협의체 조직

- 광역자치단체 간 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운영 및 사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역협의체를 구성
 - 행정 경계 간 폐기물 이동 및 처리에 관한 협약 체결
 - 광역 폐기물 처리문제 발생 시 조정 역할 수행



▲ 폐기물관리 광역협의체 구축 모형

■ 지자체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별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시
-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
 -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조례(8조 제2항)에 의거, 반입수수료 10%를 할증 또는 할인
 - 대구광역시 구·군별 시범사업을 통하여 감량효과 입증

- 경상북도 시·군별 할당량 산정 후 연차별 삭감계획 수립
- 우수 시행 지자체에 대한 정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연계사업 및 시책

- 재활용품 집단회수 시스템 구축 및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 음식물류쓰레기 배출자별 종량 시스템 도입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실시
- 폐기물관리 유비쿼터스 서비스체계 구축

3. 폐기물 에너지 활용체제 구축

■ 폐기물 전처리시설 기반 RDF 제조 및 공급 확대

- 조만간 폐기물전처리시설(MBT)의 설치 및 운용으로 제조될 예정인 고품연료(RDF)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처 발굴 역점 추진
- 계획 중인 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RDF 공급량과 질의 불균일성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고품연료 사용 희망업체의 지속적 확대 추진
- 권역별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대구, 포항 & 영천, 영주 & 예천 등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 폐기물 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

- 정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시책(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에 따른 대구경북의 ‘폐기물 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이 시급
- 대구경북 차원의 폐기물에너지화 추진사업 주요 내용
 - 지역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및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계획 수립
 - 기존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및 신규 시설 계획 등 전략 수립

-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우선적 배정 전략 마련 등

■ 연계사업 및 시책

- 대구경북 생태산업단지 광역화 및 활성화
 - 기 지정된 대구 및 포항생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광역자원순환망을 구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광역화 추진
 - 산업단지 내 미활용 에너지 공유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기업참여 확산

4. 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산업 허브지역화

■ 물 수요관리 정책 강화

- 2009년 물 수요관리 성과 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한 분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대책 마련
 - 실적이 저조한 항목별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 상수도 관망 확대 및 노후화 개선을 통해 유수율 제고 및 누수율 저감, 수도요금 현실화, 중수도 설치 및 하·폐수 재이용 확대
- 정부의 하수처리 고도화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우선지원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배가
 - 인제거시설 도입 등 낙동강 지류 하천 복원사업을 선도함으로써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정부 예산지원 계기 마련

■ 물 산업 허브지역화

- 대구경북 지역이 2015년 세계 물포럼 국내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기회를 살려 물 산업의 국내 허브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물 산업 핵심 인력 양성
 - 물 산업 특성화 대학원 육성, 물 산업 선진국과 인적 교류 확대
- 물 산업 관련 R&D 기반 강화

- 대구경북 물 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R&D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범사업 시행
- 물 산업 관련 기업 클러스터 구축
 -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물 산업 기업 창업보육 강화, 물 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 연계사업 및 시책

- 하수관거정비 고도화 시범사업 추진
-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추진
- 하·폐수처리장 방류수를 공업용수 및 지역 환경관리수로 이용 확대
- 축산 및 음폐수의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촉진

5. 사업추진 로드맵

추진전략	우선사업	중점사업	장기사업
주민의식 개혁 주민참여 강화	폐기물감량·자원화협의회 운영 재활용프라자 설치 및 환경학습 프로그램 알뜰나눔장터 확대 실시	대구경북 생태발자국줄이기 사업	주민참여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관리 강화 에너지 자원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계획 & 입지타당성 조사	폐기물관리 광역협의체 조직 지자체별 폐기물 종량제 시행 폐기물전처리시설 RDF 제조/공급 폐기물 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	재활용품 집단회수 시스템 구축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별 종량제 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 지역폐기물 에너지화 실행계획 생태산업단지 광역화
물 수요관리 선진화 물산업 거점 추진	고도화된 차세대 하수 관거 정비 시범사업	물 수요관리 강화 물산업 허브지역화	상수도 관망 확대 및 노후개선 중수도/절수기 설치 우수저류시스템 구축 물산업 인력양성 및 R&D 강화 물 관련 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축산 폐수관리 선진화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V. 세계로 열린 SOC 확충

① 세계를 향한 길,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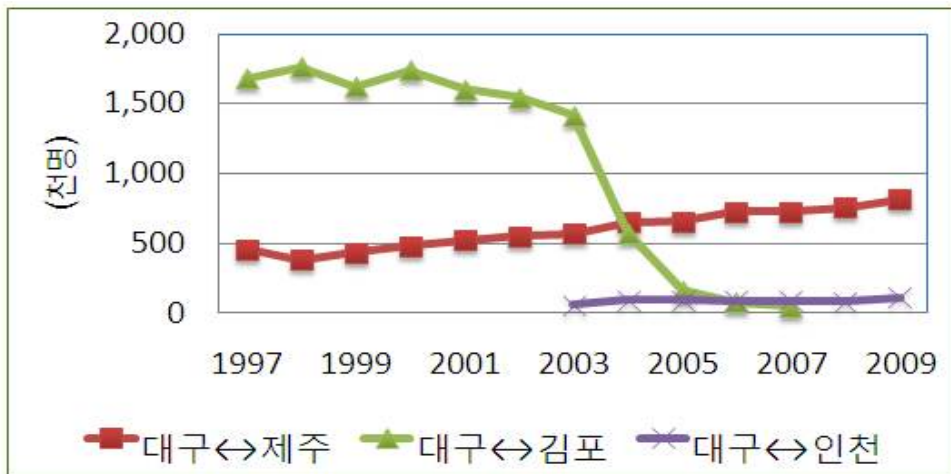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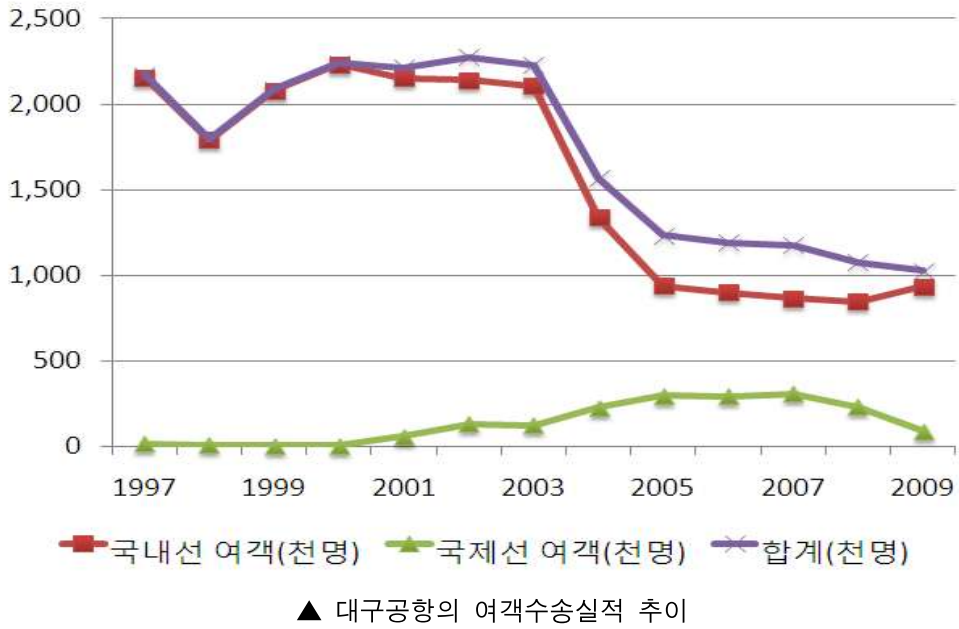
1. 하늘길 현황

■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지역 공항

- 대경권의 공항은 1961년 대구공항을 시작으로 1970년 포항공항, 1975년 예천공항 등이 개항
- 이 중 현재 민간 여객 부문으로 운영 중인 공항은 대구국제공항과 포항공항뿐
 - 대구공항은 국제선 3개 노선(북경, 상해, 심양)과 국내선 2개 노선(인천, 제주)이 운항 중이며, 포항공항은 국내선 2개 노선(김포, 제주)만 운항 중
 - 대구공항과 포항공항은 군·민 겸용 공항이기 때문에 활주로 등 이착륙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권이 군에게 있고, 야간운행통제시간(Curfew Time)이 설정되어 있음
- 군사전용 공항인 예천공항은 1989년 12월에는 민항기가 개항하였으나, 이용 수요가 없어 2004년 5월부터는 민항노선을 폐지한 상태
- 울진공항의 경우 투자여건 악화에 따라 비행교육훈련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올해 7월에 개항

■ 대구국제공항은 이미 경쟁력 상실

- 대구공항은 과거 서울(김포)와 대구를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활황을 이루었으나, 2004년 KTX의 개통으로 서울(김포) 노선의 경쟁력 상실
- 국제노선의 경우 2006년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국제노선의 수요가 김해공항으로 흡수



2. 바닷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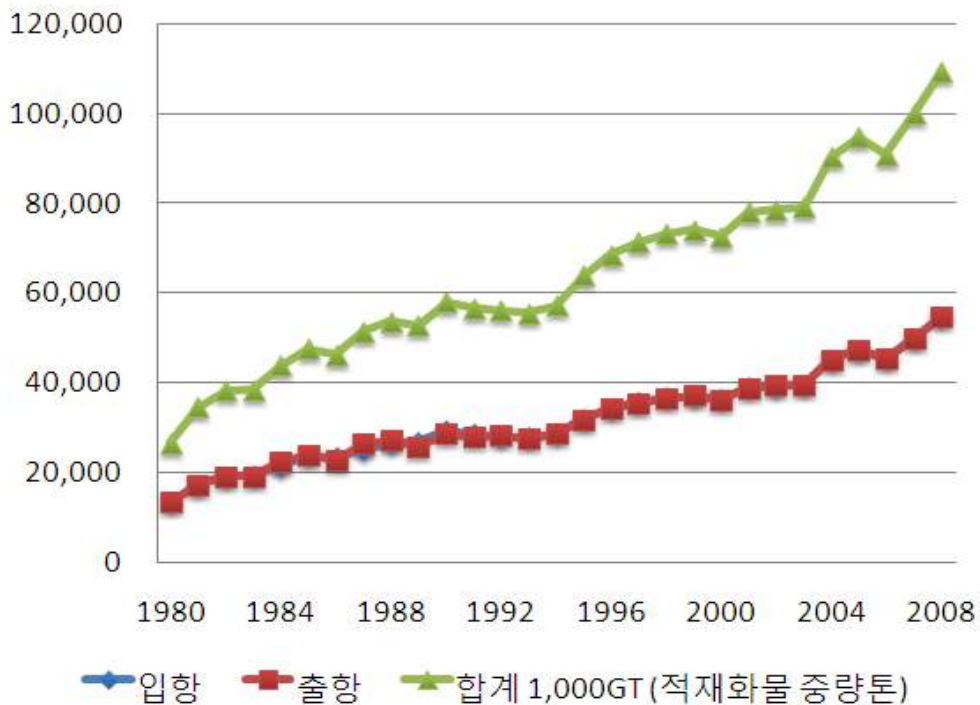
■ 대경권 항만의 일반 현황

- 대경권의 항만 시설은 무역항인 포항항과 연안항인 구룡포항, 후포항, 울릉항이 존재
 - 무역항은 수출·입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직접 건설·관리 및 운영

- 연안항은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연안 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건설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임
- 지역의 유일한 무역항인 포항항은 포항구항, 포항신항, 영일만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일만항은 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 4선식으로 개장
- 포항구항 : 모래, 유류 등 취급, 어선, 여객터미널
- 포항신항 : 포스코 등 배후 철강공단을 지원하는 신항
- 영일만항 : 컨테이너 부두

■ 포항항, 아직 관문 항만으로는 역부족

- 포항항의 화물 출항은 1995년 469만RT에서 2008년 1,118만RT로 연평균 6.91%씩 증가
- 출항 화물의 종류는 철강 및 그 제품이 86%로 대부분을 차지



▲ 포항항의 적재화물 수송실적 추이

3. 문제점 종합

■ 대구국제공항으로는 세계와 경쟁 불가

- 세계경제체계가 과거 국가와 국가 간 경쟁체계에서 광역경제권 간의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 경제권 간의 직항노선이 증가
 - 이에 따라 주요 국가에서는 광역경제권의 국제 거점공항을 확충 및 신설
-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과거 주요 도시별로 형성되어 있던 지방공항의 재정비 및 세계화에 부합하는 광역경제권별 국제공항 체계로의 전환 필요

■ 인천공항 이용 불편과 손실 막대

- 대경권에서 국제선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의 이용이 절대적이며,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건설로 김해공항이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 대구경북 주민이 국제공항을 통하여 세계로 왕래하는 통행량은 2007년 기준으로 약 1,344천 명이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씩 급증
- 영남권 주민들이 항공편으로 해외여행 시 인천공항 이용자 수는 2007년 기준으로 232만 명이며, 이는 전체 여행객의 43%를 차지
 - 대구경북 주민들의 경우 인천공항 이용자 수가 약 76만 명이며, 이는 대구경북 여행자의 56% 수준
-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영남권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2007년~2025년 누적 약 11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해 평균 6천억 원에 달함
 - 대구경북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시간손실 비용 역시 2007~2020년 누적 약 2조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¹¹¹⁾

111) 정용기(2008), 「인천공항 이용의 사회경제적 손실과 영남권 신국제공항」, 대구경북연구원

▼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대구경북의 경제적 손실 추정 결과

(단위 : 백만 원/년)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07~20년 누적손실
여객	운임 손실 비용	저 성장	26,056	35,030	43,347	53,640	574,624
		중 성장		35,838	45,564	57,969	601,883
		고 성장		36,648	47,781	62,297	629,090
	시간 손실 비용	저 성장	42,577	57,241	70,832	87,651	938,974
		중 성장		58,562	74,454	94,725	983,518
		고 성장		59,885	78,078	101,797	1,027,974
	소계	저 성장	68,633	92,271	114,179	141,291	1,513,598
		중 성장		94,400	120,018	152,694	1,585,401
		고 성장		96,533	125,859	164,094	1,657,064
화물	운송 손실 비용	저 성장	16,123	25,270	32,430	41,618	424,688
		중 성장		25,956	34,388	45,603	448,961
		고 성장		26,642	36,347	49,587	473,172
합 계	저 성장	84,756	117,541	146,609	182,909	1,938,286	
	중 성장		120,356	154,406	198,297	2,034,362	
	고 성장		123,175	162,206	213,681	2,130,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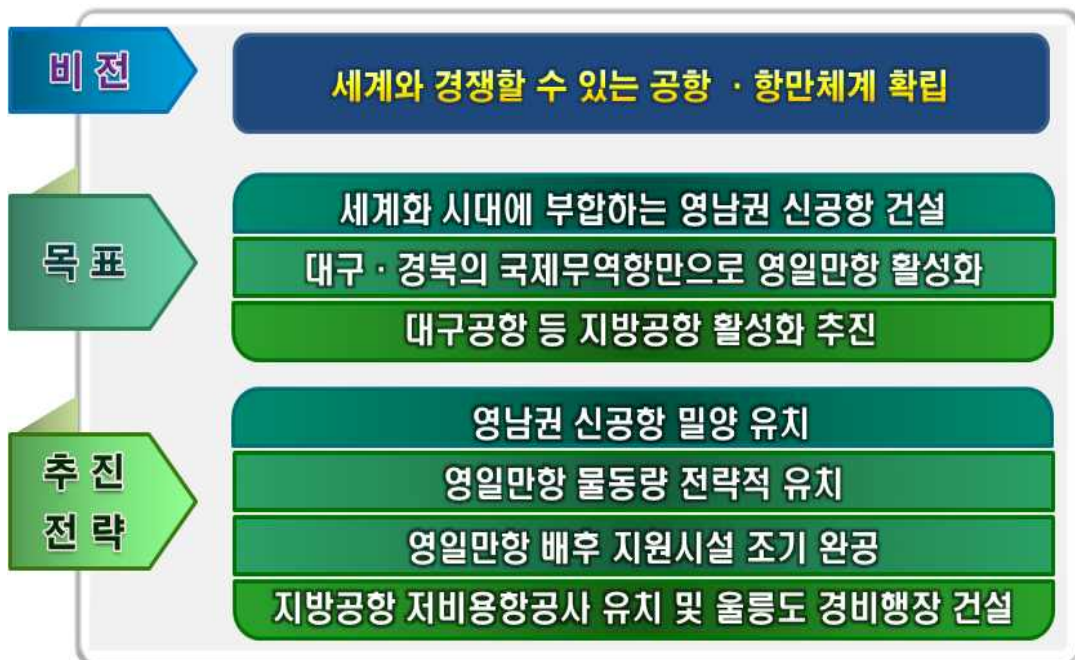
■ 영일만항의 활성화 미흡

- 배후산업단지와 배후단지 등의 적기 조성이 미진함에 따라 물동량 확보 및 정기노선 확보 부진
- 투자유치와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철도, 고속도로 등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나, 영일만항은 철도연계망 미 구축 상태
- 경북도와 포항시에서는 영일만항 이용 선사, 화주, 물류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항로연장지원금, 직항로개설 운항손실금, 항만이용 장려금 등으로 2~3년간 219억 원을 지원¹¹²⁾하고 있으며, 선 · 화주 부담의 컨테이너세도 폐지
- 그러나 아직 인지도가 낮아 투자유치와 정기노선 개설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항로연장지원금 : 1선사 3억원(5만원 이하/TEU), 3년간 5~7개사
 - 직항로개설 운항손실금 : 손실액 50%, 1선사 10억원 이내(2년간)
 - 항만이용장려금 : 화주 및 물류기업 4만원 이하/TEU, 20만TEU 도달할 때까지

112) 2009.4.23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조례' 제정

2 비전과 전략

- 공항과 항만 분야의 비전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공항·항만체계 확립”으로 설정
- 비전에 따른 3대 목표로는
 - 첫째,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 둘째, 대구공항 등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 셋째, 대북방교역의 중심항만으로서의 영일만항 활성화로 설정
-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 지방공항 저비용 항공사 유치 및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 영일만항 물동량 전략적 유치
 - 영일만항 배후 지원시설 조기 완공 등을 제시



▲ 공항·항만부문 비전 및 목표

③ 주요 전략사업

1.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 신공항의 기능과 역할

-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생존 문제를 넘어 남부경제권 공동번영의 필수요소
 -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
-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국내 제2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영남지역의 국제거점 공항으로 건설
- 인천공항에 위기 및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제2관문공항의 기능을 담당하여 인천공항과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
 - 기존의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민항부문은 신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
- 한국과 교류가 가장 많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중·단거리 국제선을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육성
 -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행 항공편 이용객은 전체 국제선 이용객의 73% 차지
- 저비용항공사(LCC)의 친숙공항으로 육성
 - 신공항은 중단거리 항공수요를 처리한다는 특성이 LCC의 특성과 서로 일치하여 LCC 친숙공항으로 활성화 가능

■ 신공항의 규모

- 순수 공항면적은 $4.4\text{km} \times 1.7\text{km} = 7.5\text{km}^2$ (약 230만평)로 계획
 - 1단계 활주로는 최신 항공기종이 취항 가능한 $3,800\text{m} \times 60\text{m}$ 규모로 건설 후 공항을 개항하며, 이때 총 건설비용은 내륙지역에 건설할 경우 6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
 - 2단계 활주로는 장래 항공기와 항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활주로 크기와 건설 시기를 결정하며, 건설비용은 약 2조원 정도로 추정

■ 신공항의 개항 시기

- 2007년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터미널, 활주로 등이 2020년 이전에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늦어도 2020년 이전에는 반드시 개항 필요
- 최근 열악한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어렵게 유치한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미래 성장동력 산업단지들은 신공항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
- 중·단거리에 위치한 중국(인구 13억), 인도(인구 11억)의 경제성장 속도와 공항확충 계획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와의 원활한 교역 추진과 이미 지방 국제공항체계가 잘 갖추어진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공항의 조기 건설 절실

■ 최적입지 : 밀양 하남지역

- 영남권 5개 광역시·도에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
 - 영남권과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이 취약한 호남권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건설하여 신공항의 기능에 부합한 남부경제권(영·호남권)의 국제거점공항으로 육성
- 공역 중첩, 장애물, 기상조건 등의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
 -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의 원천적 제거가 가능하고, 바람의 방향, 안개, 태풍 등 기상조건이 양호한 지역
- 24시간 공항 운영과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이 가능한 지역
 - 제2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음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군·민 겸용공항이 아닌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필요
- 공항 확장, 배후단지 건설 등이 용이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2. 대구공항과 포항공항 활성화

■ 해당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유치

- 국제선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 중국노선을 유치하고, 관광 성수기를 겨냥한 계절별 전세기 확충
- 국내선의 경우에는 소형항공기 위주로 유치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인천노선과 제주노선 확충

■ 야간운행통행시간 해제 확대

- 대구공항의 경우 현재 주말 및 연휴기간 해제(1년 동안 한시적 운영)를 평일 까지 확대

■ 기타 활성화 대책 추진

- 항공사에 대한 특정노선 취항 지원금 교부
-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직접보상 확대
- In-Bound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 주요 거점지역을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운행

3.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¹¹³⁾

■ 경비행장 건설에 따른 항공수요

- 2018년 기준으로 연 81만 통행으로 추정되었으며, 수도권에서 39만, 영남권에서 42만의 통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사업내용

- 활주로는 1,200m(50석 규모 항공기 이착륙 가능)로 계획하고, 사업비용은 약 6,400억 원으로 추정

113) 국토해양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공청회자료), 2010. 6

■ 공항개발 및 운영방향

- 관광객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으로 개발
- 소형항공사업 시장조성 효과로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 도모

4. 영일만항을 국제무역항만으로 육성

가. 물동량의 전략적 유치

■ 중국 동북 3성 컨테이너 물동량 전략적 유치

- 중국 동북 3성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00만 TEU이며, 그 중 동해안으로의 출구 예상 물동량은 약 84만 TEU로 추정¹¹⁴⁾
-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물동량 선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우선 동북 3성 물동량 중에서 유치 대상 물동량을 선정해 마케팅 추진

▼ 중국 동북3성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2007년)

(단위 : 천TEU)

구분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컨테이너 물동량	2,749	476	778

■ 나진항 물동량 적극 유치

- 중국 흑룡강성에서 생산하는 광물 및 곡물은 나진항을 통해 상해항으로 이동
- 북한의 나진항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현통해운에서 나진~영일만항 또는 부산항 운항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입

■ 극동 러시아지역 수출 물동량 적극 유치

- 영일만항의 대 러시아 물류비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극동 러시아지역 수출 물동량 적극 유치(현재 4개 선사 운영)

1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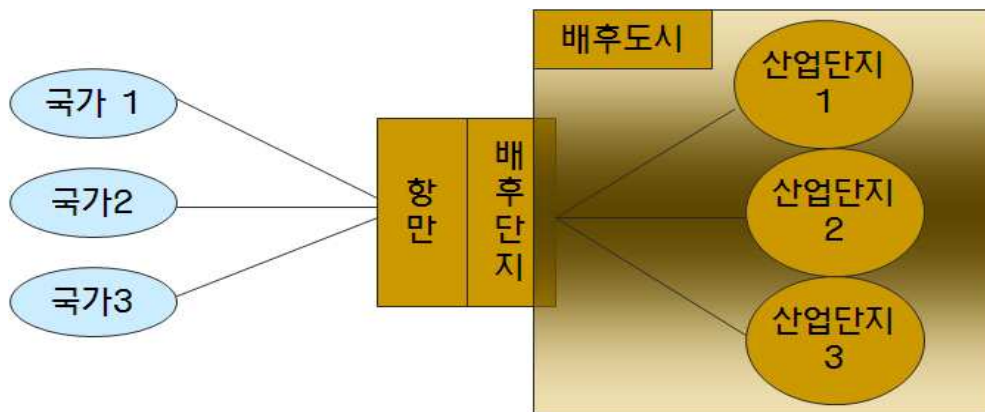
■ 포항, 구미 등 지역 수출 물동량 적극 유치

- 포항지역의 포스코 강판, OCI 등의 물동량의 주 수출지역은 동남아시아이며, 이를 위해 동남아 항로 개설 필요

나. 배후 지원시설 조기 완공

■ 배후단지 조기개발로 화물창조형 항만 육성

-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창조를 위한 기본 인프라
 - 항만 기능의 변화를 보면, 단순한 육·해상 화물 이동 통로 → 보관 배송 등 기본적 물류활동 추가 → 조립가공 등 부가가치물류활동 수행 → 중국적으로 비즈니스 및 금융 중심으로 변화
 - 배후단지의 개념은 다수의 기항지로부터 배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결절점이자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공간인 동시에 국제 물류거점으로서 항만 클러스터



▲ 항만 배후단지 개념도

■ 관련 교통인프라 조기 확충

- 영일만항 철도 인입선, 기계~영일만항 고속도로 조기 건설
 - 단기 : 철도 인입선, 구미공단~중앙고속도로 접속도로
 - 장기 : 기계~영일만항 고속도로 건설 추진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VI. 편리한 광역·도시교통

① 메가트렌드와 정책동향

1. 인구 감소 및 고령화

■ 대경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통계청은 2010년 이후 대구경북 지역 인구가 연평균 0.5%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30년 경에는 대구 약 210만, 경북 약 223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인구 감소는 통행량의 감소 유발

- 타당성평가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국가교통 DB의 여객 O/D자료는 통계청의 인구 예측치를 기준으로 예측
- 대경권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경권의 O/D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교통 DB의 대경권 O/D는 2011년 약 6,994만 인·통행/일에서 2021년 약 6,932만 인·통행/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장래 통행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통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증명하는데 난관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교통약자 증가

- 대경권, 특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
-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약자¹¹⁵⁾ 역시 증가

1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라 정의

2. 환경문제 대두

■ 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력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10.1)

■ 도로교통(개인승용차)의 수요관리 필요성 대두

-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수송 부문이 대두되면서 철도 등 기타 수단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큰 도로교통 부문의 수요관리 필요성 증대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도, 자전거 등 녹색 교통수단이 각광 받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철도부문 사업추진 의지 강력

3. 첨단기술의 발달 & 글로벌 트렌드

■ 교통정보를 통한 도로 교통 수요관리

- 도로 부문의 탄소배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수요관리 등 시도

■ 신개념 교통수단 등장

- 개인 교통수단의 억제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중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 교통수단 등장
 - 버스정보시스템 등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발달
 - 모노레일, 자기부상 열차 등과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등장

■ 도로 부문의 신규 투자 억제 → 기존 도로 효율화 사업이 대세

- 인구 감소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른 도로 부문 신규 투자 억제 등 도로 부문의 정책방향은 기존 도로 효율화

- 대경권은 과거 SOC 투자 사업의 부진으로 아직은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명확한 기존의 법정계획에 명시된 사업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사업 발굴

■ 철도 및 대중교통 투자, 지금이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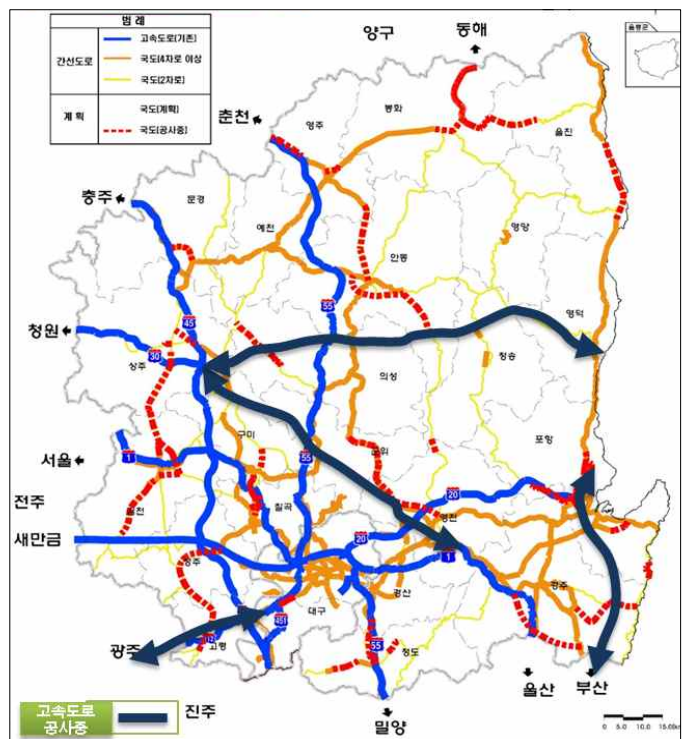
- 철도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고, 지역의 여건(수요 등)에 발목 잡혀 추진이 지지부진
-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변화 등으로 철도 및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이 최적기

2 현황과 문제점

1. 대경권 광역교통 여건 전망

■ 고속도로, 남부지역은 양호하나 경북 동북부 지역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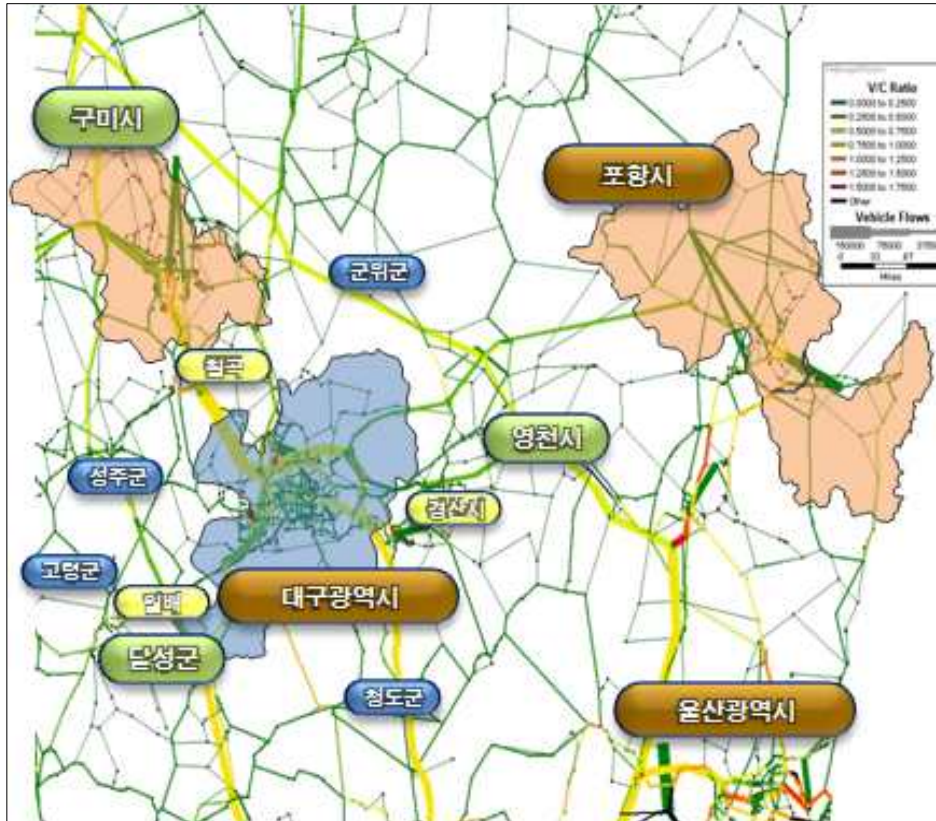
- 대경권의 고속도로는 경부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대구~포항 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 현재 고속도로는 남북 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등 4건이 공사 중이며, 국도 및 지방도는 55개 구간에서 공사 중
- 공사 중인 고속도로 개통시 대경권 대부분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포함되어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대경권 도로부문 여건 전망

■ 대구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 연결 지점에서 애로구간 발생

- 교통수요예측 프로그램 Trans CAD를 활용하여 장래(2020년 기준) 도로교통여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구미~대구 연계 구간, 영천~포항 연결 구간 등에서 애로구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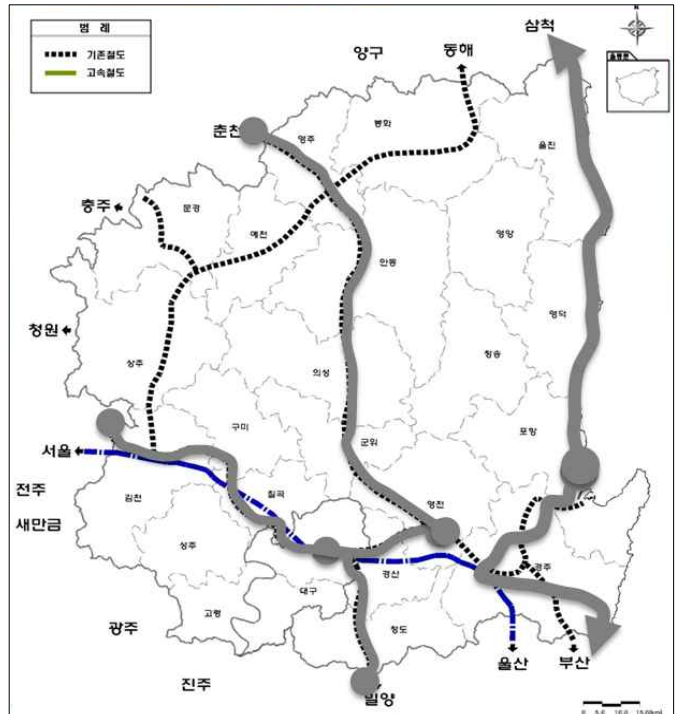


▲ 장래 도로교통여건 시뮬레이션 결과(2020년 기준)

■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 동서간·순환형 철도 부족

- 2010년 현재 대경권의 철도망은 경부고속철도 및 경부선, 중앙선, 경북선, 대구선, 영동선 등이 운영 중
-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및 경부선을 제외하고 모두 단선철도로 운영되고 있어 철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
- 이에 동해남부선 및 중부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대구선 복선 전철화 등의 시설 신설 및 개량 사업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한 광역전철망 1단계 사업(구미~대구~경산)이 추진 중

- 그러나 경북 동부지역의 경우 공사 중인 사업완료 후에도 철도교통망 불편
- 특히 동·서 간을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 철도망으로서의 기능 저하
 - 대경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경북선과 영동선의 경우 단선철도로 기능 저하
- 경북 동북부 지역 철도망 연결성 및 순환형 철도망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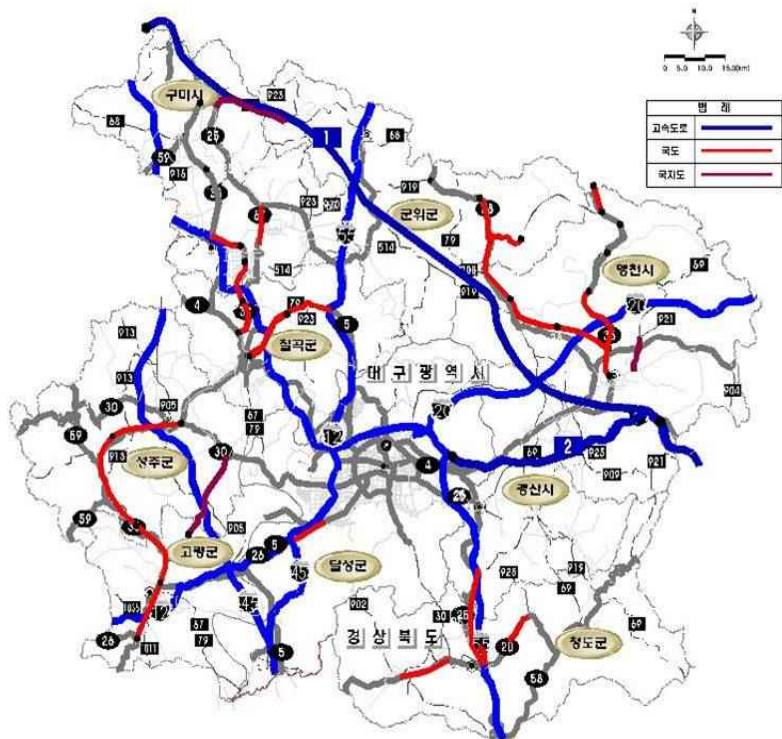


▲ 대경권 공사 중인 철도사업 완료시 여건 변화

2. 대구대도시권 교통여건 전망

■ 대구와 인접도시 간 연결도로 개선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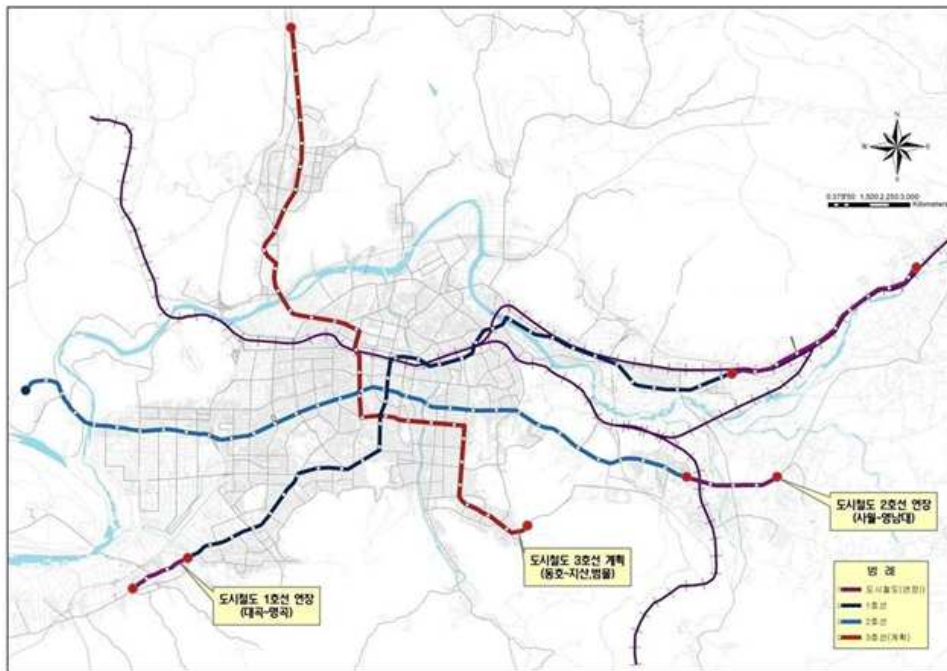
- 성주군과 칠곡군, 구미시 간의 도로계획 사업이 다수 추진 중
- 그러나 인접 도시에서 대구시로 진입하는 외부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계획 부족



▲ 대구대도시권 도로 부문 여건 전망

■ 대구시 도시철도 1·2·3호선 구축 예정

- 도시철도 1호선 대곡~명곡(화원)구간 연장과 2호선 사월~영남대까지의 연장으로 대구 광역권을 통합하는 노선 구축 예정
-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시 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까지 23.95km 구간에 정거장 30개, 차량기지 1개소로 계획
 - 고가식 모노레일 방식으로, 총 사업비 1조 4천억에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



▲ 대구 대도시권 도시철도 여건 전망

3. 여건 전망에 따른 문제점

■ 대경권 도로 부문

- 현재 대구를 중심으로 남북 간 통행 위주
 - 수도권+충청권 이동이 약 40%, 동남권 이동은 약 50%로 남북축 중심의 통행패턴을 보임
 - 동·서 간 연결 인프라 부족으로 동·서 축의 경제활동은 저하

- 경북 북부지역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며 일부 단절구간 존재
- 대경권 국가지원 지방도는 시설규격 미달 구간과 포장이 되지 않은 사리도 구간, 병목구간 등이 다수 존재하여 도로 인프라 추가사업 필요

■ 대경권 철도 부문

- 경부축 중심의 철도망 구성으로 경부축을 제외하면 철도망이 부족
- 동·서 연결 철도망이 부재하며 경부선 외에는 단선철도로 철도기능 저하
- 남북(경북 동북부) 및 순환형 철도망 부족으로 지역 간 연결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광역권 간 철도망(KTX)과 연계성 저하

■ 대구 도심 우회도로 부족

- 대구시에서 지정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도심(중구지역)
 - 이는 우회도로의 부족으로 통과차량이 모두 대구 도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발생하는 현상
 - 순환도로 기능 회복 시 도심 진입 통행량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동·서 간 연결은 달구벌대도가 주로 담당하므로 불필요한 도심 집중이 야기되고 도심 통과가 불가피
- 남북축 간선은 신천대로를 이용한 도심통과 노선이 대부분

■ 대구권 도심 외곽 경계지역 애로구간 발생

- 대구권 인접도시와 대구시 내부로의 진출입 통행이 다수 발생
- 그러나 현재 도시 외부로의 연결이 미흡하며 병목 구간이 다수 존재
-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IC~서대구IC 구간 상습 정체지역 발생

■ 대구 도심권 철도망은 기대만큼 수요 크지 않아

- 대규모 재원이 투자된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상황
- 이는 1단계 도시철도 사업(1,2,3호선) 이후 2단계 사업 추진의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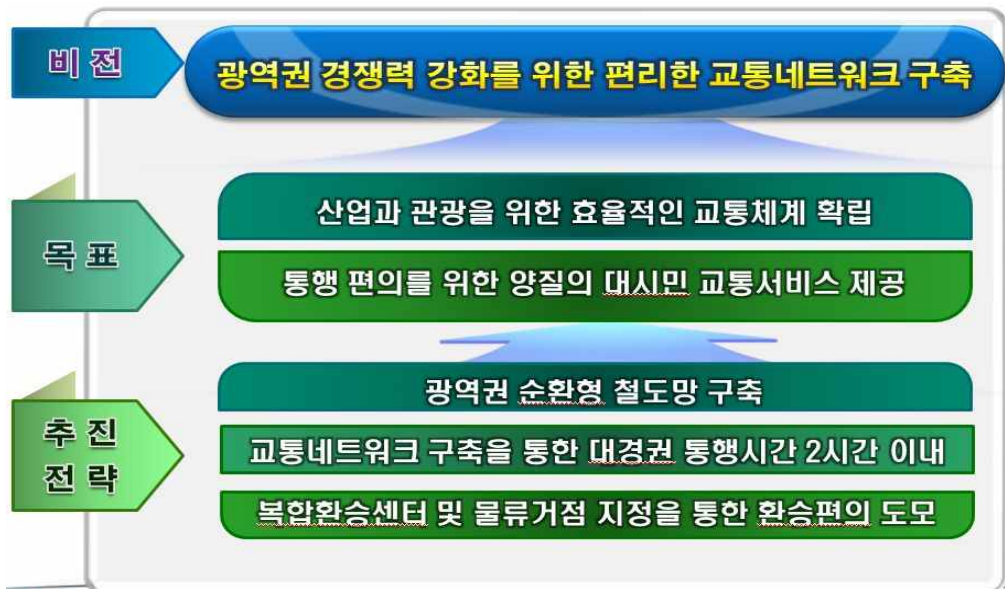
■ 환승역 부족 : 단일노선 운영으로 네트워크 체계 미흡

- 도시철도 수요가 적은 이유는 도시철도 간 환승기능 부족으로 도시철도가 단일노선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
 - 환승 기능이 강화되면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도시철도망으로서의 기능 발휘 가능
 - 환승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3 비전과 전략

1. 대경권

- 대경권 교통부문의 비전은 ‘광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편리한 교통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
 - 교통 인프라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를 ‘산업과 관광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립’, ‘통행 편의를 위한 양질의 대 시민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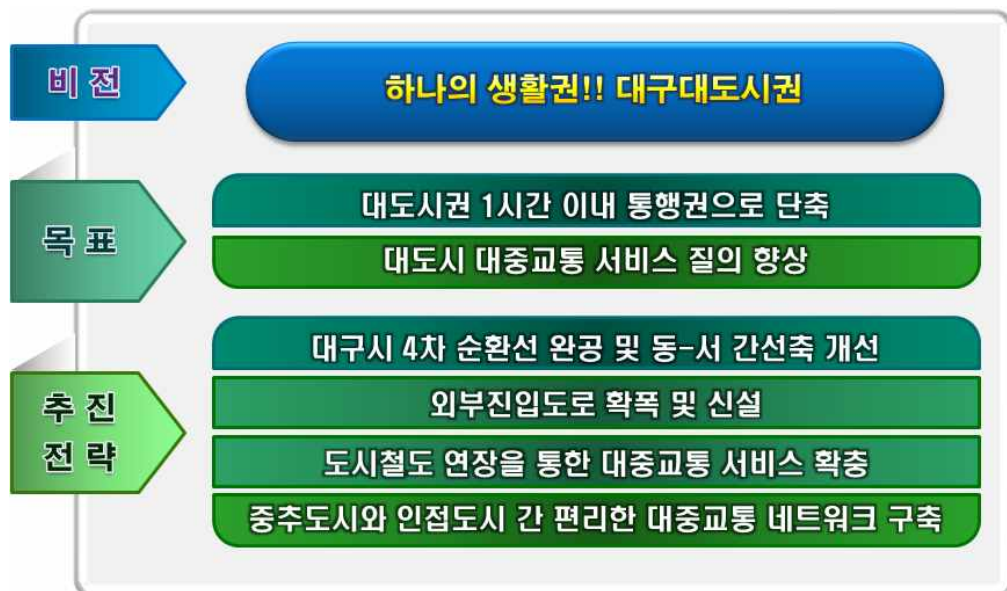


▲ 대경권 교통부문 비전 및 목표

-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설정
 - 첫째, 광역권 순환형 교통체계구축
 - 둘째, 대경권 전 지역 통행시간 2시간 이내로 연결
 - 셋째, 복합환승센터 및 물류거점 지정을 통한 환승편의 도모

2. 대구대도시권

- 대구대도시권 교통부문 비전은 ‘하나의 생활권!! 대구대도시권’으로 설정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를 ‘대구대도시권을 1시간 이내 통행권으로 단축’하는 것과 ‘대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



▲ 대구대도시권 비전 및 목표

-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
 - 대구시 4차 순환선 완공 및 동·서 간선축 개선
 - 대구시 외부 진입도로 확폭 및 신설
 - 도시철도 연장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 중추도시와 인접도시 간 편리한 대중교통네트워크 구축

4 주요 전략사업

1. 전략사업 선정 방법

■ 기존 계획에 명시된 사업 중심으로 선정

- 전략사업의 선정은 기존 법정 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중앙정부에서 신규 사업을 지양하려는 시점에 무리한 신규 사업의 추진은 역부족
 - 따라서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존 계획 중 장래 여건에서 지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전략사업을 선정

■ 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지표 설정

-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6개의 평가지표와 배점 기준을 설정
 - 평가항목간 절대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¹¹⁶⁾ 방식(5점)을 이용

리커트 척도 방식(5점)



▲ 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116)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 : Likert(1932)에 의해 개발된 리커트 척도는 태도나 가치를 수치화하는데 널리 쓰이는 척도 중의 하나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 같이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가 가장 많이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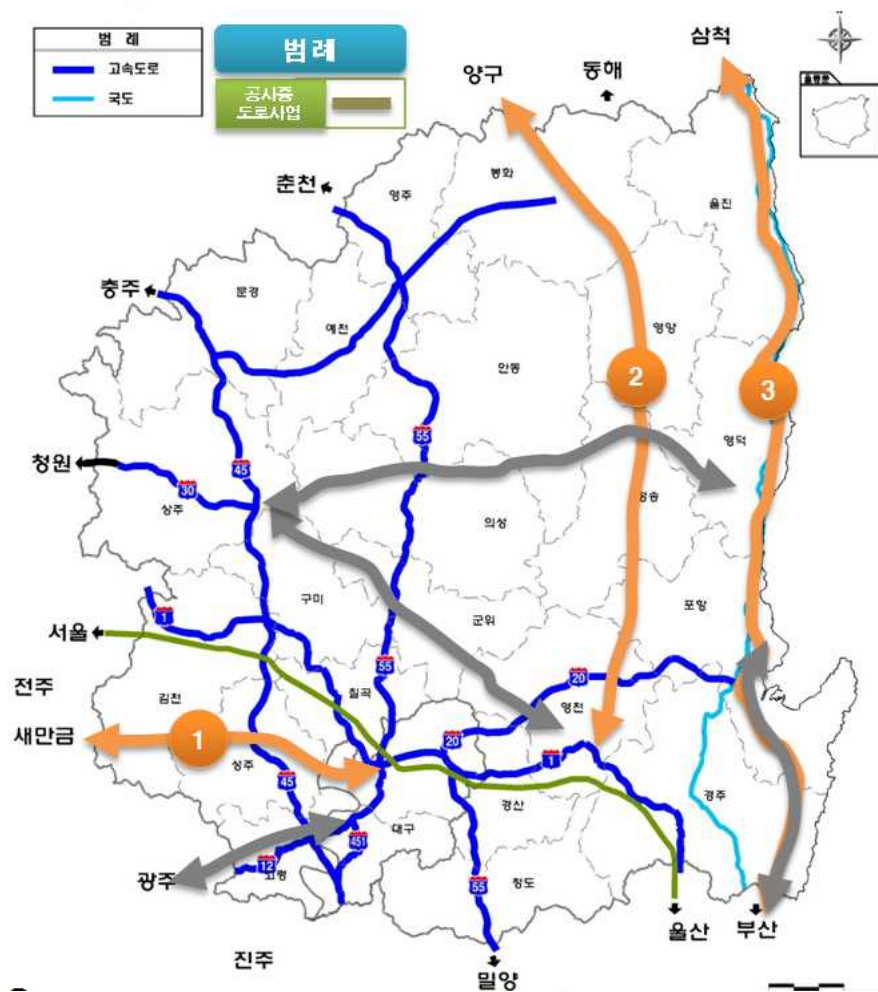
2. 대경권 전략사업

■ 고속도로는 거의 완성 단계, 동서5·6축 완공 서둘러야!

- 대경권 고속도로 사업계획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대구-새만금 고속도로, 남북 6축, 7축 고속도로 등 3개의 사업뿐

▼ 대경권 고속도로 전략사업 대상

우선순위	사업명	추진상황
1	대구~새만금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2	남북6축 고속도로 (영천~양구)	-
3	남북7축 고속도로 (포항~삼척)	타당성조사



▲ 대경권 고속도로 전략사업 대상

- 현재 진행 중인 동서 6축(상주~영덕)과 동해남부선(부산~울산~포항~영덕), 상주~영천, 고속화 간선도로로 진행 중인 동서 5축(봉화~울진) 구간이 완공 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포함
 - 특히 동서 5축 간선도로와 동서 6축 고속도로는 경북지역의 교통접근성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해 반드시 조기에 공사 완료
- 고속도로 신규사업은 다른 투자사업에 비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특히 노선의 중복도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국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필요

- 대경권 국도사업 계획 중 현재 추진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대상으로 전략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 주요 거점도시 간의 연계성, 동서축의 연계 강화 등 권역 내 2시간 통행권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특히 동·서 5축 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인 봉화~울진 구간은 동·서 주간선도로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도로로 평가됨
 - 안동~포항 국도는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포항과 안동 간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도로로서, 경북 동부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풍산~법전 구간은 동서 5축 간선도로와 신도청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경북북부권의 주요 간선도로 필요한 도로
 - 구포~생곡, 영천~삼창 구간은 병목구간으로 이 구간들만 개통된다면 상주~구미~대구와 영천~청송~안동을 연결하는 거대한 축 생성

▼ 대경권 국도 전략사업 선정

순위		구간	연장(km)	사업비(억원)
핵심	1	봉화~울진(신설)	47.2	28,323
	2	안동~포항 국도 확장	62.7	4,907
중장기	3	풍산~법전(신설)	62	6,000
	4	구포~생곡	22.4	2,312
	5	영천~삼창	25	2,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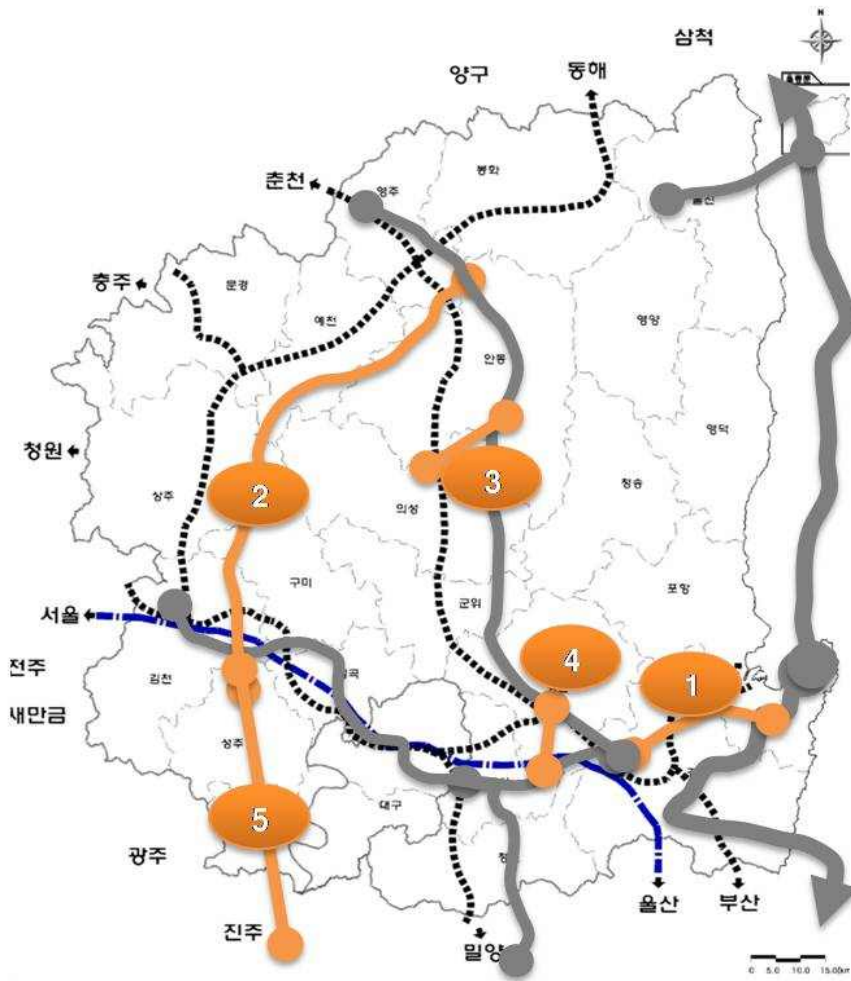
▲ 대경권 국도 전략사업 선정

■ 대경권 철도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

- 대경권 철도사업계획은 거의 대부분 중장기(안)으로 존재
- 그 중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0년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나머지 사업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김진선(김천~진주), 김전선(김천~전주) 등은 일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대구와 포항 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천-안강 철도 신설사업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파급효과 증대를 위한 경북선, 중앙선 지선(중앙선-신도청 연결), 하양-신녕 간 철도 등이 우선시 되는 상황

▼ 대경권 철도 전략사업 선정

우선순위		사업내용
핵심	1	포항직결선 부설 (영천~안강)
	2	경북선 복선 전철화 사업(김천~상주~문경~영주)
중장기	3	안동역~신도청소재지
	4	하양~신령 철도 건설
	5	김진선 철도 건설



▲ 대경권 철도 전략사업 선정

3. 대구대도시권

가. 도로 부문

■ 순환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전략사업

- 순환기능을 상실한 3차 순환도로 기능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차량의 도심통과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4차 순환도로의 조기 건설 필요
- 대구대도시권 전략사업의 핵심은 4차 순환도로 완공 및 3차 순환도로의 순환 기능 회복

▼ 순환 기능 회복을 위한 전략사업

구분	도 로 명	차로수	폭원(m)	연장(km)	추진	
1	4 차 순환선	지천~읍내	6	35	9.8	사업비3,500억원
2		안심~서변IC	6~8	35	23.9	08~19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
3		성서공단~지천IC	6~10	28~51	12.9	08~19 국가사업 추진 건의 중
4		상인~범물	6~8	35~60	10.44	25% 진행
5	3차 순환선		순환기능 회복 및 축 개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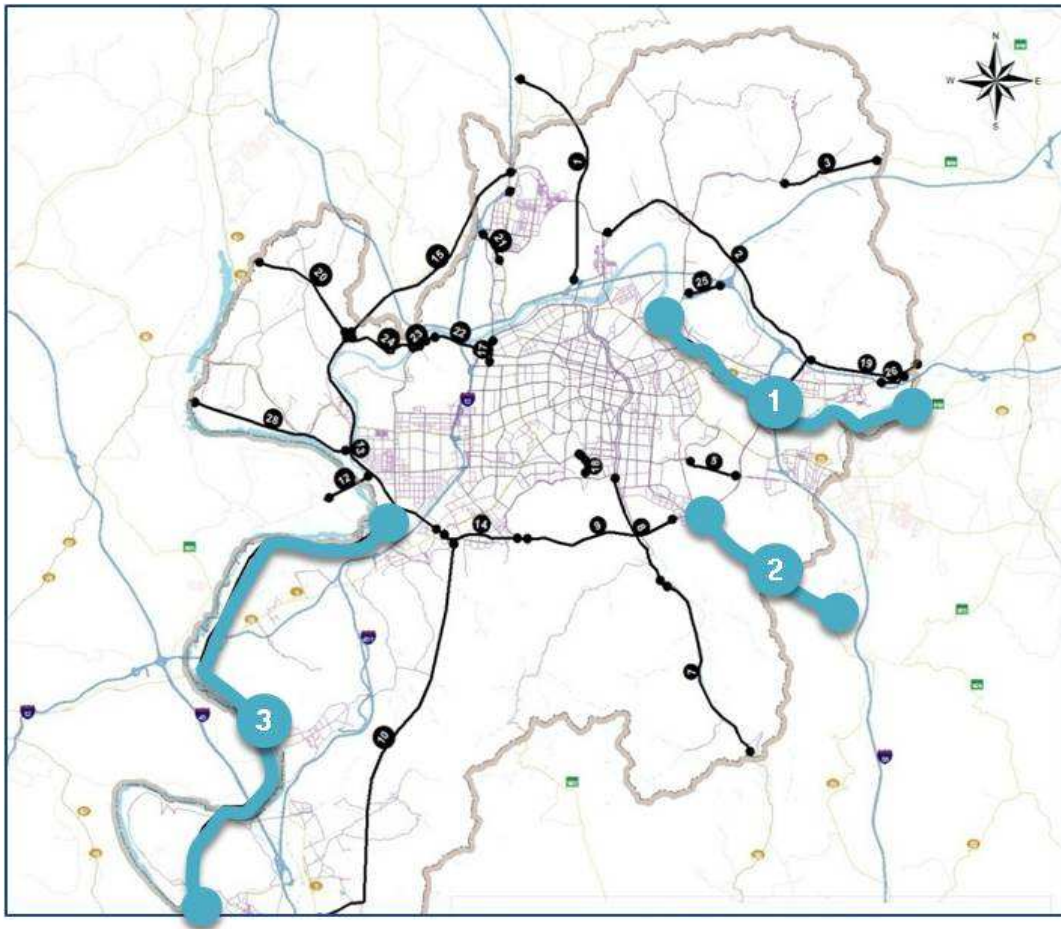
▲ 순환 기능회복을 위한 전략사업

■ 인접도시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전략사업

- 대구를 중심으로 인접도시에서 대구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사업 필요

▼ 대구 외부진입도로 개선 전략 사업

순위	도 로 명		차로수	폭원(m)	연장(km)	
핵심	1	금호강변 도시고속도로	공항교~경산시계	6	30	13.9
중장기	2	범물~남천간 광역도로		6	35	7.97
	3	낙동강변 도시고속도로	성산~구라IC	4~8	40~50	33.96
	구라IC~구지					



▲ 대구 외부진입도로 개선 전략 사업

■ 동서 간선도로축 기능 제고 및 대체노선 필요

- 대구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달구벌대로가 거의 유일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서 간선축의 정비 필요
- 달구벌대로의 기능 보완을 위해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국채보상로 구간이 선정되었으며, 신호연동화 등을 통한 축 기능 개선이 필요

나. 도시철도 부문

■ 대구권광역전철 구축, 도시철도 1·2·3호선 연계(3호선 연장)가 핵심

- 대구권광역전철은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의 공사 완료시 예상되는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09년 예비타당성평가 통과 후 추진 중
 - 2010년 현재 대구선 복선전철화 공사가 진행 중
 - 본 연구에서 전략사업으로 제시한 포항 직결선(영천~안강)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구축될 경우, 구미~대구~포항 등 대경권의 주요 거점도시를 통과하는 광역전철 운영 가능
- 또한 중장기 사업으로 제시한 하양~신령 간 철도는 중앙선 복선전철화가 완료될 경우 중앙선과 대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제2의 경부선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
 - 고속철도 1단계 완공 후 대구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는 거의 포화수준
 - 고속철도 2단계 완공 후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KTX 공급부족 발생 전망
 - 중앙선이 고속화로 계획 중이므로 중앙선을 대구로 연계할 시 기존 경부선을 대체할 수 있는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
- 도시철도의 경우 3호선 칠곡~동명, 범물지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신서혁신도시까지 구간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범물~혁신도시 구간의 연장은 1, 2호선과 환승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도시철도망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향후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다수 진행 중인 달성군 지역의 경우, 옥포~현풍간 도시철도 2호선 연장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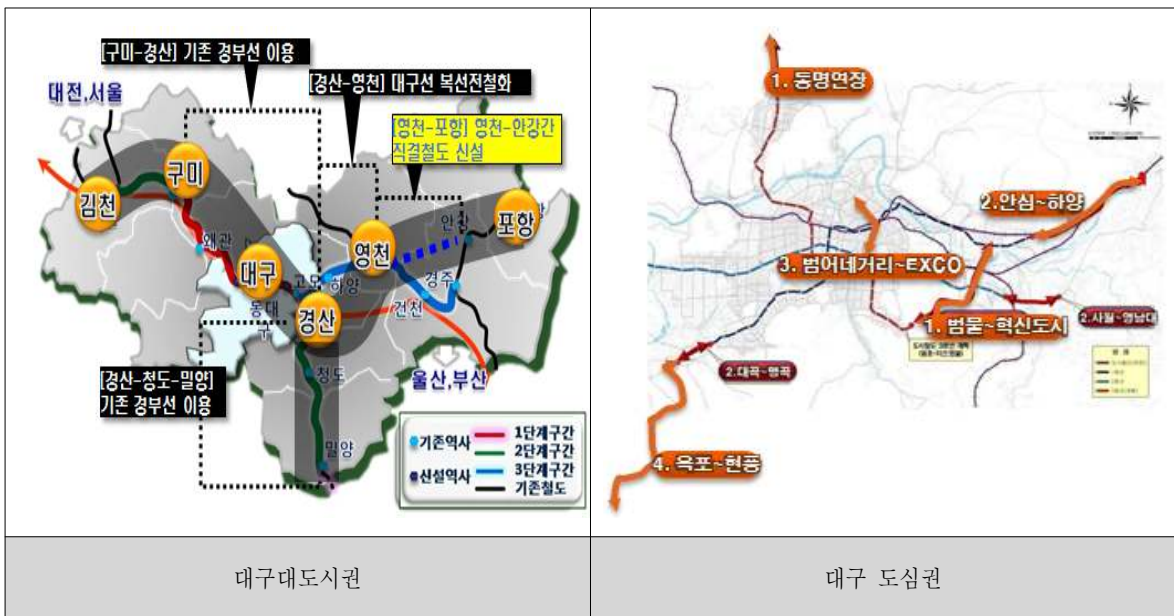
▼ 대구 도시철도 전략사업

[대구대도시권]

순위	사업명	구간	연장	사업기간	비고	사업비 (억원)	
핵심	대구권 광역전철	1·2단계	김천~구미~왜관 ~대구~경산~청도	108km	00~12	공사중	840
		3단계	구미~대구~영천~포항	78km	-	신규제안	
	포항직결선	영천~안강	30.5km	09~16	신규제안	6,117	
중장기	하양~신녕간 철도	신녕~청통~ 와촌~하양	13km	-	신규제안	3,000	

[대구 도심권]

순위	사업명	구간	연장	사업기간	비고	사업비 (억원)
1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칠곡~동명	3.0km	-	-	800
		범물~혁신도시	12.1km	-	신규제안	6,655
2	도시철도 2호선 연장	옥포~현풍~구지	20km	-	신규제안	5,000
3	도시철도 신규 건설	EXCO~경복대~동대구 ~범어네거리	8.9km	-	신규제안	5,157



▲ 대구 도시철도 전략사업

다. 대중교통 부문

■ KTX 정차역을 대중교통 거점으로 육성

- 2010년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KTX역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거점 지정 가능

▼ 교통물류 거점의 종류 및 역할 기능에 따른 지정권자

유형	거점의 역할기능 및 특성	지정권자	거점시설 예시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권역간 대규모 교통물류 활동수행	국토해양부 장관	중추거점공항, 대규모 무역항, 330만㎡이상 산업단지, 복합물류터미널, KTX 정차역 등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간, 권역내 중소규모 교통물류활동 수행	시·도지사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지방공항, 중소규모 무역항, 100만~330만㎡ 산업단지, 물류단지
제3종 교통물류거점	그 밖의 거점	시·도지사	연안항, 기타 산업단지, 일반철도 역사

- 대구대도시권에는 동대구, 김천(구미) KTX 정차역이 있어,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가능
- 특히 동대구역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신세계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



▲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 교통물류 거점 중심의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핵심

-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되면 동법에 따라 연계교통체계 구축 의무화
 -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고, 지정권자의 책임 하에 연계 교통체계 구축
 - 교통물류거점 지정 시 「연계 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사업비 국비지원 가능

■ 광역버스 확대 운영 및 광역 환승할인제도 도입

- 실질적인 생활권 구축을 위해 버스서비스 개선 및 강화 필요
 - 대구-경산의 경우 환승무료제 실시 이후 버스 이용객 증가

• •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 대구-영천 간 환승할인제 논의 중
- 대구와 인접도시 간 환승할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통근 수요가 많은 지역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

구분		사업기간		
		2010~2015	2015~2020	2020 이후
도로부문				
도로사업	단기	봉화~울진(신설)	→	
		인동~포항 국도 확장	→	
	중기	풍산~법전(신설)		→
		구포~생곡		→
		영천~삼창		→
철도부문				
철도사업	포항직결선(영천~안강)	→		
	경북선 복선전철화		→	

▲ 대경권 핵심전략사업 추진 로드맵

구분		사업기간		
		2010~2015	2015~2020	2020 이후
대도시권				
도로사업	국지도 고노~우보 외 4건	→		
	국도 일부 및 지방도		→	
대중교통 및 철도	광역전철망+포항직결선	→		
	광역버스 확대	→		
대구 도심권				
도로사업	4차순환선	→		
	3차순환선 죽계선	→		
	금오강변 도시고속도로	→		
대중교통 및 철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		
	도시철도1호선 연장	→		
	도시철도2호선 연장	→		
	도시철도3호선 연장	→		
	범어네거리~EXCO 신교통시스템 도입	→		

▲ 대구대도시권 핵심전략사업 추진 로드맵

제 6 장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New Design

Daegu

Gyeongbuk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I.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① 지방재정 개황 및 전망

1. 지방재정수입 지속적 감소

- 경기침체,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세입기반 약화
- 조세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세입구조로서, 지방예산 규모 증가율(11.8%)에 비해 지방세 증가율(2.4%)은 정체 상태

2. 지방재정 지출 증대

■ 사회복지 재정부담 증가

- 고령화 문제, 복지정책 확대, 국책사업 매칭비 확대로 지방 의무부담비 급증
- 최근 5년간 총예산 증가율 10%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예산 22% 증가

■ 지방채무 증가

-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지방채 발행액 증가

■ 비효율적 재정운용

- 일부 자치단체들의 과대 청사 건립, 선심성·낭비성 축제 및 행사 지원 등의 비효율적 재정운용 사례 증가

■ 공기업 적자 및 부채 급증

- 2006년 이후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사태 등으로 공기업 적자 및 부채 급증

3. 지방재정 전망

■ 세입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수입의 점진적 증가로 지방교부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세출 전망

- 사회복지사업 확대, 지방채무관리정책 강화 등으로 재정 여력은 여전히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환경 및 복지, 4대강 살리기 등의 대규모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대구시 재정 현황과 전망

■ 재정규모는 계속 증가, 자주재원 비중은 감소

- 대구시의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주재원의 비중 및 재정자립도는 지속적 감소 추세

▼ 대구시 재정 세입구조

(단위: 십억원)

연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총액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자주재원합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의존재원합계
2006	70.6%	4,234	1,660	911	25	2,596 (61.3%)	397	338	903	1,638 (38.7%)
2007	61.9%	4,712	1,598	905	76	2,579 (54.7%)	671	367	1,095	2,133 (45.3%)
2008	56.7%	5,505	1,628	1,042	102	2,772 (50.4%)	926	353	1,454	2,733 (49.6%)

주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기준,
자료 :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각 연도

■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재정 지출

- 환경, 사회복지, 보건분야 지출의 급속한 증대와 공공투자(건설, 교통 등)에 대한 적자 누적 등으로 재정지출 규모 급격히 증가
- 2009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 정책으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도 한몫

▼ 대구의 기능별 세출총괄

(단위: 십억원)

연도	합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2005	3,253	475	1,544	700	92	442
2006	3,657	507	1,781	830	90	448
2007	4,024	523	2,023	877	102	499
2008	4,711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579	76	11	543	133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 기업	수송 및 교통
		1,407	133	73	233	706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	-
157	0.006	661	-	-		

자료 :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각 연도.

■ 대구시 채무규모 증가

- 대구시의 지방채무는 200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2009년 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채무규모 증대
- 2010년 예산 대비 지방채 비중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시가 가장 높은 상태

▼ 7개 대도시의 지방채 규모 (2009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예산	지방채 잔액총계	지방채 비중
대구	49,554	20,531	41.4%
서울	227,095	30,963	13.6%
부산	75,064	27,217	36.3%
인천	68,336	24,774	36.3%
광주	28,092	8,098	28.8%
대전	26,821	6,057	22.6%
울산	30,062	6,201	20.6%

자료: 재정고, 지방재정 통계

■ 대구시 중기재정 전망

- 대구시의 채무감축계획(2012년까지 총부채규모 5,000억원 감축)으로 가용투자재원 여유는 더 어려워질 전망
- 중기재정계획상 가용투자재원은 연평균 4조 1,440억원, 투자재정수요는 4조 4,345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2,900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
- 지방세 세입 감소,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매칭비용을 감안하면 재원 부족액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측
- 하지만, 대규모 사업들의 우선순위 조정, 각종 경비의 총액관리제 시행, 주요 사업들의 사전검토제 등으로 가능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재정관리를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대구시 투자가용재원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중 기 계 획 기 간						평 균 신장률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입전망(A)	27,473,349	4,567,497	5,046,514	5,814,140	5,788,316	6,256,882	9.2%
경상지출전망(B)	6,750,558	1,265,140	1,217,004	1,368,419	1,385,685	1,514,310	4.9%
가용재원 (C=A-B)	20,722,791	3,302,357	3,829,510	4,445,721	4,402,631	4,742,572	10.9%
투자재정수요(D)	22,172,541	3,773,207	4,152,110	4,712,021	4,598,631	4,936,572	7.7%
부족재원(D-C)	1,449,750	470,850	322,600	266,300	196,000	194,000	-14.7%

자료: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2013」

3 경상북도 재정 현황과 전망

■ 중앙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북도 재정

○ 경북 역시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자주재원의 비중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경상북도 재정 세입구조

(단위: 십억원)

연도	재정 자립도	일반회계 총액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지방채	자주재원 합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의존재원 합계
2006	19.6%	11,063	1,799	2,424	147	4,370 (39.5%)	3,197	178	3,318	6,693 (60.5%)
2007	21.9%	12,039	1,867	2,649	92	4,608 (38.3%)	3,701	193	3,537	7,431 (61.7%)
2008	20.7%	14,209	1,915	2,978	105	4,998 (35.2%)	4,668	183	4,360	9,211 (64.8%)

주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기준
 자료 : 경상북도, 「통계연보」, 각 연도

■ 증가하고 있는 세출규모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국토개발 부문에서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북의 기능별 세출총괄

(단위: 십억원)

연도	합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
2000	1,642	94	617	729	62	140	-
2005	8,161	1,442	3,396	2,874	143	306	-
2006	8,948	1,565	3,891	2,970	179	342	-
2007	9,609	1,713	4,173	3,214	159	350	-
2008	11,165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1,104	357	35	788	866	2,088

자료 : 경상북도, 「통계연보」, 각 연도

■ 지방채 비중 증대

- 경북의 지방채무 잔액 규모는 1조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2009년 1조 4천억원으로 약 4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9개 광역도의 지방채 규모 (2009년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예 산	지방채 잔액총계	지방채 비중
경상북도	101,613	14,054	13.8%
경 기 도	268,970	38,917	14.4%
강 원 도	66,458	13,127	19.8%
충청북도	50,993	6,719	13.2%
충청남도	77,485	12,644	16.3%
전라북도	71,965	10,175	14.1%
전라남도	92,852	12,262	13.2%
경상남도	113,979	16,360	14.4%
제 주 도	26,011	7,432	28.6%

자료: 재정고, 지방재정 통계

■ 중기 재정 전망

- 중기재정계획상 가용투자재원은 연평균 4조 8,668억원이며, 투자재정수요는 연평균 5조 1,012억원 규모로 연평균 2,344억원 규모의 재원부족 발생 예상
- 노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매칭비용을 감안하면 재원 부족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특히 도청 이전에 따른 SOC투자 등 각 부문에서의 지출규모가 불확실하므로, 세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중장기 재정정책이 필요

▼ 경북의 투자가용재원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 계획 기간						평 균 신장률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입전망(A)	28,466,208	5,144,406	5,492,418	5,695,497	5,923,960	6,209,927	4.8
경상지출전망(B)	4,132,313	778,416	797,613	811,839	856,189	888,256	3.4
가용재원 (C=A-B)	24,333,895	4,365,990	4,694,805	4,883,658	5,067,771	5,321,671	5.1
투자재정수요(D)	25,505,895	4,655,990	4,874,805	5,063,658	5,322,771	5,588,671	4.7
부족재원(D-C)	1,172,000	290,000	180,000	180,000	255,000	267,000	-2.0

자료: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2013

4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정책동향

■ 지방소비세 도입 및 확대

-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 운영하고,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0%까지 확대 예정
 - 2010년 현재 2.46조원 규모에서 2013년 6.43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 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로서 2010년 지방소득세 예상세수는 약 6.5조원 규모(총 지방세수의 13.7% 수준)
- 정부는 지방소득세를 향후 독립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과표, 세율 등의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

■ 세입기반 정비 및 과세기반 강화

- 실효성 없는 감면제도 폐지 및 정비 : 비과세·감면 비율을 2009년 25%(15조원)에서 2015년까지 17.3%(13.4조원)로 개선 추진
-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 등의 자구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연장

- 2010년 말 종료되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 유도

-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

용자 방식으로 운영

■ **적극적 · 효율적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자체 노력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 낭비성, 선심성 및 유사 · 중복사업 정비 및 재정 전달체계 개선
-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시스템 구축 - 지방채 관리 강화
-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확대 및 내실화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Ⅱ. 재정 및 투자계획

① 세입·세출의 문제점과 과제

1. 지방재정 수입 측면

■ 재정 수입 감소의 악순환 진행

- 대구경북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 세입기반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으로 인구 및 자본이 유출되는 현상



▲ 대구경북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악순환 진행 단계

■ 대구 지방재정 수입의 주요 문제

-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의존재원 확대 정책
- 최근 대구시의 지방채 감축 정책도 추진 중이므로 의존재원 확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

■ 경북 지방재정 수입의 주요 문제

- 인구 감소, 고령화, 성장동력 미흡 등으로 세수입의 지속적 감소
- 중앙의존적 재정구조 심화로 재정자립도 급감 추세

2. 지방재정 지출 측면

■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재정 지출

- 대구경북의 세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비
- 사회보장비의 급속한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주민 복지수요 급증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재정수요의 급증은 향후 대구경북의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임

■ 대구시 재정지출의 주요 문제

- 여러 가지 대규모 국가사업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막대한 재정지출 수요가 우려되는 상황
- 이러한 사업들의 자원조달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의 모호 등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이 불완전한 상황
- 대구시 구·군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

■ 경북도 재정지출의 주요 문제

- 전반적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노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급증

- 자치단체들 간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적·중복적 재정지출 사례 증가
- 도청이전과 관련한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한 계획도 불완전한 상황

■ 재정분권 확립

- 재정분권이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재정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가늠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
- 중앙정부는 국가의 재정력을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자치사무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

■ 멀어지는 지방재정 자율권

- 지방재정의 규모와 위상은 제고되었으나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 재정집행권은 지방정부가,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앙의존형 재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자체 재정자립 동기 부족 및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
- 따라서 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정부의 단순한 ‘재정운영’ 방식보다 자립적 발전을 위한 ‘지방경영’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
-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 향후 의존재원의 비중 확대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② 비전과 전략

1. 비전과 목표

■ 효율적 지방재정운용으로 자치역량 강화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지출·재원조달 기능 배분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 경쟁력 제고

■ 효율적 재원확충 · 재정운영 · 재정관리 실현

-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의존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 관리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



▲ 대구경북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

2. 추진전략

■ 지방소비세의 효율적 활용

- 지방소비세를 기업 유치, 신성장동력 발굴, 사회복지부문 등의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 장기적인 지방재원 확충 차원에서 지방소비세가 달성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 지방채의 효율적 활용

- 일시적인 재정 부족, 지자체 자체 수익사업 등에는 경상적인 세수입만으로 충

당할 수 없으므로 지방채와 같은 임시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

- 고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장기적인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 없이 발행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상환부담능력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통제장치 마련

■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각종 낭비요소와 비경제적 경비를 최소화한 저비용·고품질의 재정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대구경북의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회복지 부문 국비 지원 확대

-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은 국가가 사업규모를 확정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가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매칭 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
- 사회복지부문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통해 국비 지원 확대 필요

■ 투자사업 평가·관리 강화

-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적 관리로서 시책평가, 성과주의 예산 등을 통한 제한적 관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전적 관리 및 사후적 관리를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미 구축
- 효율적 재정지출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계획·예산편성, 계약·사업집행, 사후관리) 투자사업 평가 관리 강화가 필요

■ 재정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지자체의 재정압박, 재정고통, 재정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회복체계’ 구축 필요

3 재원조달 방안

- 대구경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재원조달 우선순위는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구경북의 자주재원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현행 지방세 구조 하에 서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재원조달 방식은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기본방향

- 부문별 주요 사업 중 선별된 핵심 전략사업의 재정수요와 투자금액,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
- 한정된 투자재원을 감안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의 규모를 배분하고, 재정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효율성의 극대화 도모
- 중장기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문별 사업의 성격과 사업주체 및 투자여건, 사업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투자계획 수립

■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 확보

- 정부 해당 부서와 ‘예산신청 → 심의 → 확정’ 과정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기본계획과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여 준비
- 개발사업을 중앙정부 시책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증대 도모

■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구조의 점진적 완화

- 재산과세에 편중된 지방세 구조 개편 논의
 - 중앙정부의 과세자주권 제한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세율이나 과표를 변화시킬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
- 교부금 재원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현 19.24%의 교부율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중복성 지출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개별보조방식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능 영역 내에서 지방정부의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
- 의무별 매칭사업으로 지방재정 경직성 심화 → 국가사업 매칭펀드 방식 개선

■ 자주세원 증대 기반 마련

- 신 세원 발굴, 인센티브 수입 및 세외수입 확대방안 모색
-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세수입 기반 확충
- 징수율 제고, 탈루세원 감소 및 부동산 과표체계의 현실성 확보로 누수되는 세수입 확보
- 비과세 항목 및 세금 감면제도의 정비

■ 지방채의 적극적이고 안정적 활용방안 모색

- 세원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 매칭비로 인한 일반재원 활용도의 제한 등으로 지방재정 수입 확보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지방정부의 안정적 투자계획과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
- 지방채의 시장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중앙정부에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의 확대 요구와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역량(발행계획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 민간으로부터의 투자재원 확보

- 수익성과 실현성의 측면에서 대상 투자사업을 엄격히 평가하고 공시
-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 투자사업자 선정방식의 구축
- 선정된 투자 사업자에게는 현실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 공공성이 크지 않고, 소요재원의 상당액을 민간부문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도입 유도

4 핵심전략사업 사업비 추정

■ 핵심전략사업 선정기준

- 부문별 사업의 중요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정책의지 등을 기본전제로 설정하되,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재원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투자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사업, 향후 지역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 재원조달의 한계를 고려하여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제도개선 위주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우선 비중
- 단기적으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중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고려

■ 부문별 핵심사업 추정 사업비

- 국가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사업은 국가정책 기조와 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나 계획기조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관련 계획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
- 국가는 지방정부의 특정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국가기준보조율¹¹⁷⁾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 대상사업 특성별 국가기준보조율

보조율 구분 및 기준	기준보조율	대상사업 기준
국가적 사무	100%	- 국고위탁금 해당사업 - 기관위임사무 중 국가이해 강대사업 - 기타 국가 전액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가 우선적이고 정책적 사무	80%	- 국고부담금 해당사업 - 경제적·지역적 누출효과 강대사업 - 국가 종합적 계획사업
광역적이고 지역파급효과 사무	70%	- 경제적 및 지역적으로 외부효과 기대사업 - 광역적 수행장려 보조사업
지역적 사무	50%	- 단체위임사무 및 법시행사무비 등 자치단체의 경상적 사무화 성격의 사업 - 기타 국가보조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사무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개정(안)'으로부터 정리

117) 국가기준보조율 : 국고보조대상 사무사업비에 대한 일정보조비율로서, 보조금액은 보조기본액에 기준보조율을 곱하여 산정.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사무사업, 국가가 당해 사무사업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 국가가 장려하고자하는 사무사업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높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생각되는 사무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낮음

▼ 부문별 핵심전략사업과 추정 사업비

(단위 : 억원)

주요사업	총사업비	재원	계	1단계 ('11-'12)	2단계 ('13-'15)	3단계 ('16-)
<전통주력산업 부문> 효율성, 시급성, 지역적합성, 정책부합성 등 고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500	국비	-	-	-	-
		지방비	500(33%)	-	500	-
		민자	1,000(67%)	250	250	500
주력산업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150	국비	105(70%)	35	70	-
		지방비	45(30%)	20	25	-
		민자	-	-	-	-
주력산업 현장밀착형 인력양성	100	국비	70(70%)	20	20	30
		지방비	30(30%)	10	10	10
		민자	-	-	-	-
퇴직 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20	국비	14(70%)	2	5	7
		지방비	6(30%)	2	2	2
		민자	-	-	-	-
대구경북 중장기 산업-일자리 로드맵 구축	10	국비	7(70%)	3	4	-
		지방비	3(30%)	1	2	-
		민자	-	-	-	-
<신성장동력산업 부문> 효율성, 시급성, 지역적합성, 정책부합성 등 고려						
신기술 융합 선도기업 육성	240	국비	120(50%)	-	50	70
		지방비	120(50%)	-	50	70
		민자	-	-	-	-
신성장산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50	국비	35(70%)	-	15	20
		지방비	15(30%)	-	5	10
		민자	-	-	-	-
이업종간 신기술 교류 활성화 지원	50	국비	40(80%)	-	20	20
		지방비	10(20%)	-	5	5
		민자	-	-	-	-
신지식 산학융합지구 조성	100	국비	100(100%)	50	50	-
		지방비	-	-	-	-
		민자	-	-	-	-
신지식기반 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	90	국비	72(80%)	-	30	42
		지방비	18(20%)	-	8	10
		민자	-	-	-	-
<농수산업 부문> 농수산 관련 연구환경 조성 및 생산, 가공, 유통의 체계적 관리						
주산지별 명품브랜드 육성 (10개소)	20	국비	6(30%)	2	2	2
		지방비	8(40%)	2	4	2
		민자	6(30%)	2	2	2
산림비즈니스 특구 조성	200	국비	100(50%)	30	70	-
		지방비	30(15%)	10	20	-
		민자	70(35%)	20	50	-
1인 창조 농기업 육성	100	국비	40(40%)	10	10	20
		지방비	40(40%)	10	10	20
		민자	20(20%)	5	5	10

• •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위 : 억원)

주요사업	총사업비	재원	계	1단계 (‘11-’12)	2단계 (‘13-’15)	3단계 (‘16-)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250	국비	100(40%)	20	30	50
		지방비	100(40%)	20	30	50
		민자	50(20%)	10	15	25
곤충산업 소득화 사업	300	국비	120(40%)	-	120	-
		지방비	120(40%)	-	120	-
		민자	60(20%)	-	60	-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100	국비	20(20%)	3	7	10
		지방비	40(40%)	6	14	20
		민자	40(40%)	6	14	20
지역사회지원농장 조성	20	국비	4(20%)	1	1	2
		지방비	8(40%)	2	2	4
		민자	8(40%)	2	2	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추진단 운영	10	국비	4(40%)	2	2	-
		지방비	6(60%)	3	3	-
		민자	-	-	-	-
동해특산 대게 명품화사업	498	국비	250(50%)	65	185	-
		지방비	248(50%)	65	183	-
		민자	-	-	-	-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2,000	국비	2,000(100%)	650	1,350	-
		지방비	-	-	-	-
		민자	-	-	-	-

<서비스산업 부문> 효율성, 시급성, 지역적합성, 정책부합성 등 고려

수요 발굴 및 맞춤형 비즈니스 서비스 육성	100	국비	20(20%)	3	10	7
		지방비	48(48%)	12	28	8
		민자	32(32%)	1	17	14
해외환자 유치 시스템 구축	23	국비	-	-	-	-
		지방비	10(44%)	4	6	-
		민자	13(56%)	5	8	-
사업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30	국비	16(54%)	1	9	6
		지방비	13(43%)	1	8	4
		민자	1(3%)	0.5	0.5	-

<문화관광산업 부문> 사업의 중요성, 시의성, 정책의지 및 지역적 파급효과 고려

거점별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2,402	국비	916(38%)	320	472	124
		지방비	1,161(48%)	391	606	164
		민자	325(14%)	101	205	19
대도시권 문화관광 역량 강화	2,776	국비	1,622(58%)	483	639	500
		지방비	839(30%)	219	320	300
		민자	315(12%)	165	0	150
녹색생활 체험관광 기반 조성	1,329	국비	314(24%)	68	148	98
		지방비	575(43%)	109	276	190
		민자	440(33%)	63	212	165
문화관광 소프트 시스템 혁신	197	국비	18(9%)	4	6	8
		지방비	179(91%)	172	3	4
		민자	-	-	-	-

(단위 : 억원)

주요사업	총사업비	재원	계	1단계 (‘11-’12)	2단계 (‘13-’15)	3단계 (‘16-)
<지역교육 부문>						
(1) 초중등교육 :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함양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신장 프로그램 운영	10	국비	-	-	-	-
		지방비	10(100%)	5	2	3
		민자	-	-	-	-
미래지향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국비	-	-	-	-
		지방비	10(100%)	5	2	3
		민자	-	-	-	-
단위학교 교사 혁신그룹 육성	6	국비	-	-	-	-
		지방비	6(100%)	3	2	1
		민자	-	-	-	-
도서관 기능고도화 사업	18	국비	9(50%)	3	3	3
		지방비	9(50%)	3	3	3
		민자	-	-	-	-
(2) 대학교육 : 지역대학 특성화, 산학연계 등 협력시스템 구축						
대학컨소시엄의 단계적 구축	25	국비	-	-	-	-
		지방비	10(40%)	3	3	4
		민자	15(60%)	4.5	4.5	6
지역대학 특성화 지원조직 및 기금 마련	25	국비	-	-	-	-
		지방비	18(72%)	5	5	8
		민자	7(28%)	2	2	3
중소기업 컨소시엄 주문식 교육 실시	25	국비	-	-	-	-
		지방비	18(72%)	5	5	8
		민자	7(28%)	2	2	3
국제교류센터 건립	50	국비	10(20%)	10	-	-
		지방비	30(60%)	18	5	7
		민자	10(20%)	3	3	4
(3) 평생교육 : 평생교육시대에 대한 대응						
해피러닝프로젝트 : 소외계층 평생교육	12	국비	7(58%)	2	2	3
		지방비	5(42%)	1.5	1.5	2
		민자	-	-	-	-
대구경북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	국비	1.5(38%)	1	0.5	-
		지방비	2.5(62%)	2	0.5	-
		민자	-	-	-	-
생애주기별 커리어코칭 프로그램 개발	3	국비	1.5(50%)	0.5	0.5	0.5
		지방비	1.5(50%)	0.5	0.5	0.5
		민자	-	-	-	-

• •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위 : 억원)

주요사업	총사업비	재원	계	1단계 (‘11-’12)	2단계 (‘13-’15)	3단계 (‘16-)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부문> 국비확보 가능성, 효율성, 지역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밀착형 사업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	국비	10(50%)	-	5	5
		지방비	10(50%)	3	3	4
		민자	-	-	-	-
사회적기업 육성	210	국비	160(76%)	20	60	80
		지방비	50(24%)	10	20	20
		민자	-	-	-	-
시니어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	15	국비	5(33.3%)	2	3	-
		지방비	5(33.3%)	2	3	-
		민자	5(33.3%)	1	4	-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7	국비	-	-	-	-
		지방비	7(100%)	3	2	2
		민자	-	-	-	-
영유아도서관 설치 확대	26	국비	13(50%)	3	5	5
		지방비	13(50%)	3	5	5
		민자	-	-	-	-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선진화	28	국비	14(50%)	5	9	-
		지방비	14(50%)	5	9	-
		민자	-	-	-	-
<수준 높은 문화기반 조성 부문>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국비확보 가능성, 장기적 지속성, 제도정비 관련						
본 글로벌 게임기업 육성 프로젝트	15	국비	-	-	-	-
		지방비	12(80%)	6	6	-
		민자	3(20%)	1.5	1.5	-
공연크리에이티브 인력양성사업	27	국비	15(56%)	5	5	5
		지방비	9(33%)	2	3	4
		민자	3(11%)	1	1	1
구미 디지털콘텐츠 멀티플렉스건립사업	350	국비	150(43%)	50	100	-
		지방비	150(43%)	50	100	-
		민자	50(14%)	25	25	-
문화예술정보 핫라인 구축	60	국비	15(25%)	15	-	-
		지방비	45(75%)	15	15	15
		민자	-	-	-	-
대구경북 콘텐츠공방 구축	180	국비	84(47%)	40	16	28
		지방비	84(47%)	40	16	28
		민자	12(6%)	4	4	4
비향유자 맞춤형 지원사업	230	국비	100(43%)	20	30	50
		지방비	130(57%)	26	39	65
		민자	-	-	-	-
스타 아티스트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50	국비	20(40%)	4	6	10
		지방비	20(40%)	4	6	10
		민자	10(20%)	2	3	5

(단위:억원)

주요사업	총사업비	재원	계	1단계 (‘11-’12)	2단계 (‘13-’15)	3단계 (‘16-)
------	------	----	---	------------------	------------------	----------------

<건강한 시민을 위한 헬스케어 부문> 효율성, 시급성, 지역적합성, 정책부합성 등 고려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U-헬스 제외)	50	국비	25(50%)	10	15	-
		지방비	12.5(25%)	5	7.5	-
		민자	12.5(25%)	5	7.5	-
지역건강지도 작성	25	국비	20(80%)	8	12	-
		지방비	5(20%)	2	3	-
		민자	-	-	-	-
요양병원 품질 제고	15	국비	10(67%)	4	6	-
		지방비	5(33%)	2	3	-
		민자	-	-	-	-

<의식개혁 부문> 지역 정체성 정립 및 국제화에 역점

대구경북 정체성 정립 및 의식개선 교육·홍보사업	150	국비	-	-	-	-
		지방비	150(100%)	60	90	-
		민자	-	-	-	-
공무원 외국어 교육 확대·강화 사업	50	국비	-	-	-	-
		지방비	50(100%)	10	15	25
		민자	-	-	-	-
지역민 외국어 학습 사업	80	국비	-	-	-	-
		지방비	80(100%)	16	24	40
		민자	-	-	-	-
도시별 국제화 수준 향상 사업	270	국비	-	-	-	-
		지방비	270(100%)	180	90	-
		민자	-	-	-	-

<지역문화공동체 부문> 지원 위주의 소프트웨어적 사업

문화공동체포럼 운영	10	국비	-	-	-	-
		지방비	10(100%)	4	4	2
		민자	-	-	-	-
문화공동체 커뮤니케이터제도	10	국비	-	-	-	-
		지방비	10(100%)	-	5	5
		민자	-	-	-	-

• • 바람직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위 : 억원)

주요사업	총사업비	재원	계	1단계 ('11-'12)	2단계 ('13-'15)	3단계 ('16-)
------	------	----	---	---------------	---------------	-------------

<도심 재창조 부문>

- 중주도시 : 도심재생과 전략적 개발
- 중소 거점도시 : 도심 변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

영남 도심 재건 프로젝트	8,220	국비	410(5%)	110	190	110
		지방비	1,120(14%)	330	630	160
		민자	6,690(81%)	115	3,130	3,445
대구읍성길 복원	100	국비	50(50%)	30	20	-
		지방비	50(50%)	20	30	-
		민자	-	-	-	-
경상감영공원 및 주변공간 개발	280	국비	-	-	-	-
		지방비	280(100%)	200	80	-
		민자	-	-	-	-
신청사 건립 및 복합공간 개발	1,100	국비	200(18%)	10	100	90
		지방비	500(45%)	20	400	80
		민자	400(36%)	5	100	295
국채보상로 그린웨이 조성	200	국비	100(50%)	50	50	-
		지방비	100(50%)	50	50	-
		민자	-	-	-	-
전략지 특별계획구역 개발	6,130	국비	-	-	-	-
		지방비	30(1%)	10	10	10
		민자	6,100(99%)	100	3,000	3,000
도심 맥 프로젝트	110	국비	30(27%)	10	10	10
		지방비	80(73%)	20	30	30
		민자	-	-	-	-
도심 문화재생 프로젝트	300	국비	30(10%)	10	10	10
		지방비	80(27%)	20	30	30
		민자	190(63%)	10	30	150
포항 도시정주여건 개선 및 복합문화예술활동 강화	1,660	국비	320(19%)	320	-	-
		지방비	340(20%)	200	140	-
		민자	1,000(31%)	1,000	-	-
구미 향 가꾸기 프로젝트	550	국비	220(40%)	110	110	-
		지방비	330(60%)	110	110	110
		민자	-	-	-	-

<안전한 도시 부문>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재해정보 시스템 구축 (재해예방 시스템)	50	국비	25(50%)	10	15	-
		지방비	25(50%)	10	15	-
		민자	-	-	-	-
국민홍보 및 교육 확대 사업 (방재교육)	40	국비	-	-	-	-
		지방비	40(100%)	8	12	20
		민자	-	-	-	-

<자원순환형 사회 부문> 효율적, 자립적 자원의 활용

대구경북 생태발자국 줄이기 사업	9	국비	-	-	-	-
		지방비	9(100%)	3	3	3
		민자	-	-	-	-
물 수요관리 강화	1,300	국비	-	-	-	-
		지방비	1,300(100%)	300	500	500
		민자	-	-	-	-

(단위 : 억원)

주요사업	총사업비	재원	계	1단계 (‘11-’12)	2단계 (‘13-’15)	3단계 (‘16-)
------	------	----	---	------------------	------------------	----------------

<편리한 교통 부문>

·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국가정책 연계성, 지역의 적합성 및 형평성 고려

(1) 광역권

봉화~울진 도로(신설)	28,323	국비	28,323(100%)	9,400	9,400	9,523
		지방비	-	-	-	-
		민자	-	-	-	-
안동~포항국도 확장	4,907	국비	4,907(100%)	1,600	1,600	1,707
		지방비	-	-	-	-
		민자	-	-	-	-
포항직결선 철도 부설 (영천~안강)	6,117	국비	6,117(100%)	2,000	2,000	2,117
		지방비	-	-	-	-
		민자	-	-	-	-
경북선 복선전철화 사업 (김천~상주~문경~영주)	27,098	국비	27,098(100%)	-	-	27,098
		지방비	-	-	-	-
		민자	-	-	-	-

(2) 대구 도심권 - 광역권과 중복사업은 제외

4차 순환도로 완성	15,629	국비	15,629(100%)	5,629	5,000	5,000
		지방비	-	-	-	-
		민자	-	-	-	-
3차 순환선 축 개선	440	국비	-	-	-	-
		지방비	440(%)	240	200	-
		민자	-	-	-	-
금호강변 도시고속도로 건설	2,000	국비	2,000(100%)	-	1,000	1,000
		지방비	-	-	-	-
		민자	-	-	-	-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840	국비	840(100%)	440	400	-
		지방비	-	-	-	-
		민자	-	-	-	-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안심~하양)	5,924	국비	3,554(60%)	-	1,554	1,500
		지방비	2,370(40%)	-	1,370	1,000
		민자	-	-	-	-
도시철도 2호선 연장 (옥포~현풍~구지)	5,000	국비	3,000(60%)	-	2,000	1,000
		지방비	2,000(40%)	-	1,000	1,000
		민자	-	-	-	-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칠곡~동명, 범물~혁신도시)	7,455	국비	4,513(60%)	-	2,200	2,313
		지방비	2,942(40%)	-	1,500	1,442
		민자	-	-	-	-
도시철도 신규 건설 (EXCO~경북대~동대구역 ~범어네거리)	5,157	국비	3,094(60%)	-	1,200	1,894
		지방비	2,063(40%)	-	800	1,263
		민자	-	-	-	-

NEW DESIGN DAEGU-GYEONGBUK

보고서 체계

제 1 편 『뉴 디자인 대구경북』 총괄보고서
만화로 보는 『뉴 디자인 대구경북』

제 2 편 부문별 계획 보고서
(48개 부문별 과제로 구성)

제 3 편 도시별 계획 보고서
(30개 도시권 · 도시별 과제로 구성)

부 록 대구경북 30년사
(73개 부문별 · 도시별 과제로 구성)

부문별 보고서

① 산업(I · II)

- 1. 산업 발전방향 (나중규 · 이부형)
- 2. 기계 · 금속 · 자동차산업 (윤상현)
- 3. 전기 · 전자산업 (나중규)
- 4. 섬유산업 (이문희)
- 5. 의료산업 (최재원)
- 6. 한방산업 (박민규)
- 7. 그린에너지산업 (설홍수)

② 서비스산업

- 1.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이춘근 · 최재원)
- 2.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박성덕)
- 3. 금융산업 (이춘근 · 강태훈)
- 4. 소비형 서비스산업 (임규채)
- 5. 건설산업 (곽종무)

③ 연구개발(R&D)

- 1. 공공연구기관 R&D (김병태)
- 2. 대학 R&D (김세나)
- 3. 기업 R&D (김용현)

④ 농수산업

- 1. 농업 (석태문 · 이현지)
- 2. 해양수산 (이동형)

⑤ 문화 · 관광(I · II)

- 1. 문화 · 관광 발전방향 (송은정 · 오동욱)
- 2. 경주 & 동해안권 관광 (송재일)
- 3. 북부권 관광 (이미경)
- 4. 대구권 관광 (송은정)
- 5. 문화예술 (최정수)
- 6. 문화산업 (오동욱)

6 교육

1. 교육 발전방향 (김세나)
2. 대학교육 (김혜진)
3. 초·중등교육 (서지영)
4. 평생교육 (서찬수·박은희·김혜진·서지영)

7 복지(I·II)

1. 복지 발전방향 (박은희·오창균)
2. 저소득층 (오창균·박은희)
3. 노인복지 (박은희)
4. 장애인복지 (이재필)
5. 아동·청소년복지 (김성애)
6. 다문화 (안지민)
7. 지역문화공동체 (김재경·김성애)
8. 대구 여성정책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소)
9. 경북 여성정책 (경북여성정책개발원)

8 환경

1. 물 관리 (남광현)
2. 폐기물 관리 (김기호)
3. 대기환경 관리 (최정학)
4. 안전 관리 (김희철)

9 교통

1. 공항·항만 (정웅기)
2. 광역교통 (권태범)
3. 대구대도시권 교통 (한근수)
4. 동해안권 도시교통 (이상인)
5. 도청신도시권 도시교통 (이상인)
6. 상주·문경 도시교통 (권태범)

10 행정·재정

1. 행정 (김광석)
2. 재정 (정군우·윤상용)

도시별 보고서

① 대구대도시권(Ⅰ·Ⅱ)

1. 대구대도시권 발전방향 (신우화)
2. 대구광역시(도심, 달성군) (최영은·박종순)
3. 영천시 (김주석)
4. 경산시 (김주석)
5. 군위군 (조득환)
6. 청도군 (김주석)
7. 고령군 (조득환)
8. 성주군 (조득환)
9. 칠곡군 (조득환)

② 동해안권(Ⅰ·Ⅱ·Ⅲ)

1. 동해안권 발전방향 (김중표)
2. 포항시 (김중표)
3. 경주시 (김용범)
4. 청송군 (김용범)
5. 영덕군 (이정주)
6. 울진군 (이정주)
7. 울릉도·독도 (이동형)

③ 도청신도시권(Ⅰ·Ⅱ·Ⅲ)

1. 도청신도시권 발전방향 (이동수)
2. 도청이전 신도시 (이동수·최용준)
3. 안동시 (최용준)
4. 영주시 (이동수)
5. 의성군 (김현진)
6. 영양군 (김현진)
7. 예천군 (최용준)
8. 봉화군 (이동수)

④ 첨단산업도시권

1. 첨단산업도시권 발전방향 (류형철)
2. 구미시 (임성호)
3. 김천시 (임성호)

5 관문도시

1. 관문도시 발전방향 (류형철)
2. 상주시 (김기철)
3. 문경시 (김기철)

NEW DESIGN DAEGU-GYEONGBUK

대구경북 30년사

1 산업(I · II)

1. 기계 · 금속 · 자동차산업 (윤상현)
2. 전기 · 전자산업 (나중규)
3. 섬유산업 (이춘근)
4. 안경산업 (이문희)
5. 공예산업 (이문희)
6. 철강산업 (곽종무)
7. 에너지산업 (설홍수)
8. 의료산업 (최재원)
9. 한방산업 (박민규)

2 산업단지

1. 대구 산업단지 (윤상현)
2. 포항 산업단지 (곽종무)
3. 구미 산업단지 (나중규)
4. 경산 · 영천 · 경주 산업단지 (나중규 · 윤상현)

3 서비스 부문(I · II)

1. 연구개발(R&D) (김용현)
2.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박성덕)
3. 금융산업 (이춘근 · 강태훈)
4. 소비형 서비스산업 (임규채)
5. 건설산업 (곽종무)
6. 정보화 (이문희)

4 농수산업

1. 농업 (석태문 · 이현지)
2. 해양 · 수산 (이동형)

5 문화·관광

1. 대구 관광 (송은정)
2. 경주 & 동해안권 관광 (송재일)
3. 북부권 관광 (이미경)
4. 남부권 관광 (노윤구)

6 문화예술(산업)

1. 공연(음악) (오동욱)
2. 문학 (김성애)
3. 미술 (최정수)

7 교육

1. 대학교육 (김혜진)
2. 초·중등교육 (서지영)
3. 평생교육 (박은희·서찬수)

8 복지

1. 노인복지 (박은희)
2. 장애인복지 (이재필)
3. 아동·청소년복지 (안지민)
4. 다문화 (안지민)
5. 체육정책 (오창균)

9 환경

1. 상·하수도 (남광현)
2. 폐기물관리 (김기호)
3. 대기환경 (최정학)
4. 안전관리 (김희철)

10 교통

1. 광역교통시설 (정웅기)
2. 대구 대도시권 교통 (권태범)
3. 경북 거점도시 교통 (한근수)

11 행정·재정

1. 인구와 도시체계 (박종순)
2. 국제행사 & 국제교류 (이정주)

- 3. 행정조직 (김광석)
- 4. 세입·세출 (정군우)

12 대구대도시권 & 첨단산업도시권(I · II)

- 1. 대구시 토지이용·주거 (조득환)
- 2. 대구시 업무기능·공원녹지·경관 (신우화)
- 3. 구미시 (임성호)
- 4. 김천시 (임성호)
- 5. 영천시 (김주석)
- 6. 경산시 (김주석)
- 7. 군위군 (김기철)
- 8. 청도군 (김주석)
- 9. 고령군 (조득환)
- 10. 성주군 (김기철)
- 11. 칠곡군 (조득환)

13 동해안권

- 1. 포항시 (김중표)
- 2. 경주시 (김용범)
- 3. 청송군 (김용범)
- 4. 영덕군 (이정주)
- 5. 울진군 (이정주)
- 6. 울릉도·독도 (이동형)

14 도청신도시권 & 관문도시

- 1. 안동시 (최용준)
- 2. 영주시 (이동수)
- 3. 상주시 (임성호)
- 4. 문경시 (이동수)
- 5. 의성군 (김현진)
- 6. 영양군 (김현진)
- 7. 예천군 (최용준)
- 8. 봉화군 (이동수)

『뉴 디자인 대구경북』 수립 참여자

■ 연구진

- 연구책임 홍 철(원 장)
- 총괄조정 이상용(선임연구위원) 서인원(선임연구위원) 류형철(연구위원)
- 총괄계획 나중규(연구위원) 김용현(연구위원) 김종표(연구위원)
 석태문(연구위원) 박은희(부연구위원) 송은정(부연구위원)
 오동욱(부연구위원) 최영은(부연구위원) 최재원(부연구위원)
 이동수(부연구위원) 신우화(부연구위원) 한근수(부연구위원)
 김세나(부연구위원) 김성애(책임연구원) 최용준(책임연구원)
 윤상용(책임연구원)
- 산업부문 나중규(연구위원) 이문희(부연구위원) 윤상현(부연구위원)
 설홍수(부연구위원) 최재원(부연구위원) 박민규(부연구위원)
 이부형(부연구위원)
- 서비스업 이춘근(선임연구위원) 곽종무(연구위원) 최재원(부연구위원)
 박성덕(부연구위원) 임규채(책임연구원) 강태훈(연구원)
- 연구개발 김용현(연구위원) 김병태(연구위원) 김세나(부연구위원)
- 농수산업 석태문(연구위원) 이동형(부연구위원) 이현지(연구원)
- 문화관광 송재일(부연구위원) 송은정(부연구위원) 오동욱(부연구위원)
 최정수(부연구위원) 이미경(연구원)
- 교육부문 김혜진(부연구위원) 김세나(부연구위원) 서지영(연구원)
- 복지부문 오창균(연구위원) 박은희(부연구위원) 이재필(부연구위원)
 김성애(책임연구원) 안지민(책임연구원)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소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도시부문 김종표(연구위원) 김용범(연구위원) 류형철(연구위원)
 조득환(부연구위원) 이동형(부연구위원) 최영은(부연구위원)
 김주석(부연구위원) 임성호(부연구위원) 이동수(부연구위원)
 신우화(부연구위원) 박종순(부연구위원) 김기철(책임연구원)
 이정주(책임연구원) 최용준(책임연구원) 김현진(연구원)
- 교통부문 권태범(연구위원) 정웅기(연구위원) 이상인(부연구위원)
 한근수(부연구위원)
- 환경부문 남광현(연구위원) 김기호(부연구위원) 김희철(책임연구원)
 최정학(책임연구원)
- 행·재정 김광석(부연구위원) 정군우(부연구위원) 윤상용(책임연구원)

■ 연구자문

총괄계획

김덕란(대구광역시의원)	김용웅(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원배(국도연구원)
김종한(대구시 정책기획관)	김현기(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박재일(영남일보)
서상호(대구일보)	서정해(경북대학교)	손병해(경북대학교)
송경창(경상북도 정책기획관)	이강식(대구광역시)	이성근(영남대학교)
이재훈(영남대학교)	이춘수(매일신문)	전경구(대구대학교)
조 순(전 부총리)	조광현(대구경실련)	

산업부문

강희찬(삼성경제연구소)	구기훈(한국한의학연구원)	권기정(한국산업개발연구원)
김광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김복용(㈜보우)
김재현(한국기계연구원)	박 훈(산업연구원)	박병원(삼성종합기술원)
서동혁(산업연구원)	이보충(현대중공업)	이상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일(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진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태호(㈜한국수력원자력)
조진삼(한국원자력연구원)	Gregory Roi(고베의료클러스터)	강호완(경상북도)
김경환(지역농업네트워크)	김기홍(대구가톨릭대학교)	김대환(한국성유산업협회)
김상희(금오공과대학교)	김영기(LG이노텍)	김원기(대구테크노파크)
김유석(동국대학교)	김정욱(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협동조합)	김제형(대구의사협회장)
김종달(경북대학교)	김중배(구미상공회의소)	김진경(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김태운(대구광역시)	김태진(대경권선도산업지원단)	김한기(한국성유산업협회)
김한수(프로SM텍)	김현덕(경북대학교)	김현주(㈜비트로시스)
김형일(대구광역시)	김호경(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류종우(대구광역시)
문기영(한국성유산업연합회)	민병우(동산의료원)	박경로(경북대학교)
박원호(한국성유개발연구원)	박재일(영남일보)	박정호(신라직업전문학교장)
박진한(경주대학교)	박희태(우리영농)	배선학(대구테크노파크)
백응률(영남대학교)	백점석(한국폴리텍성유패션대학)	서영수(대경권선도산업지원단)
서정해(경북대학교)	성기용(경상북도)	안상호(영남대학교)
연규현(영진전문대학)	오도창(경상북도)	오성윤(대구광역시)
이강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규식(에스아이티)	이도현(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동수(대구경북성유산업협회장)	이미경(경상북도)	이법주(㈜동국S&C 이사)
이상훈(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이상훈(대경권선도산업지원단)	이선봉(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이성열(㈜영도벨벳)	이승소(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이영준(대구한의대학교)
이우열(대구과학대학)	이재화(대구광역시의원)	이재훈(영남대학교)
이준혁(한국한의학연구원)	이창석(㈜이주)	이춘식(한국성유개발연구원장)
이춘우(대구광역시)	이희관(전북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이희영(대경권선도산업지원단)
장병욱(한국성유개발연구원)	장봉재(대구광역시)	장충길(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전성기(한국염색기술연구소장)	전해동(마스터컴퍼니)	정욱진(매일신문)
조계현(영남대학교)	조민성(㈜동영영직)	조봉수(대구한방산업지원센터)
조일진(㈜대륙)	조현우(전남한방산업진흥원)	조희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최상기(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상태(한약재품질인증센터)
허용석(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황영진(구미전자정보기술원)

최성일(주에타솔라)
함성호(전남한방산업진흥원)
홍성학(한국성유개발연구원)
황우익(대구테크노파크)

최정건(대구테크노파크)
허경국(자동차부품진흥재단)
홍정의(주미리넷솔라)
황정태(주포스코파워)

서비스산업

곽무영(대구도시공사)
권오룡(대구광역시)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김문규(대구도시공사)
김영주(경상북도)
김찬호(주택산업연구원)
김한규(계명대학교)
박기환(대구광역시)
부기덕(대은금융연구소)
신진교(대구테크노파크)
이병완(영남대학교)
이재윤(경상북도)
장태구(대구대학교)
정연걸(대구시상인연합회장)
최창열(경상북도)
한정표(대한전문건설협회)

국맹수(한국은행)
권정락(대구광역시)
김동건(금융감독원)
김보건(대구유통단지관리센터)
김영철(계명대학교)
김철섭(대구광역시)
도윤호(대구광역시)
박득수(대구도시공사)
성낙후(대구광역시)
양재룡(한국은행)
이성호(경상북도)
이진우(부동산114)
정 용(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화섭(대한건설협회)
한동근(영남대학교)
황석준(계명대학교)

권삼수(대구광역시)
권혁진(주화성산업)
김무연(대구광역시)
김상현(영남대학교)
김용일(경상북도)
김태석(대구광역시)
민외기(경상북도)
박성태(대구광역시의원)
손형식(대구시상인연합회)
이각희(썬서한)
이우석(경상북도)
임성수(영남일보)
정기영(대구광역시)
조성제(한국은행)
한윤조(매일신문)

연구개발(R&D)

강진규(DGIST)
김태식(경상북도)
박광석(성서미니클러스터)
서정해(경북대학교)
신진교(대구테크노파크)
윤철석(경북테크노파크)
이석형(대구광역시의회)
이영목(경북대학교)
임경호(대구상공회의소)
조현기(한국과학기술단체)
허영준(경북테크노파크)

김종배(구미상공회의소)
문영백(경북테크노파크)
박찬익(대구한의대학교)
석 민(매일신문)
연규현(영진전문대)
이강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석희(경북테크노파크)
이재훈(영남대학교)
정 훈(대경대학)
한혜련(경상북도의원)
홍진근(경상북도)

김찬한(세아 메카닉스)
민용기(대구테크노파크)
박철용(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손준혁(대구테크노파크)
오준혁(대구광역시)
이상룡(경북대학교)
이승택(세양테크)
이흥우(대구광역시)
정태일(한국OSG)
허석윤(영남일보)

농수산업

강태훈(계명대학교)
김동환(경상북도)
김준식(경상북도)
박찬홍(한국해양연구원)

권석재(한국해양연구원)
김종만(한국해양연구원)
김진규(경상북도)
서말희(대구광역시)

권학기(대구광역시)
김종수(경상북도)
박상우(경북대학교)
손인목(경상북도)

손재근(경북대학교)
이승욱(대구일보)
조무제(경상북도)
한종대(경상북도)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원열(경상북도)
최주원(대구광역시)
한창화(경상북도의원)

이상욱(경상북도)
전화식(경상북도)
하성찬(경상북도)

문화 · 관광

고길준(롯데관광개발(주))
김경숙(경상북도)
김덕용(대구신문)
김유현(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정학(천마아트센터)
김진훈(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
남태완(대구광역시)
박재영(안동전통콘텐츠탁물관)
배주열(엑스코투어)
안동희(그랜드호텔)
오익근(계명대학교)
윤양수(㈜건일엔지니어링)
이상호(한국국학진흥원)
이재광(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정원재(대구광역시)
채영택(영남대학교)
황병길(대구예총발전위원회)

구창식((주)사이버프론트코리아)
김규호(경주대학교)
김만주(대구광역시)
김은파(대구엑스코)
김정현(전 대구광역시 관광과)
김철환(울릉군)
박병훈(경상북도의원)
박정엽(대구화랑협회)
서 원(경상북도)
오미희(대구광역시)
우종익(이우텍)
이경기(경상북도)
이석준(경상북도)
임종교(안동미래재단)
제니박(노보텔)
최원용(경상북도)
황형우(경상북도)

권두현(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김대권(대구광역시)
김영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재효(대구엑스코)
김주령(경상북도)
김호섭(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박상태(대구광역시의원)
박종구(동국대학교)
서철현(대구대학교)
오순환(한국문화관광연구소장)
원상용(대구문화재단)
이경배(대구광역시)
이응원(경상북도)
임충재(계명대학교)
조한익(안동시)
최원준(㈜파워엔터테인먼트)

교육부문

강은영(부산교육청)
김규학(대구광역시의원)
김사철(대구시교육청)
김종구(경북기계공고)
김형섭(시지고등학교)
박원철(송원학원)
박재홍(대구시교육청)
서원호(경상북도)
윤재희(부산교육청)
이옥정(동부교육청)
이한우(대구광역시)
전정기(영남대학교)
정화일(대구광역시)
진 식(영남일보)
최상근(한국교육개발원)
한원경(대구시교육청)

권현철(덕원고등학교)
김명희(사월초등학교)
김선대(대구광역시)
김종배(구미상공회의소)
김호경(포산고등학교)
박일희(경상북도교육청)
박준빈(구미전자공고)
서정하(대구시교육청)
이대희(대건고등학교)
이윤지(신암초등학교)
이희갑(대구시교육청)
정 훈(대경대학)
조영남(대구교육대학교)
최광현(영남이공대학)
최석민(대구교육대학교)

김규원(경북대학교)
김민조(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계명대학교)
김종한(부산인재개발원)
박원식(경북여고)
박재홍(영진전문대)
백천조(대구광역시)
유수호(경상북도)
이병옥(전 대구시교육청)
이재훈(영남대학교)
장효정(달성중학교)
정일환(대구가톨릭대학교)
조현철(대구광역시)
최병고(매일신문)
한 웅(경일대학)

복지부문

권복순(대구가톨릭대학교)	권준하(대구광역시)	김경섭(대구지체장애인협회)
김기창(경상북도)	김복규(계명대학교)	김재남(경상북도)
김진표(진명복지재단 고향마을)	김창규(수성시니어클럽)	김현익(경북보육정보센터)
류외희(대구보육정보센터)	박명배(안동 신나는빛자루 자활공동체)	박병률(대구광역시)
박은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진필(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박충선(대구대학교)
박현호(민승자립원)	배성희(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서인재(남구시니어클럽)
서혜전(대구한의대학교)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현욱(경상북도)
안국중(대구광역시)	안현숙(드림스타트센터)	안효중(경상북도)
여규문(경상북도)	우지연(대구광역시자활센터)	윤정희(대구광역시)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이거우(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미(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이영옥(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이정희(햇빛노인복지센터)	이준상(대구대학교)
이태진(보건사회연구원)	이화숙(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병락(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영기(김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장영미(대구광역시)	장흔성(구미시)
전현식(대구광역시)	정명현(경상북도)	정해용(대구광역시의원)
조병창(대구광역시)	조수민(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윤자(대구광역시)
조정숙(대구광역시)	조현미(경북대학교)	천순복(경상북도)
최낙창(혜림원)	하능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윤조(매일신문)
홍석기(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황성동(경북대학교)	

도시부문

강창교(문경대학)	곽인태(구미시)	구자문(한동대학교)
권기창(경북도립대학)	권태윤(경운대학교)	권혁원(포항시)
김경대(경주대학교)	김광석(대구광역시)	김규하(봉화군)
김기백(울릉군)	김문기(대구광역시)	김삼규(영덕군)
김삼일(포항시)	김영대(대구광역시)	김원구(대구광역시의원)
김정호(경북대학교)	김종한(대구광역시)	김주형(영주시)
김철수(계명대학교)	김초한(영양군)	김필상(안동시)
김한수(계명대학교)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희수(경상북도의원)
도기욱(경상북도의원)	박상우(전 국토연구원)	박노송(김천시)
박상우(경북대학교)	박성만(경상북도의원)	박성민(청송군)
박재범(성주군)	박종규(청도군)	박진현(경상북도의원)
박형달(대구광역시)	박형서(국토연구원)	박호식(경상북도)
배수향(경상북도의원)	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종현(김천시)
안병국(포항도시정책연구소)	안창주(영주시)	염용균(안동대학교)
오기윤(군위군)	이도선(동양대학교)	이상관(경운대학교)
이상기(경상북도)	이성근(영남대학교)	이신우(의성군)
이원섭(국토연구원)	이재길(예천군)	이재철(동양대학교)
이정우(경상북도)	이정호(영양군)	이종현(상주시)
이준택(경북매일신문)	이충성(울릉군)	이황희(영천시)
장기진(영주시)	장문호(울진군)	장영화(문경인터넷뉴스사)

장현탁(상주시)
전정열(경산시)
정갑진(청송군지역발전협의회)
진병길(신라문화원장)
최미경(대구광역시)
최종욱(안동시)
홍경구(대구대학교)
황재윤(경북일보)

전경구(대구대학교)
전찬걸(경상북도의원)
조근래(구미경찰서)
최경길(경주시)
최병환(경상북도)
피재윤(대구신문)
홍승한(봉화군)

전경자(문경시)
전해석(고령군)
조금래(칠곡군)
최규문(청도군)
최성국(구미시)
한영광(포항대학)
홍용기(대구광역시)

교통부문

곽영길(대구광역시)
박영환(대구미래대학)
박종태(경상북도)
윤대식(영남대학교)
장영석(경상북도의원)

김갑수(영남대학교)
박용진(계명대학교)
서환중(대구광역시)
이창호(대구광역시)
장은재(경상북도)

김기혁(계명대학교)
박재민(경상북도)
오철환(대구광역시의원)
이현모(대구광역시)

환경부문

강재형(대구광역시의원)
권태일(대구광역시)
김동성(경상북도)
김수봉(계명대학교)
김태한(대구소방안전본부)
박제철(금오공과대학교)
백낙권(대구광역시)
윤종석(대구광역시)
이재관(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지희(경북대학교)
정환도(대전발전연구원)
최영균(대구대학교)

구현숙(구생태산업단지(EIP))
김갑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병구(경상북도)
김영주(경북대학교)
도중호(㈜한국종합기술)
박종웅(대구한의대학교)
백성욱(영남대학교)
이대성(경북대학교)
이재춘(경상북도)
임호진(경북대학교)
조완근(경북대학교)
최정환(대구광역시)

권세원(대구광역시)
김동석(대구가톨릭대학교)
김세호(경상북도의원)
김준근(경상북도)
민경석(경북대학교)
배민기(충북개발연구원)
서정길(대구광역시)
이상용(대구광역시)
이종순(대구광역시)
정응호(대구환경기술개발센터)
최세휴(경북대학교)
현인환(단국대학교)

행정 · 재정

강광수(영남대학교)

김석태(경북대학교)

최근열(경일대학교)

『뉴 디자인 대구경북』 추진경과

- 4. 2 연구 착수(Kick-off Meeting) : 연구원 70명 참여
총괄보고서 및 78개 분야별·도시별 과제로 구성
- 4.19~4.20 분야별 착수보고회
- 5.11~5.20 1차 워크숍 : 63개 분야별 「과거와 현재 진단」
- 5. 24 1차 킬로쿼엄 "메가트렌드와 대구경북"
- 5. 31 2차 워크숍 : 분야별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 6. 7 10개 분야별 「연구회 운영계획」 발표
- 6. 9 「여성정책」 워크숍
(여성정책연구는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소,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수행)
- 6.10~8.20 분야별 연구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
- 7. 1 2차 킬로쿼엄 "도시 및 지역발전을 위한 Trend Watching"
- 7.5~7.14 1차 중간발표회 : 10개 부문, 35개 세부분야
- 7.22~8.17 정책포럼·연구회별 간담회·자문회의
- 8. 16~17 도시별 계획 연구심의회(대구시 & 경북도 23개 시·군)
- 8. 23 「뉴 디자인 대구경북」 총괄부문 초안발표
- 8. 26 도시별 계획 "비전 발표회"
- 8.30~9.17 2차 중간발표회 : 부문별 48개 과제, 도시별 30개 과제
- 10.25~11.11 세미나 : 부문별 48개 과제, 도시별 30개 과제
- 11. 8 「뉴 디자인 대구경북」 총괄계획 공청회
- 11. 30 「뉴 디자인 대구경북」 출판
(총괄보고서, 부문별 보고서, 도시별 보고서, 대구경북 30년사)

뉴 디자인 대구경북
총괄보고서

2010년 11월 25일 인쇄
2010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 홍 철
발행처 : 대구경북연구원
(706-7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로 246
TEL. (053) 770-5100
FAX. (053) 770-5079
인 쇄 : 삼영정밀인쇄사 TEL. (053)255-3245

ISBN 978-89-8288-167-1 93300

<비매품>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반드시 대구경북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